202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법 무 부 소 관
법 제 처 소 관
감 사 원 소 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소관
헌 법 재 판 소 소 관
대 법 원 소 관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목 차 】

Ⅰ. 소관 기관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2

Ⅲ. 결산개요 ····· 5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14

1. 법무부 소관 결산 ····· 14

2. 법제처 소관 결산 ····· 346

3. 감사원 소관 결산 ····· 410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 473

5.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 521

6. 대법원 소관 결산 ····· 586

Ⅴ. 대체토론 요지 ····· 730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745

Ⅶ. 심사결과 ····· 747

Ⅷ. 소수의견 요지 ····· 748

Ⅸ. 시정요구사항 ····· 748

Ⅹ. 부대의견 ····· 748

【 붙 임 】

※ 2023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2023회계연도
결 산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4. 8.

법제사법위원회

Ⅰ. 소관 기관 회부 결산

1. 법무부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및 지출

2. 법제처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3.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5.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6.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등기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2. 회부일자 : 2024년 6월 1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법무부 소관 결산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24. 8.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 8. 26.) 상정・의결

○ 제3차 위원회(2024. 8. 27.) 상정・소위원회심사보고・대체토론・의결

나. 법제처 소관 결산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24. 8.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 8. 26.) 상정・의결

○ 제3차 위원회(2024. 8. 27.) 상정・소위원회심사보고・대체토론・의결

다. 감사원 소관 결산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24. 8.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 8. 26.) 상정・의결

○ 제3차 위원회(2024. 8. 27.) 상정・소위원회심사보고・대체토론・의결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24. 8.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 8. 26.) 상정・의결

○ 제3차 위원회(2024. 8. 27.) 상정・소위원회심사보고・대체토론・의결

마.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24. 8.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 8. 26.) 상정・의결

○ 제3차 위원회(2024. 8. 27.) 상정・소위원회심사보고・대체토론・의결

바. 대법원 소관 결산

◎ 제417회국회(임시회)

○ 제2차 위원회(2024. 8. 2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3. 8. 26.) 상정・의결

○ 제3차 위원회(2024. 8. 27.) 상정・소위원회심사보고・대체토론・의결

Ⅲ. 결산개요

1. 법무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예 산 액	1조 3,458억 3,400만원
징수결정액	1조 5,362억 900만원
수 납 액	1조 5,212억 700만원
미수납액	149억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99.0%이며, 미수납액비율은 1.0%임.

(2) 세 출

예 산 액	4조 1,760억 200만원
전년도이월액	68억 6,000만원
예 비 비	15억 2,500만원
예산현액	4조 1,852억 2,300만원
지 출 액	4조 1,393억 9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123억 4,500만원
불 용 액	341억 6,9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98.9%이고, 불용액비율은 1.1%임.

나. 교도작업특별회계

(1) 세 입

예 산 액	1,214억 7,900만원
징수결정액	1,245억 3,600만원
수 납 액	1,242억 1,400만원
미 수 납 액	3억 2,2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99.7%이며, 미수납액비율은 0.3%임.

(2) 세 출

예 산 액	1,214억 7,900만원
예 산 현 액	1,214억 7,900만원
지 출 액	1,130억 4,600만원
불 용 액	77억 4,4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93.0%이며, 불용액비율은 7.0%임.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수 입

수정수입계획액	1,133억 4,700만원
징수결정액	1,353억 3,300만원
수 납 액	1,336억 5,800만원
미 수 납 액	16억 7,5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98.8%이며, 미수납액비율은 1.2%임.

(2) 지　출

수정지출계획액	1,133억 4,700만원
지출계획현액	1,117억 3,200만원
지　출　액	1,336억 5,800만원
불　용　액	23억 4,000만원

지출계획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119.6%임.

2. 법제처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예　산　액	-
징수결정액	400만원
수　납　액	400만원
미수납액	-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100.0%임.

(2) 세　출

예　산　액	437억 2,800만원
예산현액	437억 2,800만원
지　출　액	426억 2,200만원
전　용　액	1억 9,800만원
불　용　액	11억　6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97.5%이고, 불용액비율은 2.5%임.

3. 감사원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예 산 액	6억 3.900만원
징수결정액	7억 3,100만원
수 납 액	7억 3,1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은 100%임.

(2) 세 출

예 산 액	1,373억 8,100만원
전년도이월액	15억 6,800만원
예 산 현 액	1,389억 4,900만원
지 출 액	1,327억 6,200만원
이 월 액	11억 6,800만원
불 용 액	50억 1,9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 비율은 95.6%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은 0.8%이며, 불용액 비율은 3.6%임.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예 산 액	-
징수결정액	3억 1,100만원
수 납 액	1억 3,400만원
미수납액	1억 7,7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43.1%임.

(2) 세 출

예 산 액	176억 8,300만원
예 산 현 액	193억 1,600만원
지 출 액	170억 8,400만원
전 용 액	-
불 용 액	22억 3,2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88.4%이고, 불용액비율은 11.6%임.

5. 헌법재판소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예 산 액	3,900만원
징수결정액	3,600만원
수 납 액	3,600만원
미 수 납 액	-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100.0%임.

(2) 세 출

예 산 액	554억 9,200만원
예 산 현 액	554억 9,200만원
지 출 액	537억 5,200만원
불 용 액	17억 4,0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 비율은 96.9%이고, 불용액 비율은 3.1%임.

6. 대법원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예 산 액	7,382억 9,100만원
징수결정액	4,530억 800만원
수 납 액	4,515억
미 수 납 액	15억 8,0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99.7%이며, 미수납액비율은 0.3%임.

(2) 세 출

예 산 액	1조 7,757억 9,800만원
전년도이월액	98억 8,100만원
예 산 현 액	1조 7,856억 7,900만원
지 출 액	1조 7,629억 9,9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171억 9,800만원
불 용 액	54억 8,1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98.7%이고 다음연도 이월액비율은 0.9%이며 불용액비율은 0.4%임.

나. 등기특별회계

(1) 세 입

예 산 액	4,302억 6,300만원
징수결정액	3,201억 8,200만원
수 납 액	3,011억 200만원
미 수 납 액	190억 8,0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94.0%이며, 미수납액비율은 6.0%임.

(2) 세 출

예 산 액	4,302억 6,300만원
전년도이월액	30억 7,800만원
예 산 현 액	4,333억 4,100만원
지 출 액	2,642억 30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24억 9,900만원
불 용 액	1,666억 3,900만원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61.0%이고 다음연도이월액 비율은 0.6%이며 불용액 비율은 38.4%임.

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 수 입

수입계획액	1,992억 8,500만원
징수결정액	1,384억 8,100만원
수 납 액	1,368억 8,900만원
미 수 납 액	15억 9,200만원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비율은 98.9%이며, 미수납액비율은 1.1%임.

(2) 지 출

지출계획액	1,992억 8,500만원
지 출 액	1,368억 8,900만원
이 월 액	28억 7,100만원
불 용 액	40억 9,500만원

지출계획액에 대한 지출액비율은 68.7%임.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법무부 소관 결산】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Ⅲ.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세 입 ◈

가. 기타재산이자수입

(1)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이자 수입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5억 6,100만원으로, 이 중 5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실적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이며, 2023년 동 이자 수입은 2022년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정산한 것으로, 4억 7,700만원이 수납됨(전체 수납액의 86.1%).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기타재산 이자수입 (11-54-546)	331	-	331	561	554	7	0.06	331

(2) 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 법무부의 최근 5년 간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의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세입예산액은 3억 1,900만원 ~ 3억 3,900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는 반면, 실제 수납액은 1억 4,000만원 ~ 5억 5,400만원으로 비교적 큰 편차가 나타남.

특히 2023년의 경우 세입예산 3억 3,100만원 대비 5억 5,4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간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 연도별 예산액 대비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9	339	388	382	6	-
2020	339	437	430	7	-
2021	339	189	182	7	-
2022	319	147	140	7	-
2023	331	561	554	7	-

* 자료: 법무부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2020년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통화량 증가 및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지만,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고물가와 달러 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음. 이로 인해 2023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직전인 2022년 8월 기준금리는 2.50%로 2021년 최저수준(0.50%)보다 2.00%p가 상승한 상황이었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경과>

발표날짜	기준금리	이전대비
2018. 11. 30.	1.75%	+25bp
2019. 7. 18.	1.50%	-25bp
2019. 10. 16.	1.25%	-25bp
2020. 3. 16.	0.75%	-50bp
2020. 5. 28.	0.50%	-25bp
2021. 8. 26.	0.75%	+25bp
2021. 11. 25.	1.00%	+25bp
2022. 1. 14.	1.25%	+25bp
2022. 4. 14.	1.50%	+25bp
2022. 5. 26.	1.75%	+25bp
2022. 7. 13.	2.25%	+50bp
2022. 8. 25.	2.50%	+25bp
2022. 10. 12.	3.00%	+50bp
2022. 11. 24.	3.25%	+25bp
2023. 1. 13.	3.50%	+25bp

* 자료: 한국은행

○ 당시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때 2022년에 이루어진 금리 인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실제 3.50%까지 추가 인상됨)이었음. 이자 수입을 주요 세원으로 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의 특성상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2023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예년대비 수납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타재산이자수입의 2023년 세입예산을 예년 수준인 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2억 2,300만원 가량이 초과 수납(67.4%)되어 세입예산과 실적 간 불일치가 발생함.

○ 특히 2023년에는 1월에 3.50%로 인상된 기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시에도 전년과 동일한 3억 3,100만원만을 편성[1]하였으며, 2024년 6월말 기준 수납실적은 예산액 대비 233.5% 가량 초과된 11억 400만원이 수납되어 세입예산과 실적 간 불일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임.

1) 법무부는 금리 변동 예측의 어려움, 세입 규모 왜곡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수납액의 평균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의 경우 최근 3년(2020~2022) 수납액의 평균 금액은 251백만원이나 기준금리가 높은 것을 일부 반영하여 전년수준인 331백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 2024년 6월말 기준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331	1,111	1,104	7	-

* 자료: 법무부

○ 향후 법무부는 과목별 세입 수납에 영향을 주는 경제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액과 수납액간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1) 결산 개요

○ 토지대여료(11-51-511)와 건물대여료(11-51-512)는 국유재산 중 각각 토지와 건물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임.

토지대여료의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6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6억 6,200만원으로, 이 중 4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4,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건물대여료의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7억 3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5억 9,400만원으로, 이 중 5억 2,400만원을 수납하였고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토지대여료 및 건물대여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토지대여료 (11-51-511)	699	-	699	662	477	137	48	699
건물대여료 (11-51-512)	703	-	703	594	524	62	8	703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입법 추진 필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서,[2]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총 61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 센터[3]를 제외한 57개 센터가 검찰청 청사 내에 소재하고 있음.

검찰청 청사는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사용이 원칙[4]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5] 및 「국유재산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수원, 영월, 김천구미, 제천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4)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5)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특례제한법」[6]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법무부는 동 센터에 대하여 청사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법무부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의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할 것”을 요구(시정)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을 함께 요구(제도개선)하였음.

법무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익적 업무 성격을 고려하고, 지적사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였음.

그러나 이후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시에도 국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재차 촉구(제도개선)하였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6)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마련 근거가 없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법무부 조치 계획>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5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연합회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 문제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검찰청 청사는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사용이 원칙인데, 현재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청사 내에 있고 무상사용 허용 대상도 아님에도 청사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의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할 것(시정)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시정, 제도개선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경제·의료 지원, 신변보호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지원 활동의 공익적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검찰청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중 ○ 향후, 지적사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국유재산 사용료(임차료) 면제 근거 마련**, 사용료의 보조금 예산 편성 등을 위한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개선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겠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법무부 조치 계획>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43)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검찰청 청사 무상사용 문제 개선 필요	[지적사항] ○ 현재 검찰청 청사 내에 소재한 55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의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할 것”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을 함께 시정요구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추진 검토 중** ○ 조치기한(조치 중) :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현재 두 차례의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는 채로 국유재산인 검찰청 청사를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정요구 당시보다 무상 사용하는 센터가 2개소 늘어났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제21대국회 종료 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 사용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 법안으로 추진하였으나, 제21대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설명함.[7)]

그러나 해당 지적사항이 처음 제기된 2019회계연도 결산은 제21대국회 초반인 2020년 11월 19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2024년 1월 관련 법안이 제출되기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법무부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의지 및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노력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22대국회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은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혜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2024년 1월 9일에 발의되었음.

다.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은 정부의 재산, 금융 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외의 수입을 의미함.

법무부는 2023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수납 내역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검찰연수원(프로스힐)의 숙박 이용료(공무 제외)를 세입조치한 것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11-54-547)	-	-	-	53	53	-	-	-

(2)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 세입예산 계상 필요

○ 정부는 2022년부터 세입과목을 개편하여 기존의 기타재산수입(11-54-545)을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과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로 구분함.

그런데 법무부는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 과목이 신설된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예산까지 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를 해당 과목 세입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

○ 제주 검찰연수원은 국유재산 교환 및 리모델링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 이용을 제외한 개인 이용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매달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2023년에도 총 1,680건에 대한 5,336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음.

<2023년 제주 검찰연수원 사용료 수입 실적>

(단위: 건,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이용건수	116	116	145	146	156	174	141	134	130	138	116	168	1,680
사용료수입	3,980	3,810	4,260	4,510	4,780	5,590	5,030	4,540	4,000	4,110	3,600	5,150	53,360

* 자료: 법무부

제주 검찰연수원이 계속 운영되는 한 매월 사용료 수입 발생은 확실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8]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기존 제주 검찰연수원의 사용료 수입 실적을 토대로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에 적정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8)**「국가재정법」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1) 결산개요

○ 벌금 및 과료(12-56-561)는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등의 수입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1,288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1조 3,374억 900만원이며, 이 중 1조 3,373억 2,900만원을 수납하였고 8,0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몰수금 및 추징금(12-56-562)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하는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1,308억 9,800만원이 계상되어 징수결정액은 1,052억 6,0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음.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벌금 및 과료 (12-56-561)	1,128,869	-	1,128,869	1,337,409	1,337,329	80	-	1,128,869
몰수금 및 추징금 (12-56-562)	130,898	-	130,898	105,260	105,260	-	-	130,898

(2) 검찰 일부관서의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시정 필요

○ 정부의 예산편성지침[9]에 따르면 세입과목을 정함에 있어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를 경상이전수입(12관)에 속하는 별도의 항(56항)으로 구분하고 있고,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56항)는 그 세입금액의 내용 및 법적 성격에 따라 "벌금 및 과료"(56-561목), "몰수금 및 추징금"(56-562목), "과태료"(56-563목), "징계부과금"(56-564목), "과징금"(56-565목) 등 별도의 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러한 세입과목 구분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10] 수입금액을 각 세입과목별로 구분하여 징수·수납하여야 함.

○ 그런데 법무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징수부에 따르면 검찰청 일선관서에서 "추징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벌금·과료와 함께 "벌금 및 과료"(12-56-561)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된 사례가 53건, 관련 수납금액 3억 7,527만원이며,

"벌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몰수금·추징금과 함께 "몰수금 및 추징금"(12-56-562)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된 사례가 36건, 관련 수납금액 2억 7,146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

9)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43-344.

1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9조(납입의 고지)** 법 제10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납세의무자등(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입과목,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말로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과목

<2023년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간 과오수납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과오수납 건수	과오수납 관련 금액
추징금 수입 → 벌금 및 과료로 수납	53	375,274
벌금 수입 → 몰수금 및 추징금으로 수납	21	271,456

* “과오수납 관련 금액”에는 ①해당 건 전체가 과오수납액인 경우와 ②해당 건에 과오수납액이 일부 포함된 경우(예: 추징금 수입이 벌금 수입과 함께 벌금 및 과료로 수납된 경우)가 모두 포함됨. 따라서 “과오수납 관련 금액”은 과오수납이 발생한 수납건의 전체 수납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전부 과오수납액은 아님.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과오납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벌금과 추징금에서 각각 5건씩 파악되었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의 경우 2023년 7월 “벌금” 7,128만원을 “몰수금 및 추징금”으로 수납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의 경우 2023년 12월 “추징금” 7,000만원을 “벌금 및 과료”로 수납하는 등 과오수납금액 규모가 큰 사례도 발견됨.

<2023년 벌금 수입 과오수납 주요 사례(1천만원 이상)>

(단위: 원)

세입과목	관서명	부과내용	수납결의일	수납액
몰수금 및 추징금 (12-56-56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벌금 52건, 즉결벌금 6건 국고수납	2023.7.31.	71,284,330
	부산지방검찰청	벌금 23건 세입조치	2023.5.19.	52,700,000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벌금 47건 국고수납	2023.11.30.	28,230,000
	부산지방검찰청	벌금 7건 세입조치	2023.2.23.	21,292,000
	부산지방검찰청	벌금 11건 세입조치	2023.3.17.	14,000,00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3년 추징금 수입 과오수납 주요 사례(1천만원 이상)>

(단위: 원)

세입과목	관서명	부과내용	수납결의일	수납액
벌금 및 과료 (12-56-561)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추징금 1건 세입조치	2023.12.12.	70,000,000
	광주지방검찰청	추징금 2건 현금수납	2023.9.20.	19,105,810
	부산지방검찰청	추징금 9건 현금수납	2023.2.1.	14,245,00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추징금 10건 현금수납	2023.6.13.	13,844,220
	광주지방검찰청	추징금 1건 세입조치	2023.11.17.	11,899,90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법무부와 검찰은 일선 관서 세입징수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세입 징수·수납 과정에서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세 출 ◈

가. 법무활동

(1)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가) 결산개요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1033-304)은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세사업으로 법령 제·개정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자료집 발간, 국제회의 참석 및 중소기업 초청세미나,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선진법제포럼 개최 및 선진 상사법률연구 발간,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액은 32억 7,100만원이고 3,800만원이 이월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3억 900만원인데, 이 중 32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00만원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3,271	38	-	-	3,309	3,282	20	7	3,400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181	-	-	-	181	181	-	-	111

(나)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공익신탁이란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기부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금과 수익을 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임. 공익신탁은 기부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의 인가만 받으면 설정되며,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공익법인의 설립에 비해 적은 관리비용이 소요된다고 평가됨.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은 2015년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공익신탁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등 홍보 필요성에 따라 시작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에는 홍보비용 1억 5,500만원, 공익신탁위원회 운영비 1,225만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60만원 등 총 1억 7,215만원이 편성되어 아래 표와 같이 2억 176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만원)

구분	당초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편성내역
공익신탁 홍보	15,530	15,530	19,500	홍보물제작, TV지상파 공익방송 등
운영비	1,225	1,225	216	공익신탁위원회 운영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460	460	460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합 계	17,215	17,215	20,176	

* 자료: 법무부

○ 공익신탁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월 22일 제1호 공익신탁인 “법무부 천사 공익신탁”이 인가된 이후, 2023년 말 기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용되고 있는 공익신탁은 27개이며, 위탁자 수는 35,997명, 위탁금액은 약 500억 7,7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공익신탁 운영 현황>

인가연도	공익신탁명	위탁자 수(명)	위탁금액(천원)
2015년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9,013	155,175
	광복70주년 나라사랑 공익신탁	68	18,945,930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7	12,566
	난치성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23	90,364
	법무부천사 공익신탁	20,684	1,218,775
	하나이웃사랑나눔 공익신탁	834	8,433,630
	하나꿈나무육영 공익신탁	828	8,469,809
	신동방장학 공익신탁	1	626
	하나 체육진흥 공익신탁	745	47,426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2018. 9. 종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일기금 공익신탁	1	10,000,000
	이승철의 리앤차드 공익신탁	2	60,500
	혁신기업가 기금 공익신탁	1	50,000
2016년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등을 위한 공익신탁	9	180
	코리아아이스하키사랑 공익신탁	251	27,927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	16	50,527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539	1,031,043
	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10	39,641
	어린이희망 공익신탁(2023. 6. 종료)		
2017년	유안타증권 장애아동 디딤돌 공익신탁	1	110,000
	한부모가족 일생활균형 지원 공익신탁(2019. 6. 종료)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공익신탁	23	88,450
	이상현의 장애청소년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공익신탁	1	105,000
	KB만천하 공익신탁	2,928	6,996
2018년	산업재해 피해자지원 공익신탁(2020. 3. 종료)		
	KB맑은 하늘 공익신탁(2019. 8. 종료)		
2020년	KB The 맑은하늘 공익신탁	0	0
	KB 맑은바다 공익신탁(2021. 1. 종료)		
	KB은평愛 생활SOC공익신탁	4	352
	KB창원愛 생활SOC공익신탁	5	405

인가연도	공익신탁명	위탁자 수(명)	위탁금액(천원)
	KB순천愛 생활SOC공익신탁	2	150
	장애청소년의 복리를 위한 공익신탁	1	1,132,070
2021년	KB Green Wave 1.5℃(2022. 3. 종료)		
2022년	KB Net Zero S.T.A.R. 공익신탁(2022. 12. 종료)		
2023년	KB청년도약 공익신탁(2024. 3. 종료)		
2024년	밝은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지원 공익신탁	0	0
합 계		35,997	50,077,542

* 자료: 법무부

○ 공익신탁의 실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위탁자 수가 수천명에 달하거나, 위탁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신탁이 있는 반면, “신동방장학 공익신탁”, “혁신기업가 기금 공인신탁”과 같이 위탁자 수가 1명이거나 “KB The 맑은하늘 공익신탁”과 같이 위탁자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음.

또한, 공익신탁 제도 인가는 처음 도입된 2015년 12건 이후, 2016년 6건, 2017년 5건, 2018년 2건, 2019년 0건, 2020년 5건(소액)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11] 최근 2021년부터 2023년에는 연도별 1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현재는 다 종료된 상황임.

○ 공익신탁제도의 취지는 과거 유산을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직접 재단을 설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공익단체나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기부자 스스로의 능동적 참여와 기획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1) 한편, 2017년 인가된 “한부모가족 일생활균형 지원 공익신탁”이 2019년 6월에, 2018년 인가된 “산업재해 피해자지원 공익신탁” 및 “KB맑은 하늘 공익신탁”이 각각 2020년 3월과 2019년 9월에 종료되었고, 2020년에 인가된 “KB 맑은바다 공익신탁”이 2021년 1월에 종료되었음.

따라서, 공익신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공익신탁 실적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인터넷이나 라디오 광고로만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공익신탁 홍보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공익신탁 관련 홍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을 초과 집행하고 있고, 당초 예산 편성내역에 포함된 지하철 동영상 광고 등은 하지 않았으며,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한 공익방송 방식으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공익신탁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내역	실제집행내역
2021	*합계 155 -홍보물 제작: 18 -TV지상파 공익방송: 69 -지하철 동영상 광고: 68	*합계 191 -인터넷 홍보: 61 -라디오 광고: 135
2022		*합계 191 -인터넷 홍보: 61 -라디오 광고: 135
2023		*합계 195 -라디오 광고: 195

* 자료: 법무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통하여 홍보를 시행한바 있으나, 공익신탁 제도가 출범한 2015년에 위탁액 828억 원을 기록한 이후로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며, 최근 3년간 인가받은 공익신탁 건수도 연도별로 1건에 불과함.

<연도별 공익신탁 위탁액>

(단위: 개, 백만원)

연도	인가받은 공익신탁 수	위탁액
2015	13	82,893
2016	6	7,912
2017	5	656
2018	2	377
2019	0	257
2020	6	630
2021	1	1,421
2022	1	291
2023	1	345
합 계		94,782

* 자료: 법무부

○ 최근 3년간 홍보예산 집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홍보예산이 주로 연말에 단기간 라디오광고, 네이버포털을 이용하는 등 제한된 방식으로 집중 홍보하였음.

<최근 3년간 공익신탁 홍보예산 집행현황>

(단위: 만원)

일시		집행 내용	금액	업체
2021년	10. 13. ~ 11. 12.	인터넷 포털	6,050	네이버
	12. 1. ~ 12. 31.	방송광고	3,000	KBS 1R
	12. 1. ~ 12. 31.	방송광고	3,000	MBC AM
	12. 1. ~ 12. 31.	방송광고	3,000	SBS FM
	12. 1. ~ 12. 31.	방송광고	2,500	CBS FM
	12. 1. ~ 12. 25.	방송광고	1,500	TBS
	소 계		19,050	
2022년	8. 30. ~ 9. 29.	인터넷 포털	6,050	네이버
	12. 1. ~ 12. 31.	방송광고	3,000	KBS-R
	12. 1. ~ 12. 31.	방송광고	3,000	MBC-R
	12. 1. ~ 12. 31.	방송광고	3,000	SBS-R
	12. 1. ~ 12. 31.	방송광고	3,000	CBS-R
	12. 1. ~ 12. 31.	방송광고	1,500	TBS-R
	소 계		19,550	

2023년	11. 15. ~ 11.30.	방송광고	5,500	SBS-R
	11. 15. ~ 12.14.	방송광고	5,500	MBC-R
	11. 20. ~ 12.19.	방송광고	5,500	KBS-R
	11. 13. ~ 12.12.	방송광고	3,000	CBS-R
	소 계		19,500	

* 자료: 법무부

○ 특히, 2023년에는 라디오광고만으로 홍보하였는데, 라디오광고는 공익신탁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는 강점이 있으나, 공익신탁 인가 신청이 위탁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실제로 공익신탁 인가를 신청하거나 위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익신탁 실적 제고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활동 및 전문가 자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개선을 자문하기 위해 법무부 훈령인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2024년 7월 말 기준 총 7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음.[12)]

12)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익활동과 관련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비영리법인 또는 회계법인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5. 금융기관에서 신탁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동 자문위원회는 공익신탁의 인가·취소·공시·감독·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등 공익신탁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익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신탁 홍보뿐만 아니라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함.

그런데, 2023년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 위원회의 운영비로 1,225만원(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포함)을 편성하면서, 회의관련 자료집 인쇄비나 회의 지원 용품비의 산출 근거 시 회의 예정 일수를 5회로 예정했으나, 실제로는 동 위원회가 연말에 1회만 개최되어 120만원 집행에 그쳤음.

<2023년 공익신탁자문위원회 개최 내역>

(단위: 천원)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참석위원	참석수당
2023. 12. 21.	법무부 대회의실	공익신탁 제도 개선점,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위원장 등 7명	1,200

* 자료: 법무부

또한, 공익신탁관련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2023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0만원 집행에 그쳤음.

---

6. 그 밖에 공익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④ 간사는 상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최근 4년간 공익신탁관련 전문가자문료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2020	17,500	0
2021	17,500	0
2022	7,500	0
2023	7,500	1,500

*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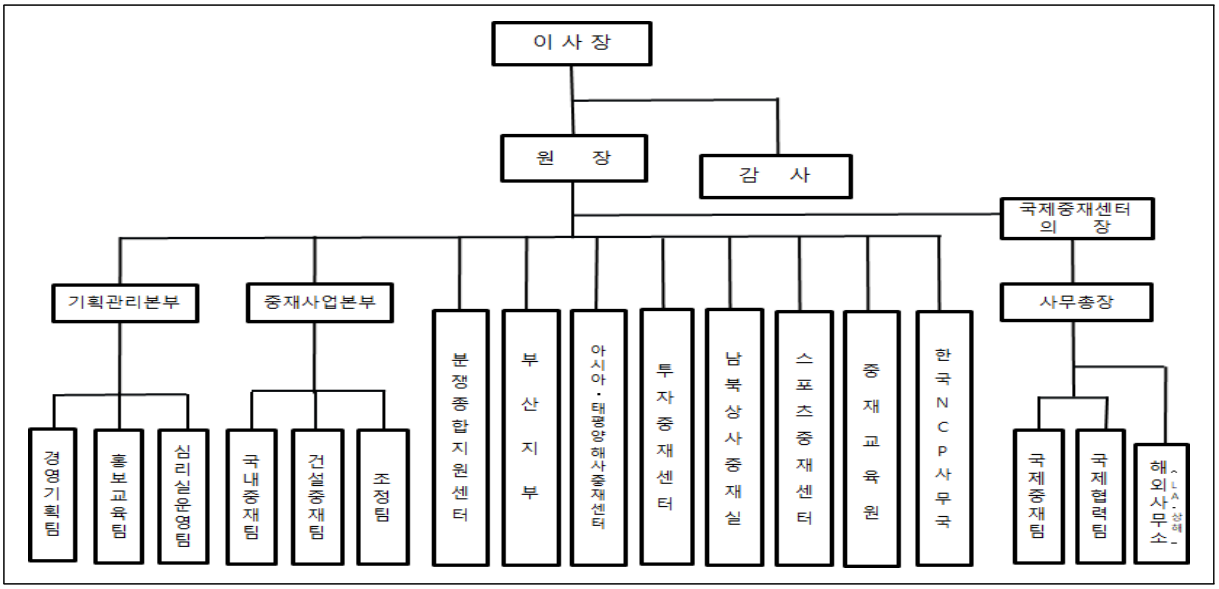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신탁의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익신탁에 대한 홍보 및 공익신탁위원회의 활성화와 아울러 공익신탁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전문가 자문료 집행액이 매년 당초 예산편성액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적정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13]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제정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4]에 따라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2023년 예산은 23억 6,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대한상사중재원 조직도>



---

13)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4)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 당초 중재기관으로는 중재사건을 담당하는 중재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시설을 운영하는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국제중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8년 5월에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통합되었고, 서울국제중재센터의 기능은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제중재센터에서 담당하게 되었음.[15)16)]

○ 지난 5년간 동 국제중재센터 운영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 11억 7,800만원, 2020년 12억 6,800만원, 2021년~2023년 13억 4,500만원이었음.

<최근 5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2,544	2,235	2,522	2,347	2,364
- 해외설명회	255	64	83	30	45
- 국제중재 행사개최	142	60	116	80	139
- 중재콘텐츠 강화	167	132	300	223	136
- 국제중재유치 강화 및 해외관리 인력	422	377	346	321	351
- 국내중재설명회	112	111	106	104	74
- 중재전문인력양성	268	223	226	244	274
- 국제중재센터 운영	1,178	1,268	1,345	1,345	1,345

* 자료: 법무부

15)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중재센터의 통합 이전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각각 심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중재 선진국의 시설에 비하여 규모가 협소하여 대형 국제중재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심리시설은 약 400㎡에 불과

16)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중재 심리시설인 맥스웰 체임버스와 유사한 규모의 중재시설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18년 4월 세계적 규모의 복합중재심리시설인 서울중재센터(’19. 2. 명칭 변경 서울중재센터 ->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가 개소하여, 물적 인프라를 갖추게 됨(연면적: 2,000㎡)
※ 중재원의 국제중재 사건 수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의 2009년도 국제중재 사건 수와 대등한 수준으로, 싱가포르 심리시설 규모(4,500㎡)를 참고하였음

2023년 국제중재센터 운영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임차료 약 7억 1,300만원, 관리비 약 5억 1,300만원, 운영비 약 6,800만원, 국제중재조정센터 시설 개선 5,000만원임.

○ 2019년 국제중재센터는 사건접수 70건 및 수수료 수입 약 8억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의 경우 국제중재 사건접수 건수 54건 및 수수료 수입 약 3억 4천만원임.

국제중재 실무자 교육(약 2천만원)이나 국제중재유치 강화 등(약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제외하고도 2023년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보조금은 13억 4,500만원 정도임에도 국제중재의 수수료 수입이 3억 4,440만원에 불과한 것은 국제중재의 국내유치 실적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대한상사중재원이 수임한 국내·국제중재사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중재사건	사건접수 건수	373	336	450	304	314
	수수료 수입	1,916	2,204	1,915	1,898	2,009
국제중재사건	사건접수 건수	70	69	50	38	54
	수수료 수입	795	694	634	328	344
합계	사건접수 건수	443	405	500	342	368
	수수료 수입	2,711	2,898	2,549	2,226	2,353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인력·시설 확충, 국내기업의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통하여 국제중재 유치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입장임.

○ 국제중재가 국제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사건 유치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17]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기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법무부는 향후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상대 홍보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중재실적이 양호한 해외 중재기관의 사례를 연구하는 등 **국제중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①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 ②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 중재전문 인력의 양성, ④중재 관련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되는 제1차 기본계획은 2018년 말 수립하여 시행되었음. 제2차 기본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3조[18]에 따라

17) 참고자료: 해외 국제중재기관 현황 및 실적

18)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립되었어야 하나 2024년 7월까지도 수립되지 않았음.

법무부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기본계획의 수립 당사자인 상사중재원 국제센터 의장의 공석으로 수립이 다소 지연되었고, 2024년 2월 신임 의장이 선임되었으므로 기본계획 관련 절차 진행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임.

○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내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계획으로, 한국을 국제분쟁중재의 동아시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 해외 국제중재기관 현황 및 실적

※ 일반현황

기관명	주요내용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ICC ICA, 프랑스)	- 1923년 설립 - 중재기관 내에 합의체 의결기관인 중재법원(court)이 있고, 동 법원의 주도로 중재절차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 * 중재인 기피신청, 예납액 결정, 중재판정 심사 등 - 프랑스 파리(본부), 홍콩, 뉴욕 등 사무소 운영 중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AAA ICDR, 미국)	- 1926년 설립되었으며, 1996년 국제중재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국제분쟁해결센터를 산하기구로 설립하였음 - 국제적인 중재기관으로서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최근 ICDR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미국 뉴욕(본부), 싱가포르 등 사무소 운영 중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영국)	- 1892년 설립 - 영국법이 준거법인 중공업, 해외건설, 조선 관련 사건 등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 - 중재절차가 영국 소송제도에 친숙한 이용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의장을 영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중재전문가 35명을 상임위원(court member)으로 선임하여 이들이 중재법원(court)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영국 런던(본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사무소 운영 중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SIAC, 싱가포르)	- 1991년 설립 - 최근 ICC와 마찬가지로 중재법원(court) 제도를 도입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동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싱가포르(본부),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대한민국 서울 등 사무소 운영 중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 홍콩)	- 1985년 설립 - 다양한 국적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council)에 의해 운영되며, 주요 절차적 결정을 하는 위원회, 정책적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자문위원회, 일상적 사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등을 두고 있음 - 중국과 외국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홍콩(본부), 대한민국 서울에 사무소 운영 중
중국국제경제 무역중재위원회 (CIETAC, 중국)	- 1956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 설립된 후, 1988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 중국 내 존재하는 중재기관(CIETAC, BAC, SHIAC, SCIA 등)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재기관으로 평가됨 - 중국 베이징(본부), 선전, 상하이, 톈진, 홍콩 등 사무소 운영 중

* 자료: 법무부

※ 기관별 중재사건 접수현황

(단위: 건)

연도	사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KCAB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78	62	70	69	50	38	54
	전체	385	393	443	405	500	342	368
ICDR	전체	1,026	993	882	704	685	755	848
ICC	전체	810	842	869	946	853	710	미공개
LCIA	전체	285	317	395	440	377	293	327
SIAC	전체	452	402	479	1,080	469	357	663
HKIAC	전체	297	265	308	318	277	344	281
CIETAC	국제	476	522	617	739	636	642	645
	전체	2,298	2,962	3,333	3,615	4,071	4,086	5,237

* 자료: 법무부

(2)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가) 결산개요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1038-303)은 법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호사제도를 개선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을 지원하여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업무 수행 등을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7억 7,300만원이고 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000만원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73	-	-	-	773	723	40	10	744
·법조윤리협의회 민간경상보조	274	-	-	-	274	274	-	-	232

(나)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변호사법」 제88조[19]에 따른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20]로 2023년 예산 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되었음.

○ 법조윤리협의회는 비상근인 위원장과 위원 8명[21]으로 구성되고, 사

19) **「변호사법」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0) **「변호사법」 제89조의3(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1)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변호사법 제89조의

무국은 비상근인 사무총장, 파견검사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5명으로 구성됨.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22]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수임 자료[23] 및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서[24] 등을 검토하여 징계 사유[25]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함.[26][27]

이러한 검토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법조윤리협의회 내규인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의

---

2 제1항)

22) **「변호사법」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변호사법」 제89조의5

24) 「변호사법」 제89조의6

25) **「변호사법」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둠.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함(변호사법 제92조, 제96조)

27)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비리로 인하여 실추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7년 설립된 기관임 (제2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회의록(2006. 12. 22.), p.9)

경우 출근 수당은 회당 450,000원, 심사자료검토수당 건당 350,000원, 이메일 결재 수당 회당 300,000원 등을 지급함.[28] 다만, 상한선을 두어서 위원장은 최대 300만원, 사무총장은 최대 2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심사자료검토수당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2022.5.16. 일부개정)>

구분	위원장	사무총장
심사자료검토수당 (1건당)	350,000원	250,000원
출근 수당 (회당)	450,000원	350,000원
이메일 결재 수당 (회당)	300,000원	250,000원
기획연구비(매월15일 지급)	500,000원	300,000원
법조자료연구비(매월 15일 지급)	300,000원	200,000원

* 자료: 법무부

○ 2023년의 경우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심사자료검토수당으로 격월로 각각 300만원, 220만원을 지급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지급되지 않은 달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나머지 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였음.

<심사자료검토수당 집행 내역>

구분	지급 월	집행액
위원장	2월, 4월, 6월, 8월, 10월	1,500만원
사무총장	2월, 4월, 6월, 8월	880만원

* 자료: 법무부

위원장은 2023년 2월에 출근 수당 13회에 자료 검토 18건, 이메일 결재 1건, 기획연구비 및 법조자료수집비로 총 1,325만원의 수당이 책정되었

28) 사무총장의 경우 출근 수당은 회당 350,000원, 심사자료검토수당은 건당 250,000원, 이메일 결재 수당은 회당 250,000원임.

으나 지급 상한으로 인해 300만원을 지급받았음(출근수당 13회×45만원 + 자료검토비 18건×35만원 + 이메일 검토비 1건×30만원 + 기획연구비 50만원 + 법조자료수집비 30만원).

출근 횟수나 자료검토 수가 다른 달에 비해 월등히 적은 8월에도, 위원장의 경우 출근 수당 180만원(4회), 자료 검토 수당 210만원(6건), 이메일 결재 수당 150만원(5회) 총 540만원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획연구비와 법조자료 수집비까지 포함하면 620만원이지만 이 역시 상한에 걸려 300만원이 지급되었음.

○ 결국, 출근 횟수나 자료검토 수와 무관하게 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출근이나 자료검토 수당 등의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여짐.[29)]

<심사자료검토수당 지급 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위원장				사무총장			
	출근 횟수	자료 등 검토 및 토의 건수	이메일 결재 횟수	상한 고려 없는 지급액	출근 횟수	자료 등 검토 및 토의 건수	이메일 결재 횟수	상한 고려 없는 지급액
1월	10회	15건	5건	11,250	4회	15건	12건	8,150
2월	13회	18건	1건	12,450	6회	18건	7건	8,350
3월	10회	50건	5건	23,500	4회	20건	11건	9,150
4월	14회	60건	7건	29,400	4회	20건	13건	9,650
5월	9회	40건	9건	20,750	4회	20건	12건	9,400
6월	7회	30건	6건	15,450	4회	20건	9건	8,650
7월	8회	12건	3건	8,700	4회	12건	15건	8,150
8월	**4회**	**6건**	**5건**	**5,400**	**4회**	**6건**	**16건**	**6,900**

29) 2015. 5. 이전까지는 정액 수당으로 지급되었으나, 법무부 회계감사 때 개선 요구를 하여 수임자료 검토 건수를 기준으로 수당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지급 상한액을 설정함.

구분	위원장				사무총장			
	출근 횟수	자료 등 검토 및 토의 건수	이메일 결재 횟수	상한 고려 없는 지급액	출근 횟수	자료 등 검토 및 토의 건수	이메일 결재 횟수	상한 고려 없는 지급액
9월	4회	20건	2건	9,400	4회	20건	10건	8,900
10월	5회	25건	4건	12,200	5회	25건	11건	10,750
11월	5회	25건	6건	12,800	5회	25건	7건	9,750
12월	4회	20건	3건	9,700	4회	20건	7건	8,150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법조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및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비상근으로 별도의 보수가 없기 때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사자료 검토수당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자료 검토 수와 무관하게 수당이 상한액인 정액으로 지급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① **출근 수당**과 관련해서는 출근은 자료 검토나 회의 등을 위해 수반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위원장의 경우 현행 4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사무총장의 경우 현행 3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② **자료 검토 수당**과 **이메일 결재 수당**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1회 10만원인 점을 참고할 때, 각각 1회(1건)당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③ **자료 검토와 결재 횟수의 산정**과 관련해서, 자료 검토와 토의 건수 및 이메일 결재 건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1일에 1회만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법무부는 이러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수당 지급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가) 결산개요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1032-308)은 론스타, 쉰들러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30])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예방·대응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55억 400만원이고, 이 중 5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200만원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5,504	-	-	-	5,503	5,472	-	32	5,275
• 론스타	1,133	-	△837	-	296	296	-	-	1,912
- 일반수용비(210-01)	1,106	-	△813	-	293	293	-	-	1,883
- 국외여비(220-02)	24	-	△24	-	-	-	-	-	24
- 사업추진비(240-01)	3	-	-	-	3	3	-	-	5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91	-	30	-	121	121	-	-	84
- 일반수용비(210-01)	60	-	-	-	60	60	-	-	50
- 국외여비(220-02)	29	-	30	-	59	59	-	-	27
- 사업추진비(240-01)	2	-	-	-	2	2	-	-	2
- 국내여비(240-01)	-	-	-	-	-	-	-	-	5

30)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투자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협정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투자유치국 상대로 직접 중재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나)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론스타사건 주석의 충실한 기재 필요

○ 2012년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약 6.4조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제기하였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론스타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2023년 양측 모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취소절차가 진행 중임.

론스타 대응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에 11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8억 3,700만원은 쉰들러 사건[31]을 위해 내역조정이 되었으며, 2억 9,600만원이 집행됨.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기재부예규)[32]에 따르면, 충당부채,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

---

31) 2018년 10월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감독 의무 해태로 인해 최소 약 3,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함.

32)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18. (공시예외) (1)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에 대하여 실무적인 이유로 공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2)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법무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3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론스타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향후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만 기재하여 소송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공시를 생략한 사실 정도만 보고하고 있어, 재무제표만으로는 론스타 사건의 개요나 경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ISDS는 일반 소송과 달리 단심이고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34]에만 취소가 가능한바, 론스타 사건과 같이 본심의 판정이 있었다면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당해 분쟁의 개요와 경과, 공시를 생략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33) p.338~p.339

34) 일반적으로 ISDS 판정의 취소 사유로 i) 판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ii)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유월한 경우, iii) 중재인에게 부정이 있는 경우, iv) 절차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v) 판정문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음.

(다)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사업**에 2023년 예산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외여비(220-02)에서 5,9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총 1억 2,100만원이 집행됨.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사업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교육 및 자문위원회 운영, 법률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교육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11건, 2023년 3건이 실시됨.

<2022년~2023년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실적>

일시	교육대상
2022.03.11.	충남도청 외자유치팀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3.22.	경남도청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ISDS예방교육
2022.03.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4.08.	한국공항공사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4.19.	한국철도공사 법무실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5.10.	부산항만공사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5.25.	한국전력공사 해외투자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6.10.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8.11.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처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9.01.	한국전력공사 법무실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2.09.29.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외사업처 법무실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3.03.03.	충남도청 외자유치팀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3.03.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업무 담당자 대상 ISDS 예방교육
2023.06.26.	한국가스공사 직원 대상 ISDS 예방교육

* 자료: 법무부

○ 법무부가 ISDS 제소 후 정부대리로펌 등과 중재신청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쟁에 대응하거나 관계부처와 협력[35]하여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업무 담당자들이 투자협정에서 보호하는 내국민대우의무나 공정·공평대우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는 것이 사후 대응을 위한 로펌 비용이나 판정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된 법령, 행정처분 등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행정기관[36]의 장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장인 법무부 차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무부가 자문을 의뢰받아 검토를 진행한 것은 2022년 1건, 2023년 1건에 불과함.

2023년 국제법무국 신설 과정에서 ISDS의 대응 외에 '예방' 업무를 독립·분리하여 "국제투자분쟁과"(기존의 국제분쟁대응과)가 아닌 "국제법무지원과"에서 전담하도록 체제 개편을 하였음.

따라서, 법무부는 기존의 교육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3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와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함.

36) 유관기관도 포함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현재까지의 ISDS 판정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ISDS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37]

37) 법무부는 ISDS 관련 경험이 부족한 부처 및 지자체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ISDS 진단 및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올해 출판을 목표로 제작하고 있고, 해당 책자에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ISDS 사례 및 유형,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수록하는 한편, 이를 이용할 지자체·공기업 등 대상 ISDS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여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나. 인권활동

(1) 법률구조

(가) 결산 개요

○ 법률구조(1131-300)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법률구조 사업비를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보조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597억 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법률구조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법률구조	59,795	-	-	-	59,795	59,795	-	-
·법률구조가구 관리 및 연계강화	50	-	-	-	50	50	-	-
· 대한법률구조공단	57,827	-	-	-	57,827	57,827	-	-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1,918	-	-	-	1,918	1,918	-	-

(나)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지양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 축소 운영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동 사업을 통해 기본급,

상여금, 법정부담금, 퇴직기금전출금 등 인건비를 수지차 방식으로 보조받고 있음.

- 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38]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공단은 연도말 기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를 의미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적립의무액)와 관련된 의무이행을 담보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퇴직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한 후 퇴직적립금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실제로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은 급격히 감소해왔음.

---

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급여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 적립의무액(A)	퇴직급여적립액(B)	퇴직급여 적립율(B/A)
2013년	27,241	19,947	73.2
2014년	31,923	20,909	65.5
2015년	37,408	22,391	59.9
2016년	39,879	22,452	56.3
2017년	44,731	25,187	56.3
2018년	48,821	25,545	52.3
2019년	53,072	24,356	45.9
2020년	57,103	24,065	42.1
2021년	59,520	20,941	35.1
2022년	65,803	17,862	27.1
2023년	65,631	15,809	24.1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기타	자본총계	
2013년	118,761	888	27,241	28,129	-	90,632	90,632	31.04
2014년	120,646	1,131	31,923	33,054	-	87,593	87,593	37.74
2015년	119,697	1,874	37,376	39,250	-	80,448	80,448	48.79
2016년	121,200	1,798	39,776	41,574	-	79,626	79,626	52.21
2017년	123,678	2,036	44,590	46,626	-	77,052	77,052	60.51
2018년	123,217	1,695	48,551	50,246	-	72,971	72,971	68,86
2019년	125,116	2,089	52,944	55,033	-	70,083	70,083	78.53
2020년	124,597	1,777	56,779	58,556	-	66,041	66,041	88.67
2021년	115,295	2,188	59,520	61,708	-	53,587	53,587	115.15
2022년	104,311	1,501	65,803	67,304	-	37,007	37,007	181.87
2023년	92,535	1,785	65,631	67,416	-	25,119	25,119	268.39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러한 기형적 구조는 단순한 퇴직급여 적립률 저하뿐만 아니라 공단 전체의 부채비율 급증 및 재무건전성의 심각한 악화를 야기하였

음. 2013년도 말 73.2%이던 퇴직적립금 적립률(퇴직급여적립액/퇴직급여충당부채)은 2023년도 말 24.1%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39] 공단 전체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3년도 말 기준 31.04%에서 2023년도 말 268.39%로 급증하였음.

○ 공단의 퇴직급여 적립률 급감 및 부채비율 급증 문제는 근본적으로 호봉제 운영에 따른 기형적인 인건비 운용구조에 기인함. 동 사업을 통해 공단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인건비는 전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처우개선분만 반영하고 개별적인 호봉 승급, 승진소요액 등은 미반영된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에 따라 편성됨. 그럼에도 공단은 재직기간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되는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한 처우개선분은 100%를 반영해왔기에 예산 편성과 실제 보수체계 간 괴리가 구조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임.[40]

○ 또한, 근본적인 인건비 문제와 더불어 공단의 퇴직급여적립금 예산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다음의 두가지 문제가 반복되어 왔음.

- 먼저, 공단은 지난 10년간 법률구조 사업에서 장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당초 편성 취지와는 다

39) 2023년도 말 기준 공단의 부채 규모는 약 674억원(퇴직급여충당부채 656억원, 연도 말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5억원, 원천징수예수금 등 13억원)으로, 부채 중 대부분이 퇴직급여충당부채에 해당함

40) 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1987년 설립 당시 당정협의에 의해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 공무원 보수표를 준용하는 호봉제 운용이 확립되었으나, 이후 예산 편성 시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른 호봉승급분 등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기본급 등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음. 다만, 기재부는 올해 초 202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음.(정부 202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급 도입한다, 대한경제, 23.2.3.)

르게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해 왔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적립액이 당초 예산 편성분 만큼 적립되지 못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퇴직급여적립액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퇴직적급여적립액		증감(B-A)
	당초 예산(A)	수정 예산(A)	
2013년	1,625,156	1,869,648	244,492
2014년	1,418,141	948,588	△469,553
2015년	1,368,022	918,022	△450,000
2016년	1,797,964	1,922,527	124,563
2017년	1,800,000	968,613	△831,387
2018년	1,800,000	470,989	△1,329,011
2019년	1,994,000	273,445	△1,720,555
2020년	1,994,000	934,927	△1,059,073
2021년	1,994,000	357,872	△1,636,128
2022년	1,994,000	1,407,004	△586,996
2023년	1,800,000	1,166,317	△633,683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다음, 공단은 퇴직적립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적립액을 재원으로 직원 대상 복리후생의 일환인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2023년도 말 기준 장단기대여금 규모: 약 38억 3,400만원), 금리 및 한도 기준(금리: 무이자 또는 연1.5%, 한도: 3,000만원 또는 5,000만원)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41]상 기준(금리 하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41)**「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④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 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이 제4항의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경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야한다.
* 매년 1월 1일(1분기), 4월 1일(2분기), 7월 1일(3분기), 10월 1일(4분기) 금리를 각 분기 중 적용

가계자금대출금리, 한도: 2,000만원)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가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유상대부	무상대부(비연고지 근무자)
대상	임·직원	임·직원 중 비연고지 근무자
상환조건	1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① 대부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 상환 ② 연고지 발령, 관사입주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전액상환
금리	연 1.5%	무이자
최대지원한도	5,000	3,000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가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적립금을 타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필요

○ 공단의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 정보에 따르면, 공단은 생활안정자금 대부에서 발생하는 장단기대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으로 인식하는 적립률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퇴직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준 〉

13. 퇴직급여충당금

(1) 당기 및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당기	65,802,506,583	3,534,308,287	(3,705,418,572)	65,631,396,298
전기	59,519,646,218	12,053,392,908	(5,770,532,543)	65,802,506,583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퇴직적립금 특별회계상 보유중인 금융상품 및 대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946,080,825	4,282,117,334
단기금융상품	8,028,302,429	7,869,808,545
장기금융상품	-	-
단기대여금(주)	1,158,206,545	1,337,464,693
장기대여금(주)	2,676,287,479	4,372,936,903
합계	15,808,877,278	17,862,327,475
적립률	24.09%	27.15%

(주) 장· 단기대여금은 임직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퇴직급여를 담보로 운영되며 임직원이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자금이 퇴직기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혹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전입되어 퇴직금에 충당되므로 적립률 산정에 포함했습니다.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발췌

○ 공단은 퇴직급여 적립률이 특히 급감한 2021년도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하여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률 산정 방식은 퇴직급여 적립률이 높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지만,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가용자산과 회계처리상 인식되는 적립액 사이의 괴리를 야기하여 재무건전성을 투명하게 인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42)]

<최근 1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급여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 적립의무액(A)	퇴직급여 적립액(B)	퇴직급여 적립율(B/A)
2013년	27,241	19,947	73.2
2014년	31,923	20,909	65.5
2015년	37,408	22,391	59.9
2016년	39,879	22,452	56.3
2017년	44,731	25,187	56.3
2018년	48,821	25,545	52.3
2019년	53,072	24,356	45.9
2020년	57,103	24,065	42.1
2021년	59,520	20,941	35.1
2022년	65,803	17,862	27.1
2023년	65,631	15,809	24.1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실제로, 공단이 주석에 공시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급여 적립률이 각각 35.2%, 27.1% 24.1%인 것으로 보이나, 퇴직기금 적립액 중 실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 3개년 간 적립률은 각각 25.2%, 18.5%, 18.2%로 퇴직급여 적립률이 5.9%p~1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남.

42) 가령 2023년도 말 현재, 장단기대여금을 포함한 적립률은 24.1%이나, 장단기대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적립률은 18.2%로 많은 차이가 있음.

<최근 3년간 회계처리 방식별 퇴직급여 적립률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 적립액			퇴직급여 적립률		퇴직금 지출액
		실제 가용자금 (공단 보유분)	장단기대여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액)	합 계	실제 가용자금 기준	현재 회계처리 기준	
2021년	59,520	14,987	5,954	20,941	25.2	35.2	4,506
2022년	65,803	12,152	5,710	17,862	18.5	27.1	5,540
2023년	65,631	11,974	3,834	15,808	18.2	24.1	3,773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 자료 가공

- 특히, 공단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규모를 넘어서는 '초과대출액'까지도 적립액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초과대출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발생여부와 무관하며, 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용도가 아니라 임직원 복리후생차원으로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자금이므로, 퇴직급여적립액으로 보아 적립률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2023년도 말 기준 퇴직급여 적립액 중 공단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은 120억원 가량이나, 최근 3개년 간 퇴직금 지출액은 연평균 46억원 가량이며, 향후 퇴직자의 증가로 연간 퇴직금 지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급여 고갈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바, 보다 보수적으로 공단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함으로써, 실제 가용자금과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 시 인식되는 자본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

업에 사용하고 있는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실제 공단 보유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가) 결산 개요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301) 사업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48억 4,600만원 중 4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4,846	-	-	-	4,846	4,030	-	816
· 인건비	3,751	-	-	-	3,751	3,105	-	646
· 홍보, 회의, 교육	143	-	-	-	143	142	-	1
· 특근매식비	4	-	-	-	4	4	-	
· 맞춤형 복지비	33	-	-	-	33	30	-	3
· 홈페이지 유지관리	48	-	-	-	48	44	-	4
· 출장, 지도점검	113	-	-	-	113	67	-	46
· 간담회, 사례회의	9	-	-	-	9	9	-	
·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14	-	-	-	14	14	-	
· 퇴직연금, 4대보험	731	-	-	-	731	614	-	117

(나) 연례적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필요

○ 동 사업은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 6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각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임. 법률홈닥터의 정원은 2017년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강화'의 세부계획에 따라 60명에서 65명으로 증원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도 편성 예산 중 법률홈닥터 65명을 고용하는 데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 등[43]은 44억 8,200만원으로 총 사업 예산의 약 92.5%를 차지함.

○ 그러나 동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격오지 등 일부 배치기관 장기공석으로 최근 5년간 결원이 지속되면서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불용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8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결산내역 및 2024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4,418	4,418	-	-	4,418	4,168	94.3	94.3	-	250
2020	4,549	4,549	-	-	4,549	4,170	91.7	91.7	-	379
2021	4,570	4,570	-	-	4,570	4,188	91.6	91.6	-	382
2022	4,703	4,693	-	△2	4,691	3,981	84.8	84.9	-	710
2023	4,846	4,846	-	-	4,846	4,030	83.2	83.2	-	816
2024	4,998	4,998	-	-	-	-	-	-	-	-

43) 인건비 및 퇴직연금, 4대보험

○ 최근 5개년 간 법률홈닥터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로 결원이 급증하였고, 최근 2024년도 6월 채용으로 장기공석이 해소되고 현원이 64명으로 증가하여 결원이 1명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최근 5개년 간 연중 퇴직 및 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인력 채용 및 결원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개년 간 법률홈닥터 인력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정원	현원			결원	채용	복직	퇴직	휴직
		합계	정규	대체					
2020년	65	60.92	56.83	4.5	3.67	1.17	0.33	1.08	0.17
2021년	65	60.08	56.5	3.58	4.92	1.17	0.17	1.25	0.73
2022년	65	55.92	50.08	5.83	9.17	1.17	0.58	1.33	0.42
2023년	65	55.92	51.0	4.92	9.08	1.75	0.42	1.17	0.75
2024년	65	57.5	51.8	5.70	7.50	2.30	0.50	1.50	0.50

cf. 위 인력 현황은 연평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년도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수치임.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지속적인 퇴사·휴직 및 채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연중 인력 채용 및 운용 과정에서 신속한 결원 보충을 통해 연례적인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인권교육

(가) 결산 개요

○ 인권교육(1133-300)은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내부강사를 대상으로 내·외부강사가 2박 3일 합숙훈련을 진행하는 '인권감수성 훈련', 검사·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외부강사가 당일교육을 진행하는 '1:1 맞춤형 교육',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당일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기관방문교육'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2억 1,400만원 중 2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교육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 인권교육	214	-	-	-	214	212	-	2
· 인권감수성훈련	175	-	-	-	174	172	-	2
· 1:1 맞춤형 교육	30	-	-	-	29	29	-	-
· 외부강사 기관방문	9	-	-	-	11	11	-	-

(나)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한 임차료 분할 집행 개선 필요

○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44]는 소관 세출예산을 지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성질상 통상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해당 관서의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3항 [별지 1호]는 운영비(210목)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의 집행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지출하여야 하며, 관서운영경비로 지

---

44)**「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하여서는 아니 됨.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제3항 [별지 1호] 일부 발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감수성훈련' 사업에서는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외 인권교육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운영비(210)에 해당하는 임차료(210-07)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임차료는 정기적인 인권교육 사업 추진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되는 일정 규모 이상 교육대상자의 숙박 또는 교육장소 임차비용인 바,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성질상 통상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동 사업에서 임차료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특히, 법무부가 단일 교육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2건으로 분할하여 동일한 시기에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없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인권교육 사업 교육별 예산 소요비용 일부 발췌〉

연번	시작일	종료일	교육명	장소	강사료(원)	임차료(원)	교육생 식비(원)	운영진 여비(월별)
1	2023-02-20	2023-02-24	신규강사양성 및 보수교육(교정)	00인재개발원	3,510,000	7,399,700	2,388,540	-
2	2023-11-23	2023-11-24	내부 인권강사 역량강화	00인재개발원	500,000	5,445,000	2,601,280	2,291,980

* 자료: 법무부

〈인권교육 사업 관서운영경비 지급부 일부 발췌〉

연번	지급일자	세목	수령인명	지급내역	지급액(원)
1	2023-03-20	임차료	주식회사 00	인권교육 임차료(교정직 신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시설사용료)	4,389,000
	2023-03-20	임차료	주식회사 00	인권교육 임차료(교정직 신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시설사용료)	3,010,700
2	2023-12-11	임차료	주식회사 00	인권교육 임차료(내부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시설사용료)	2,530,000
	2023-12-11	임차료	주식회사 00	인권교육 임차료(내부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시설사용료)	2,915,000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를 원칙적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서운영경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출장자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

○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됨.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출장자가 결제를 한 뒤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정산·지급하고, 그 외 여비는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절차>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여비의 지급방법

1) 국내 운임과 숙박비(영 제8조의2 제1항)

가)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영 제8조의2 제1항[45]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출장지에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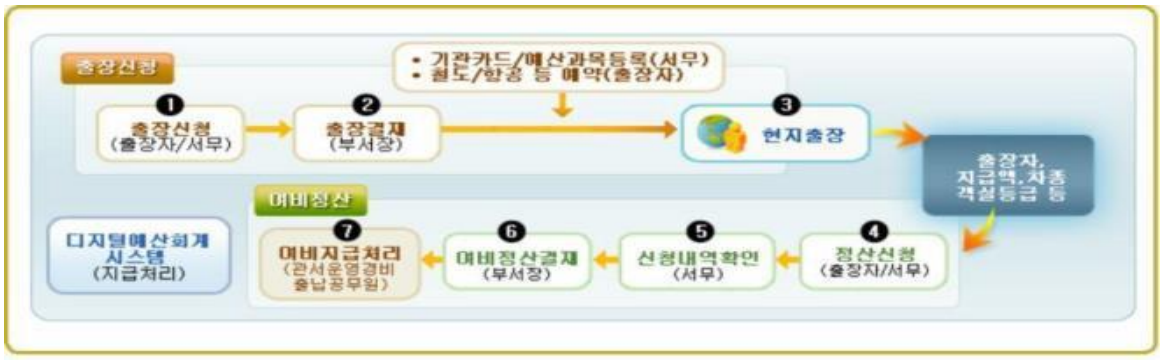
3) 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정산절차 (참고 : 출장 및 여비정산절차)



* 자료:「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일부 발췌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권감수성훈련’ 사업에는 교육생 식비 및 내부강사·운영진 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6,2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그런데 법무부의 국내여비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된 국내여비 6,200만원 중 약 3,200만원은 출장자가 아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관에 직접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에 위반되는 집행임.

<국내여비 출장자 외 지급내역>

지급일자	세목	수령인명	지급내역	지급액	증빙구분명
2023-03-20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신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2,388,540	전자세금계산서
2023-03-20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출입직 신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863,940	전자세금계산서
2023-03-31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 신규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1,166,880	전자세금계산서
2023-03-31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검찰직 인권감수성훈련 신규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972,400	전자세금계산서
2023-04-19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1,570,800	전자세금계산서
2023-04-28	국내여비	00연수원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980,000	품의서
2023-04-28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검찰직 인권감수성훈련)	1,466,080	전자세금계산서
2023-05-02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출입직 인권감수성훈련)	1,099,560	전자세금계산서
2023-06-05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과정)	1,570,800	전자세금계산서
2023-06-05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과정)	1,570,800	전자세금계산서

45)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3-06-16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1,518,440	전자세금계산서
2023-07-04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검찰직 인권감수성훈련)	1,256,640	전자세금계산서
2023-07-04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출입국관리직 인권감수성훈련)	1,413,720	전자세금계산서
2023-07-11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제5회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1,047,200	전자세금계산서
2023-07-11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제2회 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	1,047,200	전자세금계산서
2023-09-22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제3회 검찰직 인권감수성훈련)	1,141,140	전자세금계산서
2023-09-22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제3회 출입직 인권감수성훈련)	960,960	전자세금계산서
2023-09-22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제3회 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	1,201,200	전자세금계산서
2023-09-22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제3회 인권감수성훈련 시설사용료)	462,000	전자세금계산서
2023-10-31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1,441,440	전자세금계산서
2023-10-31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보호직 인권감수성훈련)	1,321,320	전자세금계산서
2023-10-31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인권감수성훈련)	539,000	전자세금계산서
2023-12-11	국내여비	주식회사00	인권교육 국내여비(내부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	2,601,280	전자세금계산서
2023-12-18	국내여비	00연수원	인권교육 국내여비(제7회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784,000	품의서
2023-12-18	국내여비	00연수원	인권교육 국내여비(제8회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840,000	품의서
2023-12-18	국내여비	00연수원	인권교육 국내여비(제9회 교정직 인권감수성훈련)	784,000	품의서
합계				**32,009,340**	-

* 자료: 법무부

○ 이러한 방식의 국내여비 집행은 실제 출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출장당사자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정산 절차를 우회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인권국기본경비

(가) 결산 개요

○ 인권국기본경비(7011-263)는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9억 2,6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300만원 및 이전용 증액 8,200만원을 더한 10억 2,000만원으로, 이 중 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권국기본경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 인권국기본경비	926	13	82	-	1,020	967	-	53
· 운영비	397	-	99	-	496	462	-	34
· 여비	178	-	-	-	178	166	-	12
· 업무추진비	122	-	-	-	122	116	-	6
· 직무수행경비	25				25	25	-	-
· 연구용역비	108	13	△52		69	69	-	-
· 보전금	20				20	20	-	-
· 유형자산	75		35		110	109	-	1

(나) 임차료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 동 사업의 운영비에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210-07)가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 각목명세서상 '업무용 승용차 렌트, 인권견학(차량임차) 등, 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국제인권회의 동시통역시스템 임차' 목적으로 3,042만원의 임차료가 편성되었으며, 그 중 약 2,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인권국 기본경비 임차료 2023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210-07]임차료		30,424
1.업무용 승용차 렌트	1,177,000원*12월=	14,124
2.인권견학(차량 임차) 등	450,000원*14회=	6,300
3.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7,000,000원=	7,000
4.국제인권회의 동시통역시스템 임차	3,000,000원=	3,000

○ 그러나 임차료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업무용 승용차 렌트비(1,023만원 집행)를 제외한 모든 임차료를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집행하였음.

인권견학(차량 임차) 등 예산은 코로나 19 및 인식 저하로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2023년을 포함하여 최근 3개년 간 집행되지 않았으며, 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및 동시통역시스템 임차 예산은 세계인권선언(12.10.)을 기념해 인권국에서 주관하는 국제인권회의를 개최하는 비용이나, 2022년 및 2023년 국제인권회의가 미개최됨

에 따라 최근 2개년 간 집행되지 않았음.

<인권견학 차량임차 및 국제인권회의 관련 예산 3개년 집행내역>

구분	설명	2021년 집행액	2022년 집행액	2023년 집행액
인권견학 차량임차	국민(중·고·대학생)이 방문을 신청한 법무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견학 프로그램 운영	0원 ※ 코로나19로 신청자 없음	0원 ※ 코로나19로 신청자 없음	0원 ※ 코로나19 및 인식저하로 신청자 없음
국제인권회의 동시통역 시스템	세계인권선언(12.10.)을 기념해 인권국에서 주관하는 국제인권회의가 있을 시 동시통역 송수신 시스템 등을 대여하는 비용	2,970,000원	0원 ※ UPR 심의(23.1.) 준비로 국제인권회의 미개최	0원 ※ 법무부 주관 UN 심의(2회) 및 후속조치로 국제인권회의 미개최
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세계인권선언(12.10.)을 기념해 인권국에서 주관하는 국제인권회의가 있을 시 회의장을 임차하는 비용	20,769,400원	3,270,000원 ※ UPR 심의(23.1.) 준비로 국제인권회의 미개최 *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대비 관계부처 회의장 임차 등에 사용	7,054,800원 ※ 법무부 주관 UN 심의(2회) 및 후속조치로 국제인권회의 미개최 *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및 자유권규약 심의대비 관계부처 회의장 임차, 유엔 사회권규약 국가보고서 간담회 대관료 등에 사용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미집행된 예산 1,630만원 중 약 1,450만원을 당초 편성 목적에는 없었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타 장비 임차료(약 670만원)와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자유권규약 심의 대비 관계부처 협의 등 타 회의 관련 임차료(약 780만원)로 활용하였음.

<인권국기본경비 임차료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내역	지급액	계정과목명
2023-01-19	임차료(인권국 공기청정기 등 12월 사용료 지급)	513,500	기타자산임차료
2023-02-16	임차료(인권국 공기청정기 등 1월 사용료 지급)	429,010	기타자산임차료
2023-03-20	임차료(인권국 공기청정기 등 2월 사용료 지급)	495,310	기타자산임차료
2023-04-21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495,310	기타자산임차료
2023-05-19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456,080	기타자산임차료
2023-06-20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487,120	기타자산임차료
2023-07-19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487,120	기타자산임차료
2023-07-25	임차료(공기청정기 필터)	44,190	기타자산임차료
2023-08-02	임차료(정수기 반환 금액)	25,500	기타자산임차료
2023-08-24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466,980	기타자산임차료
2023-08-24	임차료(CHPI-5801L, 정수기1대)	147,900	기타자산임차료
2023-09-15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664,020	기타자산임차료
2023-10-23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664,020	기타자산임차료
2023-11-28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664,020	기타자산임차료
2023-12-19	임차료(공기청정기14대, 정수기1대)	664,020	기타자산임차료
2023-02-14	임차료(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관련 인터넷 연결 장치 임대)	216,600	기타자산임차료
2023-08-28	임차료(자유권규약 제5차 관계부처회의 대관료)	660,000	기타자산임차료
2023-05-02	임차료(UN 인권메커니즘 워크샵 대관료)	1,741,600	기타자산임차료
2023-08-24	임차료(유엔 사회권규약 국가보고서 정부-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대관료)	2,346,600	기타자산임차료
2023-01-05	임차료(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대비 2차 관계부처 회의장 임차)	850,000	건물임차료
2023-09-15	임차료(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대비 관계부처 회의(서울역))	650,000	건물임차료
2023-10-05	임차료(제5차 자유권규약 심의 대비 관계부처 회의)	590,000	건물임차료
2023-02-23	임차료(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제3차 회의 임차료)	330,000	건물임차료
2023-07-27	임차료(인권 정책 간담회)	330,000	기타자산임차료
2023-05-22	임차료(법의날 무전기 렌탈 비용)	110,000	기타자산임차료

* 자료: 법무부

○ 참고로 2024년도 확정예산에는 인권견학 사업의 폐지로 인권견학 차량임차 예산 630만원이 삭제되고, 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예산이 63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회의장 임차 비용이 1,300만원 추가적으로 편성되었음.

<인권국 기본경비 임차료 2024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210-07]임차료		43,424
1.업무용 승용차 렌트	1,177,000원*12월=	14,124
2.국제인권회의 회의장 임차	13,300,000원=	13,300
3.국제인권회의 동시통역시스템 임차	3,000,000원=	3,000
4.범죄피해자지원 관련 회의장 임차	13,000,000원=	13,000

○ 2024년도 예산부터는 인권국 주관 예정인 국제인권회의 관련 예산이 확대되었는 바, 법무부는 매년 예산에 편성된 국제인권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임차료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포상금을 적정 비목으로 조정할 필요

○ 인권국은 기본경비에 인권보호 상황평가 우수기관을 포상하기 위한 포상금(310-03)을 편성하여 매년 포상하고 있음. 2023년에는 포상금 예산 2,000만원을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 등 30개 기관[46]을 대상으로 집행하였음.

<인권국 기본경비 포상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포상금명	예산액	집행액	예산집행 과목	포상이유	법적 근거	수령 대상기관
인권국 기본경비	인권보호 상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20	20	310-03 (포상금)	인권보호 우수기관에 대한 선정	인권보호 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	보호관찰소 및 교도소 등 30개 기관

* 자료: 법무부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보전금(310목)에 대한 공통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보전금 중 포상금(310-03) 비목으로는 법령에 근거를 둔 “신고포상금”,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정부업무

46) 서울북부보호관찰소(보수),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 청주보호관찰소 ,제천지소우수인권 ,서울보호관찰소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지검서부지청 ,대전지검서산지청 ,밀양검찰청 ,대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진주교도소 , 천안개방교도소 ,인천출입국 ,화성외국인보호소 ,서울소년원 ,대전보호관찰소 ,수원지방검찰청 ,부산지검서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제주교도소(우수상금) ,서울구치소 ,전주교도소 ,공주교도소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부산소년원 ,대구보호관찰소구미지소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 ,청주보호관찰소

평가 기본법」 제30조에따른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편성·집행할 수 있음.

○ 그러나 인권국 기본경비에서 지출되는 “인권보호상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법무부훈령(행정규칙)인 「인권보호상황평가 및 포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이 아닌 하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상금인바, 해당 상금을 포상금(310-03)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인권보호 상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기타운영비(210-16)[47] 비목으로 편성되는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볼 수 있는 바,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인권보호 상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예산의 비목을 포상금(310-03)에서 기타운영비(210-16)로 조정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47)「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210-16 기타운영비
1. 기업특별회계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2.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3.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다. 출입국활동

(1)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가) 결산개요

○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1231-300)은 이민행정의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이민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은 3억 9,000만원이고 이 중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00만원임.

<이민정책개발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이민정책개발지원	390	-	-	-	390	370	-	20	386

(나)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48]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49]

---

48)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외국인 및 이민 분야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4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50] 법무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4조).[51]

○ 법무부장관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2023년 12월 27일이 되어서야 확정하였고(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2018년 3월경 확정), 법무부는 2024년 1월에서야

---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5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해 시행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소관별로 매년 10월 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에 관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3년 및 2024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였으며, 법무부는 2024년 5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및 2024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음.

법무부는 기본계획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인구감소 등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사회갈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확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무부가 지연 이유로 언급한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민자 유입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2023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점, 특히 2023년 12월 말에서야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2023년 시행계획**은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혼선을 가져왔다는 점 등의 원인은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에 수립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외국인정책이 시행되기보다는, 재한외국인 수의 급증, 인구소멸지역 확대 등 급격히 변화된 대외·대내적 이민환경에 필요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적시에 수립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앞으로 외국인정책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국가현안인 출입국·이민정책이 제때 수립·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검찰활동

(1) 총괄적 검토

(가) 개관

○ 법무부는 검찰청 소관 예산을 법무부의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과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7000) 내의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7002-101), 검찰청운영기본경비 세부사업(7018-202, 7018-252)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검찰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1조 1,873억원이고 집행액은 1조 1,785억원임.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무부의 검찰청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2019년	1,063,002	1,060,001
2020년	1,099,439	1,074,074
2021년	1,165,534	1,120,816
2022년	1,162,670	1,134,512
2023년	1,187,350	1,178,488

*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검찰청 소관 예산은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프로그램에 속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제외하면 검찰활동 프로그램에 속한 17개의 세부사업에서 편성·집행되고 있으며, 이 중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는 법무부 소관 예산과 검찰청 소관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 있음.

<2023년도 검찰청 소관 예산이 반영된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검찰청시설운영	검찰청	81,894	0	△572	0	81,322	80,975	205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법무부	6,717	-	△163	-	6,555	-	-
	검찰청	1,156	-	△127	-	1,027	-	-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법무부	142	-	△1	-	141	-	-
	검찰청	9,194	-	△279	-	8,656	97	161
국제형사협력지원(ODA)	법무부	2,128	-	-	-	2,115	-	13
	검찰청	381	-	-	-	377	-	4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R&D)	검찰청	2,677	-	-	-	2,603	-	74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법무부	871	-	△2	-	869	-	-
	검찰청	24,872	74	△113	-	24,776	-	57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검찰청	31,164	-	-	-	30,811	-	353
첨단범죄및디지털 수사(정보화)	법무부	46	-	-	-	45	-	1
	검찰청	9,728	81	-	-	9,561	-	248
형사부 등 수사지원	검찰청	85,894	5	△628	-	85,223	37	10
공공수사	법무부	163	-	-	-	162	-	1
	검찰청	2,946	-	-	-	2,944	-	2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법무부	173	-	△58	-	115	-	-
	검찰청	12,376		△12	-	12,359	-	5
마약수사	법무부	74	-	△2	-	72	-	-
	검찰청	4,783	-	△7	-	4,767	-	9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	검찰청	4,290	-	△44	-	4,244	-	1
사회공정성 저해사범수사	법무부	143	-	△9	-	134	-	-
	검찰청	6,164	-	△33	-	6,129	-	2
공판활동지원	법무부	59	-	-	-	59	-	-
	검찰청	2,502	-	△10	-	2,492	-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법무부	200	-	△13	-	187	-	-
	검찰청	7,100	111	△18	-	7,192	-	-
형사보상	검찰청	40,000	-	16,852	-	56,851	-	-
검찰청운영 인건비(총액)	검찰청	803,946	-	△14,926	-	781,485	-	7,535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	검찰청	30,865	-	299	-	31,002	-	162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검찰청	14,352	-	△15	-	14,322	-	14

* 자료: 법무부

(나) 대검찰청 인력운영에 있어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이행 필요

○ 감사원은 2020년 대검찰청 등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대검찰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검사 및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파견 등의 형식으로 더 많은 인력을 운영하는 등 인력운용의 부적정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음.[52)]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검찰의 초과 인력 운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바 있음.

<검찰 인력운영 관련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내용>

구 분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2021 회계연도 결산	○ 검사 및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감사원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기준 서울중앙지검 등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11명의 검사와 149명의 일반직 등 총 160명의 인력을 여전히 파견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대검찰청 정원 581명 대비 27.5%)	○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인력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파견받아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인사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정원 외 인력 운용 규모를 최소화할 것(제도개선)
2022 회계연도 결산	○ 감사원이 2020년 정기감사 결과 대검찰청 및 법무부 검찰국의 인력운용에 대한 통보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법무부 및 대검찰청은 법령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검사 및 검찰공무원을 운용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그러나 2023년 검찰의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여전히 대검찰청의

52) 감사원,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 2021.3.

인력 초과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의 결산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대검찰청은 2023년 5월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검찰청의 검사 정원을 9명(68명→77명) 증원[53]하였고, 2023년 4월 및 12월 두 차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검찰청의 검사 외 공무원 정원을 19명(515명→534명) 증원하는 등 정원과 실제 운영 인력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실제 근무 인원은 2023년말 기준 검사 91명, 검사 외 공무원 695명으로 정원과 대비하여 검사 14명, 검사 외 공무원 161명 등 총 175명이 파견 등의 형식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2022년 대비 169명→175명으로 확대되었음. 특히, 검사의 초과 운영 인력은 14명으로 2019년(18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임.

53) 당시 「검사정원법 시행령」개정이유로, 검찰이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고검·대전고검·수원고검의 검사 정원을 대검찰청에 이체한다고 설명함.

<연도별 대검찰청 정원 및 실제 근무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검사	검사외 공무원	계	검사	검사외 공무원	계	검사	검사외 공무원	계	검사	검사외 공무원	계
정원(A)	68	514	582	68	513	581	68	515	583	77	534	611
실제근무 인원(B)	78	665	743	79	652	731	78	674	752	91	695	786
차이 (B-A)	10	151	161	11	139	150	10	159	169	14	161	175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서 대규모 인원을 파견받아 정원 외로 활용하는 인력운용 방식이 지속될 경우,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을 야기하는 등 검찰청 전체 조직 및 인사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검사의 경우 2023년말 기준 정원 2,292명 대비 현원은 2,092명(충원률 91.3%)이었는데, 법무부 및 대검찰청 근무 인원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고검, 지검, 지청)의 검사 정원은 2,215명[54], 현원은 1,950명으로 충원률이 88.0%(1,950명/2,215명) 수준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취지에 맞추어 대검찰청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원소속청 복귀 등 과도한 초과 인력 운영을 감축·해소하기 위한 인력 관리 방안을

54) 검찰청 소속 검사 정원 2,292명 - 대검찰청 검사 정원 77명 = 2,215명
*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검사 정원은 별도로 운영함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기관별 정원과 실제 운영인력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연구용역비(260목) 결산

①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는 세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2023년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11개 세부사업에 연구용역비(260목)로 총 68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64억 4,4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3%)하였음. 이 중 일반연구비로는 66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62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정책연구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연구용역비(260목)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비목	내역(각목명세서 기준)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일반연구비(260-01)	각국의 범죄인인도 심사절차 비교 연구	10	20	-	-
		아세안과의 형사사법공조 강화방안 연구	10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일반연구비(260-01)	스마트폰 녹음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	50	419	-	11
		LC-MS/MS를 이용한 생체시료 중 마약류 동시 분석법 개발	60			
		SNP 변이 활용 연구(3년차)	90			
		환각선인장의 메스칼린 생성 유전	40			

세부사업명	비목	내역(각목명세서 기준)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자를 이용한 종식별 마커 개발				
		AI 기반 문서감정 통합환경 구축 연구	100			
		법생물 DNA바코드 DNA DB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90			
		APC-HUB 홈페이지 온라인교육시스템 및 보안 업그레이드 개발	35	33	-	2
		QR코드 전자팩스 통신수사시스템	97	0	97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연구개발 사업 (1333-305)	일반연구비 (260-01)	디지털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 기술 연구	580	550	-	30
		형사사법 증거 분석기법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453	419	-	34
		사이버 범죄 수집정보의 증거화 방안 연구	667	660	-	7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일반연구비 (260-01)	검찰활동 등 관련 연구개발비	240	205	-	35
		검찰사무관 승진 관리역량평가 개발 및 운영	305	305	-	-
		양성평등정책관련 연구개발비	30	30	-	-
		도서관 통합전자시스템 구축	312	312	-	-
	정책연구비 (260-02)	형사부 전문분야 연구 및 수사기법 개발비	50	50	-	-
		대검 인권부 연구개발비	40	40	-	-
검찰업무 정보화 (1334-500)	일반연구비 (260-01)	감리 및 컨설팅	241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488	896	-	48
		차세대 검찰통계시스템 구축 ISP	215			
		검찰방송 콘텐츠 제작 기술 용역	500	464	-	36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334-501)	일반연구비 (260-01)	모바일포렌식도구 획득분석 대상 확대 개발	250			
		디지털증거 획득·분석 기법 등 연구 개발	300	734	-	6
		암호탐지 및 암호해독 기법 연구 개발	120			
		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 및 개선	70			
		사이버 성범죄 불법촬영물·가	105	290	-	23

세부사업명	비목	내역(각목명세서 기준)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상화폐 추적 기법 연구개발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	208			
형사분쟁수사지원 (1335-301)	일반연구비 (260-01)	미래발전 연구용역비	466	421	37	8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1335-303)	일반연구비 (260-01)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10	10	-	-
	정책연구비 (260-02)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구 등	60	60	-	-
마약수사 (1335-304)	일반연구비 (260-01)	아태지역 마약정보 조정센터 홈페이지 개선	8	8	-	-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시스템 구축	351	342	-	9
공판활동지원 (1337-300)	정책연구비 (260-02)	적정한 양형, 사건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50	50	-	-
형사법정비 (1338-300)	일반연구비 (260-01)	형사법 정비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 대응 관련 정책연구	130	126	-	4
합 계			**6,831**	**6,444**	**134**	**253**
일반연구비(260-01) 소계			**6,631**	**6,244**	**134**	**253**
정책연구비(260-02) 소계			**200**	**200**	**-**	**-**

* 자료: 법무부

○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55]에 따르면, 연구용역비(260목) 중 일반연구비(260-01)는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을 목적으로 편성·집행하며, 구체적으로는 기술용역,[56] 전산용역,[57] 임상연구용역,[58] 기타 연구용역[59]으로 구분됨. 이 외에 각 부처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학술연구 등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

55)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7
56)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57)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58)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59)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하여 집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연구용역비(260목)를 집행함에 있어 정책연구 성격의 용역비를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에서 혼용하여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검찰이 제출한 2023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내역을 보면,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1333-306) 등 5개 세부사업에서 정책연구용역으로 40개 과제에 13억 4,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검찰청 소관 정책연구비(260-02)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일반연구비(260-01)가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의미함.

또한, 2022년(13억 900만원) 및 2021년(11억 1,200만원)에도 정책연구용역에 유사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된 것은 일반용역비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연도별 검찰 정책연구용역 수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1			2022			2023		
	예산현액	집행액	계약건수	예산현액	집행액	계약건수	예산현액	집행액	계약건수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	715	345	16	710	331	14	977	355	11
과학수사인프라구축	376	333	6	376	321	6	563	419	7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70	70	3	70	70	3	70	70	3
공판활동지원	-	-	-	50	50	1	50	50	2
형사부등수사지원	466	364	13	552	537	14	466	452	17
합 계	1,627	1,112	38	1,758	1,309	38	2,126	1,346	40

* 는 실제 정책연구비(260-02)가 편성된 세부사업임

* 자료: 법무부

○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정책연구비(260-02) 편성 및 정책연구과제 분류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먼저, 검찰이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내역 외에도,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형사법정비(1338-300) 세부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260-01)는 형사사법공조 강화방안 연구, 변화하는 사법 환경 대응 관련 정책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책연구비 성격에 해당하며, 2023년 실제 집행한 과제 역시 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탑재되는 등 정책연구용역 과제라고 판단됨에도 법무부와 검찰이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2023년 검찰국외훈련, 형사법정비 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과제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과제명	계약금액	수행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프리즘 등록 여부	계약방법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제1·2 추가의정서 체계 및 내용 분석	20	11.17.~12.13.	12.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O	수의
형사법정비 (1338-30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적정한 치료감호 제도 운용을 위한 연구	40	6.1.~11.30.	11.3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O	경쟁→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역할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20	8.29.~11.30.	11.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O	수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관한 해외입법례 연구	15	8.29.~11.30.	11.3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O	수의
	독립몰수제도 관련 해외 입법례 및 도입 방안 검토	20	9.14.~11.30.	11.30.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O	수의
	온라인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개선방안 연구	15	9.18.~11.30.	11.30.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O	수의
	권력형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입법례 연구	15	9.22.~12.8.	1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O	수의

* 자료: 법무부

반대로,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사업 일반연구비의 경우 2023년 수행된 7건의 과제는 대부분 과학기술을 활용한 수사기법 고도화에 대한 것으로 기술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검찰이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2023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일반연구비 집행과제 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프리즘 등록 여부	계약 방법
스마트폰 녹음파일 위변조 식별기술 고도화 연구	50	3. 8.~ 11. 30.	11. 30.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O	경쟁→수의
필적감정의 객관화 지표 개발 연구	50	7. 31.~ 11. 30.	11. 30.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O	경쟁
국내시판 인주 시료분석 및 DB 구축에 관한 연구	50	7. 25.~ 11. 30.	11. 30.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O	경쟁→수의
고체상추출법 및 GC- MS를 이용한 소변 중 암페타민류 및 대마 대사체 자동화분석법 개발 및 유효화	60	4. 10.~ 12. 8.	12. 8.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O	경쟁→수의
SNP 변이 활용연구(SNP 활용 3촌 이상 친족관계 식별법 개발, 3차년)	88	3. 28.~ 11. 30.	11.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O	경쟁→수의
환각선인장의 종식별 및 메스칼린 생성 유전자 식별마커 개발	40	3. 21.~ 11. 30.	11. 30.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O	경쟁→수의
법생물 DNA바코드 DB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88	5. 30.~ 12. 20.	11. 20.	㈜코어아이티	O	경쟁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이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과제를 일반연구비(260-01)에 편성·집행하는 배경에는 예산편성지침 상 일반연구비(260-01)에 속하는 '기타 연구용역'[60] 중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60)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을 의미함.

과 정책연구비(260-02)간의 구분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다만, 정책연구비(260-02)는 예산편성지침 상 전년도 결산실적을 감안하여 차년도 정책연구비 총액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이소요 발생으로 지출한도 보다 증액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감편성·집행을 위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예산집행지침 상으로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61]에 따라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록·공개 의무, 행정안전부의 기관별 정책연구용역 점검 및 평가 등을 적용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할 수 있는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은 가급적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하여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세부사업별 연구용역비(260목)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 각각의 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과제를 재분류하고, 정책연구 성격의 과제는 반드시 정책연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61) 2023년 집행지침 상「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며, 해당 법령은 2023년 6월 개정으로 법령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

②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 필요

○ 검찰이 제출한 2023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과제 40건의 계약방식을 보면, 수의계약 25건(62.5%), 유찰 후 수의계약 9건(22.5%), 경쟁계약 6건(15%)로, 최종적으로 34건(85%)이 수의계약으로 수행되었음.

앞에서 살펴본대로 사실상 정책연구용역 성격에 해당하는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형사법정비(1338-300) 세부사업의 일반연구비 수행과제 7건을 포함할 경우 47건 중 수의계약은 41건(87.2%)에 해당함.

<검찰활동 프로그램 내 정책연구용역 계약방식 현황>

(단위: 건, %)

구 분		수의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일반경쟁	계
2020	건 수	28	8	2	38
	비 중	73.7	21	5.3	100.0
2021	건 수	28	8	2	38
	비 중	73.7	21	5.3	100.0
2022	건 수	22	11	5	38
	비 중	57.9	28.9	13.2	100.0
2023	건 수	25 **(31)**	9 **(10)**	6	40 **(47)**
	비 중	62.5 **(66.0)**	22.5 **(21.2)**	15.0 **(12.8)**	100.0

* ( )는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형사법정비(1338-300) 세부사업의 일반연구비 수행과제 7건을 포함한 경우임

* 자료: 법무부

○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검찰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 그럼에도 2023년 수의계약비율이 여전히 85% 수준으로 높고, 특히 전체 과제의 약 3분의 2 가량을 경쟁입찰 시도 없이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충실한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검찰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관련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내용>

구 분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2020 회계연도 결산	○ 2020년 실시 46건의 연구과제 중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비중은 전체의 76.1%이고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0.9%에 불과한데,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무부는 검찰활동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정책연구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적정화하며 연구결과 공개를 확대할 것 (제도개선)
2021 회계연도 결산	○ 2021년 '검찰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서 실시된 29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과제의 비중이 86.2%(25건)에 달하는데, 이는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무부는 검찰활동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고 연도말 과제선정을 지양하는 한편, 정책연구용역 활용평가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할 것

○ 검찰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용역

계약’ 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학술연구 관련 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62]을 들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수의계약 체결 요건으로 금액 조건 등을 적용하기 전에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일 것을 요구(제2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하고 있는바, 계약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따져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63]에서도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검찰은 대검찰청 정책연구과제는 수사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실적을 보유한 단체, 학회 등과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64]

6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3)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189

64)「2021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p.125

이나, 학계나 연구기관, 민간업체 등 형사법이나 수사 분야 전문가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배제할 만큼 반드시 특정인의 지식·기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관련 법령·지침과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정책연구용역이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과제 경쟁계약 수행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검찰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수의계약 및 경쟁계약 체결 관련 자체 세부 기준 마련 등 수의계약 과제 심의 및 계약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3년 검찰이 정책연구용역으로 분류한 과제(40건) 수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과제명	계약 금액	수행 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계약 방법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11건)	독일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제도 분석 및 사례 연구	20	23.6.7.~ 23.10.6.	23.10.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몰수·추징 집행 제도 및 실무 사례 연구	20	23.6.7.~ 23.11.6.	23.11.6.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사이버범죄수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수사직렬 신설에 관한 연구	40	23.7.19.~ 23.12.15.	23.12.11.	㈜한국평가원	유찰후 수의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향성 검토 연구	40	23.7.7.~ 23.12.6.	23.12.15.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제한경쟁	
	기술유출 피해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연구	38	23.8.18.~ 23.12.15.	23.12.12.	한국 과학기술원	제한경쟁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등 참여권 보장 및 개선 방안 연구	20	23.6.7.~ 23.11.6.	23.10.26.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각 법집행기관 내 인권보호 담당자의 역할 및 운용방안 비교분석	20	23.5.30.~ 23.10.29.	23.10.27.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성희롱 등 발생시 목격자 개입 매뉴얼(가이드라인)' 개발	30	23.6.16.~ 23.12.15.	23.12.13.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전세사기 관련 형사처벌 사례 분석 및 처벌강화 방안 연구	25	23.7.10.~ 24.1.9.	24.1.18.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성폭력처벌법위반죄 적용 사례 분석(통신매체이용음란죄)	25	23.5.30.~ 23.11.29.	23.11.29.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생성형 AI의 검찰 사건처리업무 활용 방안 연구	77	23.9.26.~ 23.12.12.	23.12.11.	가톨릭대학교	제한경쟁	

세부 사업명	과제명	계약 금액	수행 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계약 방법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7건)	스마트폰 녹음파일 위변조 식별 기술 고도화 연구	50	23.3.8.~ 23.11.30.	23.11.30.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유찰후 수의	시행령 제27조 제1항
	필적감정의 객관화 지표 개발 연구	50	23.7.31.~ 23.11.30.	23.11.30.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제한경쟁	
	국내시판 인주 시료분석 및 DB 구축에 관한 연구	50	23.7.25.~ 23.11.30.	23.11.30.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찰후 수의	시행령 제27조 제1항
	고체상추출법 및 GC- MS를 이용한 소변 중 암페타민류 및 대마 대사체 자동화분석법 개발 및 유효화	60	23.4.10.~ 23.12.8.	23.12.8.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후 수의 (단일응찰)	시행령 제27조 제1항
	SNP 변이 활용연구(SNP 활용 3촌 이상 친족관계 식별법 개발, 3차년)	88	23.3.28.~ 23.11.30.	23.11.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후 수의 (단일응찰)	시행령 제27조 제1항
	환각선인장의 종식별 및 메스칼린 생성 유전자 식별마커 개발	40	23.3.21.~ 23.11.30.	23.11.30.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후 수의 (단일응찰)	시행령 제27조 제1항
	법생물 DNA바코드 DB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88	23.5.30.~ 23.12.20.	23.11.20.	㈜코어 아이티	조달경쟁	
국민생활 침해사범단속 (3건)	2022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처리 현황 및 성과지표 분석	10	23.5.31.~ 23.8.31.	23.8.29.	㈜휴비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 및 관련 법제 연구	30	23.5.22.~ 23.10.21.	23.10.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교제폭력 법제 연구	30	23.5.22.~ 23.10.21.	23.10.2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공판활동 지원 (2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25	23.5.10.~ 23.10.31.	23.10.31.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스토킹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25	23.5.11.~ 23.11.30.	23.11.3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세부 사업명	과제명	계약 금액	수행 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계약 방법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형사부등 수사지원 (17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뇌파 분석 기법 개발	44	23.6.1.~ 23.11.30.	23.11.3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찰후 수의	시행령 제27조 제1항
	형사 사법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 (R&D) 성과조사 및 활용전략 개발	40	23.5.4.~ 23.8.3.	23.8.3.	㈜너비의깊이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5) 가) 여성기업
	마약원산지 추적을 위한 동남아 국가와의 마약지문감정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활용 방안 연구	27	23.8.31.~ 23.12.15.	23.12.15.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입찰후 수의 (단일응찰)	시행령 제27조 제1항
	수사·형사법 연구를 위한 '검찰 도서관'(가칭) 설치 운영 방안 연구	20	23.5.30.~ 23.8.29.	23.8.30.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범죄통계원표 개선방안 연구	20	23.5.15.~ 23.8.14.	23.8.14.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인공지능형(AI) 통합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39	23.7.5.~ 23.12.4.	23.12.4.	플레인비트	유찰후 수의	시행령 제27조 제1항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인정범위 및 한계에 대한 연구	20	23.8.21.~ 23.12.20.	23.12.11.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개정법에서의 사법통제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통제방안 연구	20	23.6.9.~ 23.12.8.	23.12.7.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합리적 인정범위 연구	40	23.6.16.~ 23.12.15.	23.12.6.	한국형사 소송법학회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피의자(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범위 및 한계에 대한 연구	20	23.6.8.~ 23.12.7.	23.12.6.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해외 주요국가의 수사과정에서의 압수·수색 제도 연구	20	23.6.8.~ 23.12.7.	23.12.6.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해외 주요국가의 수사과정에서의 체포·구속제도 연구	20	23.6.8.~ 23.12.7.	23.12.6.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검찰 디지털포렌식 조직의 재설계 및 표준 성과지표 개발	36	23.6.29.~ 23.11.30.	23.11.27.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제한경쟁	
	형사절차상 강제처분 관련 규정의 현대화 연구	20	23.9.11.~ 24.1.10.	23.12.11.	한국비교 형사법학회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해외 주요국가의 사법방해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20	23.8.31.~ 23.12.30.	23.12.11	한국형사 소송법학회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직접공조(조약외 공조) 관련 주요 외국의 법령 및 실무 연구	20	23.11.1.~ 24.6.14.	24.6.14.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	31	23.9.8.~ 24.2.7.	24.3.15.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수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차목, 5호 가목

* 자료: 법무부

(2) 검찰청시설운영 사업

(가) 결산 개요

○ 검찰청시설운영 사업(1333-300)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국 66개 검찰청의 시설·환경 개선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며, 순환 근무에 따른 지방근무자를 위한 관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818억 9,4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5억 7,200만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은 813억 2,200만원으로, 이 중 809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청시설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검찰청시설운영	81,894	-	△572	-	81,322	80,975	205	142
·검찰청사 공무직 운영	26,441	-	△423	-	26,018	26,017	-	1
·검찰청사 유지 보수 등 관리	46,501	-	△119	-	46,382	46,036	205	141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3,132	-	-	-	3,132	3,132	-	-
·숙소 임차비용	5,820	-	△31	-	5,789	5,789	-	-

(나)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시 적정 감리비 편성 및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 필요

○ 검찰은 법원 및 검찰청 출석을 위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는 장애인·거동불편 수용자의 이동권 보장과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3년부터 전국 검찰청 내 구치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함. 신규 편성된 2023년 예산에는 10개청 설치를 목표로 3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1억 5,200만원을 집

행하고, 2억 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공사비 (420-03)	3,183	△68	3,115	2,084	205	826
감리비 (420-04)	-	68	68	68	-	-
합 계	3,183	-	3,183	2,152	205	826

* 자료: 법무부

○ 검찰은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 예산 31억 8,300만원을 2023년 예산에 전액 공사비(420-03)로 신규 편성하고, 공사비에 부수되는 감리비(420-04)는 편성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중 6,800만원을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57)에 따르면, 공사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리비를 동시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가 구치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신규 예산 편성시 감리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고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한 것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한 부분임.

○ 한편, 동 사업 중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 사업은 공사업체와 2023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가 2024년 2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승강기 설치 공사에서 1억 5,485만원 및 관련 배관 이설공사에서 4,979만원 등 총 2억 464만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음.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 계약 내역>

(단위: 천원)

계약내용	계약일	계약액	2023년 집행액	이월액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2023.10.18	241,415	86,568	154,847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 배관 등 이설공사	2023.12.21	49,790	-	49,790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검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물 기초 하부 안전 우려로 인해 시공방법을 변경하였고, 굴착 단계에서 지반 아래 파이프 및 전선이 다량 발견되어 배관이설공사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이설공사 추가를 모두 반영한 해당 사업의 총 공사기간은 5개월(2023년 10월~2024년 2월)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이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연말인 10월이 되어서야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예산 이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2024년 이후에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가

지속 추진될 예정인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초부터 지청 단위별 승강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청별로 상반기 내에 공사에 착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일반수용비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65]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검찰기록물의 통합 보존 및 검찰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대검찰청 특수기록관으로서 2018년 11월 15일에 개관하였음.

2023년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예산은 일반수용비(210-01), 시설장비유지비(210-09), 일반용역비(210-14)에 총 20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72.4%인 14억 5,200만원이 집행되는데 그쳤음.

65)「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일반수용비(210-01)	811	303	821	276	441	255	441
시설장비유지비(210-09)	440	131	394	177	244	173	244
일반용역비(210-14)	1,267	1,040	1,320	1,050	1,320	1,024	1,320
공사비(420-03)	17	16	-	-	-	-	-
합계	2,535	1,490	2,535	1,503	2,005	1,452	2,005

* 자료: 법무부

○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예산의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 미집행되었고, 그에 따라 2023년 예산이 전년대비 5억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여전히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 특히 일반수용비(210-01)는 기록관 청사관리 및 기록물 보관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집행하는 것으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개관 이후 2021년(3억 300만원 집행)을 제외하고는 3억원을 초과하여 집행된 적이 없었으며,[66] 2023년에도 예산액 4억 4,100만원 대비 2억 5,500만원을 집행(57.8%)하는데 그쳤고 집행 규모 역시 2021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에도 동일하게 4억 4,100만원이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보임.

66) 연도별 일반수용비 집행액 : 2019년 1억 6,917만원, 2020년 2억 6,619만원, 2021년 3억 331만원, 2022년 2억 7,581만원, 2023년 2억 5,456만원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이 2022년 준공 5년차가 도래되어 향후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운영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비용 발생은 기록관 건축시설 유지 및 보존처리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청사관리 및 기록물 보관에 필요한 소모품을 매년 구입하는 일반수용비는 하자보증기간과 무관함.

○ 따라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 예산 중 일반수용비는 연례적으로 부진한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 등 추후 예산 편성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라)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조정을 통한 일반수용비 증액 집행 시정 필요

○ 동 세부사업에 일반수용비(210-01목)는 전국 각 검찰청사의 운영에 필요한 청소 및 관리 용품, 자재비 등 소모품 구입, 각종 검사 수수료 등에 집행됨. 2023년 일반수용비는 1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검찰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관리용역비(210-15목)에서 2억 6,4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일반수용비를 증액 집행하였음.

<2023년 검찰청시설운영 세부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수용비(210-01)	1,743	264	2,007	2,007	-

* 이·전용 증액 내역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억 9,500만원, 관리용역비(210-15) 6,900만원
* 자료: 법무부

○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상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는 절감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67]이므로, 일반수용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편성 규모(17억 4,300만원)의 15% 수준인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집행한 것은 집행지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해 검찰은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3억 8,000만원 감액되어 시설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 및 각종 검사 수수료가 크게 부족하여 세목조정을 통한 집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세부사업 중 일반수용비가 감액된 것은 앞서 살펴본대로 형사사법기록관의 일반수용비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2023년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감액된 것(2022년 8억 2,058만원 → 2023년 4억 4,058만원)으로, 형사사법기록관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그와 무관한 검찰청사 시설운영 비품구입 등 비용이 부족해진 것은 검찰이 그동안 부족한 검찰청사 시설운영

67)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1.

비품구입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이 관행적으로 형사사법기록관 일반수용비 잔액을 검찰청사 비품구입 등에 집행해왔기 때문임.

○ 따라서 검찰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인 일반수용비를 예산집행지침 취지에 맞게 절감 집행함으로써 타 비목으로부터 세목조정 등을 통해 증액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한편, 검찰청사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정확한 실수요를 산출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봄.

(마) 제주 검찰연수원(프로스힐)의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제주 검찰연수원(프로스힐)은 2017년 9월 제주지검이 (구)제주지검장 관사 노후화 및 관리비용 과다 소요 등에 따라 국유재산 교환을 통해 검찰전문화 연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5월 국유재산 교환 및 소유권 이전 후 리모델링 공사(2018.11～2019.7, 사업비 8억 3,600만원)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검찰연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23년 연수원 시설 운영은 동 세부사업의 관리용역비(210-15)로 2억 3,37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개인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기

타재산이자외 수입(54-547)으로 5,336만원이 수납되었음.

<2023년 제주 검찰연수원 월별 운영 실적>

(단위: 건, 천원)

구 분	이용횟수			사용료 수입
	공무	개인	합계	
1월	0	116	116	3,980
2월	0	116	116	3,810
3월	0	145	145	4,260
4월	0	146	146	4,510
5월	0	156	156	4,780
6월	0	174	174	5,590
7월	0	141	141	5,030
8월	0	134	134	4,540
9월	0	130	130	4,000
10월	2	138	140	4,110
11월	3	116	119	3,600
12월	0	168	168	5,150
합 계	**5**	**1,680**	**1,685**	**53,360**

* 자료: 법무부

○ 당초 제주 검찰연수원 설치 목적은 전문검사 커뮤니티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검찰 구성원의 업무상 스트레스 해소 및 조사자 심리 치료 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PROS-힐링 프로그램'과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2023년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 1,685건의 이용 건 수 중 공무 목적의 이용은 'PROS-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한 총 5건[68]에

그쳤으며,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실적은 없었고, ‘마음톡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23년 총 1,814건을 진행하였음에도 제주 검찰연수원을 이용한 실적은 전무하였음.[69] 이처럼 제주 검찰연수원은 당초 시설 설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 이용 중심의 직원 복리시설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검찰 구성원들의 업무 강도와 이동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세미나·워크숍 등 공무 목적으로는 제주 검찰연수원보다는 용인,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바, 향후 제주 검찰연수원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68) 5회에 걸쳐 104명이 참가함.
69)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2023년에 1,814건, 939명이 참여하였으나, 대부분 위탁기관과 협약을 맺은 지역 상담센터 또는 서울고검 내 상담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

(가) 결산 개요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1333-301)은 국제형사사법 공조,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등을 위한 국제형사협력 및 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장·단기 국외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78억 7,3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은 75억 8,300만원이며, 이 중 75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음.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873**	**-**	**△290**	**-**	**7,583**	**7,582**	**-**	**-**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2,782	-	△410	-	2,372	2,372	-	-
·국외도피 범죄수익 환수	118	-	△14	-	103	103	-	-
·국외훈련 지원	4,974	-	133	-	5,107	5,107	-	-

(나)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집행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제검사협회(IAP[70]) 기여 및 IAP 아시아-태

70) 국제검사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는 마약 거래, 자금 세탁 등 국제 범

평양 지부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IAP 아태지역 회원국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2023년 초청연수사업 예산은 1억 2,689만원으로 이 중 5,480만원(43.3%)이 집행되었음.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 예산집행 현황>

년도	비목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 실적
2022	일반수용비	14,800	14,800	2022. 10. 25. ~ 27. IAP 아·태지역 소속 국가 초청 연수 개최 (13개국 16명)
	임차료	21,200	21,200	
	국외업무여비	121,635	41,831	
	업무추진비	11,250	4,000	
	합 계	168,885	81,831	
2023	일반수용비	14,800	14,800	2023. 11. 21. ~ 23. IAP 아·태지역 소속 국가 초청 연수 개최 [15개국 19명 참석(네팔1, 몽골1, 베트남2, 사우디아라비아1, 싱가포르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1, 중국1, 카자흐스탄1, 키르키스스탄1, 태국4, 필리핀1, 홍콩1, 캄보디아1)]
	임차료	11,200	5,961	
	국외업무여비	89,635	24,268	
	업무추진비	11,250	9,950	
	합 계	126,885	54,979	

* 2020년부터 신규편성되었으나,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로 연수사업 취소
* 자료: 법무부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설치하는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가 2022년말 완공되었고 2023년 IAP 아태지부 연수사업을 해당 시설에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2023년 초청연수 예산은 이를 감안하여 2022년 대비 임차료(행사장 임차 등) 및 국외업무여비(숙박비 지원 등)에서 총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그럼에도 2023년 초청연수 사업 집행률은 43.3%로, 2022년(48.5%)보다 더욱 낮게 나

죄 증가에 대응하여 검찰업무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비엔나 유엔 사무소)된 국제조직으로, 세계 약 177개국 183개 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함.

타났음.

특히, 국외업무여비는 트레이닝센터 활용에 따른 숙박료 절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3,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집행률이 27.1%로 저조하였음. 연수 초청 대상이 아태지역의 IAP 회원국으로 제한된다는 점, 2022년 및 2023년 실제 초청 규모[71]를 감안하면 초청연수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여전히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임.[72]

○ 검찰은 2024년부터는 IAP 초청연수에 아태지역 회원국 뿐만아니라 IAP 관계자들의 방한도 예정되어 있어 참석 규모가 확대될 예정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 소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다만, 일부 참석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기존 국외업무여비 집행률(2022년 34.4%, 2023년 27.1%)을 감안하면 집행 실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부와 검찰은 추후 예산 편성시 2024년 IAP 초청연수 사업의 초청 규모 및 예산 집행 내역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71) 2022년 13개국 16명, 2023년 15개국 19명 초청
72) 2024년의 경우 초청연수 국외업무여비는 2023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7,96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 및 2023년 국외업무여비 집행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4)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가) 결산 개요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1333-302)은 DNA 감식, 법화학감정, 음성·영상분석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개발을 통하여 과학수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며, 국제과학수사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93억 3,6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예산현액은 90억 5,600만원으로, 이 중 87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과학수사인프라구축	9,336	-	△280	-	9,056	8,797	97	161
· 과학수사활동 지원	3,969	-	△6	-	3,962	3,908	-	54
·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 운영	5,022	-	△220	-	4,802	4,602	97	104
· 국제과학수사협력 지원	344	-	△54	-	290	287	-	3

(나)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실적 감소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영상녹화조사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목적

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73]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검찰청은 2004년부터 동 세부사업 예산으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여 2023년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총 903실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도 영상녹화조사실 관련 예산은 영상녹화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와 영상녹화장비 교체·신규 도입 등을 위하여 총 5억 7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4억 5,011만원이 집행되었음(집행률 88.7%).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	838	841	885	890	890	899	903

<2023년 영상녹화조사 관련 예산 집행내역>

구분	비목	예산액	집행액
영상녹화조사실 유지관리	210-09	19,400	3,276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	210-09	105,616	97,955
영상녹화장비 구매	430-01	382,500	(교체) 325,970 (신규) 22,918
합 계		**507,516**	**450,111**

* 자료: 법무부

73) **「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각 검찰청 내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개소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 부진은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임.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 영상녹화 우수검사 선정·격려, 우수활용 사례 발굴,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일선청 현장 지도점검 추진 계획 등을 밝히며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시정 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1.31.)
(16) 영상녹화 제도의 활성화 필요	○[시정요구사항] 법무부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인권보장 및 진술 취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제도 개선	○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독립적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및 영상녹화물을 통한 검사 피신조서의 진정성립 입증수단으로 효용성이 상실됨에 따라 영상녹화 활용 실적이 저조해진 상황임 ○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녹화 우수검사 선정·격려, 우수활용 사례 발굴,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일선청 현장 지도점검 등 실시할 예정임	조치 완료

○ 그러나 2023년 검찰의 영상녹화 조사비율은 6.4%로 2022년(8.1%)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영상녹화 조사 건수는 4,001건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남.

<연도별 영상녹화 조사실적>

구 분	전체 조사건수(A)	영상녹화 조사건수(B)	영상녹화 조사비율(B/A)
2017년	227,415	37,007	16.3
2018년	212,324	24,145	11.4
2019년	184,479	19,768	10.7
2020년	111,763	6,553	5.9
2021년	64,991	4,902	7.5
2022년	57,938	4,694	8.1
2023년	**62,564**	**4,001**	**6.4**

* 자료: 법무부

이처럼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공판과정에서 영상조사녹화물은 「형사소송법」상 독립적인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 왔고,[74)75)]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영상녹화물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76)] 더 이상 일선 검사들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유인이 없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

74)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7.10.선고 2012도5041판결)

75) 2020. 2. 4.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21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개정(2022. 2. 4.시행) 이후에도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촬영된 피의자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함.

76)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삭제되었음.

또한, 영상녹화 조사 건수의 감소는 검찰의 전체 조사 건수 자체의 감소(2017년 22.7만 건 → 2023년 6.3만 건)에도 기인하는 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 변경[77] 등 형사사법 환경 변화로 검찰의 직접조사 범위가 축소된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9년까지 각 검찰청 내에 이미 총 885개소의 영상녹화실이 설치되는 등, 영상녹화조사 관련 시설 및 장비 투자의 대부분은 최근의 형사사법 환경 변화 이전에 이루어졌음.[78] 이를 감안할 때 旣 설치된 영상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 규모 대비 영상녹화조사 수요 부족 현상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반면, 영상녹화조사 실적의 구조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말 기준 903개소의 영상녹화조사실과 영상녹화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비용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도점검, 우수활용부서 및 검사 포상·격려, 매뉴얼 제작 등 영상녹화조사 활용 개선 노력과 별개로, 장비 내구연한 도래 시 폐기 처리(미교체), 기존 영상녹화조사실 타용도

77) 직접조사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뀜(「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신설(2020.2.4.))
78) 2023년 기준, 전국 66개 검찰청에 903개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되어 청 당 평균 13.7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중앙지검(71개), 서울남부지검(37개), 인천지검(44개), 수원지검(49개), 부산지검(40개) 등 한 개 청에 30개 이상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설치된 경우도 있음.

전환 등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2023년에도 영상녹화조사실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영상녹화장비 6대를 신규 구매하는 등 영상녹화조사 관련 신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신규 영상녹화실 설치 및 신규 장비 구매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5)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가) 결산 개요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사업(1334-500)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찰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일선 검찰청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PC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11억 6,400만원 중 30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31,164	-	-	-	31,164	30,811	-	353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3,520	-	-	-	3,520	3,519	-	1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	6,602	-	-	-	6,602	6,509	-	93
· 검찰 정보보안체제 강화	3,685	-	-	-	3,685	3,499	-	186
· 검찰업무기반 정보화	17,357	-	-	-	17,357	17,284	-	73

(나) 검찰방송(검찰 유튜브) 예산 편성 개선 및 정책홍보·대국민 소통 등 채널 취지에 맞는 운영 필요

○ 대검찰청은 동 세부사업 중 '검찰업무기반 정보화' 내역사업에서 '검찰방송 콘텐츠 제작 기술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260-01)로 매

년 5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검찰방송은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써,[79] ①민생침해범죄 피해사례 소개를 통한 범죄 예방, 형사사법제도 설명, 검찰 이미지 개선 등 대국민 소통, ②인권보호·최신 수사기법 공유·청렴 교육 등 내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3년에는 용역 예산 5억원 중 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음.[80]

대검찰청의 검찰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검찰방송 운영은 검찰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유튜브 플랫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형적인 홍보 예산에 해당하는데, 해당 예산을 정보화 사업인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81] 정보화 사업은 ①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②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③「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등으로 분류되는바, 검찰방송 운영과 같은 기관 홍

79) 2011년 10월 유튜브 '검찰방송' 채널을 개설하였고, 2023년 6월 채널명을 '검찰나우'로 변경함.
80) 2024. 5. 13. 기준 유튜브 '검찰나우' 구독자 6.16만명, 동영상 821개 게시
81)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2

보용 SNS 운영 예산은 정보화 사업 편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동 세부사업 중 검찰방송 운영 예산이 편성된 '검찰업무 기반 정보화' 내역사업은 일선 검찰청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노후 PC 교체,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기존 도입 정보시스템 임차료 등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 내역사업에 검찰방송 유튜브 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해 검찰은 2007년 해당 예산 최초 편성 당시 검찰 인터넷 방송국 개국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는 정보화사업의 성격인 방송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발 등이 포함된 연혁적 이유로 정보화사업으로 분류해왔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검찰방송 운영 예산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기관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에 필요한 홍보영상 제작 용역에 전부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집행 상황에 맞게 예산 항목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특히, 정보화예산은 그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안 편성시 일반 예산과 구분된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는다는 점, 각 부처 SNS 운영 등 홍보 예산은 매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성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

안하면, 검찰방송 유튜브 운영을 위한 홍보영상 용역 예산은 동 세부사업에서 분리하여,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다른 일반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홍보영상 중 검찰 내부 행사 등 단순 영상 위주의 게시물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검찰방송 채널 운영이 용역 예산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023년 검찰방송 운영 예산은 5억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2,000만원이 편성됨. 대검찰청 내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용역 예산 규모는 법무부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규모로 보임.[82)]

<대검찰청 및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기관 대표 유튜브 운영 현황>

구분	대검찰청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환경부
유튜브명	검찰나우	법무부TV	중소벤처기업부	교육TV	환경부
예산 ('24기준)	4억6천	없음 (SNS 홍보예산 1억원)	4억	4억5천	3억
제작편수	영상 71편 쇼츠 128편	영상 66편 쇼츠 18편	영상 49편 쇼츠 21편	영상 30편 쇼츠 15편	100편 (쇼츠포함)
제작인원	상주 5명 (PD3, 작가2)	공무직 3명 (PD2, 작가1))	비상주 총 4명 (PM,PD,촬영보조,작가)	상주 1명, 비상주 6명 (기획,PD,작가 각 2명)	비상주 총 10명 (기획 6명, 제작 4명) ※ 환경부 이외에 타 업체 제작 업무 병행

* 자료: 법무부

82) 검찰은 해당 예산에는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외에도, 일선 검찰청이 요청하는 홍보영상이나, 검찰 구성원용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도 일부 포함된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검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 87건(쇼츠 영상 제외) 중 44.8%인 39건이 검찰총장 강연, 검찰총장 월례회의 발언, 검찰청 주관 내부행사,[83] 검찰 주최 학술대회·세미나[84] 등을 소재로 하여 전문업체의 기획·제작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수준의 요약·편집 영상이며, 업체가 기획·제작한 영상도 블로그 기자단 활용(16건), 직원 인터뷰 및 직원 브이로그 등 내부직원 출연 영상이 다수로 확인됨.

즉, 검찰방송이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하여 제작 편수는 높으나, 2023년 실제 제작된 영상콘텐츠의 기획력, 완성도, 제작 난이도 및 파급력 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계약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작 건수에 치중된 과업 수행보다는 5억원이라는 용역 예산 규모에 맞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나 형사사법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콘텐츠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제작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검찰방송 유튜브 채널이 당초 운영 목적인 형사사법정책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 및 소통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83) 신임검사 신고식, 검사 전출/전입 신고식, 승진 임용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 검찰 신년 다짐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식,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등

84) 대검찰청-서울대 디지털포렌식 심포지엄, 대검찰청 형사법아카데미,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OLOMICO), 한인검사협회 2023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등

2023년 1년 간 게시된 87건의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살펴보면,[85] 검찰총장의 청렴 주제 강의 영상이 11.2만 건으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그 외에도 검찰총장 강연 및 행사 연설 영상, 월례회의 발언, 신임검사 선서식 및 승진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등 검찰 내부 행사 영상이 조회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2023년 검찰 유튜브 채널 조회수 기준 상위 20건 내역>

(조회수 순 정렬, 검색일 2024. 6. 3.)

게시 날짜	제목	조회수	댓글수
23.11.9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청렴, 두 번째 이야기	112,003	931
23.5.1	서울동부지검의 HOT스타를 소개합니다 (임시보호 중인 강아지 영상)	102,504	212
23.4.21	총장이 제주로 간 까닭은?	70,581	548
23.11.24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초.문.총.답 (초임검사가 묻고 총장이 답하다)	69,307	396
23.12.8	[듣다보면 빠져드는 이야기] 검찰총장 '안양 만안교를 말하다'	62,149	275
23.4.24	[아무튼 검찰] 검찰수사관의 하루가 궁금해!	60,893	134
23.6.23	검찰에 온 충주 홍보맨	60,137	106
23.5.4	신임검사 국민 여러분께 선서합니다!	38,442	255
23.12.22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힘이 되어주고 길을 터주는 사람	37,120	476
23.5.4	오늘부터 검사	37,085	176
23.11.24	[이원석 검찰총장 강연] 신임검사 대상 강연	29,795	284
23.2.16	[웹드라마] 검찰청 사람들 1편, 신임검사 vs 지도검사	24,472	65
23.11.30	대검찰청 11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22,355	233
23.2.7	상반기 검사 전출/전입 신고식	21,518	169
23.2.7	변호사 출신 신임검사 인사드립니다!	19,848	179
23.11.2	대검찰청 10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15,927	175
23.3.31	대검찰청 3월 월례회의 검찰총장 발언	12,347	139
23.2.14	2023년 승진 임용 사무관 임명장 전수식	11,698	111
23.8.4	2023년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신고식	10,480	69
23.6.9	[#검찰나우] 축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408	359

* 자료: 검찰 유튜브 채널(youtube.com/@spbstv) 게시물을 토대로 작성

85) 조회수 검색: 2024년 6월 3일 기준

반면, 2023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정책홍보 소재였던 '마약범죄 예방' 관련 영상 조회수는 2,000건 미만으로 정책의 중요성과 대국민 인식제고 필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3년 검찰 유튜브 영상 중 '마약범죄 예방' 소재 기획 영상 내역>

(검색일 2024. 6. 3.)

게시날짜	제목	조회수	댓글수
23.4.17	범정부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1,899	37
23.12.8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급증하는 마약범죄 엄정 대응	1,726	26
23.6.30	검찰청 캐비닛 - 대한민국, 마약 경보가 울렸다!	1,495	15
23.7.3	검찰청 캐비닛 - 마약 시리얼?	1,263	11

* 자료: 검찰 유튜브 채널(youtube.com/@spbstv) 게시물을 토대로 작성

유튜브 게시 영상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이용자들의 관심도에 따라 도달수준[86]이 달라지지만, 기관 메인 홈페이지(검찰의 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 및 타 기관 채널 등과의 연계, 홍보 용역 업체의 콘텐츠 광고 집행[87] 등 운영 기관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도달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음.

정부기관 SNS 채널의 존재는 기관 고유의 정책 인지도 제고와 대국민 정보제공이 활성화될 때 그 운영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향후 대검찰청은 민생범죄 피해예방 및 형사사법제도 홍보 관련 콘텐츠의 대국민 도달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채널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검찰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86) 영상 노출수, 클릭률, 시청자 수, 조회 수, 시청 단위 등
87) 특정 콘텐츠의 알고리즘 노출 횟수를 늘려 조회수를 높이는 광고 집행 유형.

가 있다고 보임.

(6)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

(가) 결산 개요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1334-501)은 범죄증거의 디지털화 및 사이버범죄 증가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첨단범죄수사 분석시스템을 구축·유지관리하고, 디지털·사이버범죄 수사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예산액 97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8억 5,500만원이며, 이 중 9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900만원은 불용하였음.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9,774	81	-	-	9,855	9,606	-	249
· 첨단범죄수사 운영 및 지원	2,960	-	-	-	2,960	2,889	-	71
· 첨단범죄수사 및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리용역	3,432	-	-	-	3,432	3,380	-	52
· 첨단범죄수사 및 분석시스템 구축	2,567	81	-	-	2,648	2,576	-	72
·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 구축	815	-	-	-	815	761	-	54

(나)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조속한 계약 추진 및 다년 계약 방식으로의 변경 검토 필요

○ 검찰은 동 세부사업에서 전국디지털수사망,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서비스(NDFaaS)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용역비(210-15목)에 통합유지관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3년 통합유지관리 예산은 33억 2,300만원으로, 이 중 33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그런데, 대검찰청이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한 2023년 용역계약 체결경과를 보면, 첫 공고를 5월 15일에 실시하였고, 세 차례 유찰된 결과 9월 12일에 네 번째 공고를 실시하여 10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음.[88] 계약금액은 12억 2,694만원이었으나, 실제 사업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관계로 계약업체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9억 2,000만원이었음.

88) 2021년부터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맡아온 동일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됨.

<2023년 디지털수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추진 경과>

(단위: 천원)

차수	공고 게시일	계약방법	사업기간	사업금액	입찰 결과	(계약일) 계약금액
1차	23.5.15	제한경쟁	23. 6. 1 ~ 23.12.31	1,948,000	유찰(단일응찰)	-
2차	23.6.12	수의	23. 6. 1 ~ 23.12.31	1,948,000	유찰(시담결렬)	-
3차	23.8.11	제한경쟁	23. 9. 1 ~ 23.12.31	1,227,000	유찰(단일응찰)	-
4차	23.9. 1	제한경쟁	23. 9. 1 ~ 23.12.31	1,227,000	낙찰	(23.10.1) 1,226,940

* 자료: 나라장터(www.g2b.go.kr)의 해당 사업 공고 및 계약정보를 토대로 재구성

2023년도 통합유지관리 사업이 10월에야 계약됨에 따라, 신규 계약 전까지의 기간 동안(2023년 1월 1일 ~ 2023년 9월 30일) 통합유지관리 업무는 2022년도 통합유지관리 계약 업체가 수행하였고, 2023년도 통합유지관리 사업 집행액 33억 600만원 중 신규 계약 9억 2,000만원을 제외한 23억 8,600만원은 2022년도 계약 업체에게 지급되었음.

이러한 방식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제안요청서 상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업체가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기 때문임.[89)]

○ 당해연도 새로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전년도

89) 대검찰청, 2023년도 디지털수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 5페이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년도 **계약체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차기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대가지급 기준(1개월 기준으로 일단위 계산)을 준용하여 계약을 자동 연장**함"

용역 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그 취지는 사업 계약을 연초부터 추진하더라도 예산 배정·사업 준비·공고·계약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필요최소한도로 적용되어야 할 업무처리방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의 사업 공고 및 계약 현황을 보면, 예년과 달리 2023년에는 5월에야 첫 공고를 하였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첫 공고가 나가는 등 당해연도 신규 계약 체결이 예년대비 늦어지고 있어 전년도 업체에게 당해연도 과업 수행을 추가적으로 맡기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90]

<최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공고게시*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액	비고
2018	2018.7. 2.	2018.7.12.	2018.7.12.~2019.12.31.	4,735,170	다년(2년)계약
2020	2020.2.13.	2020.2.28.	2020.2.28.~2020.12.31.	2,992,000	
2021	2021.2. 1.	2021.3.22.	2021.3.22.~2021.12.31.	2,959,603	
2022	2022.2.17	2022.3. 1	2022.3.1.~2022.12.31.	3,242,998	
2023	2023.9. 1	2023.10.1	2023.10.1.~2023.12.31.	1,226,940	
2024	2024.5.21.	2024.6.17.	2024.6.17.~2024.12.31.	2,145,000	

* 공고게시일은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함

* 자료: 나라장터(www.g2b.go.kr)의 해당 사업 공고 및 계약정보를 토대로 재구성

90) 이에 대해 검찰은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과업심의·타당성 검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 외에도, 최근 유지관리 대상 장비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 예산 확정 후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반영한 산출내역서 및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입장임.

○ 2023년과 같이 당해연도 본 계약은 3개월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의 사업을 전년도 계약에 근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검찰은 향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개시 후 조속한 계약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당해연도 사업이 전년도 계약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동 사업을 다년 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91]

91) 대검찰청은 동 사업을 2018년에 2018년~2019년까지 명시적으로 2년 계약을 통해 추진한 바 있음.

(7) 형사부 등 수사지원

(가) 결산 개요

○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1335-301)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 활동 경비와 수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수사보조인력인 검사실 사무보조원과 속기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878억 9,400만원 대비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 및 타 사업 이·전용 등(△6억 2,8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52억 7,000만원으로, 이 중 852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3,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형사부 등 수사지원	85,894	5	△628	-	85,270	85,223	37	10
· 수사보조인력운영	22,928	-	△447	-	22,481	22,480	-	1
· 수사활동 일반	62,429	5	△182	-	62,252	62,206	37	8
·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195	-	-	-	195	195	-	-
· 호송 인치 업무	342	-	-	-	342	342	-	-

(나)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제 개최 실적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영장심의위원회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2021. 1. 1. 시행) 제221조의5[92]에 근거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심의 신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여 그 정당성·타당성을 판단하는 위원회임.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편성되었으며, 2023년에는 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7%인 595만원만 집행되었음.

<영장심의위원회 설치(2021) 이후 관련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세 목	주요 내용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210-01)	위원 수당 및 회의부대비용	780,000	10,572	780,000	4,672	200,000	5,520
사업추진비 (240-01)	위원회 회의 관련 사업추진비	23,000	0	23,000	0	23,000	433
자산취득비 (430-01)	전담팀 사무집기 구입	89,000	32,754	89,000	32,913	0	0
합 계		892,000	43,326	892,000	37,585	223,000	5,953

* 자료: 법무부

○ 영장심의위원회는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의 미청구 → 사법경찰관의 영장청구 심의 신청'이라는 위원회 개최 요건 발생 여부를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92)「형사소송법」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은 인정됨.

다만, 해당 예산은 부진한 집행 실적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 일반수용비가 5억 8,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일반수용비 집행률이 2.7%에 그쳤다는 것은 한 차례 감액 조정에도 여전히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실제 수요보다 과대 편성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단위: 명, 회, 천원)

청별	민간위원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2	2023	개최횟수	집행액	개최횟수	집행액	개최횟수	집행액
서울고검	46	31	2	4,398	2	4,050	1	2,000
부산고검	30	32	0	189	0	0	1	1,500
대전고검	31	23	2	3,800	0	622	1	1,800
대구고검	43	27	0	113	0	0	0	0
광주고검	37	25	1	1,852	0	0	0	220
수원고검	35	36	0	220	0	0	0	433
합계	222	174	5	10,572	2	4,672	3	5,953

* 예산 집행액은 자산취득비(430-01)를 제외한 일반수용비(210-01) 및 사업추진비(240-01) 집행액임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연간 개최 실적과 관련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향후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8) 공공수사

(가) 결산 개요

○ 공공수사 사업(1335-302)은 선거사범·국가안전위해사범·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31억 9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31억 6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공공수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공수사	3,109	-	-	-	3,109	3,106	-	3
· 공공수사 지원	511	-	△10	-	501	500	-	1
· 공공수사활동 경비	2,435	-	10	-	2,445	2,444	-	1
· 포상금 지급	163	-	-	-	163	162	-	1

(나)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필요

○ 「정치자금법」 제54조[93]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94]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

93) **「정치자금법」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4)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에 매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의 경우 선거범죄신고포상금으로 4,512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같은 세부사업 내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지급분)'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2017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선거범죄포상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남.

<연도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해당연도 주요 공직선거	예산	지 급		
			인원	금액	집행률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50,000	1	30	0.06%
2018	제7회 동시지방선거	50,000	1	21,780	43.56%
2019		50,000	0	0	0%
2020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45,000	0	0	0%
2021		11,120	1	80	0.72%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동시지방선거	45,121	1	380	0.84%
2023		45,121	0	0	0%

*자료: 법무부

2020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신청 및 지급결정 내역을 보면, 2020년과 2023년은 한 건도 없었고,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나타나는 등 포상금 신청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포상금 지급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판단됨. 주목할 부분은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가 모두 열렸음에도 검찰에 대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신청은 단 1건에 그쳤다는 점인바, 사실상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연도별 신청 대비 지급결정 내역>

(단위: 건)

연도	신청	지급결정	미지급결정
2020	0	0	0
2021	2	1	1
2022	1	1	0
2023	0	0	0

* 자료: 법무부

○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직선거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262조의3[95]에 근거하여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선거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초기 신고, 제보, 포상금 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목적의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세부사업에서 매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대통령선거(1133-300), 국회의원선거(1133-301), 전국동시지방선거(1133-302), 재보궐선거(1133-303) 등의 세부사업에서 당해연

95)「공직선거법」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도 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0년 이후 집행 실적을 보면 지급 인원 수, 지급액, 예산집행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법무부보다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급		
			인원	금액	집행률
2020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1	19,000	95.00%
	국회의원선거관리	298,000	43	257,650	86.46%
2021	위법행위예방활동	31,073	7	29,600	95.26%
2022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1	15,000	75.00%
	대통령선거관리	185,000	4	6,400	3.46%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50,000	0	0	0%
	재보궐선거관리	13,200	0	0	0%
2023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2	18,800	94.00%
	재보궐선거관리	4,000	0	0	0%
2024 (6월기준)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3	4,100	20.50%
	국회의원선거관리	200,000	12	103,200	51.6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특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었던 2022년의 경우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 6,800만원까지 편성하였다가, 재보궐선거 외에 공직선거가 없었던 2023년에는 2,400만원까지 축소 편성하는 등 중앙선관위는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96]

96) 2023년의 경우 오히려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4,512만원)이 중앙선관위(2,400만원)보다 88% 가량 많이 편성되었음.

○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향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포상금과 일원화하거나, 현재 공공수사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과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가칭)공공수사 신고포상금으로 통합하여 운영[97]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처럼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별도로 편성·운영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주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선거포상금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7) 이미 검찰은 2023년 전액 미집행된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공무원지급분) 부족액에 충당하여 집행하는 등 사실상 동 세부사업 내 포상금 예산을 당초 계획과 달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9)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가) 결산 개요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1335-303)은 주가조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경제형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125억 4,900만원 중 타 사업으로 7,0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124억 7,900만원이며, 이 중 12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2,549	-	△70	-	12,479	12,474	-	5
· 국민생활침해사범 수사	11,986	-	△49	-	11,937	11,933	-	4
·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333	-	△21	-	312	311	-	1
·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	230	-	-		230	230	-	

(나)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 운영 방식 변경 검토 필요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98] 및 제13조의2[99]에 따라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100]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연도별 검찰의 신변안전조치 실적을 보면, 2023년의 경우 출석·귀가시 동행(제3호) 5건만 있을 뿐 다른 신변안전조치 실적은 없음. 특히,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안전가옥)의 경우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관할 1개소씩 총 4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 보호시설 이용자가 전혀 없는 상황임.

---

9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의2(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10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 "범죄신고자등"이란 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의2에 따른 연도별 검찰 신변안전조치 실적>

(단위: 건)

구 분	특정시설 보호 (제1호)	신변경호 (제2호)	출석·귀가 시 동행 (제3호)	주거 순찰 (제4호)	CCTV 설치 등 주거보호 (제4호)	합 계
2019년	4	0	0	0	0	4
2020년	0	0	0	0	0	0
2021년	0	0	0	0	0	0
2022년	0	0	1	0	0	1
2023년	**0**	**0**	**5**	**0**	**0**	**5**

* 자료: 법무부

그럼에도 보호시설 관련 예산은 2023년 4,411만원이 집행되는 등 이용실적이 없었던 2020년 이후에도 매년 4,000만원 가량 꾸준히 집행되고 있는데, 실제 범죄신고자등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임대하고 있는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 위탁, 공공요금, 임차료는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임.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업무위탁비	20,000	5,028	20,000	4,752	20,000	5,188	16,000	5,549
공공요금	10,000	1,506	10,000	3,235	10,000	2,861	8,000	2,859
임차료	150,000	34,680	150,000	33,780	100,000	34,240	80,000	35,700
합계	180,000	41,214	180,000	41,767	130,000	42,289	104,000	44,108
집행률	22.9		23.2		32.5		42.4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검찰 소관 신변안전 보호시설의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여 매년 국회 결산심사 시 제도개선 내지 경찰청이 수행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101]과의 통합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범피기금 사업의 근거법률인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원 대상과 범죄 행위 단계가 상이[102]하므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실적 제고를 위해 보호시설(안전가옥)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범죄신고자등 보호시설 관련 국회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구 분	시정요구사항
2019회계연도 결산	○ 법무부는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제도개선)
2020회계연도 결산	○ 법무부는 범죄신고자 보호시설 제도의 홍보 강화 등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제도개선)
2021회계연도 결산	○ 법무부는 신변안전조치와 구조금 등 범죄신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활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실시주체를 단일화하는 등 연계·협력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제도개선)

101)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등에 근거하여 경찰청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사업에서 집행하는 거주이전비 지원 및 임시안전숙소 지원

1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목적)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등은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의 보호·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근거한 별도의 보호·지원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과 범피기금 사업이 별도의 근거법을 두고 있으므로,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를 전제하지 않는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각지대 방지 및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검찰이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사업을 지속 운영해야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2년 단위로 안전가옥을 임차하는 현재의 사업 수행방식 대신 신변안전조치 대상자(범죄신고자 등)에게 숙박비나 단기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전가옥 임대 방식은 신변안전조치 대상자의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임차료, 공공요금 등의 고정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숙박비나 단기임대료 지원 방식은 실제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숙소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신청할 때만 예산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03]

둘째, 검찰이 지정하는 안전가옥보다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원하는 임시거주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안전가옥은 수도권과 부산 권역에만 위치한 관계로 그 외의 지역에서 신변안전조치를 필요로 하는 범죄신고자등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숙박비·임대료 지원 방식이 신변안전조치 당사자의 선호에 더 부합할 가능성이 있음.

---

103) 실제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개월동안 범죄신고자가 희망하는 비즈니스 호텔 숙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음.

셋째,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라는 사업 목적의 실질적인 달성 측면에서도, 안전가옥의 소재지는 최소 2년 이상(계약 연장시 4년 이상) 위치가 고정되어 신변안전조치 당사자가 소재 노출에 따른 부담감을 갖게될 우려가 있고, 일시적으로 검찰에서 보호해야 할 신변안전조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 검찰이 보유한 안전가옥으로는 동시에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다)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사업 목적을 고려한 중국 파견 추진 등 운영 개선 필요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은 검찰이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의 주요 근거지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관을 파견하여 해외 수사 거점을 마련하고, 양국 간 핫라인 구축 및 보이스피싱 국제 공조수사를 지원하는 것임. 전담수사관 예산이 신규 편성된 2022년부터 필리핀에 2명의 수사관을 파견 중이며, 2023년에는 관련 국외여비 1억 2,477만원 중 1억 1,477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2년	95,000	95,000	85,000	10,000
2023년	124,774	124,774	114,774	10,000

* 자료: 법무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 현황>

차수	파견인원	파견 기간	활동 내용
1차	7급 1인 7급 1인	'22.7.25.~ '23.1.20. '22.6.2.~'23.1.27.	-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검찰 연락관 임시데스크' 운용 합의 - 수사청 개청 기념식 등 각종 행사 참석 - 필리핀 이민청과 정기 실무회의 협의 및 시행 등
2차	7급 1인 8급 1인	'23.3.13.~9.8.	- 검찰 연락관 데스크 계속 운용 - 이민청 외국인보호소와 업무협의 - 보이스피싱합수단 사건 수사지원 등
3차	8급 1인 9급 1인	'23.9.8.~'24.1.20.	- 보이스피싱합수단과 협력하여 총책 및 검거 - 법무부 및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 지원 - 필리핀 최대 한인커뮤니티에 보이스피싱 자수 권고 게시글 게재 등

* 자료: 법무부

○ 검찰은 2022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신규 추진시 당초 중국 파견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정책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필리핀으로 파견대상국을 변경하였음.

2022년 관련 예산 신규 편성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정부의 각종 대응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도 세력인 해외조직의 와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97% 이상이 해외에 위치하고 그 중 87.5%가 중국에 위치[104]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을 위해 중국에 수사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바 있음.

104) 법무부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2021.10월) 시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의 국가별 비중이 중국 87.5%, 필리핀 6.2%, 태국 3.7%라고 분석하였음.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환경적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동 사업의 최초 파견국가가 필리핀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나, 현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중국의 봉쇄정책이 해제된 점, 여전히 중국이 보이스피싱 해외거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사업 신규 추진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의 중국 파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검찰청과 필리핀국가수사청은 2016년 조직범죄, 마약류범죄, 인신매매, 도박 및 관련 연관 범죄, 범죄수익 환수 등 초 국가적 범죄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2022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 역시 해당 MOU를 근거로 필리핀과 업무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임.

그로 인해 필리핀에 파견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뿐만아니라 성매매, 성폭력, 도박 등 다른 유형의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필리핀과의 형사사법 공조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파견 이후 주요 수사 실적>

기간	수사 실적	비고
2022. 10.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범 검거 및 소환	검거 1인
2023. 10.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및 송환, 공범 자진귀국 및 출석 유도**	**검거 1인, 자수유도 2인**
2023. 3.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책 정보인지 및 수사**	**1인 수사 개시 지원**
2023. 9. ~	'라임사건' 주범 소재 수사	
2023. 12.	장기 도피중인 성폭력 사범 검거	검거 1인
2024. 3.	도박장소개설 사범 검거	검거 1인
2024. 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거	검거 1인
2024. 7.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	**검거 1인**

* 자료: 법무부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규모와 국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 대한 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마약수사 사업

(가) 결산 개요

○ 마약수사 사업(1335-304)은 마약사범 수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마약퇴치 및 수사공조를 위한 국제협력과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OLOMICO),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APICC) 등 국제회의와 국제협력체 등의 운영을 추진하는 것임. 2023년 예산액 48억 5,700만원 중 타 사업 이·전용(△9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48억 4,800만원이며, 이 중 48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마약수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마약수사	4,857	-	△9	-	4,848	4,839	-	9
· 마약사범 수사	4,595	-	△9	-	4,,586	4,577	-	9
·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ADOLOMICO)	98	-	-	-	98	98	-	-
·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APICC) 운영	164	-	-	-	164	164	-	-

(나)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APICC) 홈페이지 운영 부실 문제

○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APICC)는 2012년 대검찰청에서 창설한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간 정보교환과 수사공조를 위한 국제협력체임. 대검찰청은 APICC 총회 및 워크숍 개최·운영, APICC 회원국

에 대한 마약단속장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APICC 사업 관련 2023년 예산은 수용비, 임차료, 국외여비, 일반연구비 등 1억 6,424만원이 편성되어 1억 4,2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일반연구비(260-01)는 APICC 홈페이지의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보안 등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APICC 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년도 / 비목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수용비	99,756	93,819	99,756	4,770	82,756	78,526	82,756	82,437	82,756	82,542
임차료	9,000	8,725	9,000	0	9,000	0	9,000	0	9,000	14,000
국외여비	60,034	45,173	61,802	0	62,194	48,139	62,194	46,317	64,485	37,758
일반연구비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합 계	176,790	155,717	178,558	12,770	161,950	134,665	161,950	136,754	164,241	14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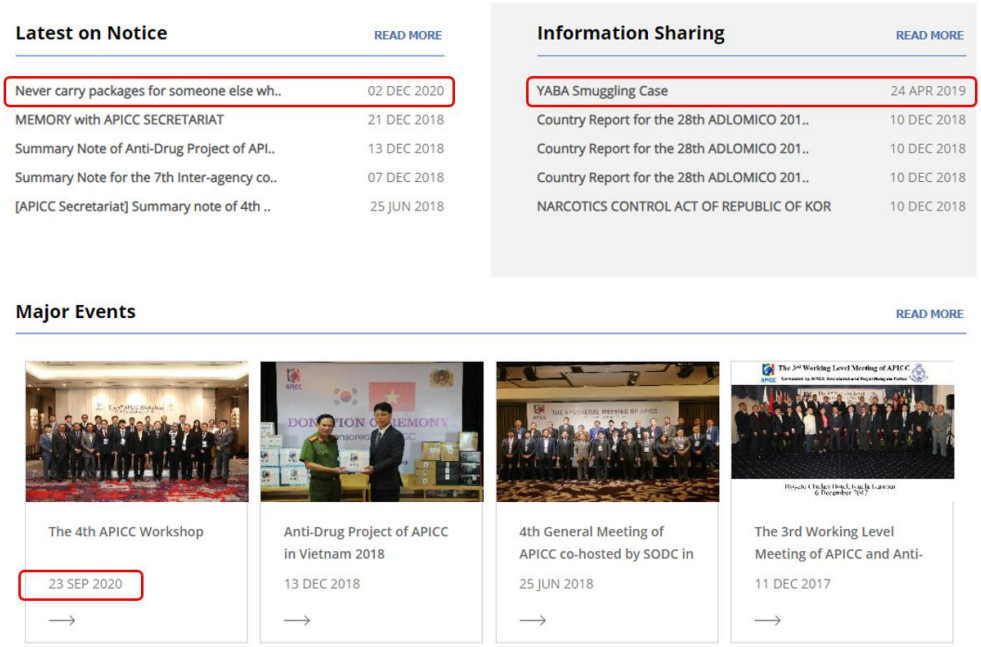
* 자료: 법무부

APICC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 800만원씩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운영 중인 APICC 홈페이지[105]를 보면 메인 화면의 최신 게시물이 2020년 12월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2021년 이후로는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05) http://www.apicc.info/

〈APICC 홈페이지 메인 화면(빨간 박스가 최신 게시물)〉

(검색일: 2024. 6. 25.)



* 출처: http://www.apicc.info/

이에 대해 검찰은 APICC 홈페이지는 회원국 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신속·간편하게 공유하기 위해 2012년 구축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사실상 홈페이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APICC 홈페이지가 회원국의 승인을 얻은 사람만 접속·이용이 가능한 폐쇄적인 방식이었다는 점도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사실상 홈페이지가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편성·집행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검찰은 APICC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일반 국민 및 전세계 마약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APICC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홈페이지가 APICC 및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1)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사업

(가) 결산 개요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사업(1335-305)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관계인의 진술 신빙성을 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42억 9,000만원 중 타 사업 이·전용(△4,4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42억 4,600만원이며, 이 중 42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4,290	-	△44	-	4,246	4,244	-	2
· 진술분석관 운영	1,024	-	△35	-	989	989	-	-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3,266	-	△9	-	3,257	3,255	-	2

(나)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예산의 과다한 미집행 문제

○ 여성아동전용조사실은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인 여성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조사실과 달리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로 구성된 전용 조사실을 설치하는 것임. 한편 장애인전용조사실은 점자 안내 블록, 점자 안내 표시판, 복도 양 측면 손잡이 설치, 출입 문

턱 제거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조사실을 조성하고,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인 사건 관계인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법무부와 검찰은 동 세부사업 내에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리모델링 포함) 및 관련 집기류 배치를 위해 2023년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8억 8,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6억 1,401만원만 집행하였고(집행률 69.5%), 집행하지 않은 2억 6,900만원가량을 공공요금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연도별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년도 / 비목	2021		2022		2023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공사비	415,000	414,760	557,330	557,330	557,330	352,268
자산취득비	58,000	57,997	326,171	326,162	326,171	261,821
합 계	473,000	472,757	883,501	883,492	883,501	614,089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은 2023년 집행 실적 부진에 대해 신청사 이전, 전용조사실 설치 공간 부족 등 청별 사정으로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신청사 이전은 실제 이전에 착수하기 수 년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는 다년도 사업이므로 예측 가능성이 있고, 청별 전용조사실

설치 공간 역시 예산안 편성 시점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2023년 해당 예산 편성시 전용조사실 설치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임.

○ 또한, 여성아동 및 장애인전용조사실 사업은 2023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2024년 이후 해당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데, 2023년말 기준 여성아동조사실은 모든 지검, 지청에 설치가 완료된 반면, 장애인전용조사실은 당초 목표했던 16개 지검 중 춘천지검, 창원지검 2개청에 설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종료되었음.[106)]

이처럼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마지막 연도 예산을 30% 이상 집행하지 못한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해 뿐만아니라 장애인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사업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음에도 대규모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에서 조사받는 장애인인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전용조사실 설치 사업 완료를 위한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6) 2021년 최초 사업 계획 수립시 장애인전용조사실은 지검 단위만 필수 설치 대상이었고, 지청 단위 검찰청은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장애인전용조사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12) 형사보상 사업

(가) 결산 개요

○ 형사보상 사업(1337-302)은 법원의 무죄 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를 대상으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변호인이었던 자의 공판 준비 및 공판 출석에 소요된 경비를 보전하는 것임. 2023년 예산에 4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168억 5,2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 받아 예산현액은 568억 5,200만원이며 이 중 568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음.

<형사보상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형사보상	40,000	-	16,852	-	56,852	56,851	-	1
·형사보상금 등 지급	40,000	-	16,852	-	56,852	56,851	-	1

(나)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타 세부사업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지양 필요

○ 형사보상금은 매년 예산편성액 대비 초과 지출되어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빈번한 상황임. 특히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형사보상 소요가 발생하여 당초 예산 대비 40% 수준인 168

억 5,200만원을 타 세부사업에서 이·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비비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019	33,213	-	6,926	40,139	40,139	120.9
2020	37,313	-	4,594	41,907	41,907	112.3
2021	40,000	-	4,390	44,390	44,387	111.0
2022	40,000	-	2,323	42,323	42,323	105.8
2023	40,000	-	16,852	56,852	56,851	142.1

* 자료: 법무부

<2023년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전용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사업코드)	충당 금액
자체이용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7002-101)	14,102
자체이용	검찰국기본경비(7011-256)	8
자체이용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2)	525
자체이용	검찰청운영기본경비(7018-252)	15
자체전용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572
자체전용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290
자체전용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280
자체전용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116
자체전용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628
자체전용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3)	70
자체전용	마약수사(1335-304)	9
자체전용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1335-305)	44
자체전용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1335-306)	42
자체전용	공판활동지원(1337-300)	10
자체전용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31
자체전용	형사법정비(1338-300)	108
합 계		16,852

* 자료: 법무부

○ 형사보상금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 결정되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음. 다만 2023년에는 검찰국 소관 거의 모든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형사보상금 지급 소요의 증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지출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22조[107]의 예비비 배정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향후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108]

---

107) **「국가재정법」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08) 실제 법무부는 과거 형사보상금 초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14년 742억원, 2015년 278억원, 2016년 58억원, 2017년 62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바 있음.

(13) 형사법 정비 사업

(가) 결산 개요

○ 형사법 정비 사업(1338-300)은 형사사법 제도 정비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형사 관계 법령에 대한 학계 및 실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연구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임. 2023년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타 사업 이·전용(△1억 8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2억 4,200만원이며, 이 중 2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법정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형사법정비	350	-	△108	-	242	237	-	5
·형사법 정비 연구지원	297	-	△97	-	200	196	-	4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53	-	△11	-	42	41	-	1

(나)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예산 조정 필요

○ 검찰은 「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109] 및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규정 제4조[110]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형사법자문위원회,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분과위원회 등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023년의 경우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을 위해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었고, 이 중 9,500만원이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에 집행되었음.

○ 2023년 특별분과위원회 예산은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액(5,000만

---

109) **「법무자문위원회규정」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0) **「법무자문위원회규정」제4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원→9,800만원)되었으나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특히 최근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 이후 한 차례도 집행률이 50%를 넘은 적이 없는 등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특별분과위원회 예산 집행 현황(일반수용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2017년	160	14	8.8	주요 국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대응으로 형사법 자문위원회 미개최
2018년	140	0	0.0	
2019년	140	2	0.01	
2020년	0	0	-	예산 전액 삭감으로 미집행
2021년	50	20	40.0	현안과제 수행, COVID-19 확산 등으로 위원회 개최 미흡
2022년	50	24	48.0	현안과제 수행, COVID-19 확산 등으로 위원회 개최 미흡
2023년	98	0	0.0	전세사기, 마약범죄, 이상동기범죄 등 중대현안 발생

* 자료: 법무부

검찰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당시 증액 편성 배경에 대해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한 법령 개정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완화로 위원회 개최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특별분과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전세사기, 마약범죄, 이상동기범죄 등 중대현안발생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우선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전액 불용되었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17년~2019년에도 공수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을 이유로 형사법 자문위원회가 미개최되는 등 중대현안발생 및 현안과제 수행 등을 이유로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련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황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관련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운영 예산을 지속 편성하더라도, 과거 집행실적을 보면 단 한차례도 3,000만원 이상 집행된 사례가 없는바, 현재 특별분과위 운영 예산 규모(9,800만원)는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111] 예산 편성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11) 2024년에도 2023년과 동일하게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14) 안미영 특별검사

(가) 결산 개요

○ 안미영 특별검사 사업(1339-308)은 2022년 4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5월 9일 공포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명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등 업무 지원을 위한 것임. 2023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6억 4,000만원과 예비비 15억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억 6,500만원 중 1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안미영 특별검사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안미영 특별검사	-	640	-	1,525	2,165	1,460	647	58
·안미영 특별검사	-	640	-	1,525	2,165	1,460	647	58

(나) 국가재정법상 이월 한도를 초과한 과도한 예비비 이월 시정 필요

○ 법무부는 안미영 특별검사팀 운영을 위해 2023년에 총 15억 2,5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았는데, 1차로 6월에 8억 6,000만원을 배

정 받았고 2차로 12월에 6억 6,500만원을 배정받았음. 법무부는 2차로 배정받은 예비비 6억 6,500만원 중 이월이 불가한 직책수행경비 약 1,8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인 6억 4,700만원을 2024년도로 이월시켰음.

○ 법무부는 2022년에도 안미영 특검팀의 예비비를 2023년으로 이월한바 있고, 과거에도 박영수 특검, 허익범 특검팀 등에서 배정받은 예비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관행을 반복해왔음.

<특별검사 운영 관련 예비비 이월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박영수 특검 (2016.12~2023.2)		허익범 특검 (2018.6~2021.7)		안미영 특검 (2022.5~)	
	예비비 배정액	이월액	예비비 배정액	이월액	예비비 배정액	이월액
2016	3,967	3,004	-	-	-	-
2017	2,502	317	-	-	-	-
2018	2,898	27	3,148	507	-	-
2019	2,740	156	1,466	46	-	-
2020	2,308	400	2,065	120	-	-
2021	1,391	199	2,040	-	-	-
2022	-	-	-	-	4,265	640

* 자료: 법무부

○ 이러한 예비비 이월의 근거를 보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은 예비비 집행시 이월을 최소화하되,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5호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란 '기본경비' 즉, 각 중앙관서에서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를 의미하며, 이월 한도는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5%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44

(3) 예비비 이월 최소화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소요는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8, 59

<2. 기본경비>

2-1. 적용범위

가.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의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임

2-2. 세부지침

나. 기본경비 이월

(1) 기본경비 이월범위

○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목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복리후생비

나. 직책수행경비

○ 예비비는 '기본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지침에서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이월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국가재정법」 제48조의 내용을 예비비 특징에 맞게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비비 이월시 이월 한도는 '당해연도 배정된 예비비 총액의 15%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2023년 안미영 특별검사 세부사업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6억 4,700만원은 예비비 배정 총액(15억 2,500만원)의 42.4% 규모로 이월 한도를 초과하였음.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예비비 역시 법무부 세출예산에 합산되어 총

괄관리되어야 하므로 예비비의 이월한도 기준(모수) 역시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으로 보아야 하며, 2023년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은 1,550억 2,200만원이었으므로 예비비 이월 규모는 이월한도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비비 이월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을 법무부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특별검사 예산을 법무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별도의 예비비로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한해 예비비 편성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 제22조 등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예산 이월은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예비비 이월 한도 기준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기본경비 총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이라고 판단됨.

특히, 법무부는 안미영 특별검사 예비비가 처음 배정된 2022년에는 예비비 이월 한도의 기준(모수)을 ‘배정 예비비 총액’으로 해석하여 2022년 배정받은 예비비 42억 6,500만원의 15%인 6억 3,900만원만을 이월하고, 나머지 미집행액 4억 7,600만원은 불용처리한바 있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2022년 최초 예비비 배정액 4,265,066천원의 15%인

639,759천원을 이월하고, 초과잔액은 불용처리하였다"고 법무부 스스로 설명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가 2023년 배정 예비비 총액의 15%(2억 2,875만원)를 초과한 6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은 「국가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예산집행지침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향후 특별검사 운영 등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예비비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별검사 예비비를 다음연도 집행을 목적으로 당해연도에 미리 배정받는 관행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이월은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본경비 이월과 달리 예비비 이월은 예산집행지침에만 근거가 있을 뿐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비비 이월을 지양하고 특별검사 예산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2023년에 다음연도 이월을 목적으로 배정받은 예비비 6억 6,500만원 중 예산집행지침상 이월이 불가한 직책수행경비 1,800만원이 포함되어 해당 항목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 역시 부적절한 부분으로, 향후 예산집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마. 교정활동

(1)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

(가) 결산개요

○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1531-300)은 국제회의 경비 및 수용자 국제이송,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조리원·시설관리인 등 상용직 임금 등 전국 교정시설의 행정경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466억 4,400만원에서 8억 5,400만원이 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74억 9,800만원이고, 이 중 47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200만원임.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도소 행정지원	46,644	-	854	-	47,498	47,406	-	92
· 공무직 운영	26,543	-	△1	-	26,542	26,511	-	30
· 교정공무원 업무 지원 등	7,389	-	855	-	8,243	8,182	-	61
· 민영교도소·직장 어린이집 지원	12,712	-	-	-	12,712	12,712	-	-

(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사업 비목의 변경(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검토 필요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은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자살·병사사건 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해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즉각적인 치료 개입과 심층상담 및 외부 전문상담을 연계하고, 장기간 야간근무 및 격무지 근무 등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편성내역	예산액
2.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845,502**
가.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315명*500,000원= 157,500
나. 자살·병사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05건*2명*500,000원= 105,000
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54기관*4,416,700원= 238,502
라. 직무스트레스 해소 관련 교육	54기관*6,379,630원= 344,500
4. 현장근무자 정신건강 프로그램	54개기관*12,800,000원= **691,200**

* 자료: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실시 현황>

프로그램명	실시횟수	실시인원
마음나래프로그램	4,604	5,510
산림치유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45	1,540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과 현장근무자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별로 일반수용비 비목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매월 프로그램 비용을 위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액	수탁기관
02-16	마음나래 프로그램 1월분	19,931	○○○
03-17	마음나래 프로그램	58,322	○○○
04-18	마음나래 프로그램	100,085	○○○
05-12	산림치유프로그램	6,736	△△△
05-16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51,931	□□□
05-24	마음나래 프로그램	108,388	○○○
06-13	산림치유프로그램	7,533	△△△
06-15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48,640	□□□
06-15	마음나래 프로그램	143,003	○○○
06-28	산림치유프로그램	16,052	△△△
07-13	산림치유프로그램	8,054	△△△
07-13	마음나래 프로그램	145,918	○○○
07-21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65,454	□□□
08-09	교정공무원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57,106	□□□
08-24	마음나래 프로그램	69,323	○○○
09-18	산림치유프로그램	11,009	△△△
09-18	마음나래 프로그램	49,416	○○○
10-31	교정공무원 산림치유프로그램(7회차)	6,869	△△△
11-30	산림치유프로그램(8,9회차)	8,463	△△△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액	수탁기관
11-30	산림치유프로그램(8,9회차)	7,169	△△△
12-19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10,11월분)	79,812	□□□
12-19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10,11월분)	65,304	□□□
12-19	마음나래 프로그램(9.10.11월)	96,059	○○○
12-19	마음나래 프로그램(9.10.11월)	78,643	○○○
12-19	마음나래 프로그램(9.10.11월)	74,328	○○○
12-19	산림치유프로그램	30	△△△
12-21	마음나래 프로그램(12월)	15,999	○○○
12-21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9월분)	55,971	□□□
12-27	직무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12월분)	68,783	□□□
총계		1,524,331	

○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본부에서 프로그램 구성 단계부터 참여대상자 선정 및 홍보, 내부전문가에 의한 사전 상담 수행, 프로그램 점검 및 사후평가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주관·관리하면서, 사업 중 트라우마 치유·극복을 위한 외부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일부를 제한적으로 외부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을 위한 예산 편성액 15억여원 대부분은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등으로 정하고 있음.[112)]

○ 따라서, 법무부는 교정본부에서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주관·관리하고 있더라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사업을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한다면,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동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112) 1-12. 일반용역비(210-14목)
가. 적용범위
ㅇ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집행
**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수수료와 심사위원 수당 등 부대경비도 집행할 수 있다
나. 일반지침
ㅇ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가) 결산개요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1531-302)은 교정기관 노후시설·장비 유지보수,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076억 8,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억 3,100만원과 47억원 전용 감액으로 예산현액은 1,042억 1,300만원이고, 이 중 94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8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1억 200만원임.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107,682	1,231	△4,700	-	104,213	94,303	6,807	3,102
· 교정시설 유지 보수	11,970	-	-	-	11,970	11,917	-	53
· 교정시설 개선 공사	70,865	1,231	△969	-	71,127	61,277	6,807	3,042
· 교정시설 장비 개선	24,847	-	△3,730	-	21,117	21,110	-	7

(나)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의 구분 편성 필요

○ 법무부는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누락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200만원을 실시설계비에서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광주교도소 의료과 여직원 숙직실 증축 및 기결 3팀 사무실 증축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113]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증축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교도소 소유 연면적 1,703.78㎡가 증가하는 공사로서, 교정본부에서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기본조사설계비 집행 내역 >

- 목적 : 광주교도소 의료과 여직원 숙직실 증축 및 기결 3팀 사무실 증축 - 조건 :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증축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추진 필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기본조사설계 용역 추진 - 경과 : ① 2022. 9. 30. ~ 2023. 6. 14. : 기본조사설계 용역 추진(21,500천원) ② 2023. 6. 8. ~ 12. 15.(준공) (실시설계비) 15,453천원, (공사비) 310,069천원, (감리비) 2,200천원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건설비의 실시설계비 및 기본조사설계비 편성과 관련하여 「2021회계년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2022. 8.)」 및 「2023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검토보고(2022.11.)」에서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들이 기본설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가 아니라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하여 해당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실시설계비의 세목변경을 통해 이를 집행하였음.

○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공사들이 기본설계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임.

(다) 건설비의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세사업 중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20억 9,6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이·전용하고 612억 7,7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68억 700만원은 이월하고, 30억 4,200만원을 불용함.

〈최근 5년간 건설비 및 세사업별 이월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건설비(420) 예산현액	53,169	47,820	54,427	78,806	71,127
- 건설비(420) 이월 합계	7,644 (14.4%)	6,626 (13.9%)	11,990 (22.0%)	1,231 (1.6%)	6,807 (9.6%)
· 실시설계비(420-02)	-	81	338	257	565
· 공사비(420-03)	7,618	7,536	11,450	962	6,107
· 감리비(420-04)	26	112	183	11	136
· 시설부대비(420-05)	-	-	18	-	-

* 자료: 법무부

○ 수용동 증축 공사 등의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하반기에 착공하거나 실시설계가 중지됨에 따라 용역기간 및 공정 일정 부족 등으로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여 이월되었음.

〈교정시설 개선 공사 이월 내역〉

사업명	이월액 (천원)	이월 사유
강릉교도소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구조설계	131,519	내진보강구조설계 입찰 절차 지연으로 용역기간 부족
춘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3,139,177	2차 계약의 9월 착공으로 24년 4월 준공에 따른 잔여기간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영월교도소 여성수용동 증축	2,709,480	24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순천교도소 수용동 증축	80,000	24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용동 증축	42,970	계속공사로 인한 도급 공사비 및 감리비 이월

사업명	이월액 (천원)	이월 사유
상주교도소 오수처리장 증축	150,000	23년 12말 계약체결로 24년 이후 착공 가능
천안교도소 오수관로 증설공사	120,950	설계변경 검토 및 계약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인천구치소 수용동 증축	114,860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수용동 증축	318,375	실시설계 착수 중 도시계획 인허가 필요에 따른 용역 중지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 위헌 결정 이후 신속한 수용정원 확대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로 대규모 계속사업 성격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그리고 2025년부터 대규모 신·증축 공사는 국유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에서 대규모 계속사업 성격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향후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 따라서 법무부는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건설비 집행 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연초 등 적정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설비 이월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라)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 등의 혼용 집행 개선 필요

○ 법무부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미취학자녀를 위한 9개 직장어린이집(직접운영 8[114]개 기관, 외부위탁 1개 기관)을 설치하고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로 23억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보수 및 물품구입을 위해 공사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8,600만원과 9,500만원을 편성하였음.

<어린이집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	비목	편성내역	편성액
교도소 행정지원	민간위탁사업비	교정시설 내 직장어린이집 9개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 *255,885,200원=	2,302,967
	공사비	직장어린이집 보수 4개소*21,500,000원=	86,000
	자산취득비	.어린이집 물품 구입 등 9개기관*10,556,000=	95,004
	합계		2,483,971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시설 개선 공사 및 자산취득비를 집행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음.

2023년도 집행 내역을 살펴볼 때 예산 부족 등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임. 이는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에 ‘어린이집 보수’ 및 ‘어린이집 물품 구입’ 등 어린이집 소요 경비에 대한

114) 교정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8개기관) 중 대구교도소 어린이집은 2022년에 신축이전 예정이었으나 저류조 용량 문제로 2023년 12월에 이전하여 2023년 집행은 없었음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서 예산을 혼용 집행한 것이며, 사업 목적을 벗어난 집행으로 보임.

<어린이집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 분(비목)	교도소 행정지원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집행일	집행내역	집행액
민간위탁 사업비	2,302,494	-	-	-
일반수용비	-	12.29	어린이집 화재용 투척용 소화기	111
시설장비 유지비	-	3.22	보드미 어린이집 정수기 필터 교체	3,223
공사비	107,516	7.19	직장어린이집 노후 세면대 교체	30,753
		8. 3	직장어린이집 내부 환경개선공사	
		12.28	어린이집 정수기 수리 필터 교체	
자산취득비	32,233	7.25	수중펌프 3대(7.25)	1,181
계	2,442,749			35,268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어린이집 공사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은 해당 예산이 편성된 “교도소행정지원 사업”의 각 비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기관의 배정 예산 범위 및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의 공사비와 자산취득비가 집행되었다고 설명함.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 집행을 통제하여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115] 아울러 「국가재정법」,「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이·전용 등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보완하고 있음.[116]

○ 이에 법무부는 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117]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115)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16) 이·전용이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또는 자체 이·전용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법무부는 예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정교화 사업

(가) 결산개요

○ 교정교화 사업(1532-301)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심성 순화를 유도하고 출소 후 재범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비·운영비·구호 및 교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05억 3,700만원에서 8억원이 전용 등으로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97억 3,700만원으로, 이 중 9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900만원임.

<교정교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정교화	10,537	-	△800	-	9,737	9,638	-	99
·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지원	7,961	-	△814	-	7,147	7,113	-	33
· 교화시설 장비개선	2,576	-	14	-	2,590	2,525	-	64

(나)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선 등 수형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시설 내 처우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118]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 가족 만남의 시간 등 수용자의 생활이 일반 사회생활에 근접하도록 하는 처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가족만남의 집 이용”은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물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하는 것이며, “가족만남의 시간”(구 가족접견)은 교정시설 내 차단막이 없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며, 특히, 수용자 미성년 자녀 등을 위한 아동친화형 가족 만남실을 운영하고 있고,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 일정 장소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임.

○ 그런데, 2023년의 경우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 만남의 시간,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가 등의 실적이 낮음. 즉, 수형자 인원 대비 이용률 등을 보면, 가족만남의 집은 2.6%, 가족 만남의 시간은 7.4%,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실시하지 않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118) 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족만남의 집 등 이용 수형자 현황(2019년~2023년)>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1일평균 수형자 인원		33,813	33,377	33,548	32,610	35,007
가족만남의 집	이용 인원	1,908	27	0	5	895
	이용 비율	5.6%	0.1%	0.0%	0.0%	2.6%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 인원	4,295	158	859	1,454	2,588
	이용 비율	12.7%	0.5%	2.6%	4.5%	7.4%
가족만남의 날	참가 인원	9,004	59	0	24	0
	참가 비율	26.6%	0.2%	0.0%	0.1%	0.0%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참여 인원	4,859	134	0	11	305
	참여 비율	14.4%	0.4%	0.0%	0.0%	0.9%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처우는 장기간 전면 중단되었으며, 2023년 5월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교정시설에서는 '경계'단계의 방역이 요구되었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바로 회복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가족만남의 날[119]'은 그간 대규모 가족 행사로 운영되면서 금지물품 반입과 다른 수형자 가족의 신분 노출 등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현재는 개별 가족프로그램 위주로 운영 중이며, 가족접견 및 스마트접견이 활성화되고 전화사용 확대 등의 소통이 증가하는 등 '가족만남의 날' 제도의 효용이 낮아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관련 규정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19) "가족 만남의 날"이란 여러 수형자와 그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모여 음식 등을 나누는 대규모 행사인 바, 접견과 달리 자유로운 신체접촉이 가능함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및 전화사용 현황(2021년~2023년)>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스마트접견[1)]	239,615	475,702	596,833
전화사용[2)]	523,183	1,294,100	4,670,826

* 자료: 법무부

1)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예외적으로 가족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2) 수용자 전화사용 건수는 총건수만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전화사용 건수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교정시설에서의 가족 만남 등 적극적인 사회적 처우에 대한 연구[120)]에 따르면, 출소 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가족과의 유대가 이어져 가족 해체를 방지하며, 나아가 재범 억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에 비춰볼 때, 수형자와 가족간의 만남은 그 개선을 통해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향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현재 사회적 추세와 교정방식에 부합하도록 수형자에 대한 사회 처우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20)허경미, (2023), 교도소 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실태 및 개선 방향, 교정, 562
민수홍, (2018),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수형자의 가족관계: 가족접견, 서신교환, 구금 후 가족관계 변화, 교정연구 28(2)
신연희, (2015), 가족기능이 수용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족접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9(3)
조윤오, (2012), 생존분석을 활용한 교정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교정연구 57,

(다) 만델라학교 소년수형자에 대한 구분수용 예외의 조속한 근거 마련 필요

○ 만델라학교는 2022년 10월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화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수도권 내 일반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를 소년수형자 전담시설로 지정하여 202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 만델라학교 운영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에서 2억 2,700만원, “교정교화 사업”에서 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만델라학교 운영 관련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비목	집행액	비고
교정시설장비 운용및현대화	시설장비유지비	74,051	운동장 펜스 설치 등
	공사비	113,866	체육시설 설치 공사 등
	자산취득비	39,513	책상 구입 등
	합계	**227,430**	
교정교화	일반수용	51,655	교육소모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990	화이트보드 구입 등
	합계	**52,645**	

* 자료: 법무부

○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4년 6월 기준 서울남부교도소 내 별도 학습공간과 생활공간에서 소년수형자 49명에 대해 전담직원 7명(팀장 1, 정교사자격소지 6)이 지도하고 있음.

○ 그리고, 법무부는 만델라 소년학교의 소년수형자 수용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인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춘 교육·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수용의 예외로서 교도소에 해당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제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이에 법무부는 소년처우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년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된 교육환경을 갖춘 소년전담시설(서울남부교도소 내 별도 건물)을 시범 운영하고 있고, 전담시설 운영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7조[121]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소년 등은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1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처우) ⑥ 학과교육생·직업훈련생·외국인·여성·장애인·노인·환자·소년(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항에 따른 처우(이하 “중간처우”라 한다)의 대상자, 그 밖에 별도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특히 그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며,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다만, 전담교정시설의 부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만델라학교 운영 현황>

□ 추진 경과
- ○ 2022.10.26.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 ○ 2023. 2. 27. 소년수형자 전담시설 지정
- ○ 2023. 3. 2. 만델라 소년학교 운영 시작

□ 시설 개요
- ○ (위 치) 서울남부교도소(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소재)
- ○ (수용인원) 총 49명(24. 6. 7.현재)
- ○ (전담직원) 총 7명(팀장 1, 정교사 자격 소지 6)
- ○ (학교규모) 서울남부교도소 내 별도 학습, 생활 공간 마련(1, 2층 사용)
  - 1층 교육공간 : 교육실, 자습실, 상담실, 운동장 등
  - 2층 수용거실 : 총 14개 거실(3인실 6, 2인실 6, 독거실 2)

□ 학과 교육 과정
- ○ (검정고시반) 17세 이하 필수 검정고시 교육 시행을 통한 소년수형자 대상 고졸 이하 학력 취득 적극 지원
  - 정교사 자격 소지 교정공무원의 직접 강의 등 검정고시 일정(4월, 8월)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 ○ (대학진학준비반) 학업에 뜻이 있는 고졸 학력 취득 소년수형자의 의사, 학업 성취도 등을 고려, 출소 후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 검정고시 응시 인원, 합격인원
- ○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총 15명 응시, 13명 합격[고졸 9, 중졸 4])
- ○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총 31명 응시, 29명 합격[고졸 27, 중졸 2])
- ○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총 26명 응시, 26명 합격[고졸 25, 중졸 1])

□ 수능 응시 지원
- ○ 교육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만델라소년학교 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설치 및 소년수형자 10명 응시(2023. 11. 16.)

□ 대입 합격 수형자의 향후 일정
- ○ 개별 소년수형자의 출소 시기와 희망 대학의 학사규정 등을 고려하여

출소 후 실제 입학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임(대학진학준비반 12명 교육 중(24. 6. 7.기준))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시설을 분리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교도소에 소년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은 구분수용의 예외로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여 형집행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임.

○ 아울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122]에서는 ① 소년범의 교육 처우는 소년교도소 증설 등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소년범의 일반교도소 수용으로 인해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증설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② 기존 시설의 확대나 일반교도소 신설을 위한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 일반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③ 외부인 접견 등의 과정에서 성인범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따라서, 법무부는 교육에 최적화된 시설을 제공하여 학과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소년수형자의 일반교도소 내에서의 명확하고 적법한 수용 근거 마련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23]이 조속히 개정되도

122) 2023.05.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9222호)

123) 2024년 7월 현재 제22대 국회에 제출(발의)되어 있지 않음.

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년전담시설의 지정 등을 통해 소년수용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4)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

(가) 결산개요

○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7011-205)은 교정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억 5,000만원이며, 이 중 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800만원임.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450	-	100	-	550	502	-	48

(나) 교정 관련 법적 분쟁업무의 안정적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법무부는 2023년 실무수습 변호사 배정과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여야 변호사 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124] 이에 법

률사무종사변호사 중 일부를 실무수습 변호사로 채용하여 6개월간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관련 예산편성과 배정인원 배분 등은 법무실 주관으로 하여 각 실·국·본부에 배정인원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는 바, 교정본부에 2명을 확정하고 “법무실 기본경비(총액)”에서 “교정본부기본경비(총액)”의 일용 임금(110-04)으로 2,700만원(2명×2,250천원×6월)을 내역변경하였음.

<최근 3년간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계획 및 실적>

	2022		2023		2024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교정본부	0	0	2	0	3	1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일정은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하였고 교정본부에 배정된 2명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여 배치되지

---

124)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⑫ 생략

못하였고, 이후 6월 법무부의 선발 재공고에는 교정본부 선발 인원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음.

<2023년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 경과>

일시	내용
2023. 4. 24.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계획 공고
2023. 5. 10.~12	지원서 제출자 3인 서류 전형 실시
2023. 5. 17.	지원자 2인 면접 전형 실시 (면접 당일 1명 불참 의사 문자 통보)
2023. 5. 19.	최종합격자 2인 발표
2023. 5. 23.	최종합격자 중 1명 임용 포기 의사 문자 통보
2023. 5. 25.	나머지 1명 임용 포기 의사 유선 통보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교정본부는 교정 관련 법적 분쟁이 연간 약 1,500여건으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12명이 1명당 약 130건의 소송업무와 법령 제·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23년 2월 초 법무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수요조사를 통한 채용 및 법무실 예산 내역변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선발자 2명 전원이 임용포기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 교정본부는 추가 선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힘.

<2023년 교정 행정 관련 소송 현황>

구분	건수	진행중	결과	청구 사유
형사고소·고발	677 (피소인	261	1,124 (무혐의:323, 죄안됨:1,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건수	진행중	결과	청구 사유
	원 :1385명)		공소권없음:6, 각하:757, 기타:37	
행정심판	610	139	471 (일부인용:3, 기각:149, 각하:128, 취하:19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70	49	21 (인용:2, 기각:4, 각하:3, 취하: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등
헌법소원	19	6	13 (기각:1, 각하:10, 취하:2)	징벌처분, 직원고소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불복, 보호장비 사용 등
손해배상 청구	117	84	33 (원고일부승소:1, 원고패소:3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자료: 법무부(2024 교정통계연보)

○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내역변경을 통해 집행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교정본부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정규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또한, 교정 관련 법적 분쟁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실무수습 변호사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 업무 성격에 맞는 처우수준의 적정성 조사, 임용포기 시 신속한 추가 채용절차 진행 등 채용 계획의 내용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바. 범죄예방활동

(1)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사업

(가) 결산개요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사업(1631-304)은 수용 및 교육시설인 소년보호 교육기관, 보호관찰기관, 국립법무병원 건물 등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공사비, 자산취득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131억 3,200만원인데, 이 중 12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억 4,000만원임.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2,313	639	180	-	13,132	743	-	540

(나)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면밀한 감독 필요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2년부터 경북우정청 건물 4층을 임대차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무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로 2023년 이전하였음. 법무부는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 11억 5,94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중 2022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6억 3,892만원을 포함한 10억 1,773만원을 2023년도에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각 예산이 편성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정리해보면,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은 총 7억 8,063만원(2022년 기계·소방·에어컨 공사 선급집행분 + 이월예산)이고, 2023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된 내역은 총 4억 2,767만원(건축공사)임.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규 청사 리모델링 사업 집행 내역(집행연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2년 집행(선금)	이월	'23년 집행
건축	-	-	427,672
기계	50,000	127,871	117,660
소방	45,000	125,612	114,695
전기	-	222,064	203,830
정보통신	-	116,666	107,163
에어컨	46,707	46,707	46,707
합계	141,707	638,920	1,017,727

* 자료: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규 청사 리모델링 사업 집행 내역(편성연도 기준)>

구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건축	-	427,672
기계	177,871	-
소방	170,612	-
전기	222,064	-
정보통신	116,666	-
에어컨	93,414	-
합계	780,627	427,672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건물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승인이 통보 되었고, 2022년 7월 15일 국유재산 인수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였는데,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방,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축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5월말경 입주를 완료하였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 진행 경과>

기간	경과
2021. 5. ~ 2022. 5.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승인 협의
2022. 6.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사용승인 통보
2022. 6. ~ 7.	구 대구출입국사무소 용도폐지 진행
2022. 7. 15.	국유재산 인수
2022. 11. ~ 12.	소방, 기계, 전기 등 입찰 공고 및 계약
2023. 1. ~ 2.	건축 입찰 공고 및 계약
2023. 2. ~ 5.	착공 후 공사
2023. 5.	입주

* 자료: 법무부

○ 이에 따르면,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첫째, 입주가 지연됨으로써 기존 청사에 대한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음.

해당 공사는 2022년에 계획된 사업이고,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존 입주건물의 임차기간이 2023년 4월 15일에 만료되므로 4월 15일 전까지는 새 청사 입주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입주가 2023년 5월말 경에서야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청사에 대한 임차기간도 연장되었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청소년비행예방사업(1632-301) 중 임차료(210-07)로 매년 임차청사에 대한 임차료를 집행[125]하고 있었는데, 새 청사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임차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임차료 약 1,300만원을 해당 사업의 2023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계약서에 따르면 소방, 기계 등 공사의 준공일자는 4월 21일, 건축공사의 준공일자는 4월 25일이었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임차만료 전 입주는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됨.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건축 공사의 계약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2022년 6월말 경 가견적 산출을 위한 컨설팅 견적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5일 경에야 컨설팅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컨설팅 용역에 따라 컨설팅 용

125) 2022년의 경우 7,535만원을 집행하였음.

역 보고서가 9월 20일경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것은 2023년 1월이었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관련 계약의 계약서상 일정>

(단위: 천원)

구분	계약일	계약서상 착공일자	계약서상 준공일자
건축	2023. 2. 9.	2023. 2. 15.	2023. 4. 25.
기계	2022. 12. 19.	2023. 2. 21.	2023. 4. 21.
소방	2022. 12. 19.	2023. 2. 21.	2023. 4. 21.
전기	2022. 12. 19.	2023. 2. 21.	2023. 4. 21.
정보통신	2022. 12. 20.	2023. 2. 21.	2023. 4. 21.

* 자료: 법무부

적시에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추가 임차료 집행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부는 추후 소속기관의 사업추진경과를 면밀히 감독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착공시기가 2023년 2월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음.

「국가재정법」 제3조[126]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127]은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음.

12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2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같은 조 제2항[128]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이월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나열하고 있음.

법무부는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한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의 잔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202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이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형식적으로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해당 예외조항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는 것을 전제로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약이 완료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보이는데, 법무부는 건축공사의 계약시기가 지연되어 2022년 내 계약의 착수 자체가 불가능함을 입찰공고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말 계약

128)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을 조기체결하여 예산을 이월시켰는바, 이는 2023년에 소요되는 경비를 2022년도 예산으로 충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전기공사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구축(이전) 전기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본 공사와 관련된 실내건축공사 업체 선정 절차가 2023. 1.부터 시작될 예정인 사유로, 본 공사의 착공은 2023년 상반기 이내이며 발주처와 협의 필요

-이하 생략-

* 자료: 법무부

따라서, 법무부는 예산의 이월을 목적으로 계약의 시기를 임의로 앞당기는 등 부적절한 계약업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이후 법무부는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추진경과를 면밀히 감독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소년원생수용 사업

(가) 결산개요

○ 소년원생수용 사업(1632-300)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제공하여 보호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252억 1,700만원인데, 이 중 245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5.200만원임.

<소년원생수용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소년원생수용	25,217	-	-	-	25,217	24,565	-	652
-민간경상보조(320-01)	3,051	-	-	-	-	3,051	-	-

(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29]는 소년원장으로 하여금 출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1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5항[130]은 보호소년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소년원 출원생의 출원 이후 사회복귀 등을 위한 후속조치에 해당하는데, 소년원 출원생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서의 적응이 어렵거나 해당 기관의 입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소년의 관리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소년원 출원 이후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이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한국소년보호협회[131]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민간경상보조(320-01)[132]에 30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

13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사회정착지원)**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무의탁소년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가 영 제98조에 따라 운영하는 자립지원시설의 이용지원, 취업알선, 그 밖에 필요한 사회정착지원을 하여야 한다.

131) 보호소년 등의 선도·보호, 사회정착지원, 장학.원호, 연구활동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1998.12)된 재단법인임.

13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한국소년보호협회 보조금 예산 및 집행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2023년도 예산	2023년도 집행액
○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및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3,051,123,000	3,051,123,000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1,113,105,000	998,105,000
- 인건비	676,407,000	561,407,000
- 주요사업비	436,698,000	436,698,000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242,281,000	242,281,000
- 인건비	116,256,000	116,256,000
- 주요사업비	126,025,000	126,025,000
■청소년자립생활관	1,695,737,000	1,810,737,000
- 인건비	1,256,176,000	1,371,176,000
- 주요사업비	439,561,000	439,561,000

* 자료: 법무부

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청소년자립생활관은 만 12세에서 22세까지의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에게 그룹홈(Gr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 숙식, 대학 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에 총 8개(의왕·대전·부산·광주·대구·안양(여)·전북·강원)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설치되어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총 입주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입주인원이 매년 정원에 미달하였는데, 청소년자립생활관 중 절반 이상인 6곳(강원·대전·부산·안양·광주·의왕)의 생활관이 2024년 4월 기준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50% 이하였고, 이 중 부산(31.2%) 및 광주(12.5%) 생활관은 현원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자립생활관 평균 입주인원 현황〉

연도	합계	강원	대전	대구	부산	안양	광주	전북	의왕
정원	130명	18명	12명	16명	16명	20명	16명	18명	14명
2020	91명	14명	10명	18명	9명	10명	9명	16명	5명
2021	83명	13명	10명	16명	8명	9명	8명	14명	5명
2022	69명	5명	8명	8명	6명	12명	10명	13명	7명
2023	56명	4명	7명	9명	7명	9명	3명***	12명	5명
2024**	54명	7명	6명	9명	5명	6명	2명	12명	7명

*자료: 법무부
**4월말 기준
***광주생활관은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운영 일시 중단('23. 9. ~ '23. 12.)

○ 해당 보조사업의 경우 급식비 등 사업비에 비해 각 시설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비율이 높아 시설의 이용자 수가 감소할 경우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편익 대비 소요비용이 과다해지며 비효율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2021년 대비 2023년 청소년자립생활관 평균 입주인원은 약 32.5% 감소하였으나, 청소년 자립생활관 운영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2021년 16억 6,100만원에서 2023년 18억 1,1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바 있음.

○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133]에 따라

1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 3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루어진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전체 시설의 입소현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최종수혜자 추이분석, 비용효과분석, 조직업무분석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규모 및 구조 적정화 등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음.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평가 결과>

(1)

구분	총평
평가결과	· 감축(일정수준('21년 사업비 1,026백만원)), 사업방식변경 – 성과지표 개선(가중치 설정 등), 시설유형별 성과분석 실시 – 수혜자범위를 근거법이 허용하는 대상자(보호소년 등)로 제한 – 입소자정원 규모 축소 – **보호소년 추이 분석 등 내외부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재조정**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재구성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바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출원생 자립지원기관 수용 미달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수용정원이 60명에서 40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평균 수용인원이 11명에 불과하였고,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교육정원이 20명인데 불구하고 2021년 월평균 교육인원이 13명에 불과하여 두 곳의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모두 정원에 미달하였음. ○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최근 5년간 매년 총 수용인원이 총 수용정원에 미달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창업비전센터 및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한편, 소년원 출원 후 재입원율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감소세에 있던 재입원율이 2022년 출원자의 경우 급증하였는데,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이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율을 높이고 소년원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등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소년원 출원 후 3년 이내 재입원자 현황>

출원연도	출원(명)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재입원(명)	비율(%)	재입원(명)	비율(%)	재입원(명)	비율(%)
2018년	2,225	148	6.7%	344	15.5%	400	18.0%
2019년	1,832	113	6.2%	281	15.3%	328	17.9%
2020년	1,468	91	6.2%	217	14.8%	243	16.6%
2021년	1,327	63	4.7%	171	12.9%	-	-
2022년	1,428	120	8.4%	-	-	-	-
2023년	1,669	-	-				

*자료: 법무부

○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소년원 출원생 자립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첫째, 출원생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소년원 신규 수용인원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월
계	5,934	5,237	5,689	6,757	2,196
보호소년	1,637	1,361	1,520	2,092	723
위탁소년	4,297	3,876	4,169	4,665	1,473

*자료: 법무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자립생활관의 평균 입주인원이 급감한 것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홍보부족과 부정적인 인식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임.

일례로,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자립생활관 이용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14명의 입소 청소년 중 7명은 입소 전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3명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례는 1명에 불과하였음.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사전 인식>

구분	인원
나도 주변에서도 모름	7명
부정: 작은 소년원	1명
부정: 자유롭지 못함	1명
부정: 힘들다고 함	1명
긍정: 잘해준다고 함	1명

*자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따라서, 법무부는 소년원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이 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입소 여부는 지원대상자인 보호소년등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생활규칙 완화 등 보호소년등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실시하는 사회정착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주관 아래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사회정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에 대한 거주형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134]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및 각 지자체는 전국에 청소년쉼터 138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기관들의 경우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크고 각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바, 지역사회 및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 청소년이 보다 양질의 사회정착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해외 유사기관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사회정착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협업 및 지원을 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1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해외사례(미국 · 일본 · 독일)〉

구분	내용
미국 오레곤 주의 위탁보호 서비스(Foster Care Services)	소년범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위탁부모를 지정하여, 주거, 음식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
미국 미네소타 주의 위성주택 배치 명령	최대 5명을 수용하는 구조화된 가족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교화 서비스 제공
일본의 갱생보호시설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154개 있으며, 주거지원,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생활기능훈련 등을 제공
독일의 perspektivwechsel e.V.	무주택 청소년 출소자에게 학업 및 일자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소법 등을 알려주며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

*자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호소년등의 선호를 높일 수 있는 개선조치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인원을 적극 확보하고,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양질의 사회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갱생보호활동 사업

(가) 결산개요

○ 갱생보호활동 사업(1633-300)은 갱생보호활동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보호,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445억 1,9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갱생보호활동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갱생보호활동	44,519	-	-	-	44,519	44,519	-	-
-한국보호복지공단	42,821	-	-	-	42,821	42,821	-	-

(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 세분화 필요

○ 갱생보호활동 사업 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내역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임. 2023년도에는 총 428억 2,1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국고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예산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135]는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구분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136]에 따라 제정된 기획재정부 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제4항[137]은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도록 하였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은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분류 기준,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 첨부 의무,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음.

---

1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1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3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 할 수 있다.

제8조(정산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②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고, 하위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보조사업예산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으로 분류하도록 한 취지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및 보조사업 예산 심의를 원활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분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운영비(210) 보조비목 중 기타운영비(210-16) 보조세목으로 일괄 산정하여 계획·집행하였음.

<2023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업무추진비(240)	기관업무비(02)	241,000,000	226,000,000	15,000,000	93%
운영비(210)	기타운영비(16)	24,000,000,000	24,000,000,000	0	100%
인건비(110)	보수(01)	18,448,000,000	18,448,000,000	0	100%
직무수행경비(250)	월정직책급(01)	132,000,000	132,000,000	0	100%
합계		42,821,000,000	42,806,000,000	15,000,000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사업비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이 제시하는 산정기준 중 운영비(210) 보조비목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지부 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건설비(420) 등 타 보조비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비

전체를 운영비(210) 보조비목으로 산정한 것은 해당 사업에 집행된 보조금 예산 규모의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023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예산 편성근거>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본예산	○ 사업비 : ('22) 26,045백만원 → ('23) 29,452백만원 (증 3,407) -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 ('22) 0 → ('23) 4,695백만원 (순증)** **· 국정과제인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관련 전문 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및 운영비** - 생활지원 등 기타 사업비 : ('22) 26,045백만원 → ('23) 24,757백만원 (감 1,288) · 생활지원, 취·창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사업, 기타사업 등을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2,000백만원 감액, 공단 공무직 '23년 최저임금 소요 133백만원, 지방세 547, 급량비 12백만원(2%), 주거환경개선 20백만원 증액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22) 1,759백만원 → ('23) 1,698백만원 (감 61) ·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의 숙식제공 등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147백만원 감액, 지방세 32백만원, 대상자 급량비 7백만원(2%), 최저임금 상승분 47백만원 증
	1회 추경	해당없음
	2회 추경	해당없음

*자료: 법무부

<보조비목 ·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1) ~ (15) (생 략)	(생 략)
	기타운영비(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 노임 · 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 · 감독 · 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자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 1에서 일부 발췌

○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비목 또는 보조세목간 전용 필요성이 있을 시 우선 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해당 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보조사업 전체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실무상의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에는 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및 창업지원 사업 성과 제고 필요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138]는 갱생보호의 방법으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을 나열하고 있음. 이 중 숙식제공

13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사업은 생활관 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139]으로, 2023년에는 총 4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창업지원 사업은 갱생보호 대상자 중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140]으로서 2023년에는 총 5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 예산 각목명세서상 숙식제공비 및 창업지원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1633-300] 갱생보호활동		
[320-01] 민간경상보조		44,519,000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29,452,000
가. 생활지원비		6,029,002
1) 숙식제공비	524명*762,723원*12월=	4,796,002
2) 긴급지원비	8,220명*150,000원=	1,233,000
나. 취창업지원비		
1)위탁교육비	1,200명*425,000원=	510,000
2)취업지원비	8,000명*1,300,750원=	10,406,000
3)기술교육원 운영비	7개소*7,857,143원*12월=	660,000
4)창업지원비	17명*33,058,824원=	562,000
5)사후지도비	26개소*807,693원*12월=	25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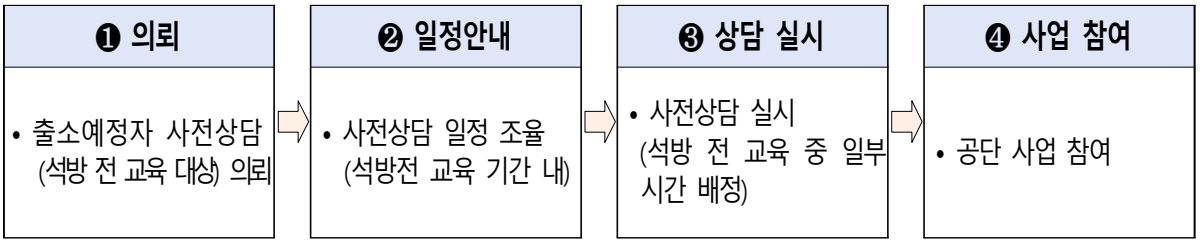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13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숙식 제공)**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숙식 제공은 생활관 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14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창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출소예정자에게 공단사업을 안내하고 자립계획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출소 후에도 우편 및 유선 등으로 재차 사업을 안내하고 있음.[14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실시 절차>



○ 그런데 최근 3년간 숙식제공 및 창업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도 숙식제공 사업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조사업 사업계획서상 계획인원은 2,055명이었으나 실제 제공인원은 1,301명으로 달성률이 63.3%로 나타났고,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계획인원 26명 중 실제 지원받은 인원은 4명에 그쳐 달성률이 15.4%로 나타나는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사업계획서에서 의도한 인원에 매년 미달하였음.

1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최근 3년간 숙식제공 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개시실적>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숙식제공	계획인원(명)	2,412	2,412	2,055
	실적(명)	1,494	1,419	1,301
	달성률(%)	61.9	58.8	63.3
창업지원	계획인원(명)	23	26	26
	실적(명)	5	2	4
	달성률(%)	21.7	7.7	15.4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숙식제공 사업의 경우 기존 생활관의 시설의 노후화와 다인실 구성으로 인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선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재 각 생활관을 1인 1실로 리모델링 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있어 이후 사업성과가 진전될 예정이라는 입장이고,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수가 적어 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숙식제공 현황(24. 5. 31.)>

연번	기관명	방 수	숙식정 · 현원(명)		생활관 유형	비고
			정원	현원		
1	서울지부	39	39	39	1인실	
2	서울동부	34	34	27	1인실	
3	인천지부	10	10	20	다인실	
4	경기지부	27	27	24	1인실	보호수용**
5	경기남부	26	26	26	1인실	
6	경기북부	9	9	16	다인실	
7	강원지부	21	21	19	1인실	
8	강원동부	16	16	11	1인실	
9	대전지부	27	27	23	1인실	
10	충남지부	18	18	0	다인실	보호수용
11	충북지부	21	21	21	1인실	
12	대구지부	18	18	25	다인실	
13	경북지부	13	13	27	다인실	
14	부산지부	26	26	25	1인실	
15	울산지부	8	8	0	다인실	보호수용
16	경남지부	18	18	18	다인실	
17	광주전남	14	14	22	다인실	
18	전남동부	27	27	7	1인실	보호수용
19	전북지부	30	30	27	1인실	
20	제주지부	17	17	16	1인실	
21	서울서부	4	4	5	다인실	
22	서울북부	4	4	2	다인실	
23	경기동부	4	4	4	다인실	
24	경북서부	5	5	5	다인실	
25	경남서부	4	4	5	다인실	
26	광주남부	9	9	8	1인실	
	소 계	449	449	422		

*자료: 법무부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시행에 따른 전용생활관

<창업지원 사업 선정기준>

(선정요건 및 기준)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
-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을 활용하려 하거나,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력자
- 본인부담금 납부 약정서를 제출한 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자가 아닌 자(신용정보조회를 통한 심사 적격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외 업종 창업희망자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자료: 법무부

○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분야별 사업실적 또한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 사업 중 숙식제공 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등 연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사업의 경우 그 부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보호관찰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실시인원)	228,975	232,591	242,997	271,523	251,264
보호관찰	101,089	95,861	95,861	94,375	93,366
사회봉사명령	58,497	62,009	51,043	69,906	61,919
수강명령	50,216	58,582	77,622	84,323	74,457
기소유예 교육 등	19,173	16,139	18,471	22,919	21,522

*자료: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 명, 건)

구분	계	숙식 제공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주거 지원	긴급 원호	사후 관리	사전 상담	창업 지원	사회 성 향상	학업 지원	심리 상담	가족 희망	취업 지원	기타 지원
2020	101,663	1,634	4,280	4,659	235	7,619	19,172	21,332	2	3,716	1,651	12,669	788	6,605	17,301
2021	119,589	1,494	4,044	5,122	169	8,457	22,812	29,467	5	4,202	2,287	13,816	974	7,019	19,721
2022	128,072	1,419	3,995	5,374	173	9,402	25,310	31,847	2	4,421	2,880	14,923	1,313	7,729	19,284
2023	141,508	1,301	4,389	5,179	147	10,201	28,008	38,124	4	4,661	3,209	16,088	1,646	7,762	20,789

*자료: 법무부

(4) 전자감독 사업

(가) 결산개요

○ 전자감독 사업(1635-301)은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전담인력 및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을 운영하고,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장치 및 감독시스템을 개선하며,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업무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306억 7,700만원이며, 이 중 287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억 3,900만원임.

<전자감독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자감독	30,677	-	-	-	30,677	28,783	955	939
-장치 및 시스템 개선	14,995	-	△472	-	14,483	13,150	955	378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사업은 전자감독(1635-301)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24시간 위치추적에 필요한 장치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관리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사업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입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49억 5,220만원을 편성하여 39억 7,817만원을 집행하고 9억 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최근 3년간 보유수량 현황을 보면, 2021년 연도말 기준으로는 4,950개였으나, 2023년 말에는 보유수량이 6,176개에 달하는 등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이는 전자장치 구입 예산이 점차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실제 구입수량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 현황 및 예상>

(단위: 개)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구입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2019년	3,634	1,601	5,235	1,271	3,964
2020년	3,964	1,623	5,587	1,066	4,521
2021년	4,521	2,229	6,750	1,800	4,950
2022년	4,950	2,300	7,250	1,601	5,649
2023년	5,649	2,150	7,799	1,623	6,176
2024년 (예상)	6,176	2,000	8,176	2,229	5,947

* 자료: 법무부

<최근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3,991,200	3,991,200	4,952,200	4,952,200

* 자료: 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으로, 2024년도에는 2021년도에 제작한 2,229개의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폐기된다 하더라도, 2024년 계획에 따라 2,000세트를 추가제작할 경우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2024년도 재고량은 5,947세트에 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인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4,000명 내외를 유지 중임. 당초 법무부는 2023년 10월 12일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범한 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포함[142]되는 등 전자감독 대상자 수의 폭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을 늘렸다는 입

14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장이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까지 발목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수는 여전히 4,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월
발목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4,052	4,096	4,205	3,924	3,946

* 자료: 법무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월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접수인원	4	4	10	12	11
종료인원	1	0	4	6	8
현재원	3	7	13	19	22

* 자료: 법무부

○ 또한, 2020년 2월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43]에 따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법무부는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해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을 1,260개로 유지하고 있으며,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수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200명대인 상황임.

14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현황>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제작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2022년	1,260	0	1,260	0	1,260
2023년	1,260	0	1,260	0	1,260
2024년 (예상)	1,260	500	1,760	500	1,260

* 자료: 법무부

<최근 5년간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월
손목형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	220	216	264	244

*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현재 부착대상자에 대한 수량 외에도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가 필요하며, 재처리를 위한 배송, 장치상태점검, 재처리 대기 및 재처리 진행, 정상작동여부 테스트 중인 전자장치 등을 고려하여 예비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최근 5년간 재처리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량**>

(단위:대)

구분	'19	'20	'21	'22	'23
발목형	2,251	3,389	3,789	4,285	4,000
손목형	-	-	-	300	822

* 자료: 법무부

**재처리 소요일수는 평균 35일(5주)

○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현재 부착 대상자에 대한 수량 외에도 장치 교체 및 재처리 등을 위한 예비수량이 갖추어질 필요는 있다고 보임.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이 과다해질 경우 제작·관리 비용과 기술노후화에 따른 폐기비용 확대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후 사업관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이는 2019년 및 2020년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이 과소하여 그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인데, 현재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수 대비 50% 이상의 여유분을 보유한 상황이므로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 및 재처리 전자장치의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특별감찰관활동

(1) 결산 개요

○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144]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특별감찰관 인건비(1802-150), ② 특별감찰관 기본경비(1818-250), ③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를 지원하는 특별감찰활동(1831-300)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에는 예산액 9억 9,800만원 중 6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 6,900만원임. 한편,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1억 3,800만원을 특별감찰활동 사업으로 전용함.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특별감찰관활동	998	-	0	-	997	628	-	369
· 특별감찰관인건비 (1802-150)	266	-	△68	-	197	-	-	197
· 특별감찰관기본경비 (1818-250)	333	-	△70	-	263	98	-	165
· 특별감찰활동 (1831-300)	399	-	138	-	537	530	-	7

144)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속적이고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전원[145]이 결원인 상태이며, 파견공무원 2명[146]과 공무직(무기계약직)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실질적인 특별감찰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사무실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특별감찰활동” 사업에서는 3인이 근무하는 264평의 사무실[147] 임차를 위해 연간 5억 2,900만원, 월평균 4,400만원의 임차료·관리비를 집행하였음.

- 특히 이러한 예산낭비는 특별감찰관실의 전원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2017년도 이후부터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 당초 편성 목적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 결원 시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 사업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집행하여 매년 당초 편성된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문제도 있음.

---

145)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 별표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차관급) 1명, 특별감찰관보(고위공무원단) 1명, 감찰담당관 6명(3·4급 상당 1명, 5급 상당 5명)로 구성(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2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음(법 제10조제1항).

146) 행정안전부 1인, 조달청 1인

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임차 관련 비용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합계
2016년	9	321	176	506
2017년	9	330	180	519
2018년	10	427	186	623
2019년	10	526	191	727
2020년	10	542	197	749
2021년	11	558	203	772
2022년	-	349	169	518
2023년	-	356	173	529

* 자료: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관활동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액	집행률(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383	-	368	-	751	749	195.5	-	2
2021	364	-	409	-	773	772	212.1	-	1
2022	399	-	127	-	526	519	130.1	-	7
2023	399	-	138	-	537	530	132.9	-	7

○ 이러한 방식의 예산집행은 예산의 당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특별감찰관실 공석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과다한 사무실 임차는 매년 대규모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년 및 2020년 결산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무실 이전 시 위약금 및 이사비용 등 추가적 예산소요, 특별감찰관 임명 시 즉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성 등을 사유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최근 4년간 특별감찰관활동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회계연도	시정요구명(유형)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2019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 개선 필요 (제도개선)	○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특별감찰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매년 편성된 관련 예산 중 필수 소요경비를 제외한 상당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며, 6~7억 규모의 사무실 임차관련 예산(임차보증금·임차료·관리비)이 지출되는 등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감찰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약 26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의 장기간 불용으로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특별감찰관의 장기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관련 예산의 불용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20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에 대한 조치 필요 (제도개선)	○ 특별감찰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7억 규모의 사무실 임차관련 예산(임차보증금·임차료·관리비)을 포함하여 매년 8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음	○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임차관련 예산 지출 등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2021년 내로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021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노력 필요 (제도개선)	○ 동 사업에서는 7억 7,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특별감찰활동의 주체인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특별감찰활동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공석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특별감찰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2	특별감찰관실 유지 인력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제도개선)	○ 특별감찰관과 감찰관보는 2016년 9월부터, 특별감찰과장 등은 2018년 4월부터 공석으로, 현재 3인(파견공무원 2인, 공무직 1인)이 사무실 유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차에 매년 5억원을 상회하는 예산(2022년 5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있음 -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는 2016년 9월부터, 특별감찰과장 및 감찰담당관은 2018년 4월부터 공석으로 특별감찰활동은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활동 재개를 대비하여 공석인 특별감찰관실 인원 및 존재하지 않는 운전원 등의 인건비를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매년 불용 및 전용을 반복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인건비, 기본경비, 특별감찰활동 예산 편성 후, 전용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집행하였음	○ 법무부와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공석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유지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 자료: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 STATS)

-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148]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국회의 추천,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바, 동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해당 기간 내에 신규 사무실 임차 등의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149]

- 또한,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기간[150]은 2025년 1월 10일에 만료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인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을 협의할 시간이 있는바, 해당 기간 내에 사무실 이전 결정 시 위약금 문제가 없어 국회 결산 과정에서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 사무실 이전을 결정하기에 용이한 상황으로 판단됨.[151]

○ 따라서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사무실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단 3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 과다한 사무실 임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48) 「특별감찰관법」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149)참고로 2015.3.27.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경우 국회의 후보자 추천과정에만 5개월(2014.7~12.)이 소요되었음.

150) '22.01.11.~'25.01.10.

151) 계약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갱신 여부에 관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한 후 임대인과 계약조건에 관하여 만료 3개월 이전까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지 않음.

아. 법무교육훈련활동

(1)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가) 결산개요

○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사업은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과 간담회, 교육 관련 출장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7억 4,5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7억 5,900만원이며, 이 중 16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1,700만원임.

<법무 · 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745	-	14	-	1,759	1,642	-	117
· 교육운영	1,122	-	-	-	1,122	1,086		36
· 교육운영 지원	0	-	-	-	637	556		81

(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법무연수원은 동 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210-09)를 1억 143만원 편성하여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비용으로 각각 10월과 12월에 5,000여만원씩 전액 집행하였음.

○ 그런데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비용은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관리용역비 내에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비로 5억 7,659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3년 사이버교육시스템 관련 편성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편성내역		편성액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210-15]관리용역비		
	1.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 가.시스템 유지관리 1)상용SW유지관리 다)사이버교육시스템	622,000천원*0.09=	55,980
	2)HW유지관리 다)사이버교육시스템	1,923,000천원*0.07=	134,610
	마.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152]	386,000천원=	386,000
	합 계		**576,590**

* 자료: 법무부

152)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비’ 3억 8,600만원은 2023년에 증액 편성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시설장비유지비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바,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 제공 댓가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볼 수 없음.

또한, 2023년도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에서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 중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 1억 2,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사업”내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사업 내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 관리용역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세사업(비목)	비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	관리용역비(210-15)	4,901	4,672	229
-사이버교육시스템 위탁운영		577	450	126

* 자료: 법무부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세부집행내역>

(단위:천원)

집행시기(월)	법무행정정보화 (관리용역비)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시설장비유지비)
2월	24,089	
3월	24,089	
4월	46,485	
5월	50,792	
6월	50,792	
8월	50,792	
9월	50,792	
10월	50,791	50,792
12월	50,945	50,638
총계	**450,358**	**101,430**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대략 6억~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예산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사이버교육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174,675	174,675	175,195	175,142	576,590	450,358
법무,검찰공무원등교육 운영 및 개선	101,430	99,032	101,430	101,430	101,430	101,430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법무연수원의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목적으로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내 관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목적으로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에 중복적으로, 용도에 맞지 않는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45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예산 집행을 통제하여 예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153] 아울러 「국가재정법」,「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이·전용 등을 규정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보완하고 있음.[154]

15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54) 이·전용이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그럼에도 법무부가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 예산을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편성·집행하여 자의적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 따라서 법무부는 사이버교육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용역비를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의 해당 예산 비목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또는 자체 이·전용 등의 절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자의적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자.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1) 법무부 청년인턴 사업

(가) 개관

○ 2023년 1월 정부는 국내·외 청년들에게 일 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청년인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함.[155] 2023년 2,000명 채용을 시작으로 4년 간('23～'26년) 총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2023년 정부 전체 청년인턴 채용 목표 2,000명은 각 부처별 정원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4월부터 각급 소속기관별로 총 2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운영하였음.[156] 청년인턴 관련 예산이 당초 2023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관계로 법무부는 여러 세부사업으로부터 전용 및 내역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청년인턴 인건비로 23억 9,000만원, 고용부담금으로 2억 6,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음.

155) 관계부처 합동,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 2023. 1.
156)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임.

<2023년 청년인턴 운영 예산 집행 및 재원조달 내역>

① 인건비(일용임금, 110-04)

(단위: 천원)

청년인턴 집행금액	예산을 집행한 세부사업	재원조달			
		유형	조달한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
12,063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 (7018-204)	자체전용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7002-102)	110-02 (기타직 보수)	13,200
97,695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내역사업 내 조정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110-04 (일용임금)	97,695
148,294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9)	자체전용	소년원 운영인건비(총액) (7002-105)	110-01 (보수)	148,294
10,442	인권국기본경비(총액) (7011-208)	내역사업 내 조정	인권국 기본경비(총액) (7011-208)	110-04 (일용임금)	10,442
220,113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0)	자체전용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총액) (7002-100)	110-01 (보수)	428,000
1,241,176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6)	자체전용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7002-103)	110-01 (보수)	1,241,176
660,726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자체전용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보수)	605,000
		내역사업 내 조정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110-04 (일용임금)	55,726
2,390,509	합 계				2,599,533

② 고용부담금(320-09)

(단위: 천원)

청년인턴 집행금액	예산을 집행한 세부사업	재원조달			
		유형	조달한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
1,357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 (7018-204)	자체전용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7002-102)	110-02 (기타직 보수)	1,500

청년인턴 집행금액	예산을 집행한 세부사업	재원조달			
		유형	조달한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
10,814	청소년비행예방(1632-301)	내역사업 내 조정	청소년비행예방(1632-301)	320-09 (고용부담금)	10,814
15,874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9)	내역사업 내 조정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9)	110-04 (일용임금)	15,874
1,122	인권국기본경비(총액)(7011-208)	내역사업 내 조정	인권국기본경비(총액)(7011-208)	320-09 (고용부담금)	1,122
26,226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0)	자체전용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총액)(7002-100)	110-01 (보수)	35,000
132,907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6)	자체전용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7002-103)	110-01 (보수)	132,907
75,000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2)	자체전용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7002-101)	110-01 (보수)	75,000
263,300	합 계				272,217

* 자료: 법무부

(나) 청년들의 선호와 편의를 고려한 청년인턴 운영 규모 결정 필요

○ 2023년 법무부 청년인턴 지원 및 경쟁률 현황을 보면, 1차 채용만으로 배정인원을 채우지 못한 소속기관이 상당 수로, 67개 소속기관에서 2차 공고, 21개 소속기관에서 3차 공고까지 진행하였음. 경쟁률은 1차 공고 1.82:1, 2차 공고 2.61:1, 3차 공고 2.03:1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음.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50% 확대(200명→300명)한 2024년의 경우에는 총 142개 소속기관에서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1차 공고 및 2차 공고 기준 2023년보다 경쟁률이 더 낮게 나타났음.

2024년 5월말 기준 2개 기관(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은 4차 공고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청년인턴 지원 및 경쟁률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공고 기관	공고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공고 기관	공고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공고 기관	공고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2023	114	212	386	1.82:1	67	97	253	2.61:1	21	29	59	2.03:1
2024	142	306	418	1.37:1	71	140	351	2.51:1	15	28	74	2.64:1

* 2024년은 5월말 기준임
* 자료: 법무부

○ 한편, 2023년 채용한 청년인턴 200명 중 18%인 36명이 채용 후 근무를 포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약만료까지 근무한 인원은 배정인원 대비 16명 부족한 184명이었음. 2024년에는 5월말 기준 일부 기관의 지원 미달 등으로 채용목표 303명 대비 74.3%인 225명이 채용된 가운데, 이미 12명이 근무를 포기한 상황으로 확인됨.

<청년인턴 채용 실적>

(단위: 명)

연도	배정인원	총 채용인원	채용 후 근무포기	계약만료까지 근무인원
2023	200	220	36	184
2024	303	225	12	근무중

* 2024년은 5월말 기준임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법무부 청년인턴의 지원 경쟁율이 높지 않고, 채용 후 근무 포기 인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

기본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인턴이 단순 업무 위주의 단기일자리라는 인식으로 인해 청년들의 인턴 제도 자체에 대한 선호나 수요가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경제·산업·문화·사회복지·환경 등 청년들이 보다 익숙하고 관심이 높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타 부처들과 비교하였을 때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비선호 현상이 작용하였을 가능성[157]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법무부 안에서도 소속기관별 업무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른 청년들의 선호 차이가 발행했던 것으로 분석됨. 2023년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한 114개 소속기관의 소관별 지원 실적을 보면 교통이 편리한 도시 지역에 주로 위치한 각급 검찰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찰 및 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1차 공고 기준 경쟁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음.

반면, 교정시설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교정본부 및 범죄예방정책국(범정국)의 경우 경쟁률이 평균 대비 낮았으며, 특히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한 교정시설에서 청년인턴을 운영한 교정본

157) 법무부도 청년인턴은 전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 및 처우를 동일한 수준으로 동시에 채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중복 지원하여 합격한 후 가장 선호하는 지역 및 기관에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부의 경우 1차 공고 기준 미달되었음.

실제 1차 공고 결과 지원인원이 전혀 없었던(0명) 기관 29개 중 24개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이었고, 4개는 범정국 소관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보호관찰소로 확인되었음.

<2023년 소속기관 소관별 청년인턴 지원 실적>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	배정 인원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		
			공고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공고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공고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법무부 본부	3	6	4	3	0.75:1	4	4	1:1	2	5	2.5:1
검찰	25	63	63	186	2.95:1	14	75	5.36:1	-	-	-
범정	21	21	21	28	1.33:1	12	43	3.58:1	-	-	-
교정	54	96	96	90	0.94:1	61	110	1.80:1	26	53	2.04:1
출입국	11	15	28	79	2.82:1	6	21	3.5:1	1	1	1:1
합 계	**114**	**201**	**212**	**386**	**1.82:1**	**97**	**253**	**2.61:1**	**29**	**59**	**2.03:1**

* 법무부 본부는 인권정책과, 국제법무국, 법무연수원
* 자료: 법무부

○ 결국 인턴으로 근무할 청년들의 실제 선호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각 부처별 정원에 비례하여 채용 인원을 할당한 결과 법무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200명)의 청년 인턴을 배정받게 되었고, 법무부도 소속기관별 채용 인원 할당 과정에서 교통 접근성 및 업무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함[158]에 따라

158) 법무부는 대도시-지방 거주 청년간 균등한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검찰·보호·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소관 업무를 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용 인원을 할당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 법무부 청년인턴의 전반적인 지원율 저조 및 기관별 수요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법무부는 2023년 청년인턴 운영 결과를 토대로 타 부처와의 실적을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소속기관별 업무 특성과 출퇴근 편의성,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소속기관별 인턴 운영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청년인턴의 실무경험 습득 및 업무참여 기회 부여를 위한 직무 설계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 2023년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 및 법무부의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보면, 청년인턴에게 단순 사무보조·잡무 부여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전공·관심직종 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하도록 하고, 조직 오리엔테이션·멘토링·개인프로젝트·주요 정책 교육 등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와 정책 과정 경험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법무부의 2023년 실제 소속기관별 청년인턴 직무를 보면, 일부 부서 및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턴 직무가 행정지원 및 자료정리, 행정지원·민원서비스,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 위주로 부여되었고, 검찰 소속 고검·지검에서는 멘토링·현장관찰·개인프로

젝트 부여 등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당초 청년인턴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소속기관 소관별 청년인턴 주요직무>

구분	기관수	배정 인원	주요직무(사례)
법무부 본부	3	6	문서 번역 및 감수, 외국 법률 및 해외자료 조사, 학술지 발간 지원, 국제행사/회의 지원, 통번역 업무 등
검찰	25	63	행정지원, 자료정리
범정	21	21	행정지원, 민원서비스, 대안 교육 지원
교정	54	96	문서수발 및 수용기록부 정리, 접견접수, 민원업무보조, 행사·홍보·문서 관리 등
출입국	11	15	민원안내·접수, 체류·사증·사범 조사 지원 출입국장 외국인 안내, 국적신청 접수 지원 등

* 법무부 본부는 인권정책과, 국제법무국, 법무연수원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정리

이는 당초 예정에 없던 범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2023년 초 긴급하게 발표·실시됨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실제 법무부도 2023년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 등을 통해 의무 지출 사항인 인건비와 고용부담금은 충당하였으나, 별도의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청년인턴 제도가 시작되어 멘토링 및 현장방문 등 예산이 수반되는 활동 진행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임.

한편으로는 수사, 출입국심사, 교정 등 업무수행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높은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근무하는 청년인턴에게

적극적으로 직무를 부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따라서 법무부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이 전공과 관심분야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근무한 청년인턴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조사·반영한 직무 설계 및 인턴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공안업무 중심인 법무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청년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경험을 습득하는 데 있어 법무부가 청년인턴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가) 결산 개요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7032-303)은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등 법무부 각급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 100억 8,600만원 중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한 7억 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7억 9,100만원이며, 이 중 104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0,086	-	705	-	10,791	10,487	-	304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10,086	-	705	-	10,791	10,487	-	304

(나)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이·전용 집행 시정 필요

○ 2022년 8월 정부는 2023년 예산에 병장 월급을 2022년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계급별 병사 월급을 인상[159]하기로 발표하였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160]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159) 월급 기준으로 이병 52.7만원→60만원, 일병 57만원→68만원, 상병 63만원→80만원, 병장 69.9만원→100만원 적용

160)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소집일부터 현

의 월급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그런데 2023년 예산 편성시 법무부의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인상된 월급 반영을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1인당 평균 단가를 월 80만원으로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무부의 2023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액은 84억 960만원이 편성되었어야 함.[161] 그러나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법무부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78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결과 인건비가 부족하여 7억 500만원을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7002-102)의 기타직보수(110-02)에서 전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연도별 법무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110-03)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5,359	-	5,359	4,984	375
2021	6,486	-	6,486	5,787	699
2022	6,912	-	6,912	6,463	449
2023	7,883	705	8,588	8,521	67

* 자료: 법무부

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소집월부터 2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9개월에서 14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161) 2023년 편성 기준 인원 876명 * 80만원/월 * 12개월

반면 법무부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교육부(각급 학교) 등에서는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정상적으로 편성(1인 당 80만원/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가 부족하거나 타 사업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는 없었음.

○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3년 예산 편성시 사회복무요원 월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편성 과정에서 최근 법무부 사회복무요원 보수 불용률이 높은 점[162]을 감안하여 요구안 대비 일부(5억 2,660만원)가 삭감되었고, 법무부 역시 기존 불용 수준을 감안하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집을 연기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입영 증가 및 월급 인상에 따른 소집 신청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실제 법무부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현원)은 888명으로 예산상 기준 인원 876명을 초과하였고, 그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음.

162) 편성 시점 기준 최근 3년 평균 보수(상용임금) 불용률 8.1%(2019년 6.5%, 2020년 7%, 2021년 10.8%)

<연도별 법무부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인원	배정인원(현원)	예산인원	배정인원(현원)	예산인원	배정인원(현원)	예산인원	배정인원(현원)
총계	904	868	991	900	958	911	876	888
본부	8	8	4	4	3	3	3	3
출입국	268	274	299	268	278	298	276	298
검찰청	547	503	567	518	562	506	477	483
소년원	41	42	41	38	41	38	41	40
보호관찰	29	29	67	60	67	55	67	54
법무연수	11	12	13	12	7	11	12	10

* 자료: 법무부

○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피복비와 같이 현원 및 예산 집행 실적 등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편성 여지가 있는 타 항목과 달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지출 사항에 해당하는바, 과거 집행 실적과 무관히 예산 상 정원 및 단가에 맞추어 편성할 사항임.

따라서 법무부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전용 받은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향후 의무지출 예산은 예산상 정원 및 단가에 맞추어 정확하게 편성·반영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3)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

(가) 결산 개요

○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7032-305)은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액은 2억 5,300만원이며 이 중 2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양성평등정책 지원	**253**	**-**	**-**	**-**	**253**	**251**	**-**	**2**
·양성평등교육비	161	-	-	-	161	161	-	-
·양성평등관련 간담회	3	-	-	-	3	3	-	-
·정책입안 및 성희롱·성폭력사건 상담·조사	6	-	-	-	6	8	-	1
·교육 콘텐츠 제작 등 용역	70	-	-	-	70	69	-	1
·양성평등주간행사 등	13	-	-	-	13	13	-	-

(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한 운영 내실화 필요

○ 법무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양성평등 정책 시행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법무부 훈령)에 의거, 2020년 4월부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2020년 4월 발족한 1기 위원회는 15명(내부6, 외부9)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12월 발족한 2기 위원회의 경우 14명(내부7, 외부7)[163]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에 대한 위원회 수당은 1인 15만원이내(서면심사의 경우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한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2년부터 일반수용비(210-01)로 1,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모두 100% 집행하였음.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0	-	-	-	-	-
2021	-	-	-	-	-
2022	10,000	-	10,000	10,000	0
2023	10,000	-	10,000	10,000	0

* 자료: 법무부

<2022년 및 2023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연도	연번	개최 일자	참석 위원 수	회의 주요 내용
2022	1	'22. 1.24.	14명	○'22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보고
	2	'22. 4.26.	7명	○1기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3	'22.12. 9.	9명	○제2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22.12.~'24.12.)
	4	'22.12.29.	6명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 추진결과 자문
2023	1	'23. 4. 6.	7명	○법무부 양성평등조직문화 개선과제 보고
	2	'23. 8.16.	5명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
	3	'23.11.13.	6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안 자문
	4	'23.12.14.	6명	○'23년 활동경과 및 '24년 운영계획 보고

* 자료: 법무부

163) 2기 내부위원(7): 차관, 기조실장, 검찰국장, 범정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본부장

법무부의 2023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2023년 개최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4차례 회의 중 법무부 차관 및 주요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은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까지 참석 실적이 전무하였고, 제4차 회의에 내부위원 한 명만 참석하는 등 내부위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음.

법무부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참석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2023년 회의안건은 연구용역 보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의안 등 외부위원 자문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의 궁극적 목적인 기관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문·평가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와 실제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게 되는 내부 정책결정자간의 충분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의가 바탕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외부위원 중심의 운영은 당초 위원회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특히, 법무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내부위원 비중을 제1기에 비해 높여서 운영하였다는 점(제1기 40%→제2기 50%),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는 양성평등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164]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일회성 회의처럼 안건 성격에 따라 임의로 회의 참석자를 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에도 대부분의 내부위원들이 위원회 정기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대한 법무부의 내부적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둘째, 2023년 제2차 회의 안건은 동 세부사업에서 진행한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165] 중간보고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에 별도로 연구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용역 완료 전 연구정책심의를 진행하여 별도의 심사위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음.

이처럼 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외부 심사가 진행됨에도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재차 중간보고를 실시한 것은 위원회 역할과 기존 정책연구용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회간 기능이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임.

---

164)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제15조(회의)**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만 회의를 개최하며,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한다.

165)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주변인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 계약액 5,900만원, 계약기간 2023.4~11.,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4)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가) 결산 개요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사업(7034-500)은 법무정보시스템, 형사사법시스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교정정보시스템 등 법무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법무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구입·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410억 1,1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5억 5,5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15억 6,600만원이며, 이 중 408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41,011**	**555**	**-**	**-**	**41,566**	**40,858**	**-**	**708**
· 법무정보시이버보안시스템 운영	8,432	-	90	-	8,522	8,293	-	229
· 형사사법시스템(법무부) 운영	1,600	-	-	-	1,600	1,600	-	-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1,926	-	10	-	1,936	1,879	-	57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7,067	555	33	-	7,655	7,534	-	121
·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16,555	-	△124	-	16,431	16,179	-	252
· 정보화사업(ISP포함)	5,431	-	△9	-	5,422	5,373	-	49

(나) 전산장비 구매 등 임차(리스) 사업의 반복적 연말 계약 개선 필요

○ 법무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교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산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를 리스계약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음.

법무부는 2023년에 총 52억 1,036만원 규모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6개월분 임차료 5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도입규모는 절반 이하인 24억 8,602만원에 그쳤고, 이에 따라 임차료도 2억 8,369만원만 집행하였음.

<2023년 본부 및 소속기관 전산장비 신규 구매 계획 대비 실적>

계획				실적			
구 분	단가(원)	수량(대)	구매액(천원)	구 분	단가(원)	수량(대)	구매액(천원)
전산 단말기	1,100,000	3,840	4,224,000	데스크탑	849,471	2,570	2,183,140
				모니터	99,000	2,000	198,000
노트북	1,230,000	152	186,960	노트북	-	0	0
빔 프로젝트	2,500,000	100	250,000	빔 프로젝트	3,176,800	16	50,829
단말 인쇄기	600,000	849	509,400	레이저 프린터(칼라)	-	0	0
				레이저 프린터(흑백)	-	0	0
스캐너	400,000	100	40,000	스캐너	540,550	100	54,055
합 계			5,210,360	합 계			2,486,024

* 자료: 법무부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내용연수가 도과하는 전산장비가 존재함에도 법무부는 이를 모두 대체하지 못하였음.

<연도별 전산장비 구매현황>

(단위 : 대)

구 분	2023년 기준 내용연수 경과 물량	2023년 도입 물량	잔여 물량(A-B)
PC	4,458	2,570	1,888
노트북	0	0	-
프린터	189	0	189
스캐너	174	100	74
프로젝터	209	16	193

* 주: 각 전산장비별 내용연수는 PC(5년), 노트북(6년), 프린터(6년), 스캐너(6년), 프로젝터(8년)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급격한 2023년 금리 인상[166]으로 인해 기존 리스계약의 2023년도 지출액이 예산 편성액보다 약 2억 6,940만원 가량 초과 집행되어 불가피하게 2023년 신규 전산장비 도입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입장임.

166)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음.

<2023년 예산 대비 실 지출액 변동이 발생한 리스계약 내역>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기간	2023년 예산	2023년 실 지출액	차액	금리 변동	금리변동 적용시점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체계 구축(5단계)	19.12.27 ~24.12.27 (60개월)	2,245,626	2,335,460	-89,834	2.731% → 5.972%	'22.12.
보호관찰정보시스템 ActiveX 제거	19.12.16 ~24.12.15. (60개월)	145,014	154,012	-8,998	3.422% → 6.79%	'22.12.
2020년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1차)	20.12.18 ~25.12.18 (60개월)	3,067,047	3,100,429	-33,382	1.913% → 3.672%	'23.12.
2019년 전산장비 구매	19.10.18 ~24.10.18. (60개월)	1,130,635	1,181,819	-51,184	2.849% → 6.018%	'22.10.
2020년 전산장비 구매(1차)	20.05.27 ~25.05.27 (60개월)	1,128,511	1,141,913	-13,402	2.572% → 4.7%	'23.8.
2020년 전산장비 구매(2차)	20.06.30 ~25.06.30 (60개월)	679,067	683,130	-4,063	2.670% → 4.815%	'23.10.
2022년 전산장비 구매	22.10.21. ~27.10.21. (60개월)	1,126,000	1,194,512	-68,512	6.248%	
초과 지출분 합계				-269,375		

* 자료: 법무부

○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존 리스계약분의 임차료 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세부사업의 리스계약이 매번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임차료 증액분이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판단됨.

조달청 지침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167]에 따르면, 5

167) **제9조(리스료)** ①리스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하며, 가산금리는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고 산정한다.
②리스계약의 리스료는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년(60개월) 단위 리스계약의 경우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4차 계약 개시 시점)에 금리 조정에 따른 리스료를 재산정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새로운 리스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경우 3년 후 금리 조정에 따른 리스료 재산정도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에 인상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임. 2023년 초과 지출이 발생한 기존 리스계약 중 3건[168]은 최초계약이 2019년 말에 체결되어 리스료 조정 역시 3년 후인 2022년 말에 이루어진 관계로, 2023년 예산 편성시 리스료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었음.

매년 금리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리스료 변동폭 역시 크지 않아 차년도 예산에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당해연도 신규 리스계약 추진에 주는 영향이 미미하나, 최근처럼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2023년과 같이 신규 리스계약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임.

○ 리스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점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에 신규 리스계약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임.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실행 시에 리스료를 재산정 한다.
③리스실행 시에는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재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한다**.

168)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체계구축(5단계), 보호관찰정보시스템 ActiveX 제거, 2019년 전산장비 구매 3건

2022년 도입된 전산장비의 경우 2022년 리스계약이 2023년 예산안 편성·제출 완료 후인 2022년 10월말에 이루어짐으로써, 2023년도분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리스료를 반영하기가 곤란하였음. 즉, 2022년 전산장비 도입 사업은 ①전산장비 구매 단가 하락 ②예산 편성시 기준 임차금리 대비 실제 금리 차이[169] 등의 이유로 당초 예산 대비 리스료가 초과집행되었는데, 2023년도분 예산 편성시 정확한 리스료가 반영되지 못함[170]으로써, 실제 2023년 예산 집행시 리스료 부족분이 발생한 것임.

이처럼 리스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질 경우 예산심사가 종료되어 실제 리스료 증감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차년도 예산 집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171]

○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부터 발주, 사업자 선정, 시스템 개발·설치·검수 등의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전산장비 구매사업도 수요조사, 구매계획 수립, 공고 및 업체 선정, 설치·검수 등 대량 구매 및 다수 기관 설치를 위한 단계적 진행에 따른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여 리스계약 일정을 앞당기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169) 예산 편성시 임차료 요율은 1.8%인 반면, 실제 계약금리는 6.248%였음.
170) 2022년 신규 장비 도입분에 대한 2023년 리스료 예산은 2022년 예산 편성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됨.
171) 2023년의 경우에도 신규 전산장비 리스료로 5.6억원(6개월분)이 편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24년 예산에 2023년 도입분 리스료로 11.2억원(12개월분)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2023년 전산장비 신규 도입에 2.8억원만 집행됨에 따라 2024년에 편성된 2023년 도입분 리스료 역시 50% 가량인 5.6억원의 불용이 불가피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장비 구매 사업의 일반 절차(일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산장비 구매사업
① 행안부 사전협의 (1~2월) ② 국정원 보안성검토 (1~2월) ③ 조달청 공고·평가 및 계약 (3~5월) ④ 시스템 구축 (5~12월) ⑤ 리스계약 의뢰 (11월) ⑥ 검수 및 리스계약 체결 (12월)	① 수요조사(호환성 검토) (1~2월) ② 조사결과 취합(구매사양 검토)(3~4월) ③ 구매계획 수립(5월) ④ 공고, 업체 선정 (6월) ⑤ 기관별 설치, 검수(7~8월) ⑥ 리스계약 발주, 체결(9~10월)

* 자료: 법무부

다만, 행안부 사전협의 및 국정원 보안성 검토가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달리 전산장비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5개월 가량 소요되는 수요조사 및 조사결과 취합, 구매계획 수립을 회계연도 개시 이전부터 착수함으로써 리스계약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반복적인 연말 리스계약이 예산편성의 불확실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전산장비 구매 등을 중심으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가급적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하반기에 체결되는 리스계약이나 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라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리스료의 실제 소요가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5)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

(가) 결산 개요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7037-300)은 법무부의 각종 정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8억 700만원 중 7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807	-	-	-	807	750	-	57
· 홍보사업비	400	-	-	-	400	400	-	-
· 근로자 인건비	358	-	-	-	358	301	-	57
· 홍보업무 운영비	49	-	-	-	49	49	-	-

(나) 매체별 적정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옥외광고 집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2023년에는 옥외광고·신문·라디오 등 전통적인 플랫폼(레거시 미디어)을 활용한 광고집행 규모가 1억 6,780만원으로 SNS 등 뉴미디어 홍보 규모(1억 398만원)보다 높게 나타났음.

<매체 유형별 광고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전통적 플랫폼(레거시 미디어)			뉴미디어(SNS홍보)	
	구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20	옥외광고	60,000	-	105,000	**206,620**
	신문·TV·라디오	60,000	5,500		
	합계	120,000	**5,500**		
2021	옥외광고	60,000	53,904	100,000	**196,700**
	신문·TV·라디오	60,000	66,000		
	합계	120,000	**119,904**		
2022	옥외광고	60,000	101,200	100,000	**174,179**
	신문·TV·라디오	60,000	8,800		
	합계	120,000	**110,000**		
2023	옥외광고	60,000	123,800	100,000	**103,980**
	신문·TV·라디오	60,000	44,000		
	합계	120,000	**167,800**		

* 자료: 법무부

2023년의 경우 마약 근절 정책 홍보에 집중하여, 옥외광고와 라디오광고는 해당 정책 홍보에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 옥외 및 라디오 광고 집행 실적>

(단위: 천원)

매체	광고내용	광고 계약액	계약 업체	광고 위치	노출기간	노출 시간대
옥외광고	마약근절 포스터광고	38,000	언론진흥재단	지하철 1~8호선	4. 15.~ 5. 14.	·1~8호선: 05:00~익일01:00 전광판 730기, 10초 일 200회
옥외광고	마약근절 옥외광고	42,900	〃	지하철 1~4호선	5. 10.~ 6. 9.	·1~4호선: 05:00~24:00전광판 25기, 20초 일 198회 ·KTX: 06:00~24:00 전광판 1기,

매체	광고내용	광고 계약액	계약 업체	광고 위치	노출기간	노출 시간대
				KTX, SRT 전광판		20초 일 158회 ·SRT : 04:30～익일 01:30 전광판 1기, 20초 일 189회
옥외광고	마약포스터 광고	42,900	〃	지하철 1～4호선 KTX, SRT 전광판	9. 4.～10. 3.	·1～4호선: 05:00～24:00 전광판 25기, 20초 일 163회 ·KTX: 06:00～24:00 전광판 1기, 20초 일 101회 ·SRT : 04:30～익일 01:30 전광판 1기, 20초 일 189회
라디오	라디오 마약광고	44,000	〃	SBS (라디오)	4.15.～5.14.	POWER FM 15:26 / 30회

* 자료: 법무부

○ 옥외광고 및 라디오광고는 대중 이동량이 높은 공공장소에 설치(옥외광고)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에게 송출(라디오)하여 정보 노출의 순간적인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광고 집행비용이 크고, ②광고 노출 장소(옥외광고) 및 시간이 특정되고 광고 기간이 제한되며, ③뉴미디어 매체와 달리 수동적 노출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음.

무엇보다 광고 전후 도달률(조회수 등) 측정을 통해 광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뉴미디어에 비해, 옥외광고와 라디오광고는 광고집행 비용대비 효과 및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특히 법무부가 2023년 집중적으로 광고 집행한 소재가 '마약 근절'

인데, 최근 마약 범죄 예방 및 선도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이 20~30대 청년 및 10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옥외광고와 라디오광고 비중이 높은 것은 광고매체 선택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임.

구체적으로, 학생과 청년의 지하철 이용 시간대는 출퇴근 및 통학 시간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KTX 및 SRT의 경우 청년·학생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만아니라 열차 전광판 광고의 집중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라디오 광고 역시 한달의 기간 동안 하루 한차례 방송에 그쳐 광고에 따른 인지도 제고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무부는 최근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달리 옥외광고·공중파 광고 비중이 늘고 뉴미디어 홍보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광고집행 추세를 면밀히 점검하여, 전체 홍보 예산 규모와 광고 매체별 광고 효과의 장단점을 토대로 매체별 광고 비중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주요 정책별 홍보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적합한 광고 매체를 선정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72]

172) 대통령령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제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를 관장하고 있고(제1항),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관하여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바(제2항), 마약 근절 정책과 같은 범정부적 홍보 소재에 대해서는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및 홍보 컨설팅 등을 거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6)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173]) 관련 사업(7038 단위사업)

(가) 결산 개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7038-300)은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과, 사건관계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형사사법 관련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66억 4,100만원 중 65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불용하였음.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6,641**	**-**	**-**	**-**	**6,641**	**6,508**	**-**	**133**
·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54	-	-	-	54	54	-	-
· 공통시스템 Active-X 제거	394	-	-	-	394	394	-	-
· 형사사법통계 보안 강화	72	-	-	-	72	47	-	25
· 형사사법포털 운영 개선	78	-	-	-	78	52	-	26
·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5,616	-	-	-	5,616	5,579	-	37
· 기타 운영 경비	427	-	-	-	427	382	-	45

한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7038-301)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추진에 따라 현재 노후된 형사사법정보시

173)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구축, 감리, PMO[174] 및 관련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485억 900만원 중 483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48,509**	-	-	-	**48,509**	**48,384**	-	**125**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46,248	-	-	-	46,248	46,219	-	29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807	-	-	-	807	807	-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PMO	940	-	-	-	940	940	-	-
· 조달수수료	191	-	-	-	191	191	-	-
· 추진단 운영	323	-	-	-	323	227	-	96

(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

○ 2023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단위사업(7038) 내 2개 세부사업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홍보 목적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 각각 6,000만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의 홍보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3년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두 사업에서

174) 프로젝트 관리 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 공공부문에서는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를 의미함.

홍보물품 구매를 위해 각각 7,356만원, 1,462만원 등 총 8,818만원을 집행, 당초 계획대비 26% 가량(1,818만원) 초과 집행하였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련 홍보물품 구매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세부사업	항목	예산액	집행액	초과집행액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	외국어소개 홍보집	27,000	73,562	13,562
	포털 홍보 및 자료제공	33,000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홍보물 등 제작비	10,000	14,620	4,620
합 계		70,000	88,182	18,182

* 자료: 법무부

특히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사업의 경우 법무부는 당초 KICS 소개를 위한 국문/영문 홍보책자와 탁상달력 제작 등으로 5,94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175]하였으나, 실제 해당 사업의 지출부 및 지급부를 확인한 결과 미니선풍기, 머그컵, 종이쇼핑백, 만년필, 수성펜, 수건세트, 우산, 텀블러 등 여러 종류의 홍보물품을 구입하는데 7,35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볼펜, 수성펜, 휴대용 담요 등을 홍보 용도로 구입함.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전면 전자화를

175) 법무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홍보예산 집행 관련 최초 제출 자료(단위: 천원)

항목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외국어소개 홍보집	27,000	27,000	27,463	543
포털 홍보 및 자료제공	33,000	33,000	31,994	
합 계	60,000	60,000	59,457	543

* 자료: 법무부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고, 해외 형사사법기관과의 교류, 법무연수원 등 교육기관 연수생, 주요 국제회의, 법조 출입 언론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홍보 목적으로 관련 물품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KICS 관련 홍보물품 구매 내역>

(단위: 개, 천원)

세부사업	집행내역	수량	집행액(원)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	탁상달력	12,500	31,994
	미니선풍기	300	4,488
	머그컵	100	4,698
	종이쇼핑백	150	594
	KICS 안내책자(국문)	200	3,498
	KICS 안내책자(영문)(번역료 포함)	300	5,456
	만년필	70	4,507
	수성펜	90	4,816
	수건세트	150	4,414
	우산	250	4,334
	텀블러	180	4,764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볼펜	3,000	1,260
	수성펜	100	4,741
	휴대용 담요	256	3,999
	홍보용 리플렛	20,000	4,620
합 계			88,182

* 자료: 법무부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및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홍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의 예산집행지침[176] 상 기념품 등 홍보물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

법무부가 제작·구입한 홍보물의 종류와 수량,[177] 당초 예산대비 초

176)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1

과 집행된 규모 등을 감안하면 홍보물품 구매가 과도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확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를 지양하고 관련 예산의 절감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내용연수 고려 없는 전산소모품의 일괄 신규구매 지양 필요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형통단)은 2023년 9월~10월 기간 중 전산실 확장 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를 실시하면서 전산소모품 구매를 위해 1,189만원을 집행하였음.

이 중 정보보호필름(370만원)을 제외한 819만원은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암, 키보드 등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PC 부속품임.

<형통단 사무실 재배치 관련 전산소모품 구매 내역>

납품일	구매품목	단가(원)	수량(개)	금액(원)
23.8.31	마우스(L사 버티컬 마우스)	90,000	30	2,700,000
23.10.5	헤드셋	48,000	25	1,200,000
	정보보호필름	125,000	20	2,500,000
	정보보호필름	120,000	10	1,200,000
23.10.17	모니터암	45,000	30	1,350,000
	키보드(H사 기계식 적축 키보드)	98,000	30	2,940,000
합 계				11,890,000

* 자료: 법무부

177)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구매한 홍보물품은 2024년 6월 현재 절반가량 재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무실을 재배치한다고 하여 기존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등 개인 PC 부속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님에도, 사무실 재배치 후 사무실 근무 인원 수에 맞추어 개인 PC 부속품을 일괄적으로 신규 구매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보임.

특히, 형통단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구매하면서 일반 사무용 단가 대비 5배 가량 비싼 특수 기능이 탑재된 모델[178]을 일괄 구매하였음.

예산집행지침[179] 상 일반수용비의 소모품 구입은 최대한 절감 집행이 원칙이며, 범용적 기능을 초과하는 특수 기능이 탑재된 물품의 일괄구매는 직무의 난이도·특수성, 직무수행 능률 등을 세심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된다는 점에서, 형통단의 고가 소모품 일괄 구매는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낭비성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78) 사무용 무선 마우스+키보드 세트는 시중에서 4만원 미만으로 구매 가능하나, 형통단이 구매한 마우스와 키보드 단가는 각각 9만원, 9만 8,000원으로 마우스+키보드 기준 18만 8,000원임.
17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1

(7)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

(가) 결산 개요

○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7039-300)은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의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하여 법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수용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23억 6,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6,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2억 2,900만원이며, 이 중 211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22,360	2,869	-	-	25,229	21,179	2,997	1,052
· 검찰 노후 관사 개보수	200	-	-	-	200	200	-	-
· 수용동 리모델링	733	-	-	-	733	697	-	36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	-	-	-	1,385	1,374	-	11
· 기타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	-	-	-	1,823	1,791	-	32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4,196	2,869	-	-	7,065	3,930	2,980	154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생활관 바닥난방 설치	1,336	-	-	-	1,336	1,148	-	188
· 치료감호소 비상대기소 리모델링	2,937	-	-	-	2,937	2,926	-	11
· 신축 대구교도소 오배수 설비 보강공사	9,596	-	-	-	9,596	9,000	-	596
· 서울여자소년분류심사원 리모델링	154	-	-	-	154	113	17	24

(나) 사업 공정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인한 반복적 예산 이월 시정 필요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87억 5,100만원)은 2023년 예산현액 70억 6,500만원 중 39억 3,000만원만 집행(집행률 55.6%)되었고, 29억 8,000만원이 2024년으로 이월되었음.

해당 사업은 2022년에도 당초 계획 대비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된 예산 42억원 중 13억 3,000만원만 집행(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률 31.7%)되고 28억 6,900만원이 2023년으로 이월된바 있음.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연도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2022년 집행실적						2023년 집행실적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본조사 설계비	-	63	63	63	-	-	-					
실시 설계비	-	182	182	182	-	-	-					
공사비	4,147	-	4,147	1,322	2,825	-	4,143	2,825	6,968	3,877	2,942	149
감리비	43	-	43	-	42	1	43	42	85	42	38	5
시설 부대비	10	-	10	8	2	-	10	2	12	11	-	-
합 계	**4,200**	**245**	**4,445**	**1,575**	**2,869**	**1**	**4,196**	**2,869**	**7,065**	**3,930**	**2,980**	**154**

* 자료: 법무부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공사비(420-03목)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

는 것이 원칙임.[180]

또한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공정 경과를 보면,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2022년 7월에 착수하여 2023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22년 8월 기준 공사 계약 발주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181] 법무부도 목표했던 2023년 12월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비 예산의 분할 편성(2023년 및 2024년)이 가능했다고 보임.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계획대비 실제 공정 경과>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공사		완공시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착수	완료	
최초 계획	'21.7.	'21.11.	'21.11.	'22.4.	'22.7.	'23.12.	'23.12.
실제 공정	'21.10.	'22.2.	'22.2.	'22.7.	'22.12.	'24.6.	'24.6.3.

* 자료: 법무부

○ 그럼에도 법무부는 별도의 사업기간 및 예산 편성 조정 없이 2023년 예산에 잔여 공사비 41억 9,6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그 결과 2023년에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함.

향후 법무부는 교정시설 리모델링 등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80)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57
181)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에 공사 계약을 발주하였음.

(8)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가) 결산 개요

○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7039-302)은 법무기록의 독자적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법무부 기록관 건립(2024년 1월 준공)에 따른 기록관 운영, 시설 유지·관리 및 기록물 보존 처리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023년 예산액 47억 3,000만원 중 44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법무부 기록관 운영	4,730	-	-	-	4,730	4,459	234	37
·법무부 기록관 운영	4,730	-	-	-	4,730	4,459	234	37

(나)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의 편성 및 예산 초과 집행 시정 필요

○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는 ①RFID 태그, 보존상자, 탈산비품 등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와 ②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로 구성됨.

정부의 2023년 예산안 편성시 법무부 기록관의 2023년 8월 9일 준공을 전제로 5개월분의 일반수용비 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2억 500만원과 기록관 운영경비 8,000만원으로 구성됨.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준공 예정일이 2023년 9월 16일로 연장된 부분을 반영하여 운영기간 3.5개월을 기준으로 비목별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도 2억원으로 감액 확정되었음. 확정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법무부 기록관은 확정된 일반수용비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1억 2,000만원과 운영경비 8,000만원으로 구분하였음.

<2023년 법무부 기록관 운영 일반수용비 예산 심의 · 확정 결과>

(단위: 천원)

항 목	정부 제출 예산안	국회 확정 예산	사유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205,000	120,000	준공시기 변경에 따른 운영기간 조정 (5개월→3.5개월)
기타 기록관 운영비	80,000	80,000	
합 계	285,000	200,000	

* 자료: 법무부

○ 한편 법무부 기록관은 지하층 공사 물량 증가 및 공법 변경, 시멘트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골조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2023년 공사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총 4개월 가량 추가로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24년 1월 12일에 준공되었음.

최종 준공이 2024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2023년에 편성된 기록관 운영 관련 예산은 원칙적으로 불용되어야 하나, 법무부 기록관은

기록관 운영 준비 작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2023년말부터 집행하였으며, 일반수용비의 경우 2억원 중 97.2%인 1억 9,441만원을 집행하였음.

<법무부 기록관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편성 항목	2023 예산	2023 결산	세부내역
일반수용비(210-01)	200,000	194,405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 등	120,000	51,012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
		45,992	기록물 재난물품 구입
		(합계) 97,004	
기타 기록관 운영비 등	80,000	53,867	기록관 입간판 등 사인물 구입
		18,045	기록관 준공 홍보물 구입
		15,152	직원교육비
		6,000	보존장비 도입 외부위원 수당(제안서 평가)
		3,740	엘리베이터 보양재 구입
		627	기록관 전산장비(PC 등) 설치
		30	조달 수수료 납부
		(합계) 97,401	

* 자료: 법무부

법무부 기록관의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운영기간 조정(5개월→3.5개월)으로 일반수용비가 8,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법무부 기록관은 감액분을 전부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에 반영하고,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는 당초 편성한 8,000만원을 유지하였음.

일반수용비도 사무용품·소모성 물품 구입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 역시 조정된 운영기간에 비례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법무부 기록관이 감액된 예산을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에만 모두 반영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182]

○ 둘째, 법무부 기록관은 실제 집행과정에서도 감액 편성된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는 더욱 축소하여 집행하고,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집행하였음. 2023년 예산 심의·확정 후 법무부 기록관은 기타 기록관 운영비에 8,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9,740만원을 집행[183]하여 21.8% 가량 초과 집행하였음.

결국 법무부 기록관은 예산 확정 단계와 예산 집행 단계에서 모두 보존처리 물품 구입 항목은 축소하고, 경상적 경비인 기록관 운영비 항목을 확대 집행하였음.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와 달리 기록관 운영비는 목적이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법무부 기록관이 임의로 해당 항목을 확대 편성·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확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임.

○ 셋째, 법무부 기록관은 기록관 운영비에서 준공 홍보물 구입으로 1,800만원 가량을 집행하였는데, 2023년 기록관 운영 준비 기간은 2개월 미만이었고, 최종 준공시점은 2024년 1월이라는 점에서 연말에

182) 법무부는 기록관 준공에 따른 사인물(건물 입간판 등) 구입 등 일회성 집행 소요를 감안하였다는 입장임.
183) 보존처리 물품 구입 예산의 낙찰차액 일부가 포함됨.

많은 수량의 홍보물품을 일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기록관 준공 홍보물품 구입 상세 내역>

품목	수량	단가 (원)	구입액 (천원)	활용내역
천연옻칠 나무수저세트 (2p)	150	29,700	4,455	기록관 시설 견학 등 방문객에게 배포
수성펜	300	25,300	7,590	
우산	300	20,000	6,000	
합 계			**18,045**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 기록관은 기록관 시설 및 보존환경 견학을 위한 방문 수요에 대비하고, 2024년에 기록관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관기관 및 방문객 배부 목적으로 연말에 홍보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법무부 설명과 달리 2024년 법무부 기록관 운영 사업에도 '보존처리 용품 구입 및 기타 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5억 7,000만원의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어 연도별 수요에 맞춘 홍보물품 구입이 충분히 가능하고, 2023년 법무부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에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기록관 비품 구입 등' 목적의 일반수용비가 930만원 가량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184]을 감안하면, 연말에 동 세부사업 예산으로 다량의 홍보물품을 구매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임.

184) 법무부 지출부를 확인한 결과,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은 당초 목적인 기록관 비품 구입 등에 사용된 내역이 없는바, 운영지원과의 다른 일반수용비 소요에 충당된 것으로 보임.

(9) 기관운영 기본경비

(가) 결산 개요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는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 등 법무부 본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 해당하며, 2023년 예산액 36억 6,2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4,700만원 및 타 사업 이·전용(△1억 5,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5억 5,800만원으로, 이 중 27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3,662	47	△151	-	3,558	2,791	47	720
·기관운영 기본경비	3,662	47	△151	-	3,558	2,791	47	720

(나) 과장급 역량평가 관련 예산 미집행 문제

○ 법무부는 2023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용역비(210-14)로 '과장급 역량평가 과제개발 및 모의테스트'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않았음. 미집행된 예산은 법무부 정책만족도 조사 용역비(2,000만원, 2023년 10월), 제3차 국정과제점검회의 행

사 대행 용역(4,000만원, 2023년 11월) 등에 지출된 것으로 파악됨.

○ 법무부는 ①다양한 직렬이 존재하는 법무부의 조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②인사혁신처 주관 과장급 역량평가의 법무부 수요인원 초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역량평가 모델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708만원과 5,700만원을 집행하여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및 실행과제를 개발해왔음. 법무부는 2년 간 완성한 자체 역량평가모델을 기본골격으로 2023년에는 평가과제를 추가 개발한 후 2024년부터 자체 역량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음.

<법무부 과장급 역량평가 관련 용역수행 현황>

구분	2021	2022
사업명	법무부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개발 및 모의평가 운영	법무부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개편 및 실행과제 개발
계약기간	2021.7.15.~11.30.	2022.7.27.~12.15.
계약액	4,708만원	5,700만원
과업내용	○역량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인증절차 지원 -역량모델 개발 -평가기법 선정, 역량평가 운영방안 제시 -인사혁신처 인증을 위한 자료 제시 등 ○역량평가 실행과제 개발 -교육·평가과제 개발(각 1세트) -평가위원용 평가매뉴얼 개발 ○교육용 교재 개발 ○모의평가 운영(1회)	○역량 모델 개편안 마련 -기존 역량모델 구성요소 점검·수정 ○실행과제 개발 -실행과제 개발(1세트) -체계적 평가자 가이드 개발 ○모의평가 운영(1회)

* 자료: 법무부

그런데 법무부는 자체 역량평가 모델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2023년에 실행과제 개발 및 역량평가 모의테스트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체 역량평가 도입 추진 이후 '통합활용정원제[185]' 시행 등 정부 규모 축소 기조, 국정과제 관련 예산 및 인력 우선 배정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자체 역량평가 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차후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旣 완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 역량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가 국정과제에 집중되는 것은 정부 행정환경의 상시적 특징으로 보아야 하고, 2023년에 법무부의 역량평가 제도 관련 정원이 즉각 감축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예산 확정 후 불과 수 개월만에 편성된 예산 집행을 취소할 만큼 제반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임.

오히려 법무부 내 자체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다는 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평가모델 개발까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185) 범정부 관점에서 정책환경 변화로 역할이 줄어든 분야의 정원을 통합 지정하여 해당 정원을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배정·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인력 운영제도로, 20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향후 1년에 1,100명씩 5년 간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제도 시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 2024년 이후 관련 예산 편성 계획이 없는 등 현재 자체 역량평가 도입 추진은 일시적 중단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연속성 및 旣 개발된 평가모델의 적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과장급 자체 역량평가 도입의 추진 여부와 후속과제 개발 및 평가시행 계획 등을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2. 교도작업특별회계

◈ 세 입 ◈

가. 기타잡수입

(1) 결산 개요

○ 기타잡수입(69-691)은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타잡수입의 세입예산액은 3억 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00만원이며 전액 징수(예산액 대비 21.4%, 징수결정액 대비 100%)하였음.

<기타잡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기타잡수입	369	-	369	79	79	-	-

(2)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입편성 필요

○ 최근 3년간 세입액 및 수납액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법무부는 기타잡수입의 경우 교도작업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고철, 톱밥, 목공자재 등)의 수입으로 매년 세입이 일정치 않아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21	359	359	359	52	52	14.5	100.0	-
2022	369	369	369	88	88	23.8	100.0	-
2023	369	369	369	79	79	21.4	100.0	-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징수결정액이 매년 1억원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수납액 및 수납률(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20% 내외로 저조함에도 연례적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최근의 징수실적에 비해 매년 과다계상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의 과다편성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상[186] 세출예산 규모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기타잡수입 항목에 대한 연례적인 과다편성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최근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186)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세 출 ◈

가. 교도작업 사업

(1) 결산개요

○ 교도작업(1535-300) 사업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거나,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작업운영을 지원하고,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554억 5,500만원에서 8억 9,400만원이 전용 등으로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63억 4,900만원이며, 이 중 558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억 5,000만원임.

<교도작업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도작업	55,455	-	894	-	56,349	55,899	-	450
· 인건비	1,211	-	-	-	1,211	950	-	261
· 운영비	29,087	-	2,694	-	31,781	31,725	-	56
· 여비	153	-	-	-	153	153	-	-
· 업무추진비	56	-	-	-	56	56	-	-
· 보전금	24,274	-	△1,800	-	22,474	22,392	-	82
· 민간이전	674	-	-	-	674	623	-	51

(2) 교도작업 생산직종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강구 필요

○ 교도작업은 운영형태에 따라 직영, 위탁노무 등으로 구분되고 주문생산 체제로 운영됨. 생산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70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여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중 직영작업 비율이 가장 높고(61.0%), 이어서 위탁작업(24.8%), 노무작업(10.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도작업 생산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생산계획	60,893	61,374	61,603	61,564	62,480
생산실적	62,704	62,849	65,555	63,366	70,214
직영작업	34,326 (57.7%)	37,089 (59.0%)	38,413 (58.6%)	38,946 (61.5%)	42,794 (61.0%)
위탁작업	20,158 (32.1%)	18,271 (29.1%)	16,996 (25.9%)	17,284 (27.3%)	17,435 (24.8%)
노무작업	8,114 (12.9%)	7,357 (11.4%)	7,489 (11.4%)	6,815 (10.8%)	7,673 (10.9%)
잡수익	106 (0.2%)	2,657 (4.1%)	2,657 (4.1%)	321 (0.5%)	2,312 (3.3%)

* 자료: 법무부

○ 직영작업장에서 실제 실시하는 교도작업의 직종은 목공, 철공, 인쇄공, 봉제공, 장류공, 식품공 등 25개 직종임.[187]

187) 법무부는 위탁작업장 직종은 267개로 직종별 분류 및 수입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설명함

<교도작업 직영작업장 생산직종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직종별 분류	수입액	연번	직종별 분류	수입액
1	봉제공	9,990,770	14	스테인레스공	81,494
2	인쇄공	2,167,217	15	석공	6,050
3	목공	4,261,078	16	면도기공	776,847
4	철공	74,410	17	비누공	896,891
5	식품공	7,225,689	18	선반공	245,517
6	영농	4,500	19	도자기공	51,154
7	편직공	4,260,285	20	닭훈제공	2,210,504
8	축산	782,826	21	목공예	773,082
9	양화공	549,767	22	재단공	534,784
10	플라스틱공	557,580	23	임가공	7,430
11	직조공	1,386,572	24	세제공	1,456,702
12	화장지공	1,959,809	25	건설공	181,427
13	장류공	2,351,167	**합 계**		**42,793,550**

* 자료: 법무부

○ 교도작업은 작업 장소·시간 등 교도소가 처한 한계 때문에 단순 노무 중심 작업이어서 현대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율은 산업 환경 변화로 과거 인력에 의한 작업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거나, 경기 불황에 따라 저조한 실정임.

<2023년 위탁작업 및 외부작업 현황>

구분		교정기관	작업장	업체수	계약인원	실제 작업인원
위탁작업		45	267	134	7,784	8,127
외부통근 작업	개방작업	24	40	36	1,140	819
	외부통근	8	13	12	163	124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민간기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교정시설 내 작업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기업체로 통근하는 작업의 확대, 출소 전 사회적응 능력 함양을 위한 희망센터 추가 설립 등 다양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생산 직종을 다양화하고,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며, 이와 함께 외부통근작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수형자가 최신 숙련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출소 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등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의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은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는 직

영작업의 품질·기술지도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사육사, 식품품질관리원, 시설관리, 기계기술공, 운전원, 사무보조원 등이며 2023년 기준 27명(정원 32명)이 근무 중임.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현황>

연번	기관	인원	연번	기관	인원
1	원주교	1명	8	제주교	1명
2	안양교	1명	9	공주교	4명
3	광주교	1명	10	대구교	7명
4	여주교	2명	11	천안교	1명
5	군산교	1명	12	부산교	1명
6	전주교	1명	13	강릉교	1명
7	의정부교	5명	합 계		27명

* 자료: 법무부

○ 2023년의 경우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은 집행이 저조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상용임금	2021	1,101	1,018	92.5	83
	2022	1,183	1,023	86.5	160
	2023	1,211	950	78.4	261
고용부담금	2021	211	112	53.1	99
	2022	228	152	66.7	77
	2023	236	185	78.4	51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잦은 퇴사 및 퇴직 이후 신규 채용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 교도작업 공무직 변동 현황>

구분	정원	채용	퇴직	현원
인원	32명	9명	9명	27명(△5)

* 자료: 법무부

○ 교도작업 담당 공무직의 퇴사가 잦거나 신규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처우 수준이 법무부 산하기관마다 차등적[188]이고, 공무직의 근로와 유사한 일반 산업현장 근로자의 처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숙련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은 수용자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88) "'수당에 차별' 법무부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소송 2심 패소", 뉴스1, 2023. 9.30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수 입 ◈

가. 총 괄

(1) 여유자금

(가) 결산 개요

○ 여유자금은 특정 시점에서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 사업성 대기자금을 포함함.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470억원의 여유자금은 보유하고 있으며, 433억 3,670만원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하여 3.91%의 수익률을 달성하였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3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3	47,000	43,367 (3.91)		43,367 (3.91)	

(나) 여유자금 규모 적정성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한 검토 필요

○ 여유자금은 쓰고 남은 재원을 보유하여 단년도 원칙 하의 일반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적정수준의 여유자금 규모를 파악하여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에 중요한 요소임.[189]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여 중장기 벌금 수납액의 변동가능성, 사업비 부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획재정부 재정 문제로 인한 일반회계전입금의 지연 납입 및 대규모 범죄 발생 등에 대비하고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최근 5년간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19	4,745	13,353 (1.74)	-	13,353 (1.74)	
2020	4,800	5,497 (1.04)	-	5,497 (1.04)	
2021	9,900	8,522 (0.82)		8,522 (0.82)	
2022	31,500	17,771 (2.33)		17,771 (2.33)	
2023	47,000	43,367 (3.91)		43,367 (3.91)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최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 평잔을 살펴보면, 2019

189) 「예결산심사 표준교재-기금편」, 국회의정연수원

년 및 2020년에는 48억원 수준이던 여유자금규모가 2021년에는 전년대비 2.1배인 9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대비 3.2배인 315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470억원까지 증가하여 2019년 대비 거의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최근 5년간 수입 및 지출(여유자금 제외)>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		수지차(수입-지출)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결산액
2020	98,601	98,929	103,192	97,362	-4,591	1,567
2021	109,985	110,879	109,816	103,723	169	7,156
2022	98,198	99,633	85,309	81,017	12,889	18,616
2023	98,542	100,892	85,306	82,966	13,236	17,926
2024	91,052	-	91,203	-	-151	-

* 자료: 법무부제출 자료 가공

○ 이처럼 여유자금이 급증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2년 및 2023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180억원가량 적었기 때문임. 즉, 여유자금의 회수·예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예산액을 제외하고 단년도 기준 발생한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하면, 매년 수입의 경우 계획액 대비 결산액이 많았고,[190] 지출의 경우 계획액 대비 결산액이 적었음.[191] 이에 따라 연초 계획과는 달리 기금의 수지차(수입-결산)가 매년 결산액이 계획액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2022년

190) 2022년, 2023년도의 경우 수입 사업 중 여유자금의 평가수익금 등을 포함하는 기타재산이자수입(수납률 131.9%, 369.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기타경상이전수입(수납률 139.5%, 147.2%)에서 수납률(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

및 2023년에 그 절대적인 규모가 180억원 가량으로 급증하면서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24년도부터 법무부는 종전에 사업성 기금의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여 단기자금으로만 운영하던 여유자금 중 140억원 가량을 만기 12개월 이상의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임.

○ 그러나 사업성 기금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사업 수행이 기금운용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입을 그 해 지출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금의 수입·지출 간 균형을 이루고, 여유자금 규모는 유동성 곤란이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참고로, 기금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수요의 합리적 예측과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 제고를 조화하는 관점에서, 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산출한 기금의 적정 유동성[192] 규모는 2022년 126억 3,200만원, 2023년 125억 1,300만원, 2024년 113억 4,400만원 이었음.

연도		계획액		징수	수납액	수납률	수납률	미수납액
		당초	수정(A)	결정액(B)	(C)	(C/A)	(C/B)	
'22	기타재산수입	417	417	558	550	**131.9**	98.6	8
	기타경상이전수입	2,029	2,029	4,991	2,830	**139.5**	56.7	2,161
'23	기타재산수입	417	417	1,570	1,540	**369.3**	98.1	30
	기타경상이전수입	2,373	2,373	5,031	3,494	**147.2**	69.4	1,536

191) 2022년도의 경우 지출 사업 중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집행률 69.7%), 범죄피해구조금(집행률 91.1%) 등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2023년도의 경우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집행률 86.2%), 범죄피해구조금(집행률 91.1%) 등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함.

192)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에서 권고하는 통계적방법론(cashflow at risk)사용

○ 따라서 법무부는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균형 및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방식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기금의 소요에 비례하는 적정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사업별 분석

(1) 기타재산이자수입

(가)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과 지자체·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을 세입조치하는 사업임.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은 4억 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15억 7,000만원 중 15억 4,000만원을 수납하고 3,0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 기타재산이자수입	417	417	-	1,570	1,540	30	-

(나) 여유자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액 증액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로 초과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131.9%이고, 2023년도에는 수납률이 369.3%까지 급증하여, 계획액과 수납액 간의 차이가 11억원 이상 발생하였음.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4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A)								
'20	426	426	-	-	171	152	35.7	88.9	19	-
'21	426	426	-	-	111	99	23.2	89.2	12	-
'22	417	417	-	-	558	550	131.9	98.6	8	-
'23	417	417	-	-	1,570	1,540	369.3	98.1	30	-
'24	417	-	-	-	-	-	-	-	-	-

○ 동 사업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부터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193]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입액이 급증하면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2022년도 이후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	국고보조금 이자	합계
2020년도	91	80	171
2021년도	52	59	111
2022년도	502	46	558
2023년도	1399	171	1570

* 자료: 법무부

193) 여유자금 위탁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중 당해연도 회수 여유자금 규모에 비례하는 만큼을 당해연도 평가수익금으로 인식함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1	9,900	8,522 (0.82)		8,522 (0.82)	
2022	31,500	17,771 (2.33)		17,771 (2.33)	
2023	47,000	43,367 (3.91)		43,367 (3.91)	

* 자료: 법무부

○ 「2024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유자금 규모 증가로 여유자금을 단기는 물론 중장기자금으로도 운영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24년도 계획안 수립 시 2019~2021년도 수납액 평균을 기준으로 2023년도 계획액과 동일한 4억 1,700만원을 세입 계획액으로 편성한바, 2024년도 결산 시에도 계획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기타재산이자수입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4년도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A)								
'20	426	426	-	-	171	152	35.7	88.9	19	-
'21	426	426	-	-	111	99	23.2	89.2	12	-
'22	417	417	-	-	558	550	131.9	98.6	8	-
'23	417	417	-	-	1,570	1,540	369.3	98.1	30	-
'24	417	-	-	-	-	-	-	-	-	-

○ 기금의 경우 특정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계획액과 결산 시 수납액의 구조적인 차이가 지속되는 경우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최근 급증한 기금 여유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동 사업의 세입 계획액을 충분히 증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체계적 오류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일반회계전입금

(가) 결산 개요

○ 일반회계전입금(91-911)은 벌금 수납액의 8%를 세입조치한 것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942억원 중 942억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음.

<일반회계전입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 일반회계전입금	94,200	94,200	-	94,200	94,200	-	-

(나)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194]은 정부로 하여금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동 사업의 계획액에 매년 벌금 수납예상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해왔음.

---

19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2조(기금의 조성) ①「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4.12.30., 2020.10.20.>

○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당해연도 벌금수납예상액과 실제 집행된 벌금액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8%를 기금의 세입으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결산 과정에서 법정 전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납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금전입금”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2항제4호[195]에 따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 배분되는 법정배분금(복권수익금의 35/100의 12.583%)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결산 과정에서 계획액과는 별도로 실제 발생한 복권수익금을 기준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5년 간 결산 과정에서 법령에서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인 계획액을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여,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로 기금에 납입된 금액간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23년도의 경우 계획액과 동일한 942억원을 수납액으로 확정

---

195)**「과학기술기본법」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 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하였는데, 이는 법령에서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 전입금액보다 52억 2,500만원이 적은 금액임.

<최근 5년 간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안)
벌금	계획액(A)	1,424,025	1,424,025	1,677,985	1,139,679	1,091,646	1,091,091
	수납액(B)	1,083,496	1,143,747	1,020,899	1,064,874	1,242,814	-
	수납률	76.1	80.3	60.8	93.4	113.8	-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액(C)	82,440	82,440	106,054	94,200	94,200	86,121
	수납액(D)	82,440	82,440	106,054	94,200	94,200	-
	법정전입금액 (E=B*법정전입비율)[196]	65,010 (B*6%)	68,625 (B*6%)	81,672 (B*8%)	85,190 (B*8%)	99,425 (B*8%)	-
	법정전입금액과 수납액의 차액 (D-E)	**17,430**	**13,815**	**24,382**	**9,010**	**-5,225**	-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 및 기재부는 임의적인 예측이 아닌 법정 기준에 따라 재원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결산 시 법령에서 정부로 하여금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집행된" 벌금액에 8%를 곱한 금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196) 과거 동법 시행령에서는 전입 비율을 6%로 정하고 있었으나, 일반회계의 벌금 수납액의 감소 추이와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2018년 1월 시행)"의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 말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전입비율을 종전의 6%에서 8%로 상향하였고, 2021회계연도 계획액부터 8%의 전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지 출 ◈

가. 총 괄

(1)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가) 결산 개요

○ 기금 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 지원을 하는 '직접지원 사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기관의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사업'으로 분류됨.

사업 분류에 따른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직접사업의 경우 계획액 335억 4,500만원 중 321억 1,500만원, 간접사업의 경우 계획액 491억 2,800만원 중 48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 · 간접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직접사업	33,545	32,115	95.7%
간접사업	49,128	48,228	98.2%
합계	82,673	80,343	97.2%

* 자료: 법무부제출 자료 가공

(나)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비중 확대 노력 필요

○ 법무부는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을 확대하라는 국회 지적에 따라 2020년 4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직·간접지원 사업 분류 체계를 변경하였음.

구체적으로 현재 간접지원인 진술조력인 수당, 국선변호사 수당,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등, 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사업은 직접지원 사업으로 재분류하였고, 신규 사업인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간접지원사업으로 분류하였음.

○ 각 분류 기준에 따라 2023년도 지원 사업 성격별 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을 살펴봄. 과거 분류 기준에 따르면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의 절대적 규모 및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신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규모는 유사한 수준이며, 집행액의 절대적 규모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지원 성격별 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액
과거 분류 기준	직접지원 사업	22,984 (27.8%)	21,232 (27.1%)	92.4%	22,138 (26.8%)	20,769 (25.9%)	93.8%	21,853 (25.6%)
	간접지원 사업	59,657 (72.2%)	57,131 (72.9%)	95.8%	60,535 (73.2%)	59,574 (74.1%)	98.4%	63,654 (74.4%)
	합계	82,641 (100%)	78,363 (100%)	94.8%	82,673 (100%)	80,343 (100%)	97.2%	85,507 (100%)
신규 분류 기준	직접지원 사업	33,559 (40.6%)	31,313 (40.0%)	93.3%	33,545 (40.6%)	32,115 (40.0%)	95.7%	36,066 (43.6%)
	간접지원 사업	49,082 (59.4%)	47,050 (60.0%)	95.9%	49,128 (59.4%)	48,228 (60.0%)	98.2%	52,541 (63.6%)
	합계	82,641 (100%)	78,363 (100%)	94.8%	82,673 (100%)	80,343 (100%)	97.2%	88,607

* 자료: 법무부제출 자료 가공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지원성격 분류 및 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성격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계획액
		과년분류(21년 결산시)	신규분류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간접	(좌동)	3,658	3,658	3,855	3,855	4,516
	스마일센터 설치·운영비	간접	(좌동)	8,413	8,413	8,263	8,150	8,335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	간접	-	-	-	-	3,100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직접**	**(좌동)**	**4,071**	**3,278**	**3,503**	**3,465**	**3,300**
	범죄피해자 자립지원	직접	(좌동)	508	508	508	508	708
	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	직접	(좌동)	409	409	409	396	409
	범죄피해자법률구조지원	직접	(좌동)	412	412	412	412	412
	교육,연구개발 등	간접	(좌동)	325	317	331	329	320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형사조정위원수당·교육·감독 등	간접	(좌동)	4,590	3,211	3,510	3,504	2,479
	공증수수료	간접	직접	30	7	30	7	21
범죄피해 구조금	**범죄피해구조금**	**직접**	**(좌동)**	**10,423**	**9,503**	**9,870**	**8,990**	**9,870**
	홍보, 지도점검	간접	(좌동)	130	113	145	135	145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위치확인장치	직접	(좌동)	2,045	2,039	1,763	1,375	2,045
	이전비 지원	직접	(좌동)	228	228	200	200	200
	임시안전숙소 제공	직접	(좌동)	682	682	960	946	1,201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진술조력인 수당	간접	직접	587	585	700	667	758
	진술조력인 운영 등	간접	(좌동)	1,011	1,007	970	968	874
성폭력피해자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간접	(좌동)	13,929	13,714	14,377	14,033	14,181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지원	**직접**	**(좌동)**	**4,042**	**4,039**	**4,341**	**4,338**	**3,53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간접	(좌동)	17,351	16,953	18,647	18,222	19,465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간접	(좌동)	686	671	-	-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직접	(좌동)	164	134	172	139	172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국선변호사 수당	간접	직접	5,442	4,984	5,415	5,412	7,585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등	간접	직접	3,505	3,498	4,292	4,292	4,975
합 계				**82,641**	**78,363**	**82,673**	**80,343**	**88,606**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신규 분류 기준에 따를 때 2023년도 직접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이유는 직·간접사업의 분류기준 변경에 따라 직접사업으로 재분류된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및 진술조력인 수당의 계획액 및 집행액 규모가 크기 때문임.

○ 그러나 재정비 전후 어느 기준에 따르더라도, 직접지원의 집행률은 간접지원의 집행률에 비해 낮은 편임. 또한,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접지원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인바,[197] 이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범죄피해구조금,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최근 3년간 계획액은 감소 추세에 있음.

○ 한편, 국회는 그간 직접지원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으며,[198] 사업별 지원성격 재분류에 따른 직접지원 비중 확대는 지적사항 이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시정요구에도 시정요구 당시 분류 기준에 따른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 규모는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를 보였음. 특히 범죄피해자가 선호하는 생계지원의 계획액 및 집행액이 축소되었으며, 의료지원 규모도 축소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

19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방안 (법무부, 2020)

198) 최근 3개년 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내 직접지원 관련 예결산 검토보고서 및 지적사항
○ 2019년도 결산심사 부대의견: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한다.
○ 2019년도 법사위 결산시정요구: (제도개선)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
○ 2019년도 및 2020년도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피해자를 위한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
○ 2020년도 예정처 예산 및 결산 검토보고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
○ 2021년도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 및 간접지원 성격의 사업 축소 필요
○ 2021년도 법사위 결산시정요구: (제도개선)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및 지출구조 효율화 등 필요

의 선호 및 수요가 반영된 생계·의료지원 위주의 금전적 지원 확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선호 및 수요가 충실히 반영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히 사업재분류에 따른 직접지원 비중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특히 생계·의료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 지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199]

199) 참고로 법무부는 2025년도 기금안에는 생계비 지급 단가 상향 및 지원기간 연장, 민간경호사업의 경찰청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의 이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퇴소자립 수당 신설 및 퇴소자립 지원금 상향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직접지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나. 사업별 분석

(1)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가) 결산 개요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은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상담, 경제·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를 지원하고,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의 위탁운영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간병비 및 치료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172억 7,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자체변경한 수정 계획액 172억 8,100만원 중 17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7,270	17,281	-	17,281	17,115	-	16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	3,855	3,855	-	3,855	3,855	-	-
·스마일센터운영	8,263	8,263	-	8,263	8,150	-	113
·범죄피해자치료비 및 생계비	3,503	3,503	-	3,503	3,465	-	38
· 피해자 자립지원	508	508	-	508	508	-	-
· 강력범죄피해현장정리	409	409	-	409	396	-	13
· 범죄피해자법률구조	412	412	-	412	412	-	
· 연구용역	100	106	-	106	105	-	1
· 홍보·협의·점검 등	220	225	-	225	223	-	2

(나)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예산 과다집행 및 정산 절차 미이행 등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홍보·협의·점검 등” 사업에는 범죄피해자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 160명을 교육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 사업 예산 5,000만원(160명*312,500원)이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법무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①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부족한 예산액은 타 내역사업의 예산으로 혼용 집행하였으며, ② 계약 내용상 수행하기로 한 교육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한 문제가 있음.

○ 먼저, 예산의 과다집행 및 내역사업·비목 등의 혼용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

- 법무부는 당초 편성된 예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7,273만원 규모의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수의계약[200]으로 체결한 뒤, 대금 지급을 위해 “홍보·협의·점검 등”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4,545만원, 당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구 용역을 목적으로 다른 내역사업인 “연구용역”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2,727만원을 혼용하여 집행

200)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후 수의

하였음.

- 이처럼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는 단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다른 목적의 내역사업의 예산을 활용한 문제는 최근 3개년 간 반복되었음. 해당 사업은 매년 단독응찰로 유찰 및 재공고가 반복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는 최근 3년동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추진하였음.[201]

〈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양성 교육 용역제안서 상 용역과제(2023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 교육 및 교재 개발** ○ 교육대상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140여명 ○ 교재개발 : 법령·제도 현실을 반영한 2023년도 교육교재 업데이트 및 일부 신규 개발 ○ 교육방법 : 집합교육(3박 4일, 1박 2일) 또는 비대면 교육(코로나19 상황을 토대로 법무부와 사전 협의)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재 개발** ○ 교육대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약 120명 ○ 교육방법 : 센터 자체 교육 ○ 주요 교육내용 - 범죄와 형사사법 절차의 이해 -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이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참여

* 자료: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 용역제안서 일부 발췌

○ 다음으로, 계약 내용에 비해 미흡한 교육 실적과 정산절차 미이행에 따른 대금 과다지급의 문제가 있음.

---

2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용역 공고 당시 제안요청서 상 용역과제로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140여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재 업데이트 및 교육 실시를 계획하였음.

- 특히, 용역 공고 당시 제안요청서 및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 상으로는 종사자 140명에게 “기본교육(3박4일), 고급교육(3박4일), 연수교육(1박2일)”이 용역 과제였으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사업제안서에는 140명의 종사자 대상 교육 방식이 “고급교육(3박4일*70명)과 연수교육(1박2일*70명)”만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용역 원가가 계산된 것으로 보임.

<종사자 대상 교육 주요계획안 및 실집행 실적>

<table>
<tr><th>구분</th><th>인원</th><th>교육내용</th></tr>
<tr><td>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td><td>140명</td><td>
<table>
<tr><th>기본교육(3박 4일)</th><th>고급교육(3박 4일)</th><th>연수교육(1박 2일)</th></tr>
<tr><td>-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이해
- 형법과 범죄의 이해
- 형사사법 단계별 지원 정책의 이해
- 범죄피해자 심리의 이해
-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
- 상담기법
-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실무
- 보조금 통합관리 실무</td><td>-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
- 법률지원 사례 연구
-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 범죄피해자 기금 체계 및 구조금
- 비영리법인 회계
-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실무
- 상담기법
-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 연구</td><td>- 연수교육과정의 이해
-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
- 법무부와의 대화
- 연수교육과정의 평가
- 대외홍보 및 언론대응
- 소진예방심화특강
- 조직관리 및 운영</td></tr>
</table>
</td></tr>
<tr><td>사업제안서 (원가계산 기준)</td><td>140명</td><td>
<table>
<tr><th>고급교육(3박 4일)</th><th>연수교육(1박 2일)</th></tr>
<tr><td>-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
- 법률지원 사례 연구
-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 범죄피해자 기금 체계 및 구조금
- 비영리법인 회계
-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실무
- 상담기법
-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 연구</td><td>- 연수교육과정의 이해
- 정보윤리와 개인정보보호
- 법무부와의 대화
- 연수교육과정의 평가
- 대외홍보 및 언론대응
- 소진예방심화특강
- 조직관리 및 운영</td></tr>
</table>
</td></tr>
<tr><td>실집행</td><td>61명
(고급 19명, 연수 42명)</td><td>고급교육 2박3일, 연수교육 1박2일</td></tr>
</table>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 가공

- 그런데, 2023년도의 실제 교육 내역을 살펴보면, 고급교육은 2박3일로 축소되어 실시되었고, 교육인원도 61명(고급교육 19명, 연수교육 42명)만이 이수하여 계획인원 140명 대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법무부는 4개월 간 5명의 연구원 등의 인건비,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고급교육(3박4일) 및 연수교육(1박2일)에 소요되는 수강생·연구진·강사진의 식비·숙박비·간식비·인쇄비·비품비 등 7,273만원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상 견적에 따라 그대로 지급하였음.

- 법무부는 교육 신청자가 적어 교육 실적이 미흡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은 3개년 연속 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사업추진 방식과 예산 규모 변경 등 개선이 없었고, 매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수의계약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 집행에서의 비효율이 지속된 것으로 보임.

<최근 3개년 간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의 계획 및 실집행 실적 >

구분	제안요청서상 계획 교육대상자	실제 교육 내역 교육대상자(이수 기준)
2021년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약 100여명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 고급교육 18명 - 연수교육 46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100여명	센터 자체 교육
2022년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100여명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 기본교육 23명

구분	제안요청서상 계획 교육대상자	실제 교육 내역 교육대상자(이수 기준)
2023년도		- 연수교육 43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약 100여명	센터 자체 교육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스마일센터 종사자 140여명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 고급교육 19명 - 연수교육 42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및 자원봉사자 약 120명	센터 자체 교육

* 자료: 법무부

○ 하나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집행 편의주의로 보임. 또한, 용역 발주 당시 계획 대비 실제 교육 기간이 더 짧았고, 이수 인원도 계획 대비 5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정산절차 없이 계약 당시 견적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방식·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없이 지급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① 해당 교육 수요가 크지 않고, 교재개발이 과년도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②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운용 및 관련 자료 제작 등의 업무인 동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혼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 예산을 “홍보·협의·점검 등” 사업의 일반용역비(210-14)로 단일하게 편성하며, ③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정산사항을 명시하여 수행 용역 대비 과다한 대금 지급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범죄피해구조금

(가) 결산 개요

○ 범죄피해구조금(1135-302)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계획액 100억 1,500만원 중 9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범죄피해구조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범죄피해구조금	10,015	10,015	-	10,015	9,125	-	890
· 범죄피해구조금	9,870	9,870		9,870	8,990		880
· 홍보·지도점검	145	145		145	135		10

(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 실적 제고 필요

○ 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범죄피해자 보호법」[202]에 따라 범죄

2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예산임. 동 사업의 최근 3년 간 연평균 집행률은 90%미만이고, 연평균 12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 실적 부진으로 예산편성액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최근 5년 간 범죄피해구조금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19	10,000	1,662	-	11,662	11,662	11,650	99.9	-	12
2020	10,708	10,708		10,708	9,682	90.4	90.4	-	1,026
2021	11,650	11,650	-	11,650	9,918	85.1	85.1	-	1,732
2022	10,553	10,553	-	10,553	9,616	91.1	91.1	-	937
2023	10,015	10,015	-	10,015	9,125	91.1	91.1	-	890

○ 사업실적 부진은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3년(2021년~2023년) 동안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건수 및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조의 신속성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8조[20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실적은 매년 1~2건 수준이며, 2023년의 경우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음.

---

203)**「범죄피해자보호법」**

제26조(구조결정)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①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총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9	305	11,516,297	185	9,278,850	34	1,140,317	86	1,097,129
2020	206	9,567,057	145	8,214,365	27	985,276	34	367,416
2021	191	9,792,147	144	8,894,672	25	639,389	22	258,086
2022	189	9,502,935	138	8,406,292	23	821,919	28	274,724
2023	149	8,989,710	111	8,357,448	14	408,967	24	223,295

* 자료: 법무부

<최근 5년 간 긴급구조금 지급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총 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9	7	152,168	5	121,413	2	30,754	-	-
2020	1	12,170	1	12,170	-	-	-	-
2021	1	20,000	-	-	1	20,000	-	-
2022	2	14,901	1	10,000	-	-	1	4,901
2023	-	-	-	-	-	-	-	-

* 자료: 법무부

○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204]에 따라 국가는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 상당액을 상환청구함으로써 해당 구상금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는데,[205] 최근 5년 간 구상건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3년도 기준 구상집행 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13.2%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205)**「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최근 5년 간 구상권 행사 실적>

(단위: 천원)

연도	구상건수		구상집행 건수		구상집행 금액	
	구상소송 건수	임의변제 건수 (통보포함)	임의변제 세입조치	강제집행 (소송 등) 세입조치	임의변제 세입조치 금액	강제집행 세입조치 금액(소송 등)
2019	196	267	47	4	419,218	7,901
2020	161	272	34	5	466,068	233,770
2021	104	183	31	8	677,553	51,002
2022	134	199	45	31	918,012	200,867
2023	80	147	39	24	1,030,252	159,268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강력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구조금 지급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재산조회가 어려워 구상권 행사 실적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그러나, 강력범죄 건수는 2021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에도 구조금 지급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206] 구상소송 및 임의변제를 진행한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주도록 구조방안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세입·세출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긴급구조금을

206) 5대 강력사범 접수 건수(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e-나라지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5대 강력사범 접수 건수	431,151	387,529	265,310	285,954	282,102

※ 5대 강력사범 : 폭력, 흉악, 성폭력, 약취·유인, 방화·실화사범

포함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실적을 제고하고, 구상권 행사 인력 확충 및 가해자 재산 적시조회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상권 행사 실적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하고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가) 결산 개요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136-300) 사업[207]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원활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 헌법이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근 진술조력인을 양성·교육·배치하고,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13억 6,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을 자체변경한 수정 계획액 16억 7,000만원 중 16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500만원임.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360	1,670	-	1,670	1,635 [1,461]	-	35
· 진술조력인 양성	101	121	-	121	119[119]	-	2
· 진술조력인 수당	410	700	-	700	667[667]	-	33
· 진술조력인 배치	849	849	-	849	849[675]	-	-

207) 2013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실시 및 진술조력인 48명 자격 부여
2015년~ 법무부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사업 추진

(나)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은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운용하는 사업이고, 다른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은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최근 3개년 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급여지급 등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운용하는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반면,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을 지급하는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은 당초계획액 대비 초과로 계획변경을 통해 증액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었음.

<2021-2023년도 진술조력인 배치,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연도	당초 계획액	자체변경 증감분	수정 계획액	실집행액	불용액	당초계획액 대비 실집행률
진술조력인 배치	2021년	774	-	774	616	158	79.6
	2022년	896	-	896	680	216	75.9
	2023년	849	-	849	675	174	79.5
진술조력인 수당	2021년	231	414	645	645	-	279.2
	2022년	361	226	587	585	2	162.0
	2023년	410	290	700	667	33	162.7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 가공

- 즉,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당초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은 최근 3개년 평균 78.3%에 그치나,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

의 경우 당초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이 최근 3개년 평균 201.3%로 당초계획액 대비 2배 이상 초과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대조적인 예산집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진술조력 수요 증가에도 상근 진술조력인의 열악한 처우로 매년 15명 내외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대부분 비상근으로 활동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이 부족한 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비상근 진술조력인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하였기 때문임.

- 2021년 법무부는 진술조력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상근진술조력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였음. 매년 진술조력인 양성 사업을 통해 15명 가량의 신규 진술조력인이 양성되고 있음에도 2021년 이후 기존 인원의 퇴사와 신규 채용의 반복으로 상근 진술조력인 인원은 단 1명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3년 연속 4명 가량의 결원이 지속되어 왔음.

<2021-2024년도 진술조력인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상근			비상근	현원 합계
	정원	현원	결원	현원	
2020년	16	14,8	1.2	121.2	136
2021년	18	13.8	4.1	136.2	151
2022년	18	14.1	3.8	150.9	165
2023년	18	13.8	4.2	166.2	180
2024년	16	11.8	3.3	168.2	180

cf. 위 인력현황은 연도별 연평균 수치이며, 2024년도의 경우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 가공

○ 결국 동 사업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연례적인 실집행률 부진으로 사업 예산 감축이 제안되었고, 비상근 진술조력인력은 매년 확대되는 반면, 2024년도부터는 상근 진술조력인력은 2명 감축되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상근/비상근 진술조력인의 진술조력 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상근 진술조력인보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제공하는 진술조력 서비스 실적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020~2023년도 진술조력인 진술조력 실적>

(단위: 건수)

구 분	상근	비상근	비상근/상근
2020년	1,326	1,358	1.02
2021년	1,611	2,573	1.60
2022년	1,484	2,338	1.58
2023년	1,569	2,662	1.55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진술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근 진술조력인력 중심의 제도 운영과 관련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진술조력 서비스의 제공 대상인 아동·장애인의 경우 피해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자에게 신속·전문적인 진술조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봄.

- 상근 진술조력인은 전국 권역별 피해자 지원전문기관에 상근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활동가능시간대 및 활동

가능지역에 제한이 있는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비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다수의 사건을 집중 담당하면서 매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사례별 피해자의 특성에 적합한 우수 조력 방안을 논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비상근 진술조력인에 비해 전문성이 축적된 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국회[208] 및 언론[209] 등에서는 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2023년도 말 기준 전국에 배치된 상근 진술조력인은 13명 뿐임.[210] 또한, 배치인력 중 과반인 7명이 서울·경기에 근무하고 있으며,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9개 지자체에는 단 1명의 상근 진술조력인도 배치되지 않음.

208) **<상근 진술조력인 관련 국회 법사위 결산 시정요구사항>**

2019년도	시정요구명	ㅇ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예산 적정편성 및 제도 지원대상 등 확대 필요
	시정 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과 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20년도	시정요구명	ㅇ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의 적정 편성 및 상근 진술조력인 확대 필요
	시정 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업무편중을 해소하고 진술조력 대상자들이 적시에 전문적인 진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제도개선)
2021년도	시정요구명	ㅇ 진술조력인 제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및 평가 개선 필요
	시정 요구사항	ㅇ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력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진술조력인을 지역별 수요에 따라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 자료: 재정경제통계시스템,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일부 발췌

209) “진술조력인 필요성 커지는데 상근 인원은 태부족”, 파이낸셜뉴스, 2023.1.1.
“범죄 피해자 ‘진술조력인’ 확대한다는데… 상근은 전국에 15명뿐”, 서울신문, 2023.6.13.

210) 육아휴직자 1인 제외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현황 〉

(단위: 명, 2023년 말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인원	4	2	1	-	-	-	1	3	-	-	-	1	-	-	1	-	13

* 자료: 법무부

○ 또한,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가능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근 진술조력인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충분한 비상근 진술조력인력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프리랜서인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활동가능시간대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진술조력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활동가능지역별 현황 〉

(단위: 명, 2023년 말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인원	36	8	9	9	1	5	4	41	5	2	11	6	10	8	6	4	166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신속하고도 안정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상근 진술조력인의 채용부진과 이로 인한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집행잔액을 활용한 계획에 없던 예산 집행 부적정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술조력인 양성” 사업은 신규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기존 진술조력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3년도 해당 사업에는 진술조력인 교육 및 자격관리 등을 위한 비용(진술조력인 신규 선발을 위한 위원 등의 수당, 진술조력인 신규양성을 위한 교육 비용,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비용)으로 일반수용비(210-01)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3년도 진술조력인 양성 사업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210-01]일반수용비		498,702
1. 진술조력인 교육 및 자격관리 등		89,000
가. 진술조력인 신규 선발		3,000
1) 공고문 검수	3명*200,000원=	600
2) 서류평가위원 수당	3명*300,000원=	900
3) 면접위원 수당	3명*500,000원=	1,500
나.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60,000
1) 기본교육	12명*2,000,000원=	24,000
2) 기본실무교육	12명*1,000,000원=	12,000
3) 심층실무교육	12명*2,000,000원=	24,000
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2회*13,000,000원=	26,000
2. 진술조력인 수당	1,587건*258,000원=	409,446
3. 계수조정	256,000원=	256

* 자료: 2023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 그러나 2023년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 실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기념품비, 참석자 수당, 자료집 등)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 대상 권역별 사례관리회의’(장소 임차료, 참석자 수당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법무부는 계획에 없던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타 세부사업인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예산의 집행잔액을 자체 계획변경하여 동 사업 예산을 증액하였음.

<2023년도 진술조력인 양성사업 일반수용비 계획 대비 실집행 내역>

2023년 예산안 심사 당시 계획	실집행 내역
○ 진술조력인 선발, 교육(210-01) : 89백만원 가. 신규 교육생 선발 : 3백만원 · 공고문 검수 : 3명 X 200천원 = 600천원 · 서류평가 위원 : 3명 X 300천원 = 900천원 · 면접위원 : 3명 X 500천원 = 1,500천원 나.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 **60백만원** · 기본교육(이론, 4박5일 합숙) : 12명 X 400천원 X 5일= 24백만원 · 기본실무교육(실무, 주1회 교육) : 12명 X 100천원 = 12백만원 · 심층실무교육(이론, 4박5일 합숙) : 12명 X 400천원 X 5일 = 24백만원 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26백만원 · 90명 X 288천원 = 26백만원	**○ 진술조력인 선발, 교육(210-01) : 107백만원** 가. 신규 교육생 선발 : 3백만원 · 공고문 검수 : 3명 X 200천원 = 600천원 · 서류평가 위원 : 3명 X 300천원 = 900천원 · 면접위원 : 3명 X 500천원 = 1,500천원 나.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 **68백만원** · 기본교육(이론, 4박5일 합숙) : 15명 X 346천원 X 5일= 26백만원 · 기본실무교육(실무, 주1회 교육) : 15명 X 93천원 X 10일 = 14백만원 · 심층실무교육(이론, 4박5일 합숙) : 15명 X 366천원 X 5일 = 27.5백만원 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26백만원 · 100명 X 260천원 = 26백만원 **라. 권역별 사례관리회의(비상근) : 2백만원** **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8백만원** **- 자료집 2백만원** **- 기념품비 5백만원** **- 참석수당 1백만원**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지 못했던 문제는 있으나, 시행 10주년을 맞는 제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회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학술대회의 참석수당, 자료집 등 필수 비용뿐만 아니라 기념품비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4)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가) 결산 개요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1135-306) 사업은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이전비 또는 임시숙소 숙박비를 지원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실질적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액 35억 6,400만원에서 6억 4,100만원을 자체변경 감액한 수정 계획액 29억 2,300만원 중 25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200만원임.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3,564	2,923	-	2,923	2,521	-	402
· 위치확인장치	2,404	1,763	-	1,763	1,375	-	388
· 이전비	200	200	-	200	200	-	-
· 임시숙소	960	960	-	960	946	-	14

(나) 위치확인장치 활용 실적 미흡 개선 필요

○ 동 세부사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역사업인 '위치확인장치' 사업은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를 구입·지급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112 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및 검찰청이 법무부 예산을 배정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음. 2023년도에는 경찰청이 6,300대의 위치확인장치를 신규로 추가 확보하여 경찰청에서 10,000대, 검찰청에서 172대의 위치확인장치를 운용하였음.[211]

<위치확인장치 작동 방식>



* 자료: 법무부

211) 위치확인장치는 주로 사건 초기 단계인 경찰 접수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수량을 경찰청에서 보유·지급하고 있으나, 검찰도 검찰 송치 사건 등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등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위치확인장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수량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위치확인장치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확대 운용하기 시작한 2023년도에도 그 활용실적은 미흡한 수준으로 보임.

<위치확인장치 활용실적>

(단위: 대,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4월)
보유 대수 (대)	계	2,221	2,471	2,472	3,872	3,872	10,172	7,872
	경찰청	2,050	2,300	2,300	3,700	3,700	10,000	7,700
	검찰청	171	171	172	172	172	172	172
지급 대수 (대)	계	5,290	7,089	6,831	11,007	14,223	16,697	5,136
	경찰청	5,243	7,057	6,801	10,989	14,208	16,690	5,134
	검찰청	47	32	30	18	15	7	2
조치 실적 (건)	신고건수	542	826	885	2,376	3,042	6,842	1,564
	오인신고	-	-	-	1,428	1,943	5,816	-
	유효신고	-	-	-	948	1,099	1,026	-
	가해자 검거	55	93	101	184	267	246	117
	현장조치 건수	193	283	332	764	896	792	179

* 자료: 법무부

- 먼저,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경찰청 기준 보유대수는 2022년 3,700대에서 2023년 10,000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지급대수는 전년 대비 약 17%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 확대운용 규모 대비 지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검찰청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172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급건수는 연간 7건에 불과하여 지급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2배 이상 확대된 보급대수에 비해 실질적인 조치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지급한 기기를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한 신고건수와 신고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 가해자 검거 및 현장조치 건

수를 살펴보면, 신고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처럼 보이나, 오인 신고 건수 및 비율이 증가하여 유효신고 건수는 오히려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가해자 검거 및 현장조치 건수도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증가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위치확인장치 보급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지급실적은 소폭 증가하고, 조치실적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바, 투입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냄.

○ 따라서 법무부, 경찰청 및 검찰청은 홍보, 지도, 안내 등을 통해 증가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비례하여 위치확인장치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급실적을 제고 하고, 급격히 증가한 오인 신고율의 원인을 파악하여 오인 신고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위치확인장치 보급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위치확인장치 폐기 기준 및 방식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 “위치확인장치” 사업에서는 3년 할부 방식으로 내구연수 4년의 위치확인장치를 구입하고 있으나, 그 폐기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 운용이 반복되고 있음.

○ 먼저, 폐기 기준 및 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운용 및 기기 성능 표준화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위치확인장치의 내구연수는 4년으로, 일정 기간 경과 시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기기를 폐기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 계획안 편성 당시 경찰청은 2019년도에 도입한 2,300대의 기기를 2023년도에 순차적으로 폐기[212]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도 계획안 편성 시에는 2023년 12월에 일괄 폐기 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실제로는 2023년 12월까지 운용한 뒤 2024년도부터 폐기하였는바, 폐기 기준 및 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음.

212)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2019년도 1월에 300대, 3월에 950대, 11월에 1,050대를 도입한 바,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2023년도 2월, 4월, 12월에 순차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위치확인장치 구매 · 폐기 · 보유대수>

(단위: 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구매	계	2,221	-	-	2,300	172	1,400	-	6,300	-
	경찰청	2,050	-	-	2,300	-	1,400	-	6,300	-
	검찰청	171	-	-	-	172	-	-	-	-
폐기	계	-	-	-	2,050	171	-	-	-	2,300
	경찰청	-	-	-	2,050	-	-	-	-	2,300
	검찰청	-	-	-	-	171	-	-	-	-
보유	계	2,221	2,221	2,221	2,471	2,472	3,872	3,872	10,172	7,872
	경찰청	2,050	2,050	2,050	2,300	2,300	3,700	3,700	10,000	7,700
	검찰청	171	171	171	171	172	172	172	172	172

* 자료: 법무부

○ 다음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고장난 기기를 공급업체에 다시 반납하거나 각 청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스마트워치에 해당하는 위치확인장치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기기의 부품 등을 일부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함으로써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대금 등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검찰청은 폐기한 기기를 각 지청에서 보관하고 있고, 경찰청은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업체에 전달하여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각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어 폐기 방식이 일관성이 없고,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213]

○ 따라서 법무부, 경찰청 및 검찰청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 및 기기 성능 표준화를 위해 위치확인장치의 폐기 및 재활용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계약 시 위치확인장치 반납을 조건으로 대금 등 계약 조건을 협상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13) 2016년도에 도입하여 2019년도~2020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기기 2,221대(경찰청 2,050대, 검찰청 171대)에 대하여 검찰청은 각 지청 보관, 경찰청은 공급업체에 전달하였고, 2019년도에 도입하여 2024년 초부터 운용을 중지한 2,300대의 경찰청 폐기분의 경우 각 경찰서에서 보관 중임.

【 법제처 소관 결산 】

(전문위원: 이화실)

Ⅱ. 결산 검토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가. 결산 개요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는 법제처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수 등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 221억 4,200만원 중 6,500만원을 전용하고 예산현액 220억 7,700만원 중 217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4,300만원을 불용함.

【 2023년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비목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인건비	22,142	-	△65	-	22,077	21,734	-	343	22,612
- 보수 (110-01)	21,720	-	△165	-	21,555	21,273	-	283	22,144
- 기타직보수 (110-02)	251	-	100	-	351	329	-	22	292
- 연가보상비 (110-05)	170	-	-	-	170	132	-	39	176

자료: 법제처

❑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시 법제처는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 발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법제

처는 인력 수급 노력 및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등을 통해 2023년에는 2022년 13억 3,800만원 대비 10억원 가량 불용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설명함.

【 최근 5년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19,680	19,680	±131	19,680	18,711	95.1	**95.1**	-	**969**
2020	22,199	21,412	-	21,412	19,892	92.9	**92.9**	-	**1,520**
2021	22,430	22,430	23 ±27	22,453	20,058	89.4	**89.3**	-	**2,395**
2022	22,142	22,109	±25	22,109	20,771	93.9	**93.9**	-	**1,338**
2023	22,142	22,142	△65 ±100	22,077	21,734	98.2	**98.4**	-	**343**

자료: 법제처

❑ 인건비 결산내역 중 전용 6,500만원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턴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의 보수(110-01목)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의 일용임금(110-04목)으로 전용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동일 세부사업 내에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으로 보수(110-01목)에서 1억원의 전용증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나.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연례적 전용 부적정

❑ 2023년 기타직보수(110-02목)로 편성된 예산은 2억 5,100만원으로 전용 1억원을 포함한 총 3억 5,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함.

❑ 기타직보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 지급액이 정해진 기타 직종에 대한 보수인데, 2023년 법제처는 신규공무원이 정식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의 형태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110-01목) 중 1억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함.

【 2023년 기타직보수(110-02목) 세부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직급	소속	집행금액
전문임기제	나급	법령용어순화팀	73,239
	다급	대변인실	59,245
	라급	대변인실	55,390
	라급	대변인실	49,110
경채	5급	법제지원총괄과	3,552
	5급	경제법령해석2과	3,552
한시임기제	5급	법령데이터혁신팀	752
실무수습(지역인재)	7급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8,645
	7급	법령해석총괄과	22,546
	9급	행정법제국	13,722
실무수습(공채)	7급	법제정보담당관실	19,827
	7급	자치법제지원과	19,895
합계			329,475

자료: 법제처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타직보수의 경우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규공무원이 임용 전 근무함에 따라 기타직보수(110-02목)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110-01목)로부터의 자체전용이 가능함을 규정함.

❑ 법제처는 동 지침에 근거하여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로 1억원을 자체 전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과 같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기타직보수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타직보수 예산의 과소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매년 특정 비목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다르게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19~2023년 인건비 내 기타직 보수(110-02)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역
	본예산	추경					
2019	14	14	131	145	137	8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1명
2020	268	268	-	268	237	31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1명
2021	261	261	27	288	281	7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4명**
2022	235	235	25	260	254	6	전문임기제 5명, **실무수습인원 3명**
2023	251	251	100	351	329	22	전문임기제 4명, **실무수습인원 7명**

자료: 법제처

【 2019~2023년 인건비 내 기타직 보수(110-02)로의 전용 사유 】

자료: 법제처

연도	전용 금액	전용사유
2019	1억 3,100만원	전문임기제 임용 등에 따른 보수의 **기타직보수로의 세목 조정**
2021	2,300만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특근매식비 일부를 인건비로 전용
	2,700만원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근무에 따라 기타직보수(110-02)의 부족이 발생하여 보수(110-01) 일부를 기타직 보수로 전용**
2022	2,500만원	
2023	1억원	

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1011-200)

가. 결산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00)는 법제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서 2023년도 예산 17억 3,200만원 중 16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1,732	1,732	-	65	1,797	1,665	-	132	1,755
상용임금	423	423	-	-	423	411	-	12	469
일용임금	95	95	-	65	160	76	-	84	46
특근매식비	217	217	-	-	217	205	-	11	220
일·숙직비	26	26	-	-	26	24	-	2	26
복리후생비	279	279	-	-	279	263	-	16	285
기타운영비	165	165	-	-	165	158	-	7	164
직책수행경비	416	416	-	-	416	416	-	-	427
특정업무경비	10	10	-	-	10	10	-	-	10
고용부담금	102	102	-	-	102	102	-	-	108

자료: 법제처

❑ 2022년 결산 시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공무직 근로자 임금과 관련하여 호봉체계 개편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받았고, 법제처는 기존 1만 원이던 최저호봉과 최고호봉의 기본급 격차를 1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장기 근무

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 것으로 설명함. 법제처는 2025년에도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임을 밝힘.

나.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 전용 부적정

❑ 정부는 청년들의 정부정책 참여 등 다양한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23. 1. 17. 국무조정실을 통해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을 발표[214]함.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외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2023년부터 신규로 청년인턴을 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법제처는 이에 따라 2023. 3월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4명의 인턴을 6개월간 채용하기로 결정함.

21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청년의 국정참여 및 일경험 기회 확대 위해 국내외 청년인턴 대폭 늘리기로”, 2023. 1. 17.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에 따른 2023년 공공부문의 인턴 채용 및 지원규모는 2022년 2.2만명에서 1.3만명 이상 확대된 3.5만명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23년 부처의 기능과 규모를 고려하여 2천명을 선발하기로 함.
* 중앙 2천명(신규) + 공공기관 2.1만명(확대) + 재정사업 7.7천명(신규) + 해외 인턴 4.5천명

【 2023년도 법제처 청년인턴 운영계획 중 모집인원(안) 】

부서명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행정법제혁신추진단	행정·홍보	1명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연 나이 법령정비 국민 의견수렴 지원 ○국가행정법제위원회 회의 개최준비 등 업무지원
법령데이터혁신팀	전산	1명	○법제 데이터분석 지원 ○법제분야 관련 국내외 우수 분석사례 정리 ○법제데이터 관련 회의 운영 지원
법령정비과	법무	1명	○법령 개선제안 검토 ○위법·불합리한 법령 정비과제 검토 ○어린이·청소년 대상 법제 및 진로교육 지원
알기쉬운법령팀	외국어·국제	1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해외자료 조사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국민참여단 운영관리 지원(인터넷 카페 등 플랫폼 모니터링 등)

자료: 법제처

❑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 이후인 2023. 1월 발표되었고, 2023년 청년인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 부처에서 기관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법제처는 4명의 인턴을 6개월간 채용하기 위한 예산 6,500만원을 인건비(1001-100)-보수(1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 2023. 6월 전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예산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국가재정법」 제45조[215]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215) 「국가재정법」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216]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청년인턴 운영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법제처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수(1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아 자체전용이 가능한 것[217]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인 일용임금의 경우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함을 규정[218]하고 있고, 동 일용임금은 변호사 단기 법률사무종사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219]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

216) 「국가재정법」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217) 2023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p.236)

구 분	목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재정부 협의)
100 (인건비)	110 (인건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110-02목(기타직보수), 110-03목(상용임금), 110-05목(연가보상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18) (2) 일용임금
가) 집행기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용임금을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한다.

보수(110-01목)를 일용임금(110-04목)으로 전용하여 청년인턴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법제처는 당초 행정·홍보, 전산, 법무, 외국어·국제 4개 분야 각 1명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법무 분야 1명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없어 2차 채용공고에서는 법제 지원 분야로 한정하여 추가 3명의 인턴을 모집하였고, 이후 4개월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전용한 예산 6,500만원 중 75%에 해당하는 4,900만원만 집행하였는데 법제처는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비용을 전용한 6월 당시에는 11월까지 운영 예정인 변호사 단기 법률 사무종사 운영을 위한 일용임금 9,500만원의 불용여부 및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용임금(110-04목)은 당초 전용한 금액 6,500만원보다 더 큰 8,400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수요조사 없이 추진한 데에서 불필요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219) 법제처,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명세서(일반회계)」, 34p
(110-04) 일용임금 95,000원(천원)
가. 변호사 단기법률 사무종사 2,250,000*7인*6월 = 94,500
나. 조정계수 500,000원

【 2023년 청년인턴 채용기간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직급	소속	집행금액	비고
청년인턴	인턴	법령정비과	13,428	6~12월
	인턴	행정법제혁신추진단	11,858	8~12월
	인턴	법제지원총괄과	11,858	8~12월
	인턴	자치법규입안지원과	11,858	8~12월
합계			49,002	

자료: 법제처

다.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 기관운영기본경비 일용임금(110-04)은 수개월 동안 고용하는 일용직을 위한 보수로,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220]를 6개월 임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에는 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 법률사무종사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결산액
일용임금	보수	95,000	27,000
고용부담금	4대 보험료	11,634	3,123
합 계		106,634	30,123

자료: 법제처

220) 법률사무소 개업을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법」에 따라 6개월의 최소 법률사무종사가 요구되는 변호사

❑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등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쳐야만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음.[221]

이러한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 법조인으로서의 함양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법제처는 2012년 신청을 통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222]

---

221)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222)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법제처의 최근 5년간 법률사무종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채용인원이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을 제외하면 평균 근무기간이 계획된 6개월에 미치지 못함. 특히 2023년의 경우 모집 계획인원은 7명이었으나 최종 2명이 채용되어 채용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최근 5년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운영현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모집공고인원	5명	5명	7명	7명	7명
실제근무인원	5명	5명	5명	7명	2명
평균근무기간	5개월 12일	5개월 8일	5개월	4개월 26일	6개월
배치부서	법제교육과 법령해석국(2)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과 법제관실	법제교육과 법령해석총괄과(2)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 법제관실	법제교육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법제관실 법령해석총괄과	법령정비과 법제조정총괄 법제관실 법령해석총괄과 법제교육과 자치법규입안지원과 행정규칙법제관실 법령해석총괄과	법제교육과 법령해석총괄과

자료: 법제처

또한, 최근 3년간 법률사무종사 예산의 집행률은 2021년 약 60%, 20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③ ~ ⑥ 생 략

22년 약 75%, 2023년 약 30%로, 3년 연속 부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 법률사무종사 예산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223]	2022년	2023년
예산(천원)	일용 임금	52,355	53,859	105,000	105,000	95,000
	고용 부담금	5,445	5,682	11,403	11,529	11,634
집행(천원)	일용 임금	47,759	47,199	62,280	76,490	27,000
	고용 부담금	4,607	5,216	6,801	8,968	3,123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비수도권이라는 법제처의 위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원자의 수가 부족하고, 합격한 자가 타 기관에도 합격한 경우 법제처와의 계약 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모집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23) 법제처의 설명에 따르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일용임금 예산은 2020년까지 시급(최저임금)으로 산출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실무수습 변호사의 급여와 관련된 논란이 다수 발생했던 점 및 각 기관의 우수인력 확보 등을 고려한 법무부 안내(법무과-5004, 2020.6.9.,"2021년 국가기관·지자체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관련 안내")에 따라 1인당 250만원으로 일괄하여 일용임금 예산에 반영되었음.

2020년·2021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예산(자료: 법제처)

년도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합계
2020년	8,590원x209시간x5인x6월=53,859천원	53,859천원x0.1055=5,682천원	59,541천원
2021년	2,500,000원x7인x6월=105,000천원	105,000천원x0.1086=11,403천원	116,403천원

❑ 이와 같이 계획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법제처의 인력 활용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법제처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인력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임.

❑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요가 높지 않고 법제처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제처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계속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법제사법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법제처는 해당 사업의 집행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서의 수요를 파악한 후 모집 계획인원을 설정하고, 법률사무종사 모집공고를 법률신문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수회 시행하며,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들의 법제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부서별 총괄서기관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상호 간 지식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월별 소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법제처 단기 법률사무종사 교육 프로그램 내용 】

- (오리엔테이션 실시) 법제처 업무 전반 및 조직, 부서별 위치 소개 및 재직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 (멘토링 운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들의 법제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부서별 총괄 서기관 등을 1:1 멘토로 지정·운영(상시)
- (소통 프로그램 등 운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상호간 지식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한 월별 소통 프로그램(월간 커피브레이크) 실시
- 변호사 출신 멘토 사무관 섭외하여 멘토링 실시
- (업무 체험 프로그램) 법령해석 안건 합동검토회의(매주 월) 참관 및 법제 교육 출강* 등 주요 업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법제 교육과 주관 교육 과정('행정법일반과정' 등) 107시간 강의 진행
- (교육 프로그램) 법령입안과정, 법령해석과정 등 법제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법제교육과 주관 과정) 운영

구분	교육 과정
법령입안 심화과정	- 행정기본법 - 총칙, 보칙 및 부칙 규정 - 실체 규정 1 (인허가, 등록, 신고) - 실체 규정 2 (결격사유, 과징금) - 실체 규정 3 (행정강제, 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및 법령안편집기 활용 방법
법령해석과정	- 행정법 Ⅰ (총칙) - 적극행정 법제 사례 연구 - 행정법 Ⅱ (작용법) - 법령해석 방법론 -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 모의해석실습
법제 전문가 과정	- 법제 특강(경과조치와 적용례의 구분과 작성방법) - 제안이유 주요내용 작성법 - 법령문장 잘 쓰는 방법 - 법제특강(부칙 입안시 유의사항 -해석상 부칙이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 법령심사안 작성시 유의사항

자료: 법제처

그러나 2021년 이후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모집인원 재공고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집행 실적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도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게다가 법제처에 채용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는 법제처로부터 임금을 제공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단기로 근무하는데, 이들에 대한 채용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교육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신규 변호사의 능력 함양을 위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224]가 있고, 멘토링 등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 운영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함.

❑ 따라서 채용인원의 감소 및 예산집행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해당 제도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24) 법률사무종사제도 취지에 따라 법률사무종사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제 사건을 통한 실습 진행 등 적합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p25)

3.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가. 결산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는 법제처 기관운영 및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2023년도 예산은 총 2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600만원은 동일한 사업 내에서 세목조정되었고, 25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9,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기본경비		2,662	2,662	-	±36	2,662	2,570	-	92	3,277
①	일반수용비	1,381	1,381	-	△20	1,360	1,354	-	7	1,527
②	공공요금및제세	72	72	-	-	72	53	-	19	85
③	피복비	0.7	0.7	-	-	0.7	0.6	-	-	-
④	급식비	4	4	-	-	4	3	-	1	3
⑤	임차료	211	211	-	△7	204	176	-	28	250
⑥	유류비	23	23	-	-	23	9	-	15	15
⑦	시설장비유지비	68	68	-	-	68	68	-	-	94
⑧	일반용역비	75	75	-	3	78	64	-	14	111
⑨	국내여비	142	142	-	13	155	151	-	4	186
⑩	국외업무여비	24	24	-	△9	15	14	-	1	16
⑪	국외교육여비	-	-	-	20	20	20	-	-	-
⑫	관서업무추진비	142	142	-	-	142	142	-	-	149
⑬	손실보상금	0.05	0.05	-	-	0.05	-	-	0.05	-
⑭	포상금	0.05	0.05	-	-	0.05	-	-	0.05	0.1
⑮	공사비	251	251	-	-	251	251	-	-	75
⑯	자산취득비	269	269	-	-	269	265	-	3	315
⑰	무형자산	-	-	-	-	-	-	-	-	450

자료 : 법제처

나. 국내장기교육 훈련자 국외교육여비 적정 편성 필요

❑ 법제처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국외교육여비(220-03목)로 3차례에 걸쳐 2,014만원을 전용하였음. 법제처는 국내파견 교육훈련자의 국외 현장학습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국외교육여비로 비목을 변경한 것으로 사유를 설명함.

【 2023년 일반수용비 → 국외교육여비 전용 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원)	~으로		집행내역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5.24.)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8,647,31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국외교육여비 (220-03)	글로벌리더십과정 국외현장학습 경비
전용 ('23.8.8.)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7,453,68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국외교육여비 (220-03)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경비
전용 ('23.9.12.)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일반수용비 (210-01)	4,039,740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국외교육여비 (220-03)	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여비
합계			**20,140,730**			

자료: 법제처

❑ 그러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장기교육의 경우 모집 시점에 대략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가 교육계획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외현장학습 경비를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등을 위한 예산비목인 국외교육여비

(220-03목)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 후 수시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 변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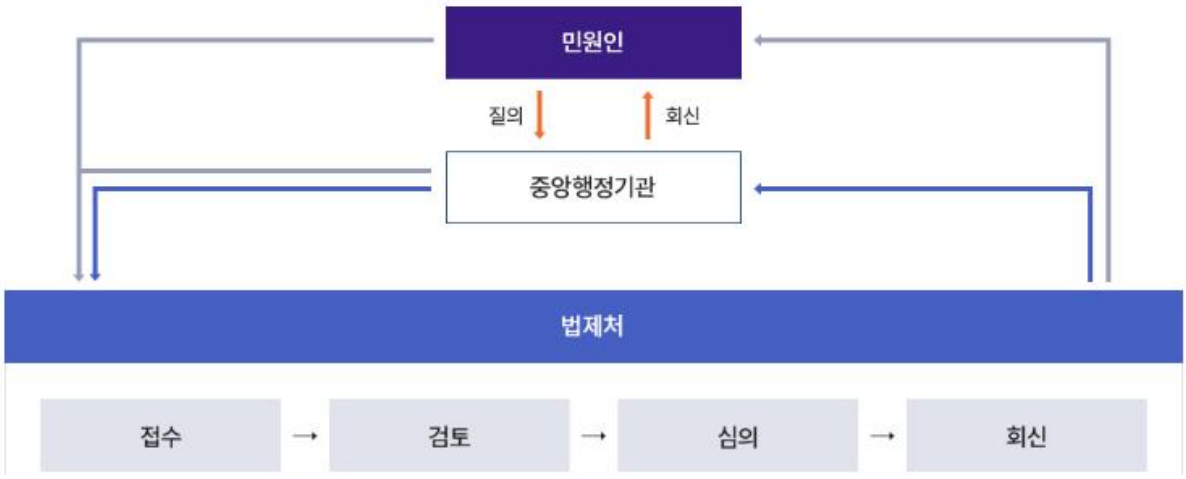
❑ 법제처는 매년 국내장기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와 국외교육여비를 함께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여 예산당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국외교육여비는 편성되지 않아 매번 일반수용비 일부를 국외교육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안은 집행 내용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외현장학습의 경우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국외교육여비로 계상되어 다른 국외여비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법령해석국 관련 별도 사업예산 편성 방안 검토 필요

❑ 법령해석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말함. 법령해석 업무는 정부입법 총괄, 법령심사 및 법령정비와 함께 법제처의 주요 기능에 해당함.

- 법령해석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③ 민원인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되어 법제처의 안건 검토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신하는 절차로 진행됨.

【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 절차 】



❑ 2023년 법제처는 1,182건 법령해석 요청을 접수하여, 490건 회신하였음. 접수건수는 2021년 923건에서 2023년 1,182건으로 28% 증가한 반면, 처리건수 중 반려건수는 2021년 193건에서 2023년 391건으로 102% 증가[225]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법령해석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 】

(2023. 12. 기준)

연 도		2021	2022	2023
접 수		923건	1,013건	1,182건
철 회		58건	91건	139건
처리	회 신	470건	470건	490건
	협 의·조 정	122건	156건	169건
	반 려	193건	272건	391건
평균처리기간[226]		37.9일	36.7일	39.9일

자료: 법제처

❑ 또한, 법제처는 법령해석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2023년 검토과정에서 39건의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44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대면 23회, 온라인 21회)를 개최하였음.

225) 법령해석 요청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이 될 수 있는데, 민원인 요청 안건 접수가 2021년 518건, 2022년 604건, 2023년 696건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안건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민원인 접수 안건의 경우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한 사항 등 법령해석 반려사유(「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8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반려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됨(출처: 법제처)

226)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 협의 및 민원인 답변 지연 등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상 계류된 안건을 장기계류안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말 기준 17건이 장기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함.

【 최근 3년간 법령해석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 】

(2023. 12. 기준)

연 도	2021			2022			2023		
개최방식	대면	온라인	서면	대면	온라인	서면	대면	온라인	서면
본위원회	-	42회	-	3회	39회	-	23회	21회	-
전문위원회	-	-	-	-	2회	-	-	9회	-
소위원회	33회	-	-	21회	-	-	29회	-	-

자료: 법제처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게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10만원(2시간 이상 참석하는 경우 5만원 추가), 사전검토수당 15만원, 주심수당 10만원(주심안건 1건당으로 초과 안건마다 5만원 추가 등)을 지급하고 있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평균 4시간이 소요되고, 참석위원은 1~2개의 안건마다 주심위원[227]으로 지정되어 참석하고 있는 바, 참석수당, 사전검토수당, 주심수당을 합하여 35만원~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228].

❑ 이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상·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 발간 등 법령해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은 전체 기관운영기본경비 24억 6,000만원 중 12.2%에 해당하는 3억 1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됨.

227)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위원들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위원별로 주심안건을 배정함으로써 주심위원이 해당 주심안건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검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함.

228) 그 외에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외부위원에 대해 교통비를 3만~1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 2023년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법령해석국 관련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예산비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일반수용비 (210-01목)	① 국 일반수용비	26,271	23,977
	② 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25,000	125,075
	③ 참석위원 교통비	5,250	587
	④ 안건인쇄비	76,626	76,622
	⑤ 법령해석사례집 발간	24,000	23,727
	⑥ 법령해석담당자 연찬회	6,000	5,235
	⑦ 전문가 자문	9,000	8,750
	⑧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1,000	1,000
	⑨ 법령의견제시과 일반수용비	7,700	7,700
	⑩ 전문위원회 운영비	8,400	7,500
	⑪ 참고문헌 구입비	8,000	4,160
공공요금및제세 (210-02목)	① 공공요금	6,000	-
	② 안건, 답변서등 발송	4,470	-
임차료 (210-07목)	① 위원회 개최(서울)	5,040	7,996
	② 공기청정기 임차료	3,360	3,494
국내여비 (210-01목)	① 국내여비	5,330	5,330
	② 안건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800	800
	③ 위원회 개최(서울)	30,000	17,815
	④ 법령의견제시과 국내여비	1,368	857
국외업무여비 (210-02목)	외국법령해석시스템 연구	7,981	6,987
업무추진비 (240-02목)	① 국 관서업무경비	1,818	732
	② 위원회 개최 경비	10.800	10,859
	③ 담당자 연찬회 경비	2,550	1,818
	④ 법령의견제시과 경비	2,250	1,660
계		368,225	342,681
(음영부분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 계)		**(301,658)**	(294,771)

* 기관운영경비의 공공요금및제세(210-02)는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지출하여 법령해석국 관련 집행액 산출 불가

❑ 그런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로 편성한 예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말함[229]. 또한, 기본경비는 집행지침에 따라 기본경비 총액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예산의 집행에 있어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특수성이 있음.

❑ 그러나 법령해석은 법제처의 입안지원, 법령심사 및 법령정비와 함께 법제처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업무임.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기관운영기본경비와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음.

❑ 법제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기본경비로 추진하던 사업을 주요사업비로 전환·요구하는 것을 금지[230]하고 있으므로 매년 기본경비로 편성하던 법령해석국 기본경비를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을 현재와 같이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포함

229)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8.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서 정의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임

230)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4

하여 편성하는 경우 법령해석 업무와 직접 관련된 예산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결과 집행된 예산과 법령해석 처리·철회·반려 현황,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등 사업 실적과의 관계, 예산의 비용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여지[231]도 있음.

❑ 참고로, 법령심사지원 사업과 법령입법지원 사업의 경우 법령심사지원 세부사업 내의 내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부입법 제때마련율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삼아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그 외 정부입법 법률안의 국회 제출 건수,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개최 건수 등의 사업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바, 법령해석업무 관련 비용 역시 별도 사업예산으로 요구·편성하여 사업 실적 및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1) 법제처는 법령해석 처리、철회、반려 현황,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내역 등 법령해석 실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국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바, 예산과 사업실적과의 관계, 예산의 비용효율성은 법령해석국 기본경비 집행실적으로도 파악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법령심사지원 및 법령입법지원 내역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내역 사업명	편성 근거	집행 내역
법령심사 지원	○ 96백만원 ㆍ전시법령안 등 인쇄: 14.4백만원(180건×0.08백만원) ㆍ법제업무편람 인쇄: 15백만원(830부×0.018백만원) ㆍ정부입법계획 인쇄: 4백만원(500부×0.004백만원×2건) ㆍ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34.4백만원(12월×2.87백만원) ㆍ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28.1백만원(12월×2.34백만원)	○ 87.4백만원 ㆍ전시법령안 등 인쇄: 10.2백만원 ㆍ법제업무편람 인쇄: 14.9백만원 ㆍ정부입법계획 인쇄: 2.8백만원 ㆍ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34.2백만원 ㆍ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25.3백만원
법령입법 지원	○ 216백만원 ㆍ지원 인력 보수: 118백만원(3명×39.3백만원) ㆍ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9.5백만원(850부×0.023백만원) ㆍ전문가 간담회: 7.1백만원 ㆍ법령입법지원 결과보고서 발간: 3.6백만원(12,000원×300부×1회) ㆍ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20.4백만원(34회×0.6백만원) ㆍ국외출장: 8.7백만원(1회×8.7백만원) ㆍ사무용품비: 6.2백만원 ㆍ기타 사업추진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32.5백만원	○204백만원 ㆍ지원 인력 보수: 113.8백만원 ㆍ법령입안심사기준 책자 발간: 19.5백만원 ㆍ전문가 간담회: 3.8백만원 ㆍ법령입법지원 결과보고서 발간: 3.6백만원 ㆍ법령입법지원 전문가 자문료: 18.8백만원 ㆍ국외출장: 5.7백만원 ㆍ사무용품비: 6.2백만원 ㆍ기타 사업추진비 등: 32.6백만원

자료: 법제처

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모색 필요

❑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간 이견 해소를 위하여 법제처장이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때 그 사실 및 법리적 보완 사항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 이견 조정을 위해 직권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제12조의2제5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제처장이 국무조정실 등 관련 조정기관에 통보(제11조의4제2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232)]

❑ 최근 3년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는 2021년도 96건, 2022년도 72건, 2023년도 107건의 안건에 대하여

---

232)「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⑤ 협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입법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최된 것으로 확인됨. 2023년의 경우 협의회를 통해 이견 조정이 88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정의 경우 '일부 조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조정을 통해 입법을 완료한 안건은 27건으로 파악되고 있음.

【 최근 5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내역 】

(2023. 12. 기준)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안건수	64 (본협의회0건)	97 (본협의회0건)	96 (본협의회1건)	72 (본협의회1건)	107 (본협의회5건)
조정건수	49	88	78	62	88
조정건수 중 입법완료건수	17	15	19	16	27
동일 안건(**의안번호**)을 1건으로 하여 계산한 개최건수	59	92	89	63	45

※ '조정'은 '일부조정'을 포함하며, 동일 안건에 대하여 조정이 한 번에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안을 달리하여 상정한 경우를 별도 건으로 포함함
자료: 법제처

❑ 의원발의 법률안이 매년 6,000~7,000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233]에서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사하는 중 타 부처간 이견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제시되는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는 등 입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를 고려하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3)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2019년 6,039건, 2020년 7,119건, 2021년 6,759건, 2022년 4,703건, 2023년 6,405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됨.

❑ 먼저, 현재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법률안 소관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본 협의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제3항)와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제6항)로 구분[234]할 수 있는데, 개최건수 중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본협의회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개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무협의회 개최만으로 부처간 이견 조정이 되는 경우가 효율적이라고 할 것이나, 동일 안건에 대해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235]하여도 이견 조정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조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는 고위공무원이 직접 협의회에서 의견을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협의회 개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34)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35) 예컨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차례 개최되었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 경우 2023년에만 10차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됨.

❑ 다음,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236]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는 정책적 이견 등으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을 소관하는 국무조정실 등의 조정을 거치도록 실무적으로 안내하고 있을 뿐 법제처장이 국무조정실에 이를 통보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법령안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각 부처 소관 영역 등으로 인한 부처 갈등인 경우 국무조정실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책 이견 등으로 인한 부처 이견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한 국무조정실 통보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236)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입법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3. 10. 10., 2014. 11. 19.>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안 중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조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가. 결산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는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임.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총 1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0억 2,200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051	1,051	-	-	1,051	1,022	-	29	1,328
상용임금	29	29	-	-	29	28	-	1	29
일반수용비	16	16	-	-	16	16	-	-	17
공공요금 및 제세	5	5	-	-	5	4	-	1	5
특근매식비	4	4	-	-	4	4	-	-	-
임차료	6	6	-	-	6	5	-	1	6
복리후생비	1	1	-	-	1	1	-	-	1
국내여비	1	1	-	-	1	1	-	-	1
사업추진비	10	10	-	-	10	10	-	-	10
민간위탁사업비	974	974	-	-	974	948	-	26	1,253
고용부담금	5	5	-	-	5	5	-	-	6

자료: 법제처

나. 콘텐츠 현행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임.

❑ 관련 법령 일부분이 개정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함께 제공되는 연관 법령정보 또한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변경된 법령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해당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법령정보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신규 제작 시 각 소관 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현행성 및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인용 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류 신고 게시판 및 유선 등을 통해 상시 오류 신고를 받아 검토 후 즉시 반영하고 있음.

또한, 법제처로 직접 소관 부처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후 e-mail 등을 통해 한국법령정보원으로 공유하고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음.

그러나 법령의 제·개정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두 달에 한 번 실시하는 모니터링과 오류 신고 접수만으로는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임.

❑ 또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제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이미 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이 예정되어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이를 사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7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등이 개정됨으로써 정비된 출생통보제[237]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으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는 이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 전이라도 시행 예정 조문에 대한 안내문구 등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7)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다. 블로그기자단 운영의 실효성 검토 필요

❑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사업을 한국법령정보원에 위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카드뉴스, 웹툰, Q&A, 동영상 등의 형식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법령정보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여 독자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비 상세내역 】

구분	금액
민간위탁사업비	974백만원
- 국문콘텐츠 개발 위탁	721백만원
- 외국어 콘텐츠 개발 위탁	70백만원
- 외국어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용역	140백만원
- 생활법령정보 홍보	42백만원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08년부터 매년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에 게재되는 기사 및 콘텐츠를 제작하고, 법제처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 행사에 참여하며, 페이스북 등 SNS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블로그 기자가 기사 및 콘텐츠를 제출하면, 법제처는 원고료를 지급하고(일반기사 1건당 5만원, 기획기사 1건당 7만원), 한국법령정보

원은 매월 1건 이상 기사를 등록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우수 활동 기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음.

기자단은 직접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일반기사를 작성하거나, 외부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가 제시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기획기사를 작성함.

【 블로그 기자단 예산 집행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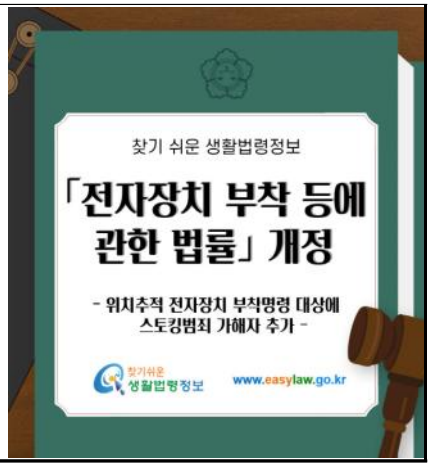
번호	집행 내역	지급 금액	지급일
1	2023년 1월 원고료 지급	600,000원	2023-02-23
2	2023년 2월 원고료 지급	550,000원	2023-03-23
3	2023년 3월 원고료 지급	850,000원	2023-04-17
4	2023년 4월 원고료 지급	500,000원	2023-06-05
5	2023년 5월 원고료 지급	550,000원	2023-06-09
6	2023년 6월 원고료 지급	550,000원	2023-07-20
7	2023년 7월 원고료 지급	740,000원	2023-08-16
8	2023년 8월 원고료 지급	500,000원	2023-09-08
9	2023년 9월 원고료 지급	500,000원	2023-10-18
10	2023년 10월 원고료 지급	440,000원	2023-11-13
11	2023년 11월 원고료 지급	560,000원	2023-12-11
12	2023년 12월 원고료 지급	770,000원	2023-12-11

자료: 법제처

【 일반기사 및 기획기사 비교 】

구분	일반기사	기획기사
주제	기자단 직접 선정	제시된 주제로 작성
형식	제한 없음(줄글, 카드뉴스 등)	
원고료	50,000원	70,000원
2023년 제작 건수	116건	18건
작성 예시		





자료: 법제처

❑ 블로그 기자단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되어 있는 콘텐츠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의 내용을 구성 및 디자인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법제처에 제출하고,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의 기자단 이야기 게시판에 이를 게재하고 있음.

❑ 블로그 기자단 활동의 효용성은 그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게시되어 있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바, 2023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118,885명으로 2019년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였으나, 2023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54,041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45% 증가하였고, 2021년·2022년 방문자 수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음.

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의 증가율 대비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답보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블로그 방문자 수 현황 】

(단위: 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홈페이지 방문자	42,263	53,330	70,917	105,608	118,885
블로그 방문자	37,844	46,958	55,115	55,845	54,041

자료: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솔로몬의 재판, 웹툰 등의 형태로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포괄하고, 블로그에 있는 정보는 대부분 링크연결의 방식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일반 국민은 본인이 찾고자 하는 생활법령 정보를 찾기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정보가 편집 및 디자인만 다르게 소개되어 있는 블로그에 방문할 별도 유인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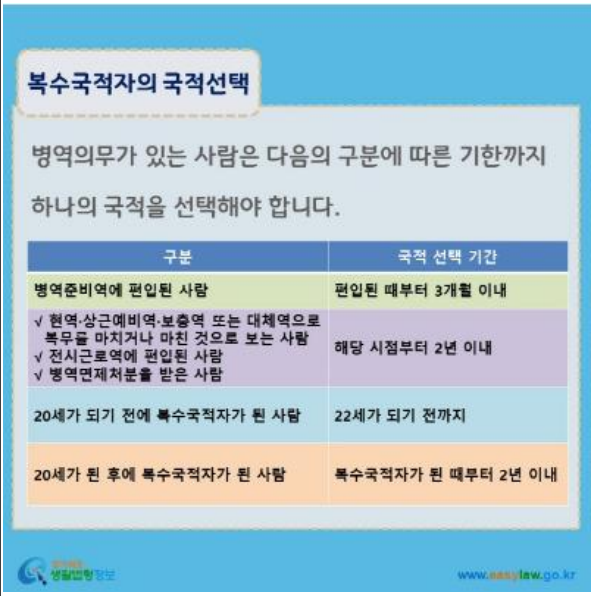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콘텐츠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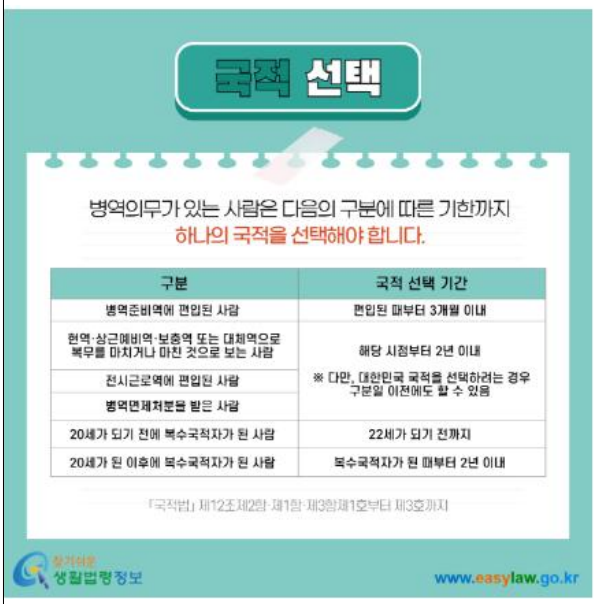
홈페이지



블로그







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블로그가 현재 운영 방식을 유지한다면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계속해서 답보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됨.

❑ 지난 2021년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채널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처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및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홍보를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법제처는 이미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법령정보제공 등 법제처 관련 업무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블로그 기자단 운영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블로그 기자단을 계속 운영할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법령심사지원(1032-300)

가. 결산 개요

❑ 법령심사지원(1032-300)은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이 있음.

- **(법령심사지원)**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각종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공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법령입법지원)**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안을 입안할 때부터 정책을 조문화하고, 법리적 쟁점 검토·지원
- **(법제업무 역량강화)** 법제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제업무평가 실시를 통한 일선기관의 법제업무역량 강화 지원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총 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법령심사지원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령심사지원	381	381	-	-	381	354	-	27	335
법령심사지원	96	96	-	-	96	87	-	9	111
법령입법지원	216	216	-	-	216	204	-	12	170
법제업무 역량강화	68	68	-	-	68	62	-	6	54

자료: 법제처

나.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강화 필요

❑ 내역사업인 법령심사지원 사업을 통해 작성하는 정부입법계획[238]은 그 해에 입법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해 정부전체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 및 시기 등을 조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매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처입법계획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법제처장은 이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수립된 정부입법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국회에 통지됨.

【 정부입법계획 수립 절차 】

자료: 법제처



❑ 정부입법계획은 입법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입법과정의 효율성과 법안심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나, 최근 5년간 당초 제출한 정부입법계획 대비 계획의 수정률

238) 법령심사지원 2023년도 집행내역(총 8,730만원)
- 전시법령안 등 인쇄: 1,020만원, 법제업무편람 인쇄 1,490만원, 정부입법계획 인쇄 270만원, 법령심사지원 활동 사업추진비 3,400만원, 법령심사지원 기타경비 2,550만원

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5년 정부입법계획 추진 현황 】

구분 / 연도	당초 제출 계획 [A]	당초계획 법안 중 국회제출	당초계획 대비 제출비율	입법 계획 추가 [B]	입법 계획 철회 [C]	수정률 $[\frac{(B+C)}{A}]$	수정 입법 계획 [D]	수정계획 법안 중 국회제출 [E]	수정계획 대비 제출비율 [E/D]
2019년	214건	117건	54.7%	95건	105건	93.4%	204건	204건	100%
2020년	380건	275건	72.4%	52건	120건	45.3%[239]	312건	312건	100%
2021년	210건	102건	48.6%	60건	121건	86.2%	149건	149건	100%
2022년	165건	76건	46.1%	85건	107건	116.4%	143건	143건	100%
2023년	210건	110건	52.4%	119건	109건	108.5%	220건	220건	100%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22년의 경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등 반영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전에 수립했던 정부입법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240], 2023년의 경우에는 입법계획 철회 건수 중 동일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철회가 40건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의원입법의 활성화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당초 계획 대비 국회 제출 비율이 5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당해연도에 추가된 건수도 매년 52건~119건에 이르는 등 상당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 등 정부입법 추진 일정 및 절차에 대한 충분한

239) 2020년의 경우 국회 개원 후 6월에 국회에 통보된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초계획 대비 제출비율은 높게, 수정률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240) 새 정부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등 수행 관련 추가 75건, 철회 45건, 그 밖에 동일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철회 19건을 각각 제외한 수정률은 32.1% 수준임.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241].

❑ 정부입법계획은 국회에 통지될 뿐 아니라 관보·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며 정부입법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함에 있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내역사업인 법제업무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법제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포상을 하고 있는데, 정부입법계획(40점), 입법예고(30점)[242] 및 하위법령제때마련(30점)[243]을 3가지 부문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음. 이 중 정부입법계획의 비중은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정부입법계획 일정 준수율 지표(30점), 정부입법계획 수정률 지표(10점)[244]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입법계획 수정률 지표(10점)의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41) 다만, 법제처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법수요、필요성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한 검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입법계획은 연 단위 계획으로, 전년도 11월에 각 부처가 검토에 착수하고 해당 연도 1월에 확정됨에 따라, 계획 수립 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입법수요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한 입법내용, 일정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점, 입법계획 철회의 주된 사유인 `정부입법계획 내용과 동일한 법안의 의원발의'는 법제처가 관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계획 수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242) 평가지표: 입법예고 기간 준수율(20점), 국민 제출의견에 대한 답변의 신속성(10점), 국민제출의견에 대한 답변의 충실성(가점, 최대 5점)

243) 평가지표: 하위법령 제때마련 준비율(30점), 하위법령 미리 마련(가점, 최대 5점), 하위법령 제때 미마련(감점, 건당 5점)

244) $10점 - \frac{\text{(추가 법률안 수) + (철회 법률안 수×5)}}{\text{연초 정부입법계획상 법률안 수*}}$

* 연초 정부입법계획상 법률안이 없는 부처는 분모를 1로 계산

법제처는 대통령 지시사항, 헌재 위헌결정 후속 입법, 연관법령 개정 필요 등 긴급한 입법수요 대응을 위한 입법계획 추가, 동일한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에 따른 입법계획 철회 등의 경우 법제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함.

【 최근 3년간 법제업무평가 평가부문 및 포상기관 】

연도	구 분		기관명	지급액 (백만원)
2021	종합평가 상위 20% 기관	부	해양수산부	2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1
		처·청·위원회	문화재청	2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1
2022	종합평가 상위 3위 이내 기관	부	통일부	3
			문화체육관광부	1.5
			기획재정부	1
		처·청·위원회	기상청	3
			식품의약품안전처	1.5
			소방청	1
	부문별 우수기관	정부입법계획	방송통신위원회	1
		입법예고	문화재청	1
		하위법령 제때마련	법무부	1
2023	종합평가 상위 3위 이내 기관	가 그룹	식품의약품안전처	3
			환경부	1.5
			행정안전부	1
		나 그룹	공정거래위원회	3
			인사혁신처	1.5
			보건복지부	1
	부문별 우수기관	**정부입법계획**	고용노동부	1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1
		하위법령 제때마련	기획재정부	1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입법계획은 정부입법에 관한 부처 간의 공유·협업 및 법제 관련 기관들의 지원 등 정부 내의 효율적 입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바, 계획 준수만을 강조하여 부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경우 다수 부처 연관 법안, 재정 부담 수반 법안 등 사전에 정부입장이 조율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 준수와 신속한 입법환경 대응 측면[245]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245) (출처: 법제처)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 등 연중에 긴급한 입법수요가 파악된 경우, 입법계획 준수를 위해서 다음 연도에 개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즉시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6. 법제정비(1032-301)

가. 결산 개요

❑ 법제정비(1032-301)는 법제처가 법령의 품질제고 및 문제점 개선, 국민의 법령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정비)** 규제 정비 등 법제적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국민법제관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 및 법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 보장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법령 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및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총 13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사업인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인건비(110-03)에서 900만원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동일 비목으로 자체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12억 9,800만원 중 12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법제정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사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법제정비	1,307	1,307	-	△9	1,298	1,211	-	87	1,324
법령정비	356	356	-	2	358	315	-	43	494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지원	341	341	-	△2	339	329	-	10	311
알기 쉬운 법제 구축	609	609	-	△9	600	567	-	33	519

자료: 법제처

나. 알기 쉬운 법제 구축 :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알기 쉬운 법제 구축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법률용어의 사전차단 및 사후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총 6억 900만원이 반영되었고, 이 중 900만원이 자체전용되었으며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 6,700만원이 집행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비목별 집행실적 】

(나)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세목명	세목코드	예산 (본예산)	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알기 쉬운 법제 구축	[illegible]	① [illegible]	609	609	600	567	②33	③39
	④[illegible]	⑤[illegible]	203	203	194	174	20	⑥68
	⑦[illegible]	⑧[illegible]	69	69	69	64	5	⑨39
	⑩[illegible]	⑪[illegible]	1	1	1	1	-	⑫001
	⑬[illegible]	⑭[illegible]	6	6	6	6	-	⑮001
	⑯[illegible]	⑰[illegible]	2	2	2	2	-	⑱001
	⑲[illegible]	⑳[illegible]	3	3	3	2	-	①001
	②[illegible]	③[illegible]	80	80	80	78	2	④89
	⑤[illegible]	⑥[illegible]	2	2	2	2	-	⑦001
	⑧[illegible]	⑨[illegible]	8	8	8	5	3	⑩36
	⑪[illegible]	⑫[illegible]	15	15	15	15	-	⑬001
	⑭[illegible]	⑮[illegible]	180	180	180	178	2	⑯99
	⑰[illegible]	⑱[illegible]	40	40	40	40	-	⑲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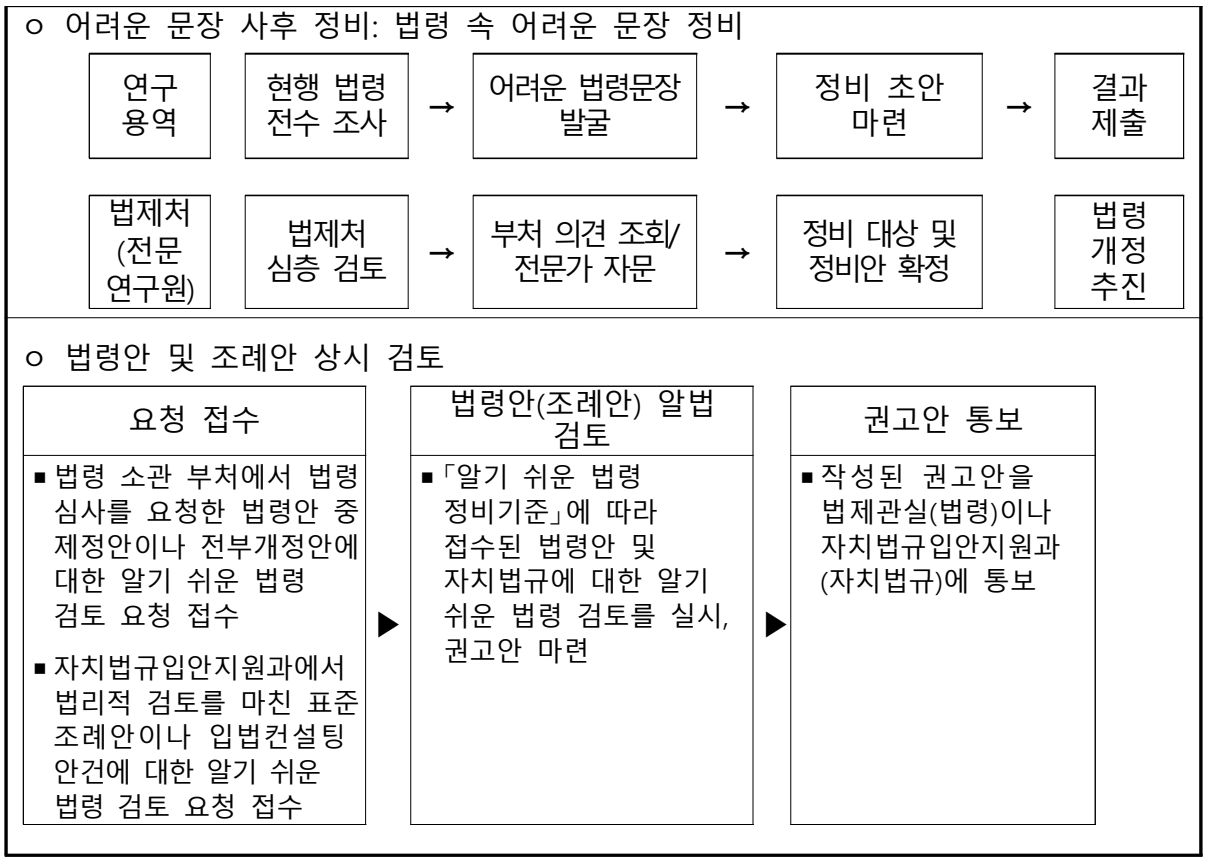
자료: 법제처

❑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제 구축 내역사업은 ① 입안 및 부처협의 단계에서의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②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사후 정비, ③ 소관 부처 또는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의 요청에 따른 법령안 및 조례안 상시 검토로 구분할 수 있음.

【 알기쉬운 법제구축 사업 흐름도 】

o 어려운 법령용어 사전 차단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개선하여왔음. 그러나 법제처가 2022년 2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246] 그동안의 용어 정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고, 이는 길고 불명확한 문장과 복잡한 법령 체계 때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법제처는 2023년부터 기존의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로 주안점을 변경하여 법령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246) 국민 인식조사 결과('22년 2월/1,230명 대상), 79.7%가 법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불명확한 문장 45.6%, 복잡한 조문 체계 48.5%라고 응답하였음.

❑ 2023년 법제처는 ‘문장정비’ 사업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3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 2023년 연구용역 개요 】

ㅇ (과 제 명) 읽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연구
ㅇ (소요예산) 1억 8,000만원(6,000만원*3건) (부가가치세 포함)
ㅇ (연구용역 구분) 분야별 법령 개수 등을 고려하여 3개팀으로 구분

구분	대상 분야	법령 예시	금액(법령 수)
1팀	주택·건축·도로·교통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거기본법, 유료도로법, 도로교통법 등(하위법령 포함)	6천만원(101개)
2팀	보건·의료 1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생명윤리법 등(하위법령 포함)	6천만원(115개)
3팀	보건·의료 2	어린이식생활법, 위생용품 관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혈액관리법 등 (하위법령 포함)	6천만원(115개)

ㅇ (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자료: 법제처

해당 연구용역을 통하여 조문 수 기준 총 1,976건의 정비안(각 팀당 1,161건, 411건, 404건)을 발굴하여 553건의 정비 초안을 선정하였고, 소관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한 최종 정비안 323건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법령 문장 정비안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법제처는 ①바른 문장, ②간결한 문장, ③명확한 문장, ④자연스러운 문장, ⑤한눈에 보이는 문장 등으로 정리 대상 및 정비안을 구분하였음.

【 어려운 법령문장 사후 정비 6가지 유형 】

<table>
<tr><th>유형</th><th>정비 대상</th><th>정비안</th><th>비고</th></tr>
<tr><td rowspan="2">1유형
바른 문장 쓰기</td><td colspan="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td><td rowspan="2">주어-서술어의 호응이 맞도록 주어를 분명히 밝힘</td></tr>
<tr><td>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은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td><td>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분을 분양 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을 신청한 자 중에서 1명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td></tr>
<tr><td rowspan="2">2유형
간결한 문장 쓰기</td><td colspan="2">의료법 제65조</td><td rowspan="2">각 호로 나누어 간결하게 정비함</td></tr>
<tr><td>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td><td>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재교부할 수 없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2. 제1항제2호·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4.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td></tr>
</table>

	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3유형 명확한 문장 쓰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85조		'이의'가 '송달'을 의미하는지 '異議'를 의미하는지 모호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함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송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송달의 비용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유형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능동문으로 정비함
	6. 조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하여 이식되어야 한다는 내용	6. 조직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식해야 한다는 내용	
5유형 한눈에 보이는 문장 쓰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길게 나열된 문장을 계산식으로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임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8.7을 곱한 금액과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16.2를 곱한 금액 및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5.8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8.7) + (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16.2) +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5.8)	
6유형 (1유형 ~ 5유형 외)	건축물관리법 제29조의2		잘못된 별표 번호를 바로잡음
	②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별표 1에 따른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채웠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건축사는 실무수련자의 실무수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실무수련자가 별표 1의2에 따른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를 채웠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이러한 6가지 유형 모두 법령의 문장을 읽기 쉽게 만듦으로써 일반 국민이 해당 법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문장정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법령 자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문장구조를 읽기 쉽게 수정하여도 문해상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9조제2항의 경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검토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안은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관을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보다 간결한 문장으로 보이도록 정리하고 있음.

각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독성과 통일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조문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내용을 함께 찾아보아야 문장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문장을 해당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문장정비 예시① 】

정비 대상	정비안
식품위생법 제9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자료: 법제처

❑ 둘째, 문장구조 정비로 인하여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대한 정비안의 경우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을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 이라고 수정하고 있음.

【 문장정비 예시② 】

정비대상	정비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한 행위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신설 당시 검토보고 등을 통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은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만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정비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및 소관부처의 의견 조회를 통해 수용된 내용이므로 실질적인 법령의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 법제처의 설명과 같이 환자에 관한 것에만 국한되는지는 제3자의 재산상 손해도 포함하는 것인지 문언적으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제처는 문장 정비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의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셋째, 단순히 문장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행정 수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임.

예를 들어,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에 대한 법제처의 문장 정비안을 살펴보면 문장 속의 조사를 바꾸거나 형용사를 추가하는 등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기 위한 경미한 수정을 하고 있음.

【 문장정비 예시③ 】

정비대상	정비안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퇴소 등의 청구 절차) ①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퇴소 등의 청구 절차) ① 정신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퇴소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명령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퇴소명령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사결과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한다.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14.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수익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14.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수익금 등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자료: 법제처

해당 정비대상의 경우 법령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인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정비 활동은 일반 국민이 법령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또한, 법령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단순히 문장구조의 개선만을 위해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으므로,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 개정 시에 문장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요약하면, 법령 자체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문장구조를 읽기 쉽게 수정하여도 문해상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문장구조를 정비하려는 시도로 인해 사실상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있으며, 단순한 문장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입법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연구용역 1억 8,000만원 등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용어정비’에서 ‘문장정비’ 사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 및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행정법제 혁신(1032-302)

가. 결산 개요

❑ 행정법제 혁신(1032-302) 사업은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별법령 정비·분석에 관한 연구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에 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6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행정법제 혁신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법제 혁신	730	730	-	-	730	684	-	46	747
일반수용비	78	78	-	-	78	76	-	2	75
임차료	10	10	-	-	10	10	-	-	10
일반용역비	20	20	-	-	20	20	-	-	20
국내여비	8	8	-	-	8	8	-	-	8
사업추진비	4	4	-	-	4	4	-	-	4
일반연구비			-	-		-	-	-	190
정책연구비	610	610	-	-	610	566	-	44	440

자료: 법제처

나. 입법영향분석 취지에 맞는 연구용역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입법영향분석이란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과 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정비, 정부입법계획반영, 행정기본법 반영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됨.[247)]

❑ 법제처는 2023년 행정법제 혁신 정책연구비 2억 2,000만원으로 3개 과제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음.

【 2023년 입법영향분석 연구과제 】

연번	계약일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계약금액	계약방식
1	2023.3.14.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장애인 등록 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3,636,360원	수의계약
2	2023.3.30.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위생용품 관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52,000,000원	수의계약
3	2023.3.30.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81,818,180원	수의계약

자료: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이 진행한 2건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위생용품 관리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어린이 안전 관리 제

247) 법제처가 2021년 도입한 제도로, 분석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법제처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정비 추진과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개선에 활용하고 있음(2021.9.24. 법제처 보도자료).

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입법배경 및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을 살핀 후 통계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해당 제도의 규범적 적정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입법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있음.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목차 】

제1장 입법영향분석 대상 및 필요성
제1절 어린이놀이시설법 개관
1.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2.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주요 내용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제2장 입법영향분석 범위와 방법 및 주요 쟁점
제1절 분석 범위
1. 시간적 범위
2. 분석 대상 영역 및 주요 쟁점
제2절 분석 방법
1. 활용 자료
2. 분석 방법론

제3장 어린이놀이시설법에 관한 실태조사
제1절 사례 및 판결례 분석
1. 개관
2. 판례 분석
제2절 통계자료 분석
1.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이행 현황
3.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이행 현황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행 현황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6. 어린이놀이시설 행정처분 현황
제3절 일반인식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2. 일반 인식조사 분석
3. 설문조사 분석
제4절 전문가의견 조사·분석

제4장 어린이놀이시설법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제1절 규범적 적성성 분석
1.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체계성 분석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제도의 규범적 적정성
3. 어린이놀이시설 의무보험제도의 규범적 적정성
제2절 효과성 분석
1. 어린이놀이시설법의 효과성
2.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의 적절성
3. 안전관리방안의 효과성
4. 의무보험제도의 효과성

제5장 결론
제1절 규범적 적정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 요약
1. 규범적 적정성 분석 요약
2. 효과성 분석 요약
제2절 입법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1. 어린이놀이시설 개념 및 범위 규정의 입법 개선 방향
2. 관련 법률과의 관계 규정의 입법 개선 방향
3. 안전관리방안 관련 규정의 입법 개선 방향
4. 의무보험제도 관련 규정의 입법 개선 방향

❑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장애인 등록 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장애인 등록제의 구조와 쟁점을 살핀 후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비교법 및 비교사회정책, 장애인 등록제 개편(2019~2022년)의 영향을 장애인 삶의 질 등을 통해 살피고, 장애인 등록제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장애인 등록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목차 】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8

제2장 장애인 등록제의 구조와 쟁점 ····· 21
제1절 장애인 등록제의 형성과 개편 ····· 23
제2절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규범적 분석 ····· 27
제3절 장애인 등록제의 사회정책적 쟁점 ····· 43
제4절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규범 및 법원 판결례 분석 ····· 47

제3장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비교법 및 비교사회정책 분석 ····· 67
제1절 국외 입법례 및 제도 비교 ····· 69
제2절 국내 유사제도 비교 ····· 90

제4장 장애인 등록제 개편(2019~2022년)의 영향 분석 ····· 107
제1절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 ····· 109
제2절 장애인 등록·등급제 인식조사 ····· 126

제5장 장애인 등록제의 중장기 개편 방향 ····· 167
제1절 장애인 등록제 개편 중장기 로드맵 ····· 169
제2절 장애 인정 기준 확대와 예외적 장애 인정 강화 ····· 175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장애인 등록제 개편 방안 ····· 184
제4절 소득·고용 분야 장애인 등록제 개편 방안 ····· 196

❑ 법제처의 입법영향분석 제안요청서에서 해당 과제추진의 취지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현행법상의 장애인 등록제의 개선을 위해 현행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등록제 관련 입법의 영향보다는 장애인 등록제의 순기능와 역기능,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규범 등 일반적인 정책적 쟁점들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법제처가 실시하는 입법영향분석의 취지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임.

❑ 그러나 법제처는 정책연구 평가결과서에서 동 입법영향분석에 대하여 목적에 부합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충실히 계약내용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다만, 팬데믹으로 인한 장애인 활동과 인식 등에 편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실제 입법영향을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추적 연구가 바람직하다는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임.

❑ 법제처는 연구용역 본래 취지인 입법영향분석에 맞는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연구 평가를 엄격히 하고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촉구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를 입법영향분석 체계에 맞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감사원 소관 결산】

(전문위원: 박동찬)

제2장 검토의견

1.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등

가. 개요

□ ‘기본경비(1111-251)’는 감사원, 감사교육원 및 감사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일반수용비 18억 7,2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업무용택시비 명목으로 편성하였고,

○ 업무용택시비 예산현액은 5억 6,000만원*으로,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예산 4억 5,000만원, 이·전용 등 1억 1,000만원

<기본경비 중 업무용택시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기본경비	13,450	13,450	-	430 △308	13,572	13,209	-	363
· 일반수용비 (210-01)	1,872	1,872	-	150 △63	1,958	1,956	-	3
업무용택시비	450	450	-	110	560	567	-	-

* 자료 : 감사원

나. 증액 편성된 업무택시비가 지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 감사원은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500%가 증가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음.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감사원은 업무용택시비 증액은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

<기본경비 중 업무용택시비 편성 목적>

<table>
<tr><th colspan="2">2021년 이전</th><th colspan="2">2022년 이후</th></tr>
<tr><td rowspan="2">원내 근무 직원의
심야시간(23시 이후)
택시 이용</td><td rowspan="2">9,000만원
이하</td><td>원내 근무 직원의
심야시간(23시 이후) 택시 이용</td><td>9,000만원</td></tr>
<tr><td>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위한 소요</td><td>36,000만원</td></tr>
</table>

□ 연도별 업무용택시비의 예산과 집행 실적을 보면 2018년 ~ 2020년의 예산액은 6,300 ~ 6,800만원 수준이었고, 2018년 및 2019년도 집행율은 80~90% 정도였으나,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9,800만원으로 집행율이 155%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후 2021년도는 전년 대비 42.8%인 2,7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율은 107.5%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5배가 증가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

음. 2023년도는 2022년도와 동일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이·전용 등으로 충당한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율은 126%임.

<최근 5년간 업무용택시비 집행 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2023
예산액(A)	6,800	6,600	6,300	9,000	45,000	45,000
집행액(B)	5,630	6,282	9,821	9,675	40,600	56,700
집행률(B/A)	82.8	95.2	155.9	107.5	90.3	126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의 업무용택시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2022회계연도의 예산안 심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감사원은 업무용택시비를 주로 원내 근무 직원의 심야시간(23시 이후) 택시 이용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해 왔고, 그에 따라 동 예산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본경비(1111-251)에 편성해 왔는데, 2022회계연도에 증액한 업무용택시 예산은 감사원이 압축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업무용택시비 지출 목적과 달라 사실상 신규 편성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는 증액한 업무용택시 예산은 그 동안의 업무용택시비 집행 목

적과 다르게 편성된 것임을 재확인하고, 기존의 집행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 목적에 맞추어 감사활동 현지출장 시의 소요에 집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러나 감사원은 업무용택시 사용 내역에 대해 직원들의 구체적인 행선지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며 2023년 업무용택시비 예산 중 심야시간 귀가 지원 등에 2억 8,300만원, 감사활동에 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각각의 총액을 제출하였으나 증액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다. 업무용택시비 예산 증액 전용의 적절성

□ 2023년도 감사원이 집행한 택시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택시비로 편성한 예산 4억 5,0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을 초과집행하였는데 초과집행 사유는 야근 업무 증가 및 택시요금 인상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고,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감사활동경비 내 국내여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전용하였음.

<업무용택시비를 위한 감사활동경비-국내여비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3.11.13.)	감사활동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110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야근 업무 증가 및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업무용택시 예산이 부족

* 자료 : 감사원

□ 전용한 예산 1억 1,000만원은 2023년도 전체 업무용택시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전용 시점이 11월 13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50일 간에 모두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현지출장 및 초과근무 증가 등으로 업무택시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48]은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원내 직원 심야시간(23시 이후) 택시 이용 소요에 따른 예산집행액이 6,200만원 수준이고, 소요가 증가한 2021년도 집행 수준도 9,7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1억 1,000만원을 증액 전용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248)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라. 감사활동 현지출장 시 업무용택시비는 감사활동경비로 편성할 필요

□ 현행 업무용택시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으나, 실질적 으로는 기관의 경상적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원내 직원 심야시간 택시 이용과 감사활동을 위한 현지출장 시 현장조사 등을 위한 택시 이용 비용인바 목적이 서로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2022년도 업무용 택시비 3억 6,000만원 증액은 감사활동 현지출장 시 소요를 반영한 것임.

□ 감사원은 예산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본경비(1111-251)에 편성하고, 감사활동에 전속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감사활동경비로 구분하는 등 (1131-303) 별도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집행하여야 하므로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경우 기본경비와는 구분된 감사활동경비(1131-303)에 편성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3년도 기본경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 예산액
	본예산
·기본경비(1111-251)	13,450
- 상용임금(110-03)	3,759
- 일용임금(110-04)	83
- 일반수용비(210-01)	1,87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93
- 피복비(210-03)	29
- 급식비(210-04)	15
- 특근매식비(210-05)	261
- 일·숙직비(210-06)	49
- 임차료(210-07)	1,262
- 유류비(210-08)	34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43
- 재료비(210-011)	17
- 복리후생비(210-012)	1,097
- 일반용역비(210-014)	14
- 관리용역비(210-015)	77
- 기타운영비(210-016)	496
- 국내여비(220-01)	184
- 국외교육여비(220-03)	3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12
- 직책수행경비(250-02)	1,239
- 특정업무경비(250-03)	41
- 일반연구비(260-01)	71
- 포상금(310-03)	104
- 고용부담금(320-09)	508
- 자산취득비(430-01)	149
합 계	13,450

* 자료 : 감사원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 예산액
	본예산
· 감사활동경비(1131-303)	17,078
- 일반수용비(210-01)	1,75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 국내여비(220-01)	5,816
- 국외업무여비(220-02)	492
- 국외교육여비(220-03)	60
- 특수활동비(230-00)	1,51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04
- 특정업무경비(250-03)	4,616
- 일반연구비(260-01)	1,900
- 포상금(310-03)	268
- 자산취득비(430-01)	20
합 계	17,078

□ 현재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경비와 감사활동경비는 단위 사업을 구분하여 그 비목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에는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예산이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249]되어 있는바, 이는 현장출장 소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임.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는 현장출장 감사반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것으로, 업무용택시비 중 현장출장 택시비와 그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감사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업무용택시비를 감사활동경비 단위사업(1131-303)의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49) <감사활동경비-일반수용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내 역	예산액
.감사활동경비(1131-303)	17,078,000
일반수용비(210-01)	1,752,274
1. 감사백서 등 발간비	278,300
2. 정책자문위원회 등 회의경비	143,000
3. 자체감사활동 지원·개선 실무협의 등	90,000
4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603,000
5.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350,574**
6. 감사지원 정부청사연락사무소 운영비	43,200
7.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	149,400
8. 명예민원상담관 활동비	94,800

* 자료 : 감사원

2.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 예산 편성 및 집행 불일치 해소 필요

가. 개요

□ ‘기본경비(1111-251)’는 감사원, 감사교육원 및 감사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

감사원은 기본경비 중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여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 업무용택시비, 교육초빙강사료 등을 위하여 2023년도에 1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 예산현액은 19억 5,800만원*으로, 19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본예산 18억 7,200만원, 이·전용 등 8,700만원 (1억 5,000만원, △6,300만원 전용)

<기본경비-일반수용비(210-01) 편성 및 내역>

(단위 : 천원)

일반수용비 (210-01)	2023 예산액	2023 집행액
	1,871,663	1,955,444
1. 운영지원과(업무용택시 제외)	408,325	566,056
·업무용택시	450,000	567,000
2. 인사혁신과	64,220	104,164
3. 대변인실	130,356	115,744
4. 감찰관실	2,500	2,500
5. 심의실	42,820	56,707

일반수용비 (210-01)	2023 예산액	2023 집행액
	1,871,663	1,955,444
6. 심사관리관실	5,000	5,000
7. 기획조정실	22,000	19,221
8. 디지털감사지원관	5,000	1,412
9.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82,250	87,644
10. 감사교육원	513,962	390,252
11. 감사연구원	12,000	11,996
12. 의무실 의약품비	18,600	19,813
12. 자체교육강사료	1,500	370
13. 직원 정신건강 관리	13,200	7,565

* 자료: 2023년도 각목명세서 재구성

□ 2023년도 기본경비(1111-251) 일반수용비 18억 7,200만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지원과와 감사교육원이 각각 8억 5,800만원, 5억 1,400만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1억 8,200만원, 대변인실 1억 3,000만원 순임.

나.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불일치 해소 필요

□ 2023년도 기본경비(1111-251) 일반수용비 중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경우 예산액은 1억 8,200만원이나 집행은 8,800만원에 불과하였음.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액 1억 3,5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밖의 연도는 집행율이 모두 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런데 감사원은 각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제 집행액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심지어 2022년도에는 40%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기본경비-일반수용비(210-01) 중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예산액	125,000	114,000	135,000	182,250	182,250
	집행액	36,153	32,931	79,418	87,429	87,644
	집행잔액	88,847	81,069	55,582	94,821	94,606

* 자료: 감사원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1131-303) 일반수용비 중에 현장출장 감사반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해당 예산은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구입, 대상기관 감사장 사용에 따른 차대비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는 감사활동경비(1131-303) 일반수용비로 필요한 수요를 이미 상당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기본경비(1111-251)에 편성되어 있는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기본경비(1111-251) 중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수요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과 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감사활동경비 -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 :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가. 개요

□ ‘감사활동경비(1131-303)’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직무감찰 및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70억 7,800만원으로, 그 중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가 각각 58억 1,600만원, 4억 9,2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예산의 3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특정업무경비는 27%에 해당하는 46억 1,600만원, 일반연구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19억, 15억 1,900만원임.

○ 감사활동경비 예산현액은 167억 4,700만원*으로, 158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예산 170억 7,800만원, 이·전용 등 △5억 1,400만원, 이월(8,800만원, △1억 2,400만원)

<감사활동경비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감사활동경비	17,078	17,078	88	95 △514	16,747	15,966	16,659	15,878	124	657
· 국내여비 (220-01)	5,816	5,816	-	△258	5,558	5,332	5,558	5,332	-	226
· 국외업무여비 (220-02)	492	492	-	31 △93	430	428	430	428	-	2
· 국외교육여비 (220-03)	60	60	-	63	123	122	123	122	-	1

* 자료 : 감사원

나. 감사활동경비 -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 감사원은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1131-303) 중 여비 예산을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여비 2억 5,800만원을 각각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 및 기본경비의 업무용택시비로 전용하였고, 국외업무여비 9,200만원을 다른 사업의 국외업무(교육)여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 등을 하였음.

□ 감사원은 2023년도 코로나19 완화 이후 국제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료 인상 등으로 추가 집행요인이 발생하여 “감사활동경비”의 국외업무여비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의 국외업무여비로 60백만원 전용,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외출장 예산

부족으로 “감사활동경비” 국내여비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로 55백만원을 전용하였다는 설명임.

<최근 5년간 감사활동경비-국내여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9,003	-	-	-	9,003	8,918	-	85	99.1
2020	9,003	△1,600	-	-	7,403	5,356	-	2,047	72.3
2021	8,726	-	-	-	8,726	3,881	-	4,845	44.5
2022	6,981	△554	-	△300	6,127	4,252	-	1,875	69.4
2023	5,816		-	△258	5,558	5,332	-	226	95.9

* 자료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의 여비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로 1억 4,700만원을 전용하였는바, 이는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 8억 2,2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에서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상당한 비중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효과를 갖는 측면이 있음.

○ 특히, 감사원은 2023년도 당초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국외교육여비[250] 에 100%를 초과하는 6,200만원을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국내여비(220-01)에서 세목조정하여 증액하였는바 감사활동경비의 국

250) <2022/2023 감사활동경비-국외교육여비(220-03)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세목조정)	예비비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42,000	42,000	-	27,585	-	69,585	70,261	-	
2023	60,000	60,000	-	62,962	-	122,962	121,589	-	

* 자료 : 감사원

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집행 방식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은 향후 이와 같은 방식의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감사활동경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	**전용** (6.9.)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외 업무여비 (220-02)	60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 업무여비 (220-02)	코로나19 완화 이후 국제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료 인상 등으로 예산보다 추가 집행요인 발생
	세목 조정 (8.28.)		국내여비 (220-01)	30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외 교육여비 (220-03)	캐나다 감사책임성재단 성과감사 교육인원의 확대로 교육훈련비 추가소요 발생 및 환율상승 등 영향으로 국외교육여비 예산 부족
			국외 업무여비 (220-02)	32			
	전용 (10. 18)		국내여비 (220-01)	55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 업무여비 (220-02)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코로나 이후 숙박비, 항공임 등 상승으로 인하여 상반기 감사출장 여비 추가 집행 발생. 이에 4분기에 예정된 국외출장 관련하여 소요 예상액이 잔여 예산을 초과하여 전용
	세목 조정 (10.19.)		국내여비 (220-01)	31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외 업무여비 (220-02	ODA 감사 관련 국외업무여비 예산 부족
	전용 (11. 13)		국내여비 (220-01)	110	기본경비 (1111-251)	일반수용비 (210-01)	야근 업무 증가 및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업무용 택시 예산 부족
	전용 (11. 13)		국내여비 (220-01)	32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 업무여비 (220-02)	유엔공업개발기구 외부감사관 입후보와 관련하여 회원국 대상 지지교섭 출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 예산 부족

(단위: 백만원)

구 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2	전용 (7.19.)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내여비 (220-01)	300	전산운영 경비 (1134-309)	일반연구비 (260-01)	ISP 수립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업체들의 참여 유도 및 추가 과업 수행
	세목 조정 (9.6.)		국외업무 여비 (220-02)	29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국외 교육여비 (220-03)	감사책임성재단 단기훈련 과정 관련 교육과정 확대 등으로 예산 부족
	전용 (10.21.)		국외 업무여비 (220-02)	50	국제교류 협력강화 (1135-322)	국외 업무여비 (220-02)	ICC 외부감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확보 필요

* 자료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1031-303) 국내여비가 2019년 90억 3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2023년도 58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여전히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다른 세부사업 등의 국외여비 등으로 전용 등을 하여 집행하는 상황임을 볼 때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여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5년간 감사활동경비-국내여비 예산 및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9,003	-	-	9,003	8,918	85	99.1
2020	9,003	△1,600	-	7,403	5,356	2,047	72.3
2021	8,726	-	-	8,726	3,881	4,845	44.5
2022	6,981	△554	△300	6,127	4,252	1,875	69.4
2023	5,816		△258	5,558	5,332	226	95.9

* 자료 : 감사원

4. 감사활동경비 :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가. 개요

□ ‘감사활동경비(1131-303)’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감사활동경비 예산현액은 167억 4,700만원*으로, 159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본예산 170억 7,800만원, 전년도 이월(8,800만원) 및 이·전용 등(△4억 1,900만원)

<감사활동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활동 경비	17,078	17,078	88	△419	16,747	15,966	124	657

* 자료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 예산은 그 규모 순으로 보면 여비(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외교육여비) 63억 6,700만원, 특정업무경비 46억 1,600만원, 일반연구비 19억, 일반수용비 17억 5,200만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 예산액
	본예산
○ 감사활동경비(1131-303)	17,078
·일반수용비(210-01)	1,75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 국내여비(220-01)	5,816
· 국외업무여비(220-02)	492
· 국외교육여비(220-03)	60
· 특수활동비(230-00)	1,51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04
· 특정업무경비(250-03)	4,616
· 일반연구비(260-01)	1,900
· 포상금(310-03)	268
· 자산취득비(430-01)	20

* 자료 : 감사원

□ 감사활동경비 예산 중 국내여비의 세부배정 내역을 보면 국민제안감사활동에 12억 1,100만원을 배정하고 있음.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국내여비(220-01)	5,815,595
1. 결산검사 활동	97,210
2. 성과감사 활동	1,476,785
3. 기관정기감사 활동	1,809,072
4. 특정사안감사활동	626,344
5. 국민제안감사활동	**1,211,196**
6. 민원 직접처리	337,360
8. 심사관리관실	42,515
9. 심의실	22,678
10. 기획조정실	26,816

* 자료 : 감사원

□ 2023년도 감사활동경비 중 국민제안감사와 관련된 예산은 12억 5,600만원이고, 그중 국내여비가 12억 1,100만원으로 97%에 해당하고, 그 외 국민감사청구위원회 회의경비 등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총 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감사청구 관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내역(비목)	2023년	
		예산액	집행액
감사활동 경비 (1131-303)	감사청구 관련 위원회 회의경비(210-01)	18	25
	국민제안감사활동 국내여비(220-01)	1,211	478
	감사청구 관련 위원회 오찬경비(240-02)	3	-
	감사청구제기 우수자(310-03)	24	24
	계	1,256	527

* 자료 : 감사원

□ 2023년도 감사원의 감사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실지감사 136건을 하였고, 그 중 국민제안감사는 61건임.

<2023년도 감사활동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결산검사	기관정기감사	성과감사	특정사안감사	국민제안감사
감사사항 수	136	3	35 (50개 기관)	17	20	61[1]

1) 감사착수 건수

* 자료 : 감사원

□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72조제1항[251]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의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감사청구 심사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감사청구 개요>

구 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근거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
도입연도	·2002년	·1996년
청구인	·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 국민

25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 감사대상기관의 장 · 지방의회 · 국무총리
청구대상	·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기간	· 제한 없음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기관	· 감사원 * 국회 · 법원 · 선관위 ·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기관에 청구	· 감사원

* 자료 : 감사원

□ 최근 5년간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하게 된 국민제안감사를 살펴보면 2020년 및 2021년도 각각 39건, 32건에 비하여 2022년 및 2023년도에는 각각 73건, 6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감사청구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결산검사	기관정기감사	성과감사	특정사안감사	국민제안감사
2019	감사사항 수	169	3[1]	37 (43개 기관)	16	113[2]	
2020	감사사항 수	135	1	35 (50개 기관)	33	27	39
2021	감사사항 수	128	2	38 (74개 기관)	38	18	32
2022	감사사항 수	143	3	34 (82개 기관)	20	13	73
2023	감사사항 수	136	3	35 (50개 기관)	17	20	61[3]

1) 2019년 당시 "재무감사"
2) 2019년까지는 국민제안감사가 특정감사에 포함되어 집계
3) 감사착수 건수 * 자료 : 감사원

나. 감사청구의 감사실시 결정 기간 및 감사종료 기간 단축 방안 등 마련 필요

□ 2023년도 접수된(이월 포함)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는 각각 34건, 217건으로 총 25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3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74건은 감사중이거나 감사실시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기각·각하 여부를, 공익감사청구는 부서장의 결재로 진행함.

<2023년도 감사청구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수 (이월 포함)	처리 완료				처리 중
		감사 실시	감사 미실시			
			기각	각하	취하	
국민감사청구	34	4	18	3	1	8
공익감사청구	217	35	83	27	6*	66
계	251	39	101	30	7	74

* 이첩사항 1건 포함, * 자료 : 감사원

□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 기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252]에

2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제1항[253]에 따라 감사청구의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임.

구 분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근거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
처리기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 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결정하는 것이 원칙 · 실지감사 실시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감사 종료

* 자료 : 감사원

□ 최근 5년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법정기한인 30일(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결정 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법정기한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감사청구 평균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간>

(단위 : 일)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민감사청구	40.3	82.1	84.1	48.8	70.3
공익감사청구	66.9	66.9	69.0	55.6	63.7

* 자료 : 감사원

□ 그리고 최근 3년간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감사실시

253)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
제16조(감사실시 여부의 결정기간) ①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이하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보완 기간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정비율이 평균적으로 30% 미만이고, 2023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감사청구 186건(국민 24, 공익162) 중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은 52건(국민 2, 공익 50)이며, 이 중 31%인 16건만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국민·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결정비율>

(단위 : 건, %)

구 분	연 도	접 수	처리 완료					처리 중		감사실시 결정비율 [(B+D)/(B+C+D)]
			소 계 (A)	감사실시 (B)	기각 (C)	각하	취하 등	감사중 (D)	검토 중	
국민감사청구	'21년	28	28	5	18	-	5	-	-	21.7
	'22년	39	37	5	30	1	1	2	-	18.9
	'23년	**24**	**22**	**-**	**17**	**3**	**2**	**2**	**-**	**10.5**
공익감사청구	'21년	188	188	51	111	19	7	-	-	31.5
	'22년	144	143	44	73	17	9	1	-	38.1
	'23년	**162**	**125**	**16**	**82**	**23**	**4**	**34**	**3**	**37.9**

* 자료 : 감사원

□ 2023년도 국민제안감사청구 중 공익감사청구가 감사 실시완료 16건, 처리 중 37건으로 감사실시 결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감사수요와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완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다만, 2023년도 접수된 공익감사청구사항 중 감사실시를 완료한

감사청구의 평균 감사처리 기간은 135.4일이나, 훈령 상 처리 기간은 6개월로 되어있는 점을 보면, 당초 훈령상 처리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처리기간과 향후 감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제24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제8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감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적극행정 지원 :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가. 개요

□ ‘적극행정 지원(1131-304)’은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예산현액은 3억 4,100만원으로, 이 중 3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적극행정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적극행정 지원	341	341	-	-	341	316	-	25

* 자료 : 감사원

나.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감사원의 변상 판정이나 징계·시정 등의 처분 요구, 개선 등의 권고·통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 등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음(「감사원법」 제36조[254]).[255]

254) 제36조(재심의 청구) ① 제31조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

○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사업 국내여비 예산 항목에 사실관계 확인 등 재심의 청구 처리에 필요한 추가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데[256], 2023년 재심의 처리 관련 국내여비 예산은 1,400만원임.

□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심의 청구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제38조제3항[257]).

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 요구나 권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의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審理)하고 판정한다.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개선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권고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5) 참고로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재심의 청구 안내, 재심의 결정례 등을 제공하고 있음(https://www.bai.go.kr/bai/exClaims/reExClaims/info).

256) 2024년도 예산부터 ‘적극행정 지원’ 사업 내 재심의 관련 예산을 ‘감사활동경비(1131-303)’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함.

257) 제38조(재심의 청구의 처리) ③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처리 건수 중 법정기한(2개월 이내)을 준수하여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최대 18.7%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매년 80% 이상의 재심의 청구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처리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현황>

(단위: 건, %, 일)

연도	전체 처리 건수	기한 준수 처리 건수 (2개월 이내)	기한 경과 처리 건수		평균 처리기간
			2개월~1년	1년 초과	
2019	32 (100.0)	6 (18.7)	17(53.2)	9(28.1)	231
			26(81.3)		
2020	48 (100.0)	5 (10.4)	36(75.0)	7(14.6)	213
			43(89.6)		
2021	46 (100.0)	4 (8.7)	18(39.1)	24(52.2)	294
			42(91.3)		
2022	22 (100.0)	2 (9.1)	9(40.9)	11(50.0)	325
			20(90.9)		
2023	53 (100.0)	2 (3.8)	18(33.9)	33(62.3)	474
			51(96.2)		

* 자료 : 감사원

□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국회는 예결산심사 과정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여 왔고[258], 이에 감사원은 2018년 2월 재심의 청구 처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9년 재심의 청구 처리 시 먼저 청구된 재심의 청구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며 2023년 2월 단순한 사안의 경우 서면의결이

258) 법제사법위원회 2021년 결산예비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및 2024년 예산검토보고,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및 2021년 결산분석보고 등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재심의 청구 처리의 법정기한 준수 비율은 3.8%로, 최근 5년간 기한 준수 비율 중 최저치에 머물렀고, 1년 초과 처리 비율(62.3%) 및 평균 처리기간(474일) 역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해 재심의 청구가 가장 지연되어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음.

□ 재심의의 특성상 신중히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법정기한을 도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심의 청구의 신중한 처리 못지않게 신속한 권리구제 역시 중요하고, 「감사원법」에서 재심의 청구의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재심의 청구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처리되는 재심의 청구의 비율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재심의 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이 474일로, 1년을 훌쩍 넘어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6.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 욕실 환경개선 공사 및 감사인력풀제 시설 개설공사 관련

가. 개요

□ ‘노후시설 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01-151)’는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시설물의 수명 연장 및 설비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고, 감사활동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예산현액 45억 1,400만원 중 34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4,546	4,546	-	729 △761	4,514	3,411	930	173
·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2,014	2,014	-	289 △226	2,077	1,497	542	38
· 감사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261	261	-	3	264	264	-	-
·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523	523	-	-	523	328	156	39
·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648	648	-	7	655	389	232	35
·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1,100	1,100	-	430 △535	995	934	-	61

* 자료 : 감사원

나.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는 내역사업인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의 내내역사업으로, 감사교육원의 남녀 공동욕실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임.

○ 2023년 예산으로 1억 5,412만원을 편성하였음.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세출예산 요구내역>

(단위: 천원)

내 역	요 구 액
계	154,742
실시설계비(420-02)	11,476
공사비(420-03)	139,070
감리비(420-04)	2,573
시설부대비(420-05)	1,623

* 자료 : 감사원

(1)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 감사교육원은 2023년 상반기에는 남자 욕실에 한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2023.6.)하였으나 하반기에 철거 부분 및 여자 욕실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을 추진(2023.10.) 후 다른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남녀 공용욕실 환경개선 공사를 발주하였고, 내역조정[259]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비는 2,354만원, 시설부대비는 355만원을 세출예산 현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하고, 공사비는 2억 3,232만원 전액을 차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음.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세출예산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천원)

내 역	세출예산	집행액	초과집행액	사고이월액
시설계비 (420-02)	11,476	23,540	12,064	-
공사비 (420-03)	139,070	-	-	232,319
시설부대비 (420-05)	1,623	3,553	1,930	-

* 자료 : 감사원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259) 기계실 MCC 판넬교체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

○ 감사교육원은 2023. 6. 20. 남자 욕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의계약을 통하여 실시(이하 '1차 실시설계'라 한다)하였으나, "철거 부분 및 여자 욕실에 대한 추가 설계용역을 추진 후 자동제어 공사 등의 예산집행 절감액 등을 활용하여 공사를 발주하고자 함"[260]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2023.10. 1차 실시설계를 진행한 업체와 추가 실시설계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이하 '2차 실시설계'라 한다)하였으며, 남성욕실 철거 및 여성욕실에 대한 2차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음.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설계용역공사 수의계약 현황>

(단위: 원)

계약건명	계약기간	발주금액 (제안요청서)	낙찰액 (계약금액)	계약 업체 (대표자)	집행과목	수의계약 사유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설계용역	23. 5. 15. ~ 23. 6. 13.	11,440,000	11,440,000	T건축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저가)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설계용역	23. 10. 20. ~ 23. 11. 19.	12,100,000	12,100,000	T건축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저가)

* 자료 : 감사원

260)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설계용역(추가) 추진 계획보고(2023.10.)」, 감사원 제출자료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당초 사업 물량을 초과한 실시설계가 이뤄진 사례가 없어 관련 지침 숙지가 미비했으며 향후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으나, 기계실 MCC 판넬교체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여자 공동욕실에 대한 추가 설계 및 공사 입찰을 진행한 것은 당초 사업 목적인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과 남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달리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남자 욕실 공사에 관한 예산만 반영되었고 감사교육원은 편성된 예산 외의 범위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과다한 공사비 사고이월 지양 필요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의 금액(재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 등의 금액은 예외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261].

261)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감사교육원은 2023. 11. 2차 실시설계 완료 후 2023. 12. 1. 조달청에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공사” 시설 발주계획을 등록하였고, 2023. 12. 4. ~ 2023. 12. 11.의 기간 동안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긴급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 2023. 12.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를 연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비 2억 3,232만원 전액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 감사교육원은 2차 설계용역이 종료되고 2023년 예산에 편성된 교육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 공사의 내내역사업인 ‘공기조화기 등 교체’의 공사비 집행 잔액 1억 1,178만원[262]을 감사교육원 남녀공동욕실 환경개선 사업에 이전하여 집행할 수 있는 연말이 도래할 때까지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설계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62) 총 공사비 217,768천원 중 105,988천원(약 48.7%)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임.

공사 자금을 연말이 되어서야 확보하는 등 동사업은 계획과 집행이 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한 측면이 크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비 전액을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과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부대비(420-05)는 공공요금, 수용비, 공사감독관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음.

○ 감사교육원은 시설부대비(420-05)를 사용하여 공동욕실 탈의실에서 사용할 용도로 인조라탄 재질의 벤치 테이블 3개, 라운드 스툴 테이블 3개를 총 3,553,000원에 구입하였음.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탈의실 벤치 구매 견적>

(단위: 원)

품 목 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브리스톨 벤치 테이블 1500 -화이트워시(150cm*46cm*43cm)	1	623,000	623,000
브리스톨 벤치 테이블 1800 -화이트워시(180cm*46cm*43cm)	1	750,000	750,000
브리스톨 벤치 테이블 1800 -다크브론즈(180cm*46cm*43cm)	1	750,000	750,000
맨하탄 라운드 스툴 테이블 600-앤틱허니(Dia.60*39)	1	353,000	353,000
맨하탄 라운드 스툴 테이블 600-앤틱허니(Dia.60*39)	1	353,000	353,000
맨하탄 라운드 스툴 테이블 750-앤틱허니(Dia.75*34)	1	420,000	420,000
D/C 적용 및 화물배송비	-	△19,000	△19,000
부가가치세	-	323,000	323,000
계	6	3,553,000	3,553,000

* 자료 : 감사원 제출자료를 재구성

○ 그러나 탈의실 벤치 구입비는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산 항목에 부합하는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감사 인력풀제 시설 개선공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집행 중 사업 목적 변경 지양 필요

□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는 감사역량 최대화 및 감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감사 인력풀(pool)제에 따른 시설 개선 공사을 목적으로 하는 세사업임.

○ 감사원은 당초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11억원(일반수용비 1억 1,700만원, 설계비 6,200만원, 공사비 9억 1,300만원, 감리비 1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감사원은 당초 3개 건물의 11개 층[263](50개과)에 대하여 공사

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집행 도중 공사 대상층을 본관 7층, 8층 두 개 층(8개과)으로 축소하였음.

○ 그 결과 감사원은 당초 공사예정대상 11개 층 중 2개 층(약 20%) 공사에 편성된 예산의 약 85%인 9억 3,400만원(일반수용비 7,300만원, 설계비 3,100만원, 공사비 4억 4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었음.

○ 한편, 감사원은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에 21억 4,300만원(일반수용비 1억 5,800만원, 실시설계비 8,600만원, 공사비 15억 700만원, 감리비 2,6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음.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4년 예산액
	당초	추경							
○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1,100	1,100	-	△430 535	995	934	-	61	2,143
· 일반수용비(210-01)	117	117	-	△32	85	73	-	13	158
· 실시설계비(420-02)	62	62	-		62	31	-	31	86
· 공사비(420-03)	913	913	-	△503	410	404	-	6	1,507
· 감리비(420-04)	1	1	-	-	1	-	-	1	26
· 시설부대비(420-05)	7	7	-	-	7	-	-	7	10
· 자산취득비(430-01)	-	-	-	430	430	426	-	4	356

263) 본관: 4층·5층·6층·7층·8층(5개 층), 제2별관: 1층·2층(2개 층), 제4별관 1층·2층·3층4층(4개 층)

□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개요 및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264].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관련 개요>

① 공사 목적 : 감사역량 최대화 및 감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감사 인력풀(pool)제에 따른 시설 개선 공사

② 공사 취지 :
現 과별 사무실을 칸막이로 구분하여 고정 감사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유연한 감사반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 국별 사용 가능한 공용비품을 과마다 구비함으로써 사무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 →
新 사무실 칸막이를 해체하여 국별로 개인별 지정 좌석을 없애고 감사인력을 통합·배치하여 감사사항별 필요인력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확보되는 공간에 회의실 등 공용공간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③ 사무공간 개선 대상 : 본관 4개층(4~8층, 면적: 4,899.35㎡), 제2별관 2개층(1~2층, 면적: 1,993.6), 제4별관 4개층(1~4층, 면적: 3,093.29㎡)을 합한 총 11개층 9,986.24㎡, 50개과

④ 공사 일정 : 1월 실시설계 → 2~3월 개선공사 및 사무실 배치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편집)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내 역	산출 근거	금 액
일반수용비 (210-01)	사무집기 이동배치 등 이사용역비	2,600,000원*50개과*0.9	117
실시설계비 (420-02)	기존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재배치 등 시설 개선공사 설계비	967,000,000원*6.78%*0.945	62.2
공사비 (420-03)	기존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재배치 등 시설 개선공사비	96,800원*9,986㎡*0.945	913.5
감리비 (420-04)	기존사무실 칸막이 철거 및 재배치 등 시설 개선공사 감리비	495,000원*1식	0.5
시설부대비 (420-05)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967,000,000원*0.74*0.945	6.8
계			1,100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64)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편집하여 「202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게재한 것임.

□ <‘감사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 관련 개요>에 수록된 공사 계획에 의하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는 1월 중에 실시하고 2~3월간 3개 건물 11개 층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사무실 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그러나 감사원은 5월이 될 때까지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5월에 이루어진 내부검토에서 공사 명칭인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개선공사’를 ‘감사인력 운용개선 시범사업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으로 변경하면서, 개선 내용에 예산편성의 목적인 ‘사무실간 칸막이 철거 및 각 층별 공용공간 신설’ 외에 노후 시설 개보수의 성격을 지닌 ‘내부 인테리어(사무실 바닥 교체와 벽체 도장 공사 등)’와 자산 취득의 성격을 지닌 ‘가구·의자 교체’를 추가하였음.

□ 결국 감사원은 23년도 실시설계는 3주간(23. 5. 29. ~ 23. 6. 16.)에 본청 7층 및 8층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나머지 감사부서에 대하여는 2024년에 예산을 확보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실시설계비 총액 약 6,200만원의 약 50%인 약 3,1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3년 초 본청의 도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사무실 가구 배치를 진행한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가구를 그대로 배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예산 편성 당시 사무실 간 칸막이만 철거하여 통합사무실을 구성하는 공사를 계획하였으나 내부 칸막이를 철거하고 장기간 배치되어 있던 사무용

가구 등을 이동하게 되면 노후된 사무실 바닥 및 벽체 손상 부위가 드러나게 되므로 최소 규모로 바닥재 교체와 벽체 도장공사를 포함하여 진행함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실시설계비 또한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함께 증가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인력풀제 공사와 노후된 감사원 본원의 시설 등을 수리하는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는 그 취지와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가하였더라도 예산 편성 당시에 없었던 공사의 규모가 총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면에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가 인력풀제 공사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인력풀제 시행을 위한 개선 공사 명목으로 당초 예산 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던 다수의 가구·의자 등 물품을 구매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감사원은 남은 9개 층에 대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4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공사 범위를 일부 변경하였는바[265], 향후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불요불급한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65) 감사원에 따르면, 24년 예산 편성 이후인 24. 2. 19. '기획조정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본관 4층은 풀링제 전면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 대상층을 총 11개 층에서 총 10개 층으로 축소하였음.

7.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가. 개요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업무포털시스템(OASYS),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사이버보안센터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사무용 전산기기를 최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예산현액 89억 8,500만원 중 8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505	7,505	1,480	△9	8,985	8,757	55	173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운영	1,810	1,810	-	△7	1,803	1,768	-	35
·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	2,290	2,290	123	△2	2,411	2,323	-	88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469	2,469	1,357	2	3,828	3,760	55	13
· 사이버보안센터 구축·운영	936	936	-	7	943	906	-	37

* 자료 : 감사원

나. 포렌식 유지관리 및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 전액 불용처리: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은 감사원의 업무포털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사업으로, 구축·운영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현액 3억 7,300만원 중 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음.

○ 불용액 4,500만원 중 4,200만원은 내내역 사업인 “포렌식 유지관리 및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액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음.

<OASYS 구축·운영 시설장비유지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비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OASYS 구축·운영	시설장비유지비 (260-01)	373	328	-	45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은 “강화된 포렌식 절차 이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라는 사업 목적으로 2022. 11. 2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관련 포렌식 장비(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고, 2023년 예산 편성시 2022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상용 SW 유지관리 등급별 서비스 수준 및 적용요율)에 근거하여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42,405,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260-01)에 반영하였음.

<포렌식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산출근거>

(단위: 원)

구 분	기 능	수 량	도입단가(원)	유지보수 요율(%)	유지보수 금액(원)
모바일 포렌식	증거 수집 장비	1	38,800,000	18	6,984,000
	증거 분석 프로그램	1	78,000,000	18	14,040,000
컴퓨터 포렌식	MD-HWP	2	42,000,000	16	6,720,000
	Detego	1	5,500,000	14	770,000
	EnCase	2	14,000,000	14	1,960,000
	X-way	2	7,200,000	14	1,008,000
	DFAS	2	32,000,000	16	5,120,000
	Intella Pro	2	23,000,000	14	3,220,000
	AXIOM	2	17,600,000	14	2,464,000
	R-Studio	1	500,000	14	70,000
	Vm-ware	1	350,000	14	49,000
	합계	17	258,950,000		42,405,000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은 당초 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절차에 편성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S/W 사용권 갱신 및 노트북 등 장비 구매가 반드시 필요(사용권 만료 S/W 및 장비 미사용 시 업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산취득비(430-01목)”로 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3. 10. “착오로 잘못 편성된 비목에 대하여 전용 승인한 전례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감사원은 42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음.

○ 감사원은 이러한 불용처리에 대하여, 포렌식 유지관리 비용은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SW 갱신비용으로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2023년 편성 당시에는 포렌식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갱신 비용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으로 판단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잘못 편성한 것이며, 불용처리로 갱신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포렌식 관련 SW는 사용 라이센스의 만료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함.

<만료 후 사용불가 라이센스>

구 분	품목명	수량	만료일자	용도
복구SW	EaseUS	2	23. 12. 19.	· 파일복구, 검색 등 종합적인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SW
검색 S/W	dtSearch Desktop	1	23. 12. 8.	· 문서파일명 또는 문서 내용을 검색하는 SW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재구성

□ 감사원은 갱신형 라이센스에 필수적인 SW갱신에 관한 비용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잘못 편성하여 사실상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이에 따라 SW 갱신을 하지 못하여 복구 SW 및 검색 SW(EaseUS, dtSearch Desktop)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파일복구, 검색 복구 등 종합적인 복구 기능 지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향후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항목을 올바르게 편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 국제교류협력강화 : 사업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가. 개요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는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266], 등 국제감사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참석 및 외국 감사원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에는 예산액 8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용 증액 3억 8,300만원 및 전용 감액 2억 400만원을 반영한 예산 현액은 10억 100만원으로, 이 중 9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제교류협력강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제교류협력강화	822	822	-	383 △204	1,001	988	-	13
· 세계감사원장회의 관련 교류	180	180	-	187 △158	209	202	-	7
· 국제감사기구 회원국 회비 등	108	108	-	-	108	108	-	-
· 기타 국제교류	144	144	-	88 △11	221	221	-	-
· 기타 제경비	64	64	-	△25	39	37	-	2
· ICC 외부 회계감사	259	259	-	76	326	322	-	4

266)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 각국의 최고감사기구 상호간의 감사관련 지식·정보·경험의 교환을 장려함으로써 감사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2019년 8월 기준 가입회원국 수는 194개국이고 별도의 본부없이 의장국이 3년마다 선출됨. 주요활동으로 공공회계감사 분야에서의 의견과 경험 교환을 위한 회의 및 세미나 개최와 회계감사 등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활성화 및 연구보고서·논문 발간을 들 수 있음. 매년 이사국이 참석하는 이사회와 3년마다 전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함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행				△9				
· 네덜란드대사관 주재관 파견	67	67	-	32 △1	98	98	-	-

* 자료 : 감사원

나. 사업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 아시아감사원장회의(이하 “ASOSAI”[267]는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의 아시아 지역기구로서 아시아 지역 내 최고감사기구 간 협력과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79년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차 총회 후 설립되었는바, 이사회는 매년, 총회는 3년마다 개최하고 있음.

○ 감사원은 1979년 5월 ASOSAI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총 3회[268]에 걸쳐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2년 5월 개최된 제58차 ASOSAI 이사회에서 한국이 차기 이사회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감사원은 2023년 9월 19일 부산에서 “제59차 ASOSAI 이사회”를 개최함.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개요>

일 시	2023. 9. 19.(화) ~ 2023. 9. 22.(금)(4일간)
장 소	파크하얏트부산
참석자	· 이사국, 참관국 등 16개국 및 2개 기관 99명(동반자 8명 포함) - 의장국/사무총장국: 태국 / 중국

267) Asian Organis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 회원국 간 감사분야에서 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해 세미나회의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며 환경감사 워킹그룹, 지속가능개발목표 워킹그룹, 위기관리감사 워킹그룹(WGCMA) 활동을 함

268) 1982년 ASOSAI 제2차 총회 및 제4·5차 이사회, 1990년 6월 제15차 이사회, 2001년 10월 제30차 이사회

	- 이사국/감사국: 한국, 인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러시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 참관국/참관기관: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 INTOSAI 개발기구, INTOSAI 저널
주 요 일 정	·9. 19.(화): 역량개발위원회 사전회의 ·9. 20.(수): 역량개발위원회 회의, 전략계획·규정개정 TF, 환영만찬 ·9. 21.(목): 이사회 1차 회의, 의장국(태국) 주최 만찬 ·9. 22.(금): 이사회 2차 회의, 문화행사, 사무총장국(중국) 주최 만찬

* 자료 : 감사원

□ 감사원은 2023년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사업을 위해 총 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용 등을 통해 부족분 1억 2,400만원을 충당하였고 예산현액 1억 9,000만원 중 1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는바, 비목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관련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 목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내역
일반수용비 (210-01)	14,000	Δ13,000	1,000	947	·사무용품 구매 등
임차료 (210-07)	43,500	Δ43,500	-	-	
일반용역비 (210-14)	-	**170,000**	**170,000**	**168,800**	·행사대행용역 ·수송차량 추가임차 ·통역장비등 추가임차 ·회의실 추가임차 등
국내여비 (220-01)	-	17,000	17,000	15,161	·개최장소(부산) 사전 답사 등
사업추진비 (240-01)	8,550	Δ6,363	2,187	2,187	· 간담회 개최 등
계	66,050	187,000 Δ62,863	190,187	187,095	

* 자료 : 감사원

○ 특히 감사원은 당초 편성 예산인 6,600만원의 약 2배에 달하는 1억 2,4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였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용역비(210-14)로 이는 동 사업의 추진방식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 것임.

○ 감사원은 당초 동 사업의 직접 수행을 전제로 집행 목적에 따라 일반수용비, 임차료, 사업추진비만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준비 과정에서 추진방식이 전문업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목조정 및 전용을 통해 일반용역비[269](210-14) 1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 국제회의 전문업체(PCO) 행사대행 용역계약 1건 및 추가 소요에 따른 임차 용역계약 3건 등 총 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 국제회의 개최 등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59차 ASOSAI 이사회”의 경우 총 16개국에서 약 100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인 만큼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면 국제회의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전문업체 위탁방식으로의 추진방식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감사원은 PCO 용역계약 관련 절차 과정에서 예산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270]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271](계약 등)

---

269) 「2023년도 예산집행지침」(p.162)에 따르면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집행함

270)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71) 「국고금관리법」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

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하는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6조[272]에 따라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의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 그런데 감사원은 PCO 선정에 필요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PCO 행사대행 용역입찰 공고에 앞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용역비를 조달하기 위해 세목조정(2023. 3. 6.)을 하였는데 이때 확보된 일반용역비 예산은 1억 1,300만원에 불과함.

○ 그런데 감사원은 참여국 확대 등 증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을 통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산출하였고, 이로 인해 산출 예산액 대비 확보 일반용역비가 3,700만원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사업예산으로 하여 PCO 용역계약 관련 결재(2023. 3. 23.) 및 입찰공고(2023. 4. 7.)를 진행하였음.

○ 이후 낙찰가액 1억 3,800만원으로 PCO 용역계약을 체결(2023. 6. 7.)한 후에야 예산 전용(2023. 6. 12.)을 통해 부족분 3,700만원을 조달하여 해당 용역계약 전체 예산인 1억 5,000만원을 확보함.

를 관리한다.

272)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회의 전문업체(PCO) 행사대행 용역계약 진행경과>

(단위: 천원)

일 자	일반용역비 배정액	비 고
2023년도 당초 예산	-	· 일반용역비 미편성
2023. 3. 6.	113,000	· 동 세부사업 내 세목조정 (일반수용비(25,000천원) → 일반용역비) (임차료(88,000천원) → 일반용역비)
20233. 3. 7.	113,000	· 의장국·사무국과의 화상회의에서 일정 및 참가국 확대 요청
2023. 3. 23.	**113,000**	**· 행사대행용역계약 추진계획 결재** **(사업예산: 150,000천원)**
2023. 4. 7.	**113,000**	**· 입찰공고** **(사업예산: 150,000천원)**
2023. 6. 7.	**113,000**	**· 선정 업체와의 계약체결**(계약금액 138,000천원)
2023. 6. 12.	**150,000**	**· 3,700만원 전용(1차) 및 배정** (기본경비 복리후생비(20,000천원) → 일반용역비)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추진비(17,000천원) → 일반용역비)
2023. 9. 4.	170,000	· 2,000만원 추가 전용(2차) 및 배정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 추가 임차용역 필요)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273]에서 PCO 용역계약 부족분에 대한 전용(1차) 승인을 받은 당일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용 승인된 예산을 즉시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함.

273)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그러나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 일뿐 예산 배정과 관련된 권한이 없고, 통상 예산 배정, 지출원인행위 등 전반적인 재정지출 행위는 「국가재정법」 제97조의2[274]에 따라 도입된 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처리·완성된다는 점에서 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으로도 예산 확보가 완료된 후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함.

○ 특히 감사원은 PCO 용역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미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정된 1억 5,000만원으로 결재와 입찰공고를 하였음에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전용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였는바,

이는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한 후 지출을 예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275] 지출원인행위 준칙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감사원은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소요 예산의 확보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선행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74)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275)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는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사용 필요

□ 감사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사업의 추진방식이 전문업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 등을 통해 일반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는바, 이 중 1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 예산, 건설비, 일반용역비 및 연구연구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276]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되 이 경우에도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다른 비목과 달리 낙찰차액 사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은 지침과 달리 PCO 용역계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을 수송차량, 통역장비 등을 추가 임차하는 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됨.

○ 감사원은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사업을 위해 일반용역비로 총 4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276)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보화 관련 예산> p. 88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비> p.220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일반용역비> p.163
○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연구용역비> p.187
○ 낙찰차액은 일반용역비의 낙찰차액 사용 기준을 따른다.

- 우선 입찰을 통해 선정된 PCO와 낙찰가 1억 3,800만원에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이후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에 대한 추가 임차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 2,000만원을 전용(2차)한 후 3건의 별도 임차용역 계약체결을 위해 3,000만원을 추가 집행하였음.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관련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역
일반용역비 (210-14)	-	170,000	170,000	168,800	1,200	·행사대행용역비 138,000 ·추가 임차 29,620 - 수송차량 14,300 - 통역장비등 12,320 - 회의실 3,000 ·기술평가수당 1,200

* 자료 : 감사원

○ 그런데 최초로 체결한 PCO 용역계약 예산은 총 1억 5,000만원으로, 낙찰가가 1억 3,8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용역비 불용액은 낙찰차액인 1,200만원 이상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해당 사업의 일반용역비 불용액은 120만원에 불과한 바,

이는 감사원이 낙찰차액을 PCO와의 용역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체결된 3건의 계약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제59차 ASOSAI 이사회”는 2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국제적 행사로서 행사 시작일이 임박

했고 행사 개최 과정에서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의 추가 임차가 불가피함에 따라 예산사용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불용처리 않고 사용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존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을 추가 소요에 사용[277]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약체결 후 과업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 동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98조[278]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279]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예산집행심의회에서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바[280],

일반용역비 전용(2차) 승인을 위한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 당시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심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최소한의 내부통제 절차라도 거치는 것이 타당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27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63
<일반용역비>
다. 낙찰차액 사용
○ 일반용역비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78)「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279)「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80)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p. 22 ~ 25
다.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
○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여타의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낙찰차액을 활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방식으로 보임.

□ 감사원은 일반용역비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하되 시급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가. 개요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는 라오스, 몰디브, 르완다 등 3개 국가 내 감사원의 관리자급 직원에 대하여 초청연수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를 소개하고, 그 간 우리나라가 구축한 감사 시스템 및 감사 기법을 전파하는 사업임.

○ 2023년에는 예산액 2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감사기구 역량강화 (ODA)	297	197	-	-	297	294	-	3

* 자료 : 감사원

나.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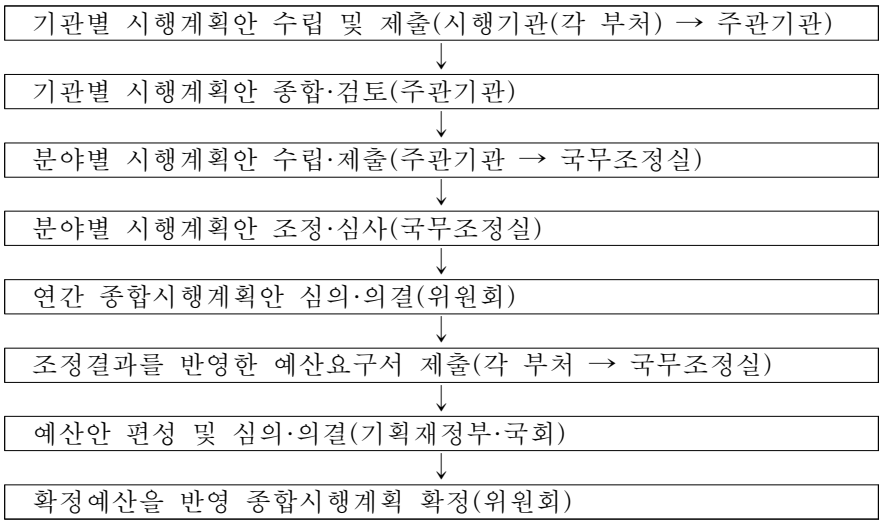
□ ODA 예산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281]에 따라 매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편성[282]함.

○ 구체적으로, 매년 초 ODA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각 부처)에서 작성한 “기관별 실시계획안”을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및 외교부[283])에서 종합·검토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함.

○ 이후 기획재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281)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282) < 우리나라 ODA 추진 절차 >



※「2021～2023대한민국 ODA 백서」(2024년 2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p.56

28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양자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양자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함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함.

□ 이와 같이 ODA 예산편성에 앞서 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ODA 특성상 그 사업의 범위나 종류 등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ODA 성격과 맞지 않은 항목을 제거하는 등의 사전통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ODA 사업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시행기관은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맞추어 ODA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2021년부터 ODA 사업으로서 「감사기구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앞서 설명한 ODA 추진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비용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직접적인 교육 업무 이외의 각종 부대 업무[284]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2023년부터 일반용역비 2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억 4,17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용역비로 ODA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비용을 집행하였음.

284) 출입국지원, 연수장소 및 식사제공, 연수과정 설계지원, 연수생 관리, 콘텐츠 제작 지원, 외부활동 운영 등

○ 감사원은 ODA 용역업체를 통해 “감사교육원 홍보 영상(국문·영문)을 제작하여 공식 블로그, 유튜브 및 감사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해당 영상은 감사교육원의 층별 시설을 소개하는 내용의 단순 기관홍보 영상으로, 개발도상국 감사기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ODA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ODA 용역 과업 산출내역 중 영상물 제작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과업 항목	집행액	비 고
라오스	사진 및 영상촬영	2,700	-
	하이라이트, 스케치영상	1,500	-
	스케치영상(영문) 추가제작	200	-
몰디브	사진 및 영상촬영	4,000	-
	하이라이트, 스케치 영상	1,600	-
	교육원 홍보영상	1,500	교육원 방문 촬영 및 편집
르완다	영상(스케치 및 **홍보영상**)	2,050	행사스케치 영상 및 감사교육원 홍보영상
계		13,550	

* 자료 : 감사원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총액확정계약으로 체결되는 용역계약 특성상 예산산출내역서에 책정된 지출항목별 예산과 실소요액의 차이가 발생[285]하는바,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향후 ODA 대상 국가들과의 협의 시

285) 감사원은 용역계약의 경우 각 지출항목의 비용을 추정하여 산정된 ‘예산산출내역서’에 기초하여 총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나, 초청연수 진행시에는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거나 덜 소요되는 항목이 발생되어 지출항목별 집행액은 계약금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감사교육원 소개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를 위해 약 150만원의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제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영상[286]은 별도로 제작되었고, 해당 영상은 감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나 성과 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감사교육원의 시설을 단순히 안내하는 내용으로서, 2023년을 포함하여 그동안 실제 연수는 주로 외부 호텔에서 진행[287]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ODA 대상 국가들과의 협의 시 필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비록 집행규모는 소액이나 ODA 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한 항목을 계약 이후에 추가하여 ODA 용역업체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회적인 예산 집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시행계획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격한 사전통제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는 ODA 종합시행계획 수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ODA 시행계획안과 종합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ODA 사업의 특수성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86)「2023 감사교육원 국제과정 소개」라는 제목으로 감사원 공식 유튜브에 게재됨
287) 2021년 신규편성 이후 2023년도까지 모두 서울 또는 연수국 소재 호텔에서 교육을 진행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Ⅱ. 검토의견

◈ 총괄적 검토 ◈

1.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가. 결산개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인력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기준 검사는 정원 25명에 현원 20명,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현원 37명,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계
정원	25	40	20	85
현원	20	37	20	77
결원	△ 5	△ 3	-	△ 8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의 파견인력 현황을 보면, 2024년 4월 기준 수사인력 2명, 행정인력 20명 등 총 22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인력 현황>

구분	파견기관	인원 수
수사인력(2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
행정인력 (20명)	중앙행정기관	2명
	지방자치단체	14명
	공공기관	4명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3년도 공수처의 보수(110-01)는 총 81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71억 1,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1%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수(110-01)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보수(110-01)	편성액	7,757	8,161
	집행액	6,340	7,111
	집행률(%)	82.2	87.1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나. 행정직원 정원확대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20명 이내”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행정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운영 중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12조(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수사처수사관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288]과 같다. 이 경우 정원 중 1명(서기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수사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행정안전부,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인사혁신처,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처장은 파견규모·직급·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공수처의 경우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 예산, 인사 업무 등 독립적인 행정 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할 때 검사정원 대비 검사외 인력 정원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의 수는 실제 소요대비 과부족할 것으로 보임.

288) [별표 3]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청의 검사외 정원 비율 비교>

기관**	검사정원	검사외인력 정원	검사대비 검사외 인력 비율
청주지검	38명	131명	3.45배
창원지검	43명	175명	4.07배
부천지청	43명	142명	3.30배
안양지청	34명	102명	3.00배
천안지청	35명	110명	3.14배
대구서부지청	35명	121명	3.45배
검찰청 전체	**2292명**	**8453명**	**3.69배**
공수처	**25명**	**60명*** **	**2.4배**

*자료: 2023년 검찰연감

**지검 및 지청 자료는 일부만 무작위 기재하였음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직원 정원표(제12조제3항 본문 관련)

총계	20
일반직 계	20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비서)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기록연구사	1
전문경력관 나군	1

비고

1. 직원 정원 중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에 기록연구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록연구사 1명을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으로 대체하거나 행정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직원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 100명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 행정주사 1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 기관의 기획·관리는 그 연속성을 위해 정원 내 직원이 담당하고 집행·실무는 파견자 등 정원 외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 20명 중 처장 비서관 1명 및 간부 5명(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을 제외한 14명만 조직유지기능 실무에 투입될 수 있어 인사, 회계, 조직 등 안정적으로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기능을 대부분 파견인력이 담당하는데, 파견인력은 파견기간 종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 기관유지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큰 상황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조직기능의 담당 현황>

단위업무	주요 세부 업무	담당자
인사	검사 인사	소속직원(행정6)
	수사관 인사	파견(지자체6)
	공무직 인사	파견(지자체6)
총무	물품관리(물품관리관)	소속직원(행정5)
	과 서무	파견(국가7)
회계	회계 · 계약(지출원)	파견(지자체5)
	급여 · 복지후생	소속직원(행정6)
조직	직제 · 조직진단	파견(지자체5)
정보화	정보화 총괄	파견(전산6)
	KICS 총괄	소속직원(전산6)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에 따라 2022년도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는 조직·인사·회계 등 기관유지의 핵심기능 업무 담당자를 정원 내 인원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의 행정직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289]된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인하여 모두 폐기되었고, 이후 제22대 국회에서는 행정직원의 정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876호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 종합하면, 공수처는 기관유지를 위한 핵심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공수처 소속 행정직원과 파견공무원간 적절한 부서배치를 통해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유지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89) 의안번호 제2110857호 이수진의원안, 의안번호 제2111515호 송기헌의원안, 의안번호 제2118489호 권인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336호 권칠승의원안, 의안번호 제2124664호 소병철의원안

다. 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충원 방안 마련 필요

○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원은 25명인데 24년 7월 기준 현원은 20명으로 결원이 총 5명에 달하였음.

공수처법 제8조[290]에 따라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임. 그런데 공수처 최초 출범 당시 검사로 임용되었던 1기 검사 13명 중 11명은 임기만료 전 퇴직하였고, 2명 중 1명은 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연임에 실패하였는바, 결과적으로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연임하여 연임 비율은 7.7%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재직 중인 검사 20명의 재직기간별 인원수를 살펴보면, 3년 이상 재직자 수는 1명이고, 2년 이상 재직자 수도 도합 6명으로 공수처 출범(2021년 1월 21일) 후 약 3년 5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중 2년 이상 재직자 비율이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수사관의 경우 임기 6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인데, 현원 36명 중 2년 이상 재직 수사관 수는 23명으로 64.9%였고, 최근 3년간 퇴직자 수는 총 15명으로 연평균 5명에 달하였음.

---

2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재직기간별 인원수〉

(단위: 명)

구분	0 ~ 1년	1 ~ 2년	2 ~ 3년	3년 이상	합계
검사	8	6	5	1	20
수사관	2	11	13	10	36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근 3년간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퇴직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검사	채용인원	21	3	10	0	34
	퇴직인원	0	5	7	4	16
수사관	채용인원	33	12	3	1	49
	퇴직인원	0	8	3	4	1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같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이 높을 경우,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어 수사 효율성이 낮아지고, 잦은 인력 공백은 조직 운영을 불안정하게 함.

○ 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수처의 검사 및 수사관의 경우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는 달리 임기제로 운영되고, 특히 검사는 연임이 3회로 제한되어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음.

공수처의 설명과 같이, 검찰청 검사의 경우 「검찰청법」 제39조[291]에 따라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을 뿐 별도의 연임제

한은 없는 반면, 수사처검사의 경우 최대 9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바,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 불안이 높은 퇴직율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임.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115호 김의겸의원 대표발의)[292]이 발의된 바 있음.

다만, 퇴직한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의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비판하는 기고문을 게재한 사례[293] 및 높은 퇴직률에도 연임심사를 받은 2명의 검사 중 1명이 부적격판단을 받아 인력 공백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임제한 외에도 채용 또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검사의 퇴직률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불안 해소책**을 마련 및 추진함과 동시에, 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기준 및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운영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줄여야 할 것임.**

---

291)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292) 현재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됨.

293) 법률신문,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 2023.11.30.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632

2.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 필요 등

가. 결산개요

○ 공수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각종 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2023년 공수처는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감찰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공소와 관련하여 공소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였음.

<공수처 산하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운영근거	위원 수 (내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비고
수사심의위원회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1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직접수사 개시 여부, ②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방향, ③구속영장 청구 여부, ④처장의 이첩요청 여부	
수사자문단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1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처리과정에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②강제수사의 필요성 및 방식	2024. 1. 25. 폐지
영장심의위원회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294]	9명	사법경찰관의 심의신청	①체포·구속영장, ②압수·수색·검증 영장, ③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위원회명	운영근거	위원 수 (내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비고
공보심의위원회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공수처 훈령)」	15인 이하 (과반 미만)	-	①공소제기한 사건, ②공소제기요구한 사건, ③불기소 등 사건, ④수사종결 전 사건	
감찰위원회	「공수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공수처훈령)」	5~9명 (2명)	위원장 요청 또는 처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 요청	①감찰업무의 기본방향·계획, ②인권감찰관이 회부한 중요 감찰사건에 필요한 조치, ③비위행위 조치기준 및 처리절차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명 (2명)	위원장 요청	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②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공소심의위원회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1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②기소 여부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사실적 쟁점, ③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④무죄판결 등에 대한 상소 여부	

29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나.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 2023년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등 수사 관련 6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경비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에, 공소심의위원회 경비는 “공판활동지원(1012-301)” 사업에 각각 편성하였음.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내 6개 수사 관련 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예산
수사심의위원회	49,500
수사자문단	67,500
영장심의위원회	40,500
공보심의위원회	66,000
감찰위원회	4,200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6,300
소계	**234,00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판활동지원 사업 내 공소심의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예산
공소심의위원회	**47,925**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그런데 수사·공소관련 각 위원회의 2023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감찰위원회를 제외한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및 공소심의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률이 20% 미만이었고, 특히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및 공소심의위원회의 집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공수처 운영 각 위원회 및 자문단 등의 참석수당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위원회명	구분	2022	2023	202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수사심의위원회	편성액	49,500	49,500	편성액: 59,865 집행액: 6,590 집행률: 11% *수사심의 : 2,790 검사징계 : 800 공보심의 : 2,000 감찰 : 1,000
		집행액	5,400	7,966	
		집행률(%)	10.9	16.1	
	수사자문단	편성액	67,500	67,500	
		집행액	6,000	7,600	
		집행률(%)	9.2	11.3	
	영장심의위원회	편성액	40.500	40,500	
		집행액	-	-	
		집행률(%)	-	-	
	공보심의위원회	편성액	66,000	66,000	
		집행액	4,966	5,300	
		집행률(%)	7.5	8.0	
	감찰위원회	편성액	4,200	4,200	
		집행액	2,800	2,200	
		집행률(%)	66.7	52.4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편성액	6,300	6,300	
		집행액	1,500	-	
		집행률(%)	23.8	-	
공판활동 지원 (1012-301)	공소심의위원회	편성액	48,000	47,925	10,600
		집행액	4,365	4,212	-
		집행률(%)	9.1	8.8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되어 영장심의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는 2024년 7월 기준 단 한 건의 회의도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2024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및 공판활동 지원 사업의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총 7,046만원 중 집행액이 659만원에 그치는 등 집행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 참석수당의 집행부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첫째, 각 위원회 예상개최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각 위원회 참석수당의 집행률 저조의 원인은 편성 시 예측하였던 개최횟수와 실제 개최횟수간 차이에 기인함.

<수사·공소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단위: 회)

구분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감찰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	공소심의위원회
구성시기		2021.6.	2021.6.	2021.6.	2021.9.	2022.9.	2021.7.	2021.6.
2021년	계획	68	30	–	–	–	–	68
	실적	**1**	**1**	**1**	**6**	**–**	**1**	**2**
2022년	본예산	27	27	27	27	2	6	16
	추경*	15	15	15	20	2	7	16
	실적	**5**	**4**	**–**	**5**	**2**	**1**	**3**
2023년	계획	15	15	15	20	2	7	14
	실적	**3**	**3**	**1**	**5**	**2**	**0**	**2**

* 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예산을 삭감조정함.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년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실제 개최횟수가 예상과 부합한 위원회는 감찰위원회뿐이었으며, 그 외 모든 위원회는 계획대비 개최횟수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특히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1년간 15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촉식 회의 한 건만이 개최되었음.

각 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회의개최 실적 추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편성 시 참석수당 예산이 과다하지 않도록 예상 개최횟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관계 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2023년도에 위촉식을 위한 한 건의 회의만이 개최되었음. 영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원인은 다음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영장심의위원회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임. 그런데 공수처법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검찰청 검사와 수사처검사 중 누구에게 영장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간 협의한 바도 없어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 사법경찰관이 검찰청 검사가 아닌 수사처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이러한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수사처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두는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구속영장
2. 압수·수색·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고 수사처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따라서,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련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장 신청을 어느 기관 검사에게 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관계 수사기관과 영장 신청 기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수처는 **관련 수사기관과 영장 신청과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의 집행실적을 제고**하되, 이후 **예산 편성 시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예산은 실적에 맞게 축소**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 범죄와 관련한 영장의 경우 수사처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하도록 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련 수사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바, 동 협의 등을 통해 영장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개최 지양 필요

○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자문위원회의 2023년도 회의개최내역을 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4월 26일, 수사자문단은 4월 6일, 자문위원회는 7월 11일에 공수처 회의실이 아닌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음.

<연도별 공수처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명, %)

위원회명	일자	장소	참석계획 (A)		참석실적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사심의위원회	3.21.	공수처 대회의실	20	-	10	-	50	-
	4.26.	**P호텔 강남점**	**20**	**-**	**12**	**-**	**60**	**-**
	7. 3.	공수처 중회의실	20	-	15	-	75	-
수사자문단	4. 6.	**P호텔 강남점**	**20**	**-**	**11**	**-**	**55**	**-**
	6.26.	공수처 중회의실	21	-	16	-	76	-
	9.25.	공수처 중회의실	21	-	10	-	48	-
자문위원회	4.21.	공수처 대회의실	20	-	13	-	65	-
	7.11.	**AT센터**	**26**	**-**	**15**	**-**	**58**	**-**
	9. 7.	공수처 중회의실	6	-	6	-	100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외부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장소대여료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집행될 우려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회의장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295] 각 위원회를 외부회의장에서 개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 확보 및 장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서울에 위치한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입장이나, 공수처는 수도권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여 공수처 내 회의장의 장소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 소관 각 위원회의 개최횟수가 많지 않아 **공수처 청사 내 회의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도 기준 실제 민간위원의 계획인원 대비 참석인원 비율을 보면, 공수처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평균 69%, 외부 회의장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평균 58%의 참석률로 **공수처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의의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296]을 고려할 때,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 내 회의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결론적으로, 이후 공수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의장 임차보다는 공수처 자체 회의장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95)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 5.
296) 다만, 공수처는 외부회의장 회의개최 당일 악천후로 인하여 참석율이 낮았다는 입장임.

◈ 개별사업별 검토 ◈

3.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가. 결산개요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1011-301)은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역량의 강화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접수사 활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9억 7,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이월예산 45억원을 포함하여 20억 1,500만원이며, 이 중 13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2,700만원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970	45	-	-	2,015	1,388	-	627

나.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필요

○ 공수처는 2022년 6월에 민원소통전문관을 위촉하였고, 2023년 11월까지 민원소통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월 평균 약 150만원의 활동비를 해당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로 지급하였음.

〈2023년 민원소통전문관 활동비 집행내역〉

(단위: 원)

세부사업명	세목	지급월	지급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수용비	1월	1,430,020
		2월	1,459,200
		3월	1,605,120
		4월	1,386,240
		5월	1,459,200
		6월	1,532,160
		7월	1,532,160
		8월	1,605,120
		9월	1,386,240
		10월	1,386,240
		11월	133,760
		총계	14,915,46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민원소통전문관은 공수처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종합민원실이 개소됨에 따라 민원처리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위촉한 것으로, 제도 개요 및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음.

〈공수처 민원소통전문관 제도 개요〉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1조
직무	- 민원인 상담, 기처리 민원에 대한 이의제기 시 관련서류 검토 후 민원인에게 설명 또는 의견 개진 등
근무시간	- 주 5일, 일 5시간 근무(주 25시간)
유사사례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상담 등을 위해 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주 5일, 1일 8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제11조(민원소통 전문관의 운영) ① 민원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퇴직자 등을 민원소통 전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민원소통 전문관의 근무형태·보수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민원소통 전문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민원소통전문관은 주 5일, 일 5시간 근무를 하며 민원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일당 8만원을 수령 하였는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고용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공수처 민원소통전문관은 형식상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업무를 하며, 업무의 대가로 월단

위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갑이 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후에는 을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을 자치단체가 갑에 대한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갑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위촉 이후 갑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갑

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을 자치단체는 갑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갑으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갑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을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을 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따라서, 민원소통전문관에게 지급될 수당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민원소통전문관 보수를 인건비(110) 비목에 편성하였어야 하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민원소통전문관에 대한 보수지급을 위한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2023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를 민원소통전문관 예산으로 지속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한편, 민원소통전문관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 등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공수처는 민원소통전문관 운영 중 고용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297] 2023년 11월에 민원소통전문관 위촉을 종료하였음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297) 유사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위원의 경우 매년 고용부담금을 편성·집행하고 있음.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298] 근로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수처는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수처 출범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수용비 330만원, 임차료 745만원 등 총 1,075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공동학술대회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세목	용도	집행액
2023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일반수용비	광고료	297
			기념품 등	3,000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임차료	학술대회장 임차	7,452
	총계			**10,749**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국가재정법」 제45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공수처 출범 2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기관운영 또는 사업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예산편성과 심의가 없었음에도 공수처 출범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29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민원소통전문관의 경우 2023년 11월 2일자로 위촉을 종료하였고, 학술대회 개최 예산의 경우 2024년 예산부터 반영하는 등 개선하였다는 입장인바, 추후 공수처는 **예산편성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2023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총 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3,600만원으로 집행률이 35.6%에 불과하였고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01	-	-	-	101	36	-	65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는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지급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인바, 공수처는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용도로 집행한 금액은 16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3%에 불과하였음.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공수처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75,000	1,000	54,000	1,609	3,600	108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예산편성 당시 산정기준을 민원전화 1통당 요금으로 환산하여 계상하였으나, 실제 제도운용 시 인터넷회선 이용 민원 처리가 많아짐으로써 공공요금 소요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통합민원 콜센터는 2022년 5월부터 운영되었고, 2022년도에도 편성된 공공요금 예산 7,500만원 중 집행액이 10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공공요금의 실제 소요는 이미 파악되었다고 보여짐.

그럼에도 공수처는 통합민원 콜센터 공공요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편성한 후 대부분 불용하였는바, 이는 불필요한 예산 불용으로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한 것으로 부적절한 사업관리로 사료됨.

따라서, 공수처는 불필요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라. 내부고발제도 실질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공수처법」 제46조제2항은 공수처가 각 기관 등의 내부고발자[299]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신변안전조치, 제8조에서는 포상금, 제9조에서는 구조금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공수처 고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에서는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포상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지급기준을 규정[300]하고 있음.

---

299) 내부고발자의 정의는 「공수처법」이나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수처 고시인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함.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300)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장 신변안전조치 :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제5장 포상금: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신청), 제22조(의견청취)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제24조(구조금의 신청),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5. (생 략)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1011-301) 중 일반수용비(210-01)에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로 600만원 및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630만원을, 포상금(310-03)에 내부고발자 포상금, 치료비, 이사비 등 총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2023년에는 한 건도 집행되지 아니하였음.

<2023년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집행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일반수용비 (210-01목)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위탁비	200,000원*30회	6,000	-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명*7회*300,000원	6,300	-
	포상금 (310-03목)	내부고발자 포상금, 치료비, 이사비 등	포상금 45,000 구조금 10,000	55,00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의 집행이 부진한 1차적인 원인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임. 공수처의 설명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이루어진 내부고발 건 수는 총 2건이었고, 이 중 구조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음.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증거인멸 또는 내부통제가 용이하여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의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직사회 내부고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7월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하여 주요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하였고,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법제화 연구용역 실시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공수처의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은 1회성이어서 2023년에는 내부고발 안내서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위공직자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에 대한 별도의 홍보도 이루어진 바가 없어 내부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수처는 홍보·교육·고발자보호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공수처와 유사하게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두고 있는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바, 해당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홍보·교육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2023년 법무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지원 관련 홍보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335-30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동영상 등 제작	44,500

*자료: 법무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교육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공공, 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20,000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9,923
	합계	29,92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4.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0)

가. 결산개요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7011-200)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임.

2023년도 예산액은 17억 700만원이고 이·전용 1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억 9,800만원이며, 이 중 1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900만원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1,707	-	191	-	1,898	1,829	-	69

나. 고용부담금의 예산 적시 반영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 공수처는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고용 및 유지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집행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공무직 근로자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2명임.

<매 연도말 기준 공수처 공무직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원	25	35	35	38
현원	23	35	32	35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매 연도별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퇴직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27명, 2022년에 20명, 2023년에 2명을 각각 채용하였고, 퇴직인원은 2021년 4명, 2022년 8명, 2023년 4명임.

<최근 3년간 공수처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퇴직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채용	27	22	2	5
퇴직	4	8	4	2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22년 5월 27일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301]하였고,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에 7,438만원, 2023년에 1억 7,398만원의 적립금을 고용부담금(320-09)에서 납부하였음.

3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세목	연도	집행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 (320-09)	2022년	74,382
		2023년	173,979
		총계	**248,361**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부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서면(이하 "재정검증결과 통보서")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2024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퇴직연금사업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공수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수를 14명으로 적시하고 있는바, 실제 가입대상자 30명[302] 중 일부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서 중 일반현황>

제도 설정일	납입 주기	법정 최소적립비율			결산연월	가입 자수	가입 기간 (전체)	평균임금 합계
		설정 전	설정 후	전체				
2022-05-27	년납	60.00%	100.00%	83.94%	2023년 12월	**14명**	2.66년	37,711,320원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 공수처의 공무직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임.

30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2023년 회계연도말 당시 30명이었음.

첫째, **고용부담금을 실소요 대비 과소편성하여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였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303]는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공수처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으로 명시[304]하였음.

3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4) **공수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제9조(가입대상)** ① 이 사업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

따라서, 2023년 최소적립금 산정 시 가입자 기준은 2023년 연도말 당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 근로자가 될 것인바, 2022년 채용되어 2023년 연도말까지 계속 근로중인 공무직 근로자는 전원이 최소적립금 산정을 위한 가입자 수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2022년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20명 중 18명은 동년 6월까지 채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적립금 예상액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2022년 공무직 근로자 채용내역>

연번	채용일자	채용인원(명)	업무 등
1	2022.02.11.	10	사무보조
2	2022.02.11.	2	방호
3	2022.04.11.	2	방호
4	2022.05.09.	2	사무보조
5	2022.05.09.	1	방호
6	2022.06.07.	1	사진촬영
7	2022.11.28.	2	방호
합계		2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출자료 재구성

그럼에도 공수처는 퇴직급여 적립급 납부금액을 예산편성 당시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고용부담금(320-09)을 과소편성함으로써 편성된 고용부담금 총액(1억 7,100만원)의 74.8%에 달하는 1억 2,800만원을 전용으로 조달하였는바, 이는 다

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른 사업 또는 비목의 예산부족을 초래하거나 국회의 예산심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고용부담금의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고용부담금(320-09)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업관리 소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자가 일부 누락**되었음.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23년 연도말 기준 공수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함에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재정검증은 가입자 14명을 기준으로 하는 등, 2024년 5월까지 일부 가입대상자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있는 공수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제10조제3항[305]을 위반한 것임.

또한, 퇴직급여의 법정 최소적립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수가 기초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일부 가입대상자가 누락된 상태로

305) **공수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규약」 제10조(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③ 사용자는 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 간사기관)에 전달하여 가입자 등재 및 상실 등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검증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기준 법정 최소적립금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지속될 경우 법정 최소적립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곤란하고, 가입 누락 상태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규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공수처는 누락된 가입대상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원을 포함한 법정 최소적립금을 조속히 산정하여 연말 납부하여야 할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미리 파악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01)

가. 결산개요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7011-201)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26억 9,700만원이고 이월예산 6,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7억 6,400만원이며, 이 중 2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억 1,600만원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697	67	-	-	2,764	2,148	-	616

나. 장애인고용의무 준수 노력 필요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1천분의 36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공수처의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을 제외한 행정직원의 정원은 총 20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1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사업	세목	연도(년)	납부액(원)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0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2022	19,445,860
		2023	22,284,08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현재 행정직원 정원 20명을 모두 채용한 상태여서 장애인 추가 채용과 의무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공수처는 현재 수사처수사관 중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수사처수사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어서 의무고용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행정직원 인원은 법정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인력 대비 정원이 과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부득이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기관이 법률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공수처는 추후 행정직원의 신규 채용 소요 발생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

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수처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해당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현재 공수처의 행정직원이 전원 채용 완료된 관계로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추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 철저 필요

○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현재까지 정부과천청사 5동을 공수처 청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건물의 경우 타 정부 기관 등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보안시설이 부재하여 수사기관 청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과천청사 5동 입주기관 현황>

기관명	위치	면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하1층, 2층, 3층	4,080
서울지방교정청	5층, 6층	2,002
사행산업감독위원회	6층	910
경인지방통계청	지하1층, 1층, 7층	2,341
서울지방공정사무소	지하1층, 4층	1,727
서울지방국토청	지하1층	2,99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층	427
과천청사관리소	지하1층, 4층	1,017
기타기관	1층, 6층	665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정부청사 입주기관 현황” 재구성

○ 이에 공수처는 지속적으로 신규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22년도 예산 심의 결과 청사 신축 사업비로 설계비 5억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되었음.

<2022년 예산 각목명세서상 공수처 청사 신축 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2500] 공용재산취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531] 청사		
[3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420-01] 기본조사설계비		500,000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신축	500,000,000원=	500,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재구성

○ 공수처는 예산 반영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청사 신축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완료 기한을 2023년 5월로 하여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계약(계약금액 총 9,000만원)을 체결하였는데, 2022년 집행한 선금 6,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이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306]에 따라 2023년도로 이월되었음.

306)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당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공수처 청사 신축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에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대응 또한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와의 사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수처는 2023년 6월 8일 **해당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24년 2월 10일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하였음. 그러나 이후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월의 경우 이미 이월된 예산을 재이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항 후단[307]을 고려하면 변경된 계약기간에 따라 **2024년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약채무의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2023년 12월경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제1항[30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① 기성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및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30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0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하여야 하므로, 공수처는 기성금(기성고 비율 88%, 7,738만원)에 철수비용(422만원)을 더한 8,160만원 중 선금으로 지급한 6,300만원을 제외한 1,860만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였음.

<청사 적정규모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계약 해지 정산금 내역>

(단위: 원)

기간		계약금	1차기성 (70%)	2차기성 (18%)	용역타절 (자료증빙)	합계
인건비		64,920,497	45,444,000	11,685,000	2,380,000	59,509,000
경비	여비	825,000	577,500	148,500	-	726,000
	건축도면	10,000,000	7,000,000	1,800,000	1,200,000	10,000,000
	유인물비	800,000	560,000	144,000	96,000	800,000
	교통통신비	300,000	210,000	54,000	11,000	275,000
	자문비	1,800,000	-	-	-	-
	소계	13,725,000	8,347,000	2,146,000	1,307,000	11,800,000
일반관리비 (4.03%)		3,172,685	2,170,000	557,000	148,000	2,875,000
부가세 (10.00%)		8,181,818	5,596,000	1,438,000	383,000	7,417,000
합계		90,000,000	61,557,000	15,826,000	4,218,000	81,601,000
정산금		**81,601,000(정산금) - 63,000,000(기 지급금) =18,601,000(금회 기급분)**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해당 사안의 경우, <u>계약관리 부실</u>로 <u>용역계약을 중도해지</u>함으로써 <u>사업의 일부 과업을 미달성</u>하였고, <u>불필요한 추가비용 및 이월예산의 불용이 발생</u>하였다는 점이 문제가 됨.

공수처가 해당 용역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된 주요원인은 예산의 재

이월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2024년 이후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임. **해당 규정을 계약변경 당시부터 고려하였다면** 절차를 거쳐 신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말로 조정하는 등 **재이월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월예산의 재이월이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다음해로 연장함으로써 용역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따라 ① 사업정적성재검토 대응이라는 계약의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② 기성고 분 외 271만원[309]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으며, ③ 이월예산 2,700만원 중 840만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따라서, 공수처는 이후 **계약관리 부실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09) 2차 기성고에 포함되어야 할 건축도면 등을 제외한 인건비 및 부가세 비용임.

【헌법재판소 소관 결산】

(전문위원: 이화실)

Ⅱ. 검토의견

1. 총괄 :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가. 상용임금 결산 개요

❑ 헌법재판소의 공무직근로자를 고용하는 예산은 본부기본경비(1011-250) 사업과 본부운영지원(1032-302) 사업에 상용임금(110-03)으로 편성되어 있음.

- ①2023년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예산액 7억 2,2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②2023년도 본부운영지원 사업 예산액 12억 4,600만원 중 1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불용하는 등 ③총 18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헌법재판소 공무직근로자 관련 상용임금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세부사업명	목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①본부기본경비	상용임금(110-03)	722	722	664	58	778
②본부운영지원	상용임금	1,246	1,246	1,166	80	1,279

구분		2023년				2024년
세부사업명	목 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10-03)					
③합 계		1,968	1,968	1,830	138	2,057

자료: 헌법재판소

나. 공무직근로자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

❑ 헌법재판소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310]에 따라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로 구분됨.

- 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3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급여제도 비교 >

구 분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제도 개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연금제도 정책소개

❑ 헌법재판소는 2023년 말 기준 55명의 공무직근로자를 고용하면서 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도입하여 근로자 전원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2023년도 헌법재판소 공무직근로자 고용 현황 >

세부 사업명	비목	2023년 결산액 (천원)	공무직 근로자 직무	공무직 근로자 정원	공무직 근로자 현원	평균 근속연수
본부 기본경비	상용임금 (110-03)	664,000	사무, 조리, 운전 등	22명	20명	약 7년 10개월
본부 운영지원		1,166,000	시설관리, 환경미화	37명	35명	약 3년 6개월
합 계				59명	55명	

자료: 헌법재판소

❑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 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근로자는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됨.

- 공무직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기존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고,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선호할 경우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311].

❑ 둘째,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적립된 부담금만을 퇴직급여로 받게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평균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312]하게 되어 DB형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퇴직급여가 많게 됨.

-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313]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실제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311)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용자가 DB형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할 경우 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 불가하나, 그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함(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업무메뉴얼」, 2019. 8.).

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13)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들은 원금보장형을 선택하여 사실상 퇴직급여의 운용을 통한 수익률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라면 DC형 퇴직연금보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국회사무처는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 운용하고 있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314].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증대 차원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314) (법원)「**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 제1358호, 시행 2023. 11. 21.]」 제44조 (퇴직급여)**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각급 기관별로 정한다.

2. 인건비(1001-1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315]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예산액 318억 6,000만원 중 309억 9,5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인건비	31,860	-	31,860	30,995	865	33,533
보수(110-01)	30,100	-	30,100	29,389	711	31,760
기타직보수(110-02)	1,543	-	1,543	1,431	112	1,539
연가보상비(110-05)	217	-	217	175	42	234

자료: 헌법재판소

315) 직제상 정원 348명, 별도정원 11명, 기타직 22명(청원경찰 5명, 전문임기제 17명)

나.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316]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주로 본안 사건 심리를 위하여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 관계 법령, 관계 기관의 의견서 등을 사전분석·검토하고, 전원재판부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재판부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현황 >

(2024. 6. 30. 기준)

구 분			헌법연구관 정원	헌법연구관 현원	파견 법관	파견 검사	담당 업무
헌법재판소 연구부	연구부 행정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비서실장, 기획심의관, 공보관)		66	5	-	-	연구부 총괄 및 행정
	전속부			34	8	3	재판관에 배속되어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사전심사부			6	-	-	접수된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여부 검토
	공동부	자유권부		19	1	1	재판관에 배속되지 않고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재산권부					
		사회권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9	1	-	-	연구교수부 총괄
	제도연구팀장			1	-	-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등 총괄
	기본권연구팀장			-	-	-	기본권 등 국내외 이론 연구 총괄
	비교헌법연구팀장			1	-	-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 분석 등 총괄
	교육팀	교육팀장		1	-	-	교육팀 총괄
		교수		1	-	-	각종 교육계획 수립 및 강의
합계			75	69[317]	9	4	

자료: 헌법재판소

316)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하여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318]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2024년 6월 말 기준 현재 헌법연구관 중 비법조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함[319].

< 임용요건[320]에 따른 헌법연구관 현황 >

(2024. 6. 30. 기준)

자격요건별 구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사무를 한 사람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를 한 사람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법률사무를 한사람	합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76명(97%)	-	-	2명(3%)	-	78명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은 법령 및 처분의 헌법적 정당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다루는 민사·형사 재판과는 차이가 있으며 헌법을 통한 여러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학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됨. 이를 위해 재판 과정에서 헌법연구관에 의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 조

317)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파견·연수로 별도정원 5명을 운용하고 있고, 휴직자가 4명이 있어 해당 시점 전체 헌법연구관은 **78명**임.

318) 2023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회의록 8P

319) 헌법연구관 중 해당 시점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76명이며, 그 중 판사 또는 검사 출신은 각각 2명, 4명임.

320)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사·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헌법연구관의 구성 또한 다양한 배경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 임용과정에서 전문분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조인 출신의 지원비율이 94%를 상회[321]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에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함.

< 헌법연구관 학위별 전공 >

(2024. 6. 30. 기준)

구분	법학	비법학				합계
		경영·경제 계열	사회과학 계열	인문·교육 계열	자연과학·공학 계열	
학사	47명	8명	11명◉	8명◉	4명	78명
석사	55명	1명▣	–	–	1명▣	57명
박사	11명	–	1		–	12명

◉ 법학 복수전공 1명 포함
▣ 법학 포함 2개 학위 보유
자료: 헌법재판소

❑ 법조인 이외의 헌법연구관의 자격이 주로 법률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다소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임용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비법조인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및 헌법연구관을 충원하면서 특정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21)「현법재판소법」제19제4항제1호에 따른 지원비율: 21년 99%, 22년 99%, 23년 94%, 24년 97%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을 채용함에 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법조인 이외 전문가의 지원율을 높이도록 하고, 내부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각종 유인책을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심판사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3. 본부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기본경비 사업은 헌법재판소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운영경비로 2023년 예산액 65억 600만원 중 6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본부기본경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기본경비	6,506	6,506	133 △133	6,506	6,270	–	236	6,991
인건비	741	741	–	741	682	–	59	800
운영비	2,967	2,967	117 △117	2,967	2,883	–	84	3,037
여비	140	140	16 △16	140	140	–	–	143
업무추진비	466	466	–	466	464	–	2	540
직무수행경비	1,788	1,788	–	1,788	1,720	–	68	1,764
보전금	2	2	–	2	–	–	2	2
민간이전	158	158	–	158	137	–	21	173
유형자산	244	244	–	244	243	–	1	131
무형자산	–	–	–	–	–	–	–	4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의 일반수용비 집행 개선 필요

❑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재무결산 지원용역 1,2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 최근 3년간 재무결산 지원용역 집행 현황 >

세부사업명	비목	연도	지출일자	금액	용역 주요내용
본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0-01)	2021	2021. 2. 9.	4,500천원 (선금)	재무제표 기초자료 구성, 중앙관서재무제표 및 재무결산보고서 작성지원 등
			2021. 9. 17.	4,500천원 (잔금)	
			합 계	9,000천원	
		2022	2022. 4. 1.	4,500천원 (선금)	
			2022. 9. 16.	4,500천원 (잔금)	
			합 계	9,000천원	
		2023	2023. 3. 10.	6,000천원 (1차 선금)	
			2023. 7. 27.	3,600천원 (2차 선금)	
			2023. 10. 4.	2,400천원 (잔금)	
			합 계	12,000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210-14)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수용비를 ‘사무용품 구입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구분 >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8. 공고료 및 광고료 9.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0.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1. 기타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12.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
		210-14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 1.)

❑ 헌법재판소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이 일종의 자문에 해당하여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는 입장이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은 수행기간[322]이 정해진 계약이라는 점에서 일회성인 자문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국가회계법」 등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결산자료 간 계수검증 등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동 용역계약의 주된 과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함.

- 참고로 법원도 이러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음[323].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지 않고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22) 2023년의 경우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9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음.
323) < 대법원 2023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

[단위 : 천원, 1$]

2023년 예산			
내역	산출근거	원화	외화
[210-14]일반용역비		339,296	
1.재무결산업무 회계법인 일반용역비	30,000,000원=	30,000	

다.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 과다 제작

❑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1일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일반수용비 1,285만원, 일반용역비 4,659만원, 업무추진비 463만원을 집행하였음.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집행 현황 >

비 목	집행액 (만원 이하 반올림)	주요 내용
일반수용비	1,285만원	기념품 제작 비용
일반용역비	4,659만원	창립 35주년 기념식 행사대행용역 비용
업무추진비	463만원	창립 35주년 기념식 오찬 비용
합 계	6,407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헌법재판소가 집행한 일반수용비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내외부 인사에게 배부하는 기념품 제작을 위한 것으로[324], 헌법재판소는 무선충전 탁상시계(단가 16,000원, 부가세 별도)를 730개 제작하였다고 함.

324)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품 및 배부 대상 >

○ 기념식장 입장 시 **외부인사에 한해 배부(종이백에 담아 배부)**
○ 내부인사는 기념식 종료 후 9. 1.(금) 오후 **일괄 배부**
○ 식전환담인사는 해당 좌석 아래 기념품 종이백 배치

무선충전 탁상시계	가격	규격
	16,000원 (부가세 별도)	- 규격: 150*70*70mm - 색상: 블랙, 우드 - 원산지: 중국

자료: 헌법재판소

❑ 그런데 동 행사의 참석인원을 살펴보면, 초청인원은 393명이고, 참석인원은 173명으로 이에 비해 기념품 제작 개수가 현저히 많음.

- 일반적으로 기념품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념품을 넉넉하게 제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초청 인원 수의 2배 가까이 되는 기념품을 제작한 것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관련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명)

구분	전직 재판소 주요 인사	자문위원 등	법학계	법조단체 대표	지역 대표	언론계	추가 초청	내부 인사	합계
초청	59	40	70	15	8	42	25	134	393
참석	14	5	19	6	2	1	5	121	173

자료: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념식 등 행사 계획 및 진행 시 기념품을 과다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은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연례적·반복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을 포함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액 4억 6,100만원 중 4억 1,600만원이 집행되고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61	-	461	416	-	45	441
운영비	285	-	285	253	-	32	272
여비	13	-	13	13	-	-	13
업무추진비	44	-	44	44	-	-	44
직무수행경비	83	-	83	71	-	12	78
유형자산	36	-	36	36	-	-	34

자료: 헌법재판소

나.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 제고 필요

❑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써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등이 이에 해당함.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최근 4년 집행률을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약 10%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4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711	711	-	△10	-	701	617 [617]	86.8	88.0	-	84
2021	710	710	-	21	-	731	673 [673]	94.8	92.1	-	58
2022	463	451	-	-	-	451	408 [408]	90.5	90.5	-	43
2023	461	461	-	-	-	461	416 [416]	90.2	90.2	-	45

자료: 헌법재판소

❑ 2023년도 결산 세부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특근매식비(210-05),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직책수행경비(250-02) 세목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4개 세목의 불용액 합계가 3,300만원으로 기본경비 전체 불용액 4,500만원의 약 73%에 이르고 있음.

<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결산 세부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목 코드	목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10-01	일반수용비	160	160	-	-	-	160	156	-	4
210-02	공공요금및제세	58	58	-	-	-	58	53	-	5
210-05	**특근매식비**	**9**	**9**	**-**	**-**	**-**	**9**	**3**	**-**	**6**
210-07	**임차료**	**25**	**25**	**-**	**-**	**-**	**25**	**17**	**-**	**8**
210-08	**유류비**	**11**	**11**	**-**	**-**	**-**	**11**	**4**	**-**	**7**
210-09	시설장비유지비	1	1	-	-	-	1	-	-	1
210-16	기타운영비	19	19	-	-	-	19	19	-	-
220-01	국내여비	3	3	-	-	-	3	3	-	-
220-02	국외업무여비	10	10	-	-	-	10	10	-	-
240-02	관서업무추진비	44	44	-	-	-	44	44	-	-
250-02	**직책수행경비**	**83**	**83**	**-**	**-**	**-**	**83**	**71**	**-**	**12**
430-01	자산취득비	36	36	-	-	-	36	36	-	-
합 계		461	461	-	-	-	461	416	-	**45**

자료: 헌법재판소

- 특근매식비는 하루 2시간 이상 업무시간 외 근무를 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7,000원(1식 1인 기준)의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되어지는데, 매년 얼마나 집행되어질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최근 3년 50%를 넘는 불용률은 과도하다고 보여짐.

< 최근 4년 특근매식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20	12	-	12	8	-	4	33.3%
2021	12	-	12	5	-	7	58.3%
2022	12	-	12	3	-	9	75.0%
2023	9	-	9	3	-	6	66.7%

자료: 헌법재판소

- 임차료는 업무용 차량(2,340만원 편성) 및 교육용 버스(200만원 편성)의 임차를 위하여 편성되어진 세목[325]으로 업무용 차량의 임차를 위한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임차료 지출은 예산편성 시 이미 예측[326]할 수 있는바 과다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 임차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20	25	-	25	16	-	10	40.0%
2021	25	△10	15	15	-	-	-
2022	25	△1	24	15	-	9	37.5%
2023	25	-	25	17	-	8	32.0%

자료: 헌법재판소

325) 집행액은 업무용 차량 임차: 14,856천원, 교육용 버스 임차: 1,950천원임

326) 헌법재판연구원은 업무용 차량을 각각 2020년 5월, 2020년 7월부터 5년 임차하였고, 총 임차금액은 74,280천원으로 2024년에는 해당 금액의 1/5인 14,856천원의 임차료를 예측할 수 있었음.

- 유류비는 관용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편성되어진 세목으로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은 2대의 업무용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집행율이 50%를 하회하여 저조함. 특히 2023년은 2022년에 비해 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집행액은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이 줄어들어 불용율이 63.6%에 달함.

< 최근 4년 유류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20	9	-	9	3	-	6	66.7%
2021	9	-	9	3	-	6	66.7%
2022	9	-	9	5	-	4	44.4%
2023	11	-	11	4	-	7	63.6%

자료: 헌법재판소

- 직책수행경비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월별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최근 4년 직책수행경비 지급 추이를 살펴볼 때 대략 집행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4년 직책수행경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내역변경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20	83	△10	73	73	-	-	-
2021	83	△14	69	69	-	-	-
2022	83	-	83	73	-	10	12.0%
2023	83	-	83	71	-	12	14.5%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2023년도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관련 세목들의 2024년도 예산을 소요에 맞게 감액[327]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의 성격상 한번 감액이 이루어지면 증액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최근 수년간의 이·전용, 불용 등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헌법재판소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27) 특근매식비: 9백만원('23)→7백만원('24), 임차료: 25백만원('23)→17백만원('24), 유류비: 11백만원('23)→9백만원('24), 직책수행경비: 83백만원('23)→78백만원('24)

5.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처리사건의 양적 증가와 심판대상의 다양화 및 전문화 경향에 대응하여 재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충실한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판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및 헌법재판소장의 자문기구인 헌법 및 헌법제도 연구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2023년도 예산액 6억 500만원 중 5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활동운영지원	605	–	605	584	–	21	748
헌법재판업무지원	231	–	231	216	–	15	247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지원비	246	–	246	246	–	–	221
기록물 관리 및 보존	89	–	89	85	–	4	54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10	–	10	7	–	3	10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30	–	30	30	–	–	30
기록물보존서고 RFID 설비 구축	–	–	–	–	–	–	186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3년도 본안심리에서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들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년 3개월임. 이는 2014년도의 약 1년 6개월보다 9개월이, 접수건수가 2,000건을 넘어선 2017년도의 약 1년 1개월보다는 1년 2개월이 길어진 기간임.

< 2014년도 이후 연도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 현황 >

(단위: 건)

연 도	신규접수	처리사건					미제[328]
		취하(A)	지정부 각하(B)	전원부 본안심리 처리(C) (건 / 처리기간)		합계(D)	
2014	1,969	23	1,478	387	542.5(약 1년 6개월)	1,888	824
2015	1,859	26	1,344	567	535.1(약 1년 6개월)	1,937	746
2016	1,951	61	1,342	573	463.4(약 1년 3개월)	1,976	721
2017	2,626	25	2,031	369	385.8(약 1년 1개월)	2,425	922
2018	2,427	50	1,796	601	609.3(약 1년 8개월)	2,447	902
2019	2,730	46	2,018	455	521.9(약 1년 5개월)	2,519	1,113
2020	3,241	54	2,467	521	640.8(약 1년 9개월)	3,042	1,312
2021	2,827	52	2,060	509	661.6(약 1년 10개월)	2,621	1,518
2022	2,829	39	2,201	435	779.1(약 2년 1개월)	2,675	1,672
2023	2,591	42	1,938	679	835.3(약 2년 3개월)	2,659	1,604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제38조[329]는 심판절차의 종류와 관계없이 헌법재

328) 전년도까지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은 사건과 당해연도에 접수되어 처리되지 않은 사건의 합(해당 연도 말 기준)

329) **「헌법재판소법」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

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음[330].

- 2023년 말 현재 평균 처리기간인 2년 3개월은 법률상 처리기간인 180일을 4배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331]에서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될 수 있는바 심판사건의 처리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매년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증가[332]하고 있고, 일부 헌법재판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연도 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미제 헌법재판의 수가 점점 늘어나 2023년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30) **2009. 7. 30. 2007헌마732**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180일의 심판기간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기간 경과 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심판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모든 헌법재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내리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적으로 적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오히려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31)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32) <참고자료> 2.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처리 현황,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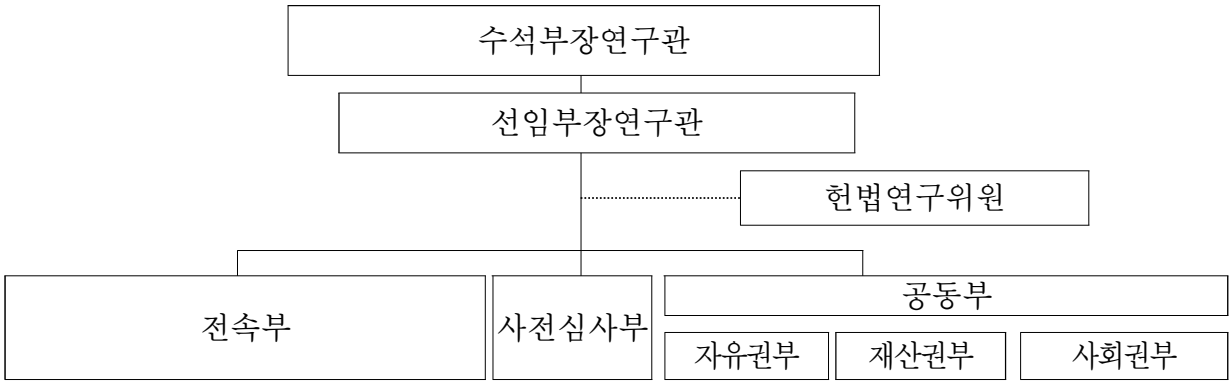
말 기준 1,600건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 신속한 국민의 권리 구제 및 빠른 분쟁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위해서는 적시에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의 처리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임.

(1) 연구부의 효율적 운영

❑ 헌법재판의 재판부는 본안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와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로 되어 있는데, 주로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재판부에 보고하는 사전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전원재판부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통하여 재판부를 지원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연구부 조직 >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지원하여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고 있는 헌법연구관[333]의 충분한 인력 확보가 필요해 보이나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임[334].

< 연구부 헌법연구관 정원 및 현원 현황 >

(2024. 6. 30. 기준)

구 분			헌법연구관 정원	헌법연구관 현원	파견 법관	파견 검사	담당 업무
헌법 재판소 연구부	연구부 행정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비서실장, 기획심의관, 공보관)		66	5	-	-	연구부 총괄 및 행정
	전속부			34	8	3	재판관에 배속되어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사전심사부			6	-	-	접수된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여부 검토
	공동부	자유권부		19	1	1	재판관에 배속되지 않고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재산권부					
		사회권부					
합계			66	64	9	4	

자료: 헌법재판소

333)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334) 최근 5년 헌법연구관 증원 내역: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1명, 2022년 4명, 2023년 3명

❑ 이에 연구부 조직과 인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헌법재판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부 중 공동부 내에 장기미제부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음(2023. 2. 12. ~ 2024. 2. 18.). 「헌법재판소법」 제34조제1항 단서[335]를 근거로 장기미제부에서 어떤 사건을 검토하였는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는 2022. 12. 31. 기준 4년 경과 장기미제사건 46건 중 41건에 대해 종국결정을 선고[336]하였음.

- 또한, 올해 헌법재판소는 연구부 내에 지정재판부 사전심사[337]의 지원을 전담하는 사전심사부를 신설(2024. 2. 19.)하였음.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의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사전심사(30일 이내 요건심사)를 위한 연구·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과도한 사전심사량이 헌법재판 처리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전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추후 장기미제부와 사전심사부 설치가 헌법재판 처리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조직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심판업무 지원을 위한 조직개편과 적

335) **「헌법재판소법」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336) <참고자료> 3. 2023년도 처리된 2022. 12. 31. 기준 4년 경과 사건 목록, 112P
337)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재적소의 헌법연구관 배치로 연구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헌법재판이 적절한 기간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청구 남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 필요

❑ 2023년도에 50건 이상의 헌법재판을 청구한 동일인은 6명으로 그 접수건수는 총 접수건수 2,591건 대비 926건(35.7%)에 이르고 있음.

< 최근 5년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한 헌법재판 현황 >

연 도	접수 건수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		
		동일인 수	건수	전체접수 대비 비율
2019	2,730	6명	1,027	37.6%
2020	3,241	6명	1,193	36.8%
2021	2,827	5명	846	29.9%
2022	2,829	7명	1,112	39.3%
2023	2,591	6명	926	35.7%

자료: 헌법재판소

❑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헌법재판 청구는 복잡다기한 법적분쟁 및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으려는 것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으나,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헌법상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동일인에 의한 다량 청구의 건 대부분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사 전 각하[338]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한 헌법재판 처리 결과 >

(단위: 건)

연 도	동일인이 50건 이상 청구한 건수	결과		
		각하	합헌	심리중
2019	1,027	1,021	6	-
2020	1,193	1,192	1	-
2021	846	845	1	-
2022	1,112	1,109	-	3
2023	926	923[339]	-	3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2021년 '남소사건 처리방안 검토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2. 9. 28.)하여 남소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340]을 마련하였음.

---

338)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339) 각하된 923건 중 922건(5건은 다른 각하사유와 중복)은「헌법재판소법」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써 ①청구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 ②구체적 주장이 없는 청구인 경우, ③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의 청구인 경우 등임.

- 해당 규정은 단지 전자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면접수가 가능해 그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전자접수가 제한되어진 경우는 없었음.

❑ 「헌법재판소법」 제37조[341]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구 남발 등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활용되고 있지 않음.

- 헌법재판소는 '남소사건 처리방안 검토 T/F'의 검토 결과[342] 현행법

---

340)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사용자등록 · 철회 등)** ① ~ ③ (생략)
④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2. 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 · ⑥ (생 략)

341) **「헌법재판소법」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42) **T/F팀 공탁금 제도 검토의견**: 공탁금의 납부명령 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고, 남소 방지의 효과는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의문. ①헌법재판소법은 공탁금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공탁을 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행 규정만으로 남소 건의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 개정이 필요, ②남소사건의 수와 예상되는 공탁금 납부명령의 횟수와 금액, 실제 납부될 공탁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③ 남소사건 청구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탁금 납부명령을 내리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고 남소 방지의 효과는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음

의 공탁금 납부명령 대상이나 국고귀속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공탁금 처리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탁금 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로써 헌법재판소규칙으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활용하고 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헌법재판 청구로 인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헌법소원 제도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탁금 제도의 내실화 등을 포함한 여러 대응책을 논의한 후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본부운영지원(1032-302)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본부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소 홍보(공보)활동, 청사관리 등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39억 2,600만원 중 3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본부운영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부운영지원	3,926	3,926	-	3,926	3,587	-	339	4,624
홍보(공보)활동	299	299	-	299	291	-	8	464
정책연구용역 등	50	50	-	50	45	-	5	50
차량 임차	126	126	-	126	126	-	-	126
노후사무집기류 교체 등	69	69	-	69	66	-	3	53
청사보안장비 등 확충	81	81	-	81	82	-	△1	43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45	45	-	45	41	-	4	45
사회복무요원 운용	74	74	-	74	71	-	3	87
사이버어학교육 등	46	46	-	46	43	-	3	46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1,503	1,503	-	1,503	1,380	-	123	1,548
청사관리	264	264	-	264	243	-	21	270
시설 보완공사	695	695	-	695	621	-	74	1,393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516	516	-	516	420	-	96	-
출입통제시스템 증설공사	95	95	-	95	95	-	-	-
헌법재판소 전시관 운영	27	27	-	27	27	-	-	34
헌법재판소 도서관 운영 및 관리	35	35	-	35	35	-	-	35
공관 환경개선공사	-	-	-	-	-	-	-	430

자료: 헌법재판소

나. 위원회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도입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23년 4,500만원을 집행하여 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정책연구용역명	예산액	결산액	수행기간	계약방식
2019	지적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 방법-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	32	30	'19.6~10.	수의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	29	30	'19.8~10.	
2020	AACC 및 연구사무국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5	25	'20.4~10.	
	비교법적 접근을 통한 장애 개념의 헌법적 이해	25	25	'20.6~10.	
2021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구 및 교육기능 강화방안	20	18	'21.6~10.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와 헌법재판-부양, 양육, 상속 등을 중심으로-	25	23	'21.6~10.	
2022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한 심판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45	41	'22.7~10.	제한경쟁
2023	헌법재판과 사실인정-헌법재판소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50	45	'23.6~10.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무처 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343]하고 있음.

❑ 동 내규 제5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연구목적 달성 여부 및 연구의 충실도 등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지만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만 개최하였을 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동 내규 제12조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 향후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344]하고 있는 만큼, 연구결과의 평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

343)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4조(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과제담당관 및 평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과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44)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2조(연구결과의 평가)** ②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안건 >

연도	개최 일자	안건
2021	4. 13.	2021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2022	3. 31.	2022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2023	3. 22.	2023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자료: 헌법재판소

❑ 다음으로, 동 내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활용상황 점검 시기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반면, 정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345]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도 유사한 규정을 두어 그 활용결과를 점검하고 있음[346].

34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46)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제12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검토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연구과제명				
부서/과제검토관				
연 구 단 체		책임연구원		
연 구 기 간	~ (개월)		연구비	
연 구 목 적				
활 용 구 분	□ 법령 제·개정 □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 제도 및 정책 개선 □ 기타( )			
연 구 목 적				

-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상황을 점검할 경우 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활용도를 고려하게 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활용상황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	

다.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는 공사비 낙찰차액 사용 문제

❑ 헌법재판소는 2023년 동 사업의 공사비(420-03)를 통해 총 6건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11억 156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 헌법재판소 공사비 집행내역 >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예산 편성액	공고 금액	낙찰 금액	낙찰 차액	집행액
시설 보안 강화 및 수목식재공사		2023. 3. 13.~4. 6.	48,000	48,000	41,962	6,038	41,962
전력감시시스템 교체공사		2023.4.3.~4.22.	21,900	21,888	20,355	1,533	20,355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조달구매)		2023.4.17.~6.20.	95,510	–	–	–	95,359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건축 공사	2023. 5.10.~12.5.	500,000*	439,080	388,338	50,742	370,107
	전기 공사	2023. 5.5.~11.30.		21,890	20,155	1,735	19,240
	자재 구매 등	2023.4.21.~11.5.		–	–	–	25,000
	소 계						414,347
보일러 교체공사	기계 공사	2023. 7.13.~11.14.	594,500*	283,159	226,085	57,074	212,320
	전기 공사	2023. 9.8.~10.20.		–	–	–	5,225
	자재 구매 등	2023. 6.7.~11.9.		–	–	–	303,293
	소 계						520,838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2023. 8.	–	–	–	–	8,700
합 계							1,101,561

*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보일러 교체공사는 공종별 금액 분리 없이 총공사금액으로 예산 편성되었고, 동 공사에서의 낙찰금액과 집행액 간 차이는 법정경비(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준공정산으로 발생함.

자료: 헌법재판소

- 이 중 시설 보안강화 및 수목식재공사, 전력감시시스템 교체공사,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보일러 교체공사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되어 있던 공사이고,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계획에 없던 공사임.

❑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은 공사비 낙찰차액 사용 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347]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사전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통해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예산을 집행하였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낙찰차액이 아니라 보일러 교체공사의 예산편성액과 공고금액 간 차이인

---

347) 예산집행지침 중 건설비 낙찰차액 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마. 낙찰차액 처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 (1) 낙찰차액 처리
>
>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고 불용처리한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 (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 ○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임의 집행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11조(지침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1.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및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 부과 또는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 조정 또는 유보
> 2.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 포함)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 1.)

“예산잔액”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해당 공사의 실시설계 결과 당초 예산 편성액 대비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가 더 적어 예상되는 공사비 불용액을 활용하여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함.

- 그러나 ①예산집행지침 상 예산잔액이라는 개념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에서 잔액(불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 물량 증대 등으로 공사비 집행이 증가할 수 있어 공사비 집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②집행잔액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비가 정산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비[348]이므로 이를 집행잔액을 통해 실시한 공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349][350] 등을 고려할 때, 동 공사는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348) 예산집행지침이 보조금과 관련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은 사업 완료 및 정산 후 발생하는 경비임을 알 수 있음.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자료: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3. 1.)

349) 재판관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진행된 2023년 8월 이전에는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보일러 교체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하여 해당 공사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없음.

350) 재판관 냉난방기 설치공사에서 사용된 예산 중 동 공사 이전에 완료된 “출입통제시스템 교체공사”의 경우에만 집행잔액을 사용[15만 1,000원 : 95,510천원(예산편성액)-95,359천원(집행액)]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낙찰차액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아야 함.

7.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헌법재판 경연대회·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정보자료실 운영,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8억 6,700만원 중 1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67	1,867	–	1,867	1,837	–	30	1,878
헌법재판연구활동	137	137	–	137	125	–	12	137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6	16	–	16	12	–	4	16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72	72	–	72	60	–	12	72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43	43	–	43	44	–	△1	43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1,488	1,488	–	1,488	1,488	–	–	1,488
정보자료실 운영	65	65	–	65	65	–	–	55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연수	21	21	–	21	19	–	2	21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19	19	–	19	19	–	–	19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	1	1	–	1	–	–	1	–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보안	5	5	–	5	4	–	1	5
사이버 강좌 재개발	–	–	–	–	–	–	–	22

자료: 헌법재판소

나.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헌법재판연구원은 동 사업과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사업에서 총 18건의 발간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일반수용비 총 1억 1,43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간물 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발간물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집행일자	발간물명	결산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1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2023-12-19	2023년도 교육용 법령집	1,210	○○○○○	수의
2		2023-05-08	2022년도 연차보고서	3,960	○○○○○	
3		2023-12-12	2023년도 헌법재판연구원 홍보책자	6,000	△△△△	
4		2023-01-20 2023-08-22	2023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8,786	○○○○○	
5		2023-10-23	2023년도 군법무관 직무연수	2,138	○○○○○	
6		2023-03-02	2023년도 헌법연구관 직무연수	3,707	○○○○○	
7		2023-06-28	2023년도 국선대리인 초청 연수	2,086	○○○○○	
8		2023-03-16	2023년도 헌법재판소 신임 일반직공무원 직무연수	2,009	○○○○○	
9		2023-07-26 2023-12-19 2023-12-21	2023년도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실무교육	5,259	○○○○○	
10		2023-09-07 2023-12-21	2023년도 대학생 헌법교육 기초과정	3,602	○○○○○	
11		2023-04-03 2023-05-08 2023-06-22	2023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헌법교육	13,324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집행일자	발간물명	결산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2023-10-27 2023-12-19				
12	헌법재판 연구원 운영지원	2023-02-03 2023-02-10 2023-03-28 2023-06-05 2023-07-27 2023-09-21 2023-11-22	2023년도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등(8종)	11,060	○○○○○	
13		2023-03-28	2022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발간용역 헌법재판연구원	16,685	○○○○○	
14		2023-10-17	2023년도 상반기 연구보고서 발간용역	14,990	▲▲▲▲▲ ▲▲▲▲▲	
15		2023-08-22 2023-12-21	2023년도 헌법재판 전문학술지(헌법재판연구 제10권 1,2호)	10,900	◇◇◇◇◇	
16		2023-06-05 2023-12-21	2023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3종)	2,281	▽▽▽	
17		2023-09-22	2023년도 제12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518	○○○○○	
18		2023-12-19	2023년도 제7회 우수헌법수업 경연대회 자료집	4,840	○○○○○	
합계				114,355		

자료: 헌법재판소

❑ 첫째,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도에 체결한 총 18건의 수의계약 중 14건(77.8%)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와 체결하였음.

- 발간물 계약은 모두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요건[351]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과다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우려가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헌법재판연구원은 총액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용역을 두 차례 계약으로 나뉘어 수의계약을 진행한 문제가 있음(위 표 연번 13·14).

- 헌법재판연구원은 매년 연구보고서 작성 계획을 수립하고 두 차례에 나누어 이를 발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전년도에 작성이 완료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반기에는 발간 당시까지 작성이 완료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생 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타. (생 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 차. (생 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생 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 6) (생 략)
나. ~ 아. (생 략)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주제 선정 및 발간 방식 >

□ **연구보고서 주제 선정 방식**

ㅇ 연구보고서 주제는 각 팀장이 재판부 및 연구부의 연구과제 제안 등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제안회의(연구교수부장, 각팀장, 헌법연구위원, 외부교수 참석)에 이를 회부하여 과제제안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과제를 선정함

- 주제선정 및 발간계획은 연초에 연구기본계획·연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

□ **연구보고서 발간 주기**

ㅇ 연구보고서는 연구기본계획에 의해 1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약 6개월의 연구를 실시한 후 1년에 두 차례 책자로 발간하고 있음

자료: 헌법재판소

- 이와 같이 연초에 연구보고서 작성 계획을 수립하여 연례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두 차례 발간하고 있으므로 연구보고서 발간 계약은 연초에 총액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러한 발간 계약을 분할하여 각 계약 금액이 2,000만원 미만[352]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함. 즉, 헌법재판연구원은 계약 총액 규모상 경쟁입찰 대상이 될 수 있을 연구보고서 발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두 차례로 분할한 것으로 보임.

352) 수의계약 요건에 관하여는 각주 48) 참고

- 이와 같은 발간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분할 수의계약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353].

❑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할 발간 계약을 분할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다.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참여 및 수상작 활용도 제고 필요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는 헌법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여 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참여할 수 있음.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요 >

- **(대회 운영)** 매년 상반기 교사들의 강의계획서를 접수하여, 예선(서면심사)과 본선(강의시연)을 종합 평가하여 총 8명 시상
- **(참가 대상)** 전국 초·중·고교 교사 *'21년부터 초등교원까지 참가대상 확대
- **(활 용)** 수상자의 강의계획서는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교원연수 시 교사들에게 직접 공유되며,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전국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심사수당 등 일반수용비 723만원, 포상금 1,200만원 등 총 1,923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예산집행 내역 >

비 목	집행액	비 고
일반수용비 (210-01)	723만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 심사수당, 행사물품 · 웹포스터 · 자료집 제작
포상금 (310-03)	1,200만원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상금
합 계	1,923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교사들의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동 경연대회에 2021년에는 17인, 2022년에는 25인, 2023년에는 16인의 교사가 참가하여 그 수가 높지 않은 상황임.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및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비교 >

구 분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참가(개인)	입상(개인)	참가(팀)	입상(팀)
2021년	17	8	52	8
2022년	25	8	58	8
2023년	16	8	55	8
비 고	- 대상(300만원) 1명 - 금상(200만원) 1명 - 은상(150만원) 2명 - 동상(100만원) 4명		- 헌법재판소장상 1개 팀 (상금: 500만원) - 금상 1개 팀 (상금: 400만원) - 은상 2개 팀 (상금: 300만원×2팀=600만원) - 동상 4개 팀 (상금: 200만원×4팀=800만원) - 우수변론상(개인상) 1명 (상금: 100만원)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경우 참여팀 수가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약 3배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입상팀 수는 동일하여 상대적으로 우수 헌법경연대회가 입상 경쟁률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이 우수한 헌법교육 강의계획서를 발굴하는 것인 만큼,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우수한 강의계획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헌법수업 경연대회 수상작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수상자의 강의계획서는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원연수 시 교사들에게 제공되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원연수의 참여 교사는 매년 제한되어 있고[354], 홈페이지 게시의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교사는 이를 활용하기 어려움.

- 수상자 강의계획서를 매년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발송하여 일선 학교까지 전달하게 된다면 헌법 관련 교육을 강의하는 교사들이 이를 직접 인지할 수 있어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고, 나아가 교사들이 이러한 경연대회를 알게 되어 경연대회에 대한 참여 의욕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교사 참여 및 경연대회 수상작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동 경연대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54)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87명, 2022년 145명, 2023년 96명이 교원 연수를 받았음.

8. 국제교류(1034-305)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제교류 사업은 베니스위원회, 세계헌법재판회의,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을 참석하고,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AACC 연구사무국 운영, AACC 연구 컨퍼런스 개최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5억 7,300만원 중 5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국제교류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교류	573	573	15 △15	573	501	-	72	587
베니스위원회 참석	74	74	-	74	70	-	4	74
세계헌법 재판회의 등 참석	26	26	-	26	3	-	23	30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55	55	-	55	56	-	△1	55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42	42	1 △1	42	20	-	22	42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42	42	-	42	24	-	18	42
AACC 연구사무국 운영	111	111	14 △4	121	122	-	△1	121
AACC 연구 컨퍼런스	185	185	-	185	182	-	3	185
AACC 연구사무국 연구 · 조사	37	37	△10	27	24	-	3	37

자료: 헌법재판소

나. 국외업무여비 집행 부진

❑ 2023년 동 세부사업 내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등 내역사업의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부진하였음.

< 2023년도 국제교류 내역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집행 부진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국외업무여비 (220-02)	18	-	0%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19	7	36.8%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26	9[355]	34.6%
합계		63	16	25.4%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사업은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헌법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업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당시 세계선거재판회의 의장기관인 인도네시아 선거감독위원회 및 기술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멕시코 연방선거재판소에서 2023년 7월 총회 미개최 결정을 통보하여 동 내역사업의 국외업무여비가 집행되지 못하였음.

- “주요 헌법재판기관 등 세미나 개최” 사업은 각국 헌법재판기관 및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 저명 헌법학자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간담

355) 국외업무여비 집행액 900만원은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쇼트코스 참석에 따라 집행

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장을 초청하여 강연회 등을 진행하였는데, 캐나다측에서 왕복 항공임을 자비 부담하고 헌법재판소측은 숙박비만 부담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함.

-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사업은 AACC 총회, 이사회 등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사업으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당초 몽골에서 개최되는 AACC 정례이사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2023년 4월 몽골 헌법재판소가 정례이사회를 2023년 6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동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여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함.

❑ 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안 편성 시 국제회의 개최 여부 및 방식(대면·화상)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초청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라 항공임 및 체재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예산안 편성 시 초청국가를 정해 그에 따라 항공임 및 체재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예산안 편성 시 국제회의와 초청사업에 수반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면밀히 산정·반영하여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재판자료확충(1035-306)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재판자료확충 사업은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각종 자료 및 공보 등을 제작·발간하고 헌법재판소 내 도서관 자료를 확충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액 4억 2,000만원 중 4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재판자료확충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재판자료확충	420	-	420	402	-	18	470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7	-	7	8	-	△1	7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발간	14	-	14	11	-	3	14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발간	9	-	9	6	-	3	9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37	-	37	38	-	△1	37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32	-	32	36	-	△4	32
헌법논총 발간	27	-	27	17	-	10	27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	50	-	50	42	-	8	50
도서관자료 구입	216	-	216	216	-	-	266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28	-	28	28	-	-	-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	-	-	-	-	-	13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오디오북 제공	-	-	-	-	-	-	15

자료: 헌법재판소

나. 연례적 발간물의 발간 수량 재검토 필요

❑ 헌법재판소는 재판자료확충 세부사업[356]을 통해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공보, 헌법논총 6종[357]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음.

< 최근 4년 연례적 발간물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발간물명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2020	10	9	1	10
	2021	7	7	0	0
	2022	7	7	0	0
	2023	7	8	△1	△19.4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2020	18	12	6	33.3
	2021	17	8	9	51.2
	2022	15	8	7	42.8
	2023	14	11	3	23.7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20	9	8	1	11.1
	2021	9	5	4	45.4
	2022	9	5	4	41.0
	2023	9	6	3	34.8
헌법재판소판례집	2020	60	40	20	33.3
	2021	45	26	19	42.4
	2022	40	31	9	23.7
	2023	37	38	△1	△2.8
헌법재판소공보	2020	46	28	18	39.1
	2021	40	34	6	16.1
	2022	36	29	7	19.8
	2023	32	36	△4	△13.4
헌법논총	2020	33	18	15	45.5
	2021	31	16	15	49.2
	2022	30	20	10	32.1
	2023	27	17	10	35.4

자료: 헌법재판소

356) 세부사업 중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은 외국판례나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부 발간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번역료가 주된 예산이고,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은 2015년 12월 발간 이후 제3개정판을 발간하는 것으로 연례적 발간물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357) **①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협력·교환자료로 활용, **②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판례를 법조문별·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민들이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적인 연구자료로 활용, **③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매년 선고되는 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요 결정을 선정하여 해설서를 발간·배포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용, **④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 중 중요한 것을 선정하여 발간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 **⑤헌법재판소공보**: 헌법재판소 규칙, 인사, 공지사항, 판례 등의 내용으로 매월 간행됨, **⑥헌법논총**: 헌법·헌법재판 관련 논문의 공모 및 논문집 발간을 통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헌법재판에 활용

❑ 그동안 해당 발간물들은 결산 심사를 통해 연례적 집행부진 등에 대하여 국회의 지적을 받아 왔고, 헌법재판소는 후속 조치로 해당 예산을 감액하거나 일부 발간물 수량을 조정해 왔음.

< 최근 4년 연례적 발간물 발행부수 >

(단위: 수량)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상 발행부수	실 발행부수	예산상 발행부수	실 발행부수	예산상 발행부수	실 발행부수	예산상 발행부수	실 발행부수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900	900	900	900	900	800	800	800
헌법재판소판례 요지집	6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헌법재판소결정 해설집	6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헌법재판소 판례집	800x2회	550x2회	550x2회	550x2회	550x2회	550x2회	500x2회	500x2회
헌법재판소 공보	75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500x12회
헌법논총	600	550	550	550	550	550	500	500

자료: 헌법재판소

❑ 해당 발간물들은 누구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한바, 적정 배부수량의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발간수량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첫째, 해당 발간물들은 총 발행수량의 10% 이상을 재고로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임. 이에 이전 재고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재고 수량의 재조정이 필요함.

- 둘째, 국가기관 등에 배부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그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헌법재판소판례집의 경우 그 페이지 수가 1088쪽에 달해 책자 형태로 업무에 활용하기보다는 PDF파일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 셋째, 전직 주요인사, 재판소 소관 위원회 외부 위원 등에게 배부하는 수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전직 주요인사 등에 발간물을 일률적으로 배부하기보다는 해당 배부 인사 또는 위원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여 배부수량을 결정해야 함.

< 2023년도 연례적 발간물 배부처 >

(단위: 수량)

배부처	영문 판례집	판례 요지집	결정 해설집	판례집	공보 (1회x12월)	논총
헌법재판소	139	92	131	137	132	133
(재고)	(120)	(88)	(55)	(60)	(62)	(53)
대학 도서관	30	89	107	99	99	106
국회	30	3	5	31	30	30
법원·검찰	2	16	37	37	34	24
정부기관	3	44	69	52	59	60
법조계	1	15	25	20	19	20
언론사	-	3	4	4	4	4
전직 주요인사, 재판소 소관 위원회 외부 위원 등	12	-	67	61	61	70
국외기관 (대사관 포함)	463	-	-	-	-	-
총 발행수	800	350	500	500	500	500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연례적 간행물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는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부수량의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 책자 발간을 지양하고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판결 등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법률정보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10.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은 헌법재판 업무의 정보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안정적인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한 노후화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장비 교체·확충과 사이버 보안 활동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82억 4,200만원 중 81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3년도 헌법재판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헌법재판정보화	8,242	8,242	26 △26	8,242	8,163	-	79	6,443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	836	836	-	836	834	-	2	896
정보시스템 확충	3,831	3,831	-	3,831	3,785	-	46	1,670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767	1,767	△26	1,741	1,706	-	35	2,004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1,590	1,590	26	1,616	1,623	-	△7	1,637
일반운영 등	217	217	-	217	214	-	3	236

자료: 헌법재판소

나.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시 사전 계획 미흡

❑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일반연구비 2,750만원을 집행하여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음.

<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관련 계약 현황 >

계약명	비 목	금 액	계약기간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일반연구비 (260-01)	2,750만원	2023. 8. ~11.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재구성

❑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에 동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동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아니하여 8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그 운영을 개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단 공식 운영을 보류하였고, AACC 연구사무국의 주된 목적이 회원국 간 학술교류라는 점에서 AACC 및 정부 유관기관 홈페이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경 발발한 전쟁으로 홈페이지 구축 이전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

- 또한, AACC 회원국[358]에는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연구사무국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후 즉시 운영할 수도 있었다고 보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향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 사전에 구축·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358)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러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총 21개국)

다.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 활성화 필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장(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및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헌법재판센터를 구축하고 2010년 3월부터 헌법재판의 전자접수와 재판문서의 전자송달, 인터넷 기록열람 등의 전자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자헌법재판센터 홈페이지 >



❑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은 직접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여 국민의 헌법재판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도 해당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최근 5년 헌법재판 전자접수·전자송달 비율 >

(단위: 건, %)

	연 도	전체접수	전자접수	전자접수 비율
접수	2019	2,730	1,286	47.1
	2020	3,241	1,661	51.2
	2021	2,827	1,332	47.1
	2022	2,829	1,457	51.5
	2023	2,591	1,328	51.3
	연 도	전체송달	전자송달	전자송달 비율
송달	2019	9,176	3,324	36.2
	2020	11,572	4,610	39.8
	2021	10,485	4,577	43.6
	2022	10,583	4,367	41.2
	2023	12,638	4,965	39.2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전자송달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절약이 가능한 예산인 송달료도 매년 집행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그 활성화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최근 5년 송달료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9년	37,897	37,897	29,228	77.1
2020년	33,577	33,577	35,427	105.5
2021년	33,577	33,577	34,118	101.6
2022년	33,577	33,577	35,299	105.1
2023년	33,577	33,577	42,288	125.9

주) 송달료는 '본부기본경비(1011-250)'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로 편성되었음
자료: 헌법재판소

❑ 법원의 경우 소송에 있어서의 전자접수율・전자송달율이 2023년도 각각 92.5%・32.2%를 차지하고 있음. 법원의 소송(소송비용 개인이 부담, 전자접수 시 인지액 일정부분 할인)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송비용 국가가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더라도 전자적 처리에 따른 편리함 자체는 동일하므로 50%대인 헌법재판소의 전자접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5년 법원 소송사건 전자접수율・전자송달율[359] >

(단위: %)

연도	전자접수율	전자송달율
2019	70.6	25.4
2020	79.5	28.0
2021	87.3	29.8
2022	90.8	31.4
2023	92.5	32.2

자료: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재구성

❑ 위헌법률심판(헌가), 권한쟁의심판(헌라)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청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전자접수율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법원만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360]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자접수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359) 법원 전자소송 도입: 특허(2010. 4.), 민사(2011. 5.), 가사·행정(2013. 1.), 보전처분(2013. 9.), 회생·파산(2014. 4.), 시·군법원(2015. 1.), 민사집행·비송(2015. 3.)

360) **「헌법재판소법」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 최근 5년 심판사건 유형[361]별 서면접수/전자접수 건수 및 비율 >

(단위: 건,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 헌가사건					
- 서면 접수	31	20	38	43	25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0%	0%	0%	0%	0%
○ 헌나사건					
- 서면 접수	-	-	1	-	4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	-	0%	-	0%
○ 헌다사건					
- 서면 접수	-	-	-	-	-
- 전자 접수	-	-	-	-	-
- 전자접수율	-	-	-	-	-
○ 헌라사건					
- 서면 접수	4	3	-	1	-
- 전자 접수	2	2	2	4	10
- 전자접수율	33.3%	40%	100%	80%	100%
○ 헌마사건					
- 서면 접수	1,183	1,262	1,220	1,161	1,030
- 전자 접수	879	1,210	981	1,161	905
- 전자접수율	42.6%	48.9%	44.6%	50%	46.8%
○ 헌바사건					
- 서면 접수	226	295	236	167	204
- 전자 접수	405	449	349	292	413
- 전자접수율	64.2%	60.3%	59.7%	63.6%	66.9%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은 대리인 선임이 필수[362]적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운영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예정자[363]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자접수를 독려할

361) 헌가: 위헌법률심판, 헌나: 탄핵심판, 헌다: 정당해산심판, 헌라: 권한쟁의심판,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62)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3) 헌법재판소는 2024년 현재 80명의 국선대리인예정자명부를 운영하고 있음.

필요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챗봇시스템인 '헌재톡[364]'을 활용하여 전자접수·전자송달의 활용방법 및 그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023년도 '헌재톡' 이용 현황>

(단위: 명, 건)

구분(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이용자 수			215	181	259	243	301	149	301	226	250	176	186	108	2,595
대화건수	전체		602	606	671	860	983	911	1,063	563	541	490	486	360	8,136
	이용시간	평일 근무시간 (9시~18시)	363 (60%)	441 (73%)	384 (57%)	573 (67%)	637 (65%)	681 (75%)	753 (71%)	394 (70%)	321 (59%)	283 (58%)	315 (65%)	205 (60%)	5,350 (66%)
		평일 근무시간 외 + 공휴일	239 (40%)	165 (27%)	287 (43%)	287 (33%)	346 (35%)	230 (25%)	310 (29%)	169 (30%)	220 (41%)	207 (42%)	171 (35%)	155 (40%)	2,786 (34%)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시스템 편의성 개선을 통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의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64) 헌법재판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제도 및 각종 민원사항 등에 대해 문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함.

【대법원 소관 결산】

(전문위원: 김성완)

Ⅱ. 검토의견

1. 총 괄

(1) 사업 간 구분 명확화 및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재배정 관행 해소 필요

○ 최근 몇 년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내용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비용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하거나, 같은 세부사업을 여러 소속기관이 함께 집행하거나, 사업의 성격은 유사하지만 회계가 서로 다른 사업을 혼용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는 대법원이 등기특별회계 소관 사업에서 등기업무와 무관한 건물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의결공익사업들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소속기관이 함께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는 전산정보센터 공공요금을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고, 20

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참석 수당을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혼용하여 집행한 것과 도시가스료를 여러 세부사업에서 혼용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주의' 요구가 있었음.

<예산의 사업 간 혼용 집행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4) 등특 예산으로 법원사용자지원센터 등 공사비 집행 부적절	○ [지적사항] 대법원은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공사비(420-03) 중 일부를 법원 일반 업무에 대한 상담센터인 법원사용자지원센터와 법원 직원들의 숙소인 관악재 건물에 대한 보수비로 지출하였음 ○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세출은 등기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원사용자지원센터, 관악재 등 등기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비용 지출에 있어 등기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17) 의결공익사업 사업목적 명확화 및 재정운용방식 체계화 필요	○ [지적사항] 의결공익사업의 경우 다른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들에 비해 사업목적이 불명확하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여러 소속기관이 예산을 함께 집행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의결공익사업에서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운영경비'와 같이 공익사업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관련 기본경비 사업에서 함께 지출되고 있는 기본경비성 지출이 상당수 발견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각 의결공익사업을 사업내용과 집행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결공익사업에서 기본경비성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운용방식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6) 전산정보센터 공공요금을 다수	○[지적사항] 2021년도에는 전산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열요금, 승강기무선통신사용료 등 7개 공공요금을 '본부 운영지원(7031-303)',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등 5개 세부사업에서 16억	주의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사업에서 집행 지양 필요	원을 집행하였음 ○ 2020년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전산정보센터 관련 공공요금을 여러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시정조치요구를 한 바 있음 ○ 필요에 따라 여러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나눠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집행이라 할 것임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및 '법정중심재판운용(1143-403)' 등 4개 사업에서 분담하던 공공요금 예산을 '본부 운영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관하여 전산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단일하게 편성할 것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3) 예산집행실태 점검 및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회계 교육 강화 필요	○ [지적사항] 2020년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참석수당을 서로 프로그램이 다른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사업과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에서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예산 집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회계 교육을 주기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	주의
(8) 경상적 성격의 공공요금 기본경비 총괄 편성 필요	○ [지적사항] 대법원은 도시가스료 2억 3,710만원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본부 운영지원' 사업, '법정중심재판운영' 사업,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에서 각각 나누어 집행하는 등 공공요금 집행 시 세부사업간 예산을 혼용하고, 유류비 4,010만원을 도시가스료로 지출하는 등 유류비를 공공요금으로 사용하였음. ○ 경상적 성격의 공공요금은 기본경비에서 총괄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적합하고, 유류비로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한 것은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부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부적절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경상적 성격의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기본경비 사업에 총괄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의

자료: 각 회계연도별 국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안정보시스템, 예결위 심사보고서)

○ 우리나라의 예산은 회계별, 중앙관서별로 구분되며, 세출예산은 프로그램 예산구조로 편성되고 있음. 세출예산은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상하계층 구조로 편성되는 한편, 성질을 중심으로 목과 세목으로 다시 구분됨.

<프로그램 예산 구조(2024년 기준)>

분류 구분	분류 중 구분	분류항목 수
소관별(중앙관서별)	소관	60개
회계별	회계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0개
	기금	기금 67개
기능별	분야	16개
	부문	74개
	프로그램	652개
	단위사업	2,768개
	세부사업	8,400개
성질별	지출목	27개
	지출세목	114개

자료: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 재정연구분석 >> 재정사업 >> 프로그램 예산제도 소개

○ 국가예산을 이와 같이 사업별, 성질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각 중앙관서(국가예산의 소관별 주체,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포함)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 및 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책임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있음. 따라서 각 중앙관서는 사업목적, 수행주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각 세부사

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대법원 소관 예산의 경우, 각 세부사업이 사업목적과 사업수행주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같은 세부사업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여러 소속기관이 함께 혼용하고 집행하거나, 동일한 비용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혼용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됨.

○ 또한,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의 대법원 산하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와 별도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기본경비(7011-250)나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을 재배정받아 집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본부 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 예산이 법원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으로 재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 등과 같이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전체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다시 재배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소관 기본경비 등에 편성된 사법행정활동비, 과운영비 또는 공기청정기 등 집기 구입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본부 기본경비 등에서 해당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 예산 법원공무원교육원 재배정 사례>

(단위: 원)

일자	세부사업	세목	증(감)배정액	사유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50,000	각급법원 1/4분기 재판지원시설 운영비 예산 재배정
2023-01-1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특정업무경비 (250-03목)	18,780,000	각급법원 1/4분기 사법행정활동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상용임금 (110-03목)	46,560,000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 재배정(연액)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국내여비 (220-01목)	3,240,000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예산 재배정(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피복비 (210-03목)	1,654,000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예산 재배정(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2023-01-17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급식비 (210-04목)	8,400,000	소속기관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예산 재배정(피복비, 급량비, 교통비)
2023-02-0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관서업무추진비 (240-02목)	4,435,000	법원공무원교육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예산 재배정
2023-02-0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용역비 (210-14목)	4,146,000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2023-02-0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2,640,000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2023-02-0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피복비 (210-03목)	1,750,000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2023-03-03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50,000	각급법원 2/4분기 재판지원시설 운영비 예산 재배정
2023-03-0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특정업무경비 (250-03목)	19,260,000	각급법원 2/4분기 사법행정활동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3-0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기타운영비 (210-16목)	3,600	각급법원 과운영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3-06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기타운영비 (210-16목)	3,596,400	각급법원 과운영비 등 예산 재배정

일자	세부사업	세목	증(감)배정액	사유
2023-03-07	본부운영지원 (7031-303)	자산취득비 (430-01목)	2,667,000	공기청정기 구입 관련 예산 재배정
2023-04-04	본부 기본경비 (7011-250)	복리후생비 (210-12목)	2,010,000	동호회 활동지원금
2023-04-06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특정업무경비 (250-03목)	1,500,000	교육원 사법행정활동비 등 부족분 예산 재배정
2023-04-06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27,000	교육원 사법행정활동비 등 부족분 예산 재배정
2023-06-27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50,000	각급법원 3/4분기 재판지원시설 운영비 예산 재배정
2023-06-2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특정업무경비 (250-03목)	20,520,000	각급법원 3/4분기 사법행정활동비 등 예산 재배정
2023-07-0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국내여비 (220-01목)	3,825,000	2023년 상반기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예산 재배정
2023-09-06	본부운영지원 (7031-303)	상용임금 (110-03목)	△1,300,000	각급 법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 감배정
2023-09-26	본부운영지원 (7031-303)	기타운영비 (210-16목)	1,050,000	각급법원 4/4분기 재판지원시설 운영비 예산 재배정
2023-10-17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450,000	각급법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비 예산 재배정
2023-11-02	본부운영지원 (7031-303)	상용임금 (110-03목)	△15,000	각급 법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예산 감배정
2023-11-2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국내여비 (220-01목)	250,000	2023년 하반기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예산 재배정
2023-12-11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500,000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비 예산 재배정
2023-12-20	본부 기본경비 (7011-250)	포상금 (310-03목)	300,000	각급법원 우수공무원 포상금 예산 재배정
2023-12-28	본부운영지원 (7031-303)	상용임금 (110-03목)	△194,000	사회복무요원 기금예산 감배정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기본경비 관련 예산이 편성된 교육원 기본경비(7011-291)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이용, 전용, 내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부 기본경비(7011-250) 등의 사업 예산을 일부를 법원공무원교육원에 직접 재배정하여 해당 세부사업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예산의 재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이나 전용 등의 예산조정절차를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법원 소관 예산이 사업 수행 주체별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얼마만큼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옴.

○ 대법원의 경우 조직과 예산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예산구조는 이에 걸맞게 정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취지에 맞게 사업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이·전용 등 예산 조정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예산의 재배정 관행은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사법정책연구원 소관 예산 별도 편성 및 집행 필요

○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5개의 소속 기관을 두고 있음.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訟務)·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 이 중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3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2014년 1월 1일 설립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은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과 연구위원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고(「법원조직법」 제76조의2제1항),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법원조직법」 제76조의8),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사법정책연구원의 인원은 정무직(원장) 1명, 법관 12명, 일반직 34명, 임기제 13명 등을 합하여 총 60명임.

<사법정책연구원 인원구성>

(2022. 12. 31.)

구분	정무직	경력직											전문임기제	일반임기제	계
		법관				일반직									
		고법부장	지법부장	고법판사	판사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원장실	1														1
연구원실		1	3		8		2	3					9	3	29
사무국						2									2
총무과							1		1	7	3	4	1		17
연구지원과								1	3	4	2	1			11
계	1	1	3		8	2	3	4	4	11	5	5	10	3	60

자료: 법원행정처, 「2023 사법연감」, p.362

<2023회계연도 사법정책연구원 소관 예산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예산 배정액	집행액
계		6,462,026,190	6,459,220,780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915,000	915,000
	재판절차비용지원(1143-403)	2,308,000	2,308,000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116,636,620	116,403,110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564,391,000	564,391,000
	전문재판운영(1144-407)	11,016,000	11,016,000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49,490,000	49,489,900
	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1331-300)	2,880,000	2,880,000
	일반 인건비(7001-151)	5,265,201,110	5,265,197,610
	본부 기본경비(7011-250)	414,445,460	414,359,180
	본부운영지원(7011-303)	32,435,000	29,952,98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2,308,000	2,308,000

자료: 대법원 제출

○ 한편, 2023회계연도에 사법정책연구원에 배정된 예산은 일반 인건비(7001-151) 52억 6,500만원,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5억 6,400만원, 본부 기본경비(7011-250) 4억 1,4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64억 6,203만원이며, 이 중 64억 5,922만원이 집행되었음.

○ 그런데 사법정책연구원의 경우 대법원 산하 다른 소속기관과 달리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의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관 세부사업 예산의 일부를 재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2023회계연도 사법행정운영지원 프로그램(7000)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모두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지원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사법정책연구원은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지원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지 않음.

○ 각 소속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을 소속기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은 각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당 세부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각 소속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경우에도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

관과 같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보이므로, 이에 준하여 인건비, 기본경비 등 소관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3회계연도 사법행정운영지원 프로그램(7000)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일반회계	[7000] 사법행정운영지원			1,386,943	1,450,581	1,455,119	1,520,040
		[7001] 본부 인건비		1,184,406	1,228,315	1,237,214	1,288,541
			[151] 일반 인건비	1,184,406	1,228,315	1,237,214	1,288,541
		[7002] 소속기관 인건비		19,501	20,633	20,185	22,702
			[171] 도서관 인건비	5,711	6,327	6,113	6,712
			[181] 연수원 인건비	7,786	8,082	8,183	9,019
			[191] 교육원 인건비	6,004	6,224	5,889	6,971
		[7011] 사법운영 기본경비		76,548	82,517	82,477	84,834
			[250] 본부 기본경비	71,948	77,361	77,342	80,254
			[271] 도서관 기본경비	792	804	787	795
			[281] 연수원 기본경비	2,482	2,691	2,661	2,170
			[291] 교육원 기본경비	1,326	1,661	1,686	1,615
		[7031] 사법운영지원		106,488	119,116	115,244	123,963
			[303] 본부 운영지원	95,408	106,116	102,229	109,178
			[307] 도서관 운영지원	2,472	2,732.	2,577	2,825
			[308] 연수원 운영지원	5,400	6,460	6,511	8,003
			[309] 교육원 운영지원	3,208	3,808	3,927	3,957

* 일반회계 소관, 등기특별회계 제외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3) 복리후생비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 및 집행 필요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에 사용하여야 함.

<복리후생비(210-12목)의 용도>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12 복리후생비 1.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3.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5.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그런데 대법원의 복리후생비(210-12목)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210-12목)를 이와 같은 경비 외에 직원 워크숍이나 세미나, 체육행사 등에 집행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직원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예산을 다른 세목이 아니라 복리후생비(210-12목)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복리후생비를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에 집행한 사례>

(단위: 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집행 건명	지출금액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대법원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 체육행사 지원비(2023년 총 배정액)	271,365,000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2023년도 전국법원 회계직 담당자(8, 9급) 연수 관련 비용	9,291,500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2023년 전국법원 총무(사무)과장 워크숍 관련 비용	11,784,000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2023년 상반기 재판연구관 워크숍 비용	12,272,000
일반회계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023년 재판연구관 워크숍 비용 등(상사조 외 4건)	6,857,2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2023년 가사조사관 워크숍 비용	11,783,600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 중 일부 발췌

<워크숍, 세미나 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편성한 사례>

(단위: 천원)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세부내역	금액
일반회계	연수원 운영지원 (7031-308)	교육발전연구센터 운영(법학전문대학원과의 정기세미나 등)	9,000
		신규입용법관 역량개발 워크숍(심리상담 등)	23,000
일반회계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핵심경력법관 역량강화	30,000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	15,000
일반회계	국선변호료지원 (1143-409)	국선변호사 세미나 및 간담회	76,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소년·아동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29,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통역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 및 간담회 지원	45,000

자료: 대법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중 일부 발췌

○ 체육행사나 직원 워크숍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상에 명시된 복리후생비(210-12목)의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의 경우 체육행사, 워크숍, 세미나 등의 행사는 국내여비(220-01목)나 일반수용비(210-01목),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365] 등의 세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법원의 경우 이와 같이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의 행사를 복리후생비(210-12목)로 편성·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에서는 대개 기본경비 사업에 한정적으로 편성되는 복리후생비(210-12목)가 국선변호료지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소년보호 등 지원, 사법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일반 사업에도 광범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법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등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복리후생비가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210-12목)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65)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회계연도 복리후생비(210-12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		19,175	-	△97	19,630	19,466	-	162
일반 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371	-	△1	370	369	-	2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1,269	-	△1	1,268	1,266	-	2
	사법정책연구개선 (1143-405)	403	-	△1	402	395	-	7
	국선변호료지원 (1143-409)	76	-	-	76	72	-	4
	전문재판운영 (1144-407)	1,217	-	△3	1,214	1,199	-	14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332-303)	5	-	△4	1	1	-	-
	본부 기본경비 (7011-250)	13,286	-	△33	13,253	13,159	-	94
	도서관 기본경비 (7018-271)	78	-	6	84	83	-	1
	연수원 기본경비 (7018-281)	89	-	△24	65	65	-	-
	교육원 기본경비 (7018-291)	44	-	-	44	43	-	-
	본부운영지원 (7031-303)	675	-	-	675	663	-	12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63	-	△11	52	52	-	-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12	-	-	12	12	-	-
등기 특별 회계	등특 기본경비 (7011-271)	1,803	-	△13	1,790	1,774	-	15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75	-	-	75	75	-	-
사법 서비스 진흥 기금	조정제도 지원 (1161-302)	14	-	-	14	13	-	1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29	-	-	29	29	-	-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105	-	-	105	96	-	9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101	-	-	101	100	-	1

자료: 대법원 제출

(4) 자체 회계감사 결과 등 공개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법원의 감사(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 감사)는 「법원감사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이 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연 1회 법원의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회계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의 경우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 등 총 50개 기관에 대하여 회계분야별로 각각 282건 및 575건의 지도를, 2023회계연도의 경우 총 51개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 유형별로 총 176건의 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2021~2023회계연도 자체 정기회계감사 실시 현황>

회계연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결과	
			지도 건수	조치현황
2021	대법원 소속기관 5개[1], 각 고등법원 등 35개, 사무국 설치 지원 10개 (총 50개)	2021.04.05.~ 2021.11.30.	회계분야별[2] 지도 282건	완료
2022		2022.03.10.~ 2022.11.18.	회계분야별 지도 575건	완료
2023	대법원 소속기관 5개, 각 고등법원 등 35개, 사무국 설치 지원 11개[4] (총 51개)	2032.03.02.~ 2023.09.22.	처리결과 유형별[3] 지도 176건	완료

1) 대법원 소속기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2) 회계분야별: 집행, 지출원인행위, 계약, 지출, 관서운영경비, 수당 등
3) 처리결과 유형별: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서면경고, 개선, 권고, 통보
 - 법원감사규칙 개정(2023. 1. 1. 시행)에 따른 처분의 종류 및 기준 세분화
4) 남양주지원 추가
자료: 대법원 제출

○ 그런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감사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366]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자체감사 결과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점,

국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나,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367])를 통해 예산집행사무점검 결과보고서, 인사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도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 사법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감사업무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36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67) 열린국회정보(https://open.assembly.go.kr)>>주제별 공개>>행정>>감사>>정기감사 결과보고서

2. 일반회계

《세 출》

(1) 가족관계등록사무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는 대법원 소관인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145억 8,000만원이며, 이 중 145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5,200만원 불용되었음.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내역사업인 제도교육 경비 등 사업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 및 워크숍 행사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2억 100만원 가운데 1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가족관계등록사무	14,580	-	-	14,580	14,528	-	52
제도교육 경비 등	201	-	-	201	186	-	15

(나) 워크숍 예산 연례적 초과집행 부적정, 비목에 맞는 집행 및 전용절차 준수 필요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비목별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임차료가 초과 집행되고 있음. 대법원은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임차료 비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세목조정으로 3,500만원을 보충하여 4,700만원 집행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년 시(구)·읍·면의 공무원 제도개선 워크숍 항목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 요구시 국내여비 항목에서 증액 요청하고 있으나 확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세목조정을 하여 임차료 비목으로 부족한 워크숍 숙박료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워크숍 비용 관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가족관계등록사무	14,580	-	-	14,580	14,528	-	52	14,448
일반수용비(210-01)	183	-	△35	148	123		25	84
임차료(210-07)	12	-	35	47	47	-	-	12
국내여비(220-01)	129	-	-	129	127	-	2	129

자료: 대법원

○ 코로나19로 직원 워크숍을 수행하지 않았던 해를 제외하고, 2019년과 2023년에도 같은 형식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임차료 초과집행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가족관계등록사무 임차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	임차료	14	-	33	-	47	47	-	-
2020	임차료	14	-	-	-	14	-	-	14
2021	임차료	14	-	-	-	14	-	-	14
2022	임차료	12	-	△12	-	-	-	-	-
2023	임차료	12	-	35	-	47	47	-	-

* 2020년 ~ 2022년은 코로나19로 워크숍을 실시하지 않아 임차료 미집행
자료: 대법원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임차료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워크숍	객실 사용료	회의장 임차료
1	법원행정처 주관 전라지역 가족관계 등록관서장 워크숍(4.6.~4.7.)	4,865	1,800
2	법원행정처 주관 감독법원 가족관계 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9.14.~9.15.)	6,450	1,800
3	서울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등록사무 담당자 워크숍(4.27.~4.28.)	5,768	640
4	수원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 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5.18.~5.19.)	2,160	1,000
5	대구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 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6.8.~6.9.)	5,175	1,000
6	부산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5.18.~5.19.)	5,108	1,000
7	광주가정법원 주관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5.18.~5.19.)	4,800	1,000
8	전주지방법원 주관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6.15.~6.16.)	3,280	750
합계		37,606	8,990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재구성

○ 한편, 2023년 임차료 예산현액 4,70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보면, 약 3,760만원은 호텔 객실 숙박료로 사용하였고, 약 900만원은 회의장 임차료로 사용함.

○ 그런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따르면[368], 임차료 비목의 적용 대상은 ① 청사임차, ② 차량임차, ③ 교실·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④ 토지 및 장비 임차, ⑤ 재외공관 임차 등 주로 업무 목적 장소 대여를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대법원의 이러한 예산 집행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직원 워크숍을 위한 호텔 숙박료는 임차료가 아니라 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절함.

○ 또한 만약 대법원이 워크숍 숙박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싶었다면, 일반수용비(210-01)에서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210-01)에서 국내여비(220-01)로 '전용'했어야 함. 세목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내부지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 반면, 예산의 전용은 각 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집행 및 후속조치를 요함[369].

---

368)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 p.264

36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대법원이 임의적으로 워크숍 숙박료를 국내여비가 아니라 임차료 비목으로 집행하게 되면 법률이 규정한 전용절차를 회피하게 되어, 예산에 대한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통제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세목조정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 대법원은 국내여비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워크숍 숙박료가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은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 및 국제화와 외국과의 사법외교기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81억 4,200만원,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을 감안한 예산현액은 79억 3,400만원이며, 이 중 76억 2,6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800만원 불용되었음.

<2023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8,142	-	△208	7,934	7,626	-	308

(나) 장단기 해외연수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인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에 5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억 1,800만원이 이용 및 세목조정되었고, 1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42	-	△208	7,934	7,626	-	308
장단기 해외연수	5,514	-	△218	5,296	5,172	-	124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68	-	-	168	124	-	44
법관 단기국외훈련	209	-	-	209	154	-	55
연임법관 연수	1,406	-	-	1,406	1,406	-	-
국제회의 참가 등	438	-	-	438	394	-	44
개발도상국 사법역량 강화	200	-	9	209	168	-	41
외국사법부와의 정기교류	80	-	-	80	80	-	-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및 재외 한인법조인 초청	128	-	-	128	128	-	-
□ 세목별 분류(합계)	8,142	-	△208	7,934	7,626	-	308
일반수용비(210-01목)	1,984	-	△218	1,767	1,612	-	155
임차료(210-07목)	37	-	9	46	45	-	1
일반용역비(210-14목)	30	-	-	30	30	-	-
국외업무여비(220-02목)	943	-	-	943	804	-	139
국외교육여비(220-03목)	5,139	-	-	5,139	5,126	-	14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9	-	-	9	9	-	-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구체적인 이용 및 세목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인건비(7001-151)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각각 1억 6,800만원과 4,000만원 등 총 2억 800만원이 이용되었고, 그 외 임차료 부족으로 900만원이 세목조정되었음.

<2023년도 이용·세목조정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승인이용)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210-01 (일반수용비)	168	일반인건비 (7001-151)	110-01 (일반인건비)	**본부 인건비 부족**
이용 (자체이용)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210-01 (일반수용비)	40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본부 공공요금 부족**
세목조정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210-01 (일반수용비)	9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210-07 (임차료)	임차료 부족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또한 일반수용비 세부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 취지[370]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일부 지출도 확인되는데, 6개월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나(4,500만원), 온라인 강의인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겨울 프로그램 참가(23. 12. 26., 1,400만원) 등의 내역도 확인됨[371].

370)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연구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수기간은 **6개월, 1년, 1년 6개월**로 구분하여 시행(자료: 대법원 제출)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겨울 프로그램은 차년도인 2024. 1. 8.부터 1. 26.까지의 일정으로, 이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임.

<2023년도 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 집행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금액	집행사유
2023. 12. 12.	일반수용비 (210-01목)	45,123,500원	국내 어학연수비
2023. 12. 26.	일반수용비 (210-01목)	14,045,400원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겨울코스 참가

자료: 대법원 제출

<어학연수 지출 관련 세부 내역>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 (원)
1	대전지법	판사	미국 (골든게이트)	JC Education	방문	$5,400	₩7,054,560
2	서울행정	판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Fokus Sprachen Seminare (2023.9.19.~2023.10.) Language Training for Global Communication (LTGC) (2023.11.~2024.1.31.)	연구	€ 1,161	₩1,645,845

371) **구성원의 어학연수나 단기 위탁교육** 등은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 내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2023년도 예산 21억 4,400만원 편성)'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원)
3	남양주지원	판사	미국(UC데이비스)	인터네셔널 하우스(I-HOUSE) 비영리단체	연구	$120	₩156,768
4	의정부지법	판사	오스트리아(빈)	ALEKSANDRA COSIC STUDY POINT	연구	€ 1,800	₩2,551,698
5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스트라스부르)	Alliance francais a strasbourg(6개월 과정, 2023.10. ~ 2024.3.)	연구	€ 1,123.4	₩1,592,543
6	울산지법	판사	독일(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대학 WELCOME CENTRE Heidelberger Pädagogium	연구	€ 690	₩978,151
7	서울중앙	판사	독일(베를린자유)	Sprachenfreunde	연구	€ 558	₩791,026
8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파리제2)	ACCORD ECOLEDE LANGUES·PARIS	연구	€ 3,740	₩5,301,861
9	대구지법	판사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	UBC English Language Institute	연구	CAD 3,750	₩3,558,188
10	성남지원	판사	스페인(마드리드국립)	Internacional de Lenguas de Madrid	연구	€ 5,970	₩8,463,132
11	서울남부	판사	독일(뮌헨)	Carl Duisberg Centren	연구	€ 2,180	₩3,090,390
12	영덕지원	판사	스페인(마드리드국립)	UNIVERSIDS AD COMPLUTEN SE DE MADRID ih International House Madrid	연구	€ 4,200	₩5,953,962
13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스페인(바르셀로나자치)	Dinamo Language School	연구	€ 850	₩1,204,969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원)
14	광주고등	판사	일본 (동경대학	유네스코 일본어 교실	연구	￥31,200	₩270,504
합계(원화추산액)							₩42,613,597

* 2023.11.16. 기준 환율(송금보낼 때): 1$=1,306.40, 1￥=8.67, 1€=1,417.61, 1CAD=948.85
* 개인이 어학연수기관에 결재 후 영수증 첨부하여 어학연수비 신청. 개인통장으로 입금
자료: 대법원 제출

<헤이그국제법아카데미 겨울 프로그램 개요>

□ **일정**
- 2024. 1. 8.(월) ~ 1. 26.(금)

□ **진행 언어**
- 영어와 프랑스어

□ **진행 방식**
- 주최 측 제공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 강의 수강

□ **등록비 지원**
- 선발된 법관의 온라인 교육 등록비(1인당 450유로) 전액 지원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본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사업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에 지출하거나, 계획에 없던 온라인 강의 등록비에 지출하는 등 해당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은 사법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12억 300만원, 전년도 이월액과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을 감안한 예산현액은 117억 2,100만원이며, 이 중 116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203	843	△324	11,721	11,617	84	20

(나)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동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2억 900만원, '건강지원운영'사업에서 7,600만원,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서 4,7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본부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이용되었음.

<2023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03	843	△324	11,721	11,617	84	20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2,144	60	△209	1,995	1,935	84	19
건강지원운영	958	16	△78	896	880	-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지원	7,600	766	-	8,366	7,600	-	-
속기직렬 근무환경 개선	215	-	-	215	215	-	-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86	-	△47	39	39	-	-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200	-	10	210	210	-	-
□ 세목별 분류(합계)	11,203	843	△324	11,721	11,617	84	20
일반수용비(210-01목)	2,442	76	△226	2,293	2,192	84	17
임차료(210-07목)	98	-	△96	2	2	-	-
복리후생비(210-12목)	371	-	△1	370	369	-	2
기타운영비(210-16목)	-	-	1	1	1	-	-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123	-	-	123	123	-	-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7,400	-	-	7,400	7,400	-	-
공사비(420-03목)	250	545	-	795	795	-	-
감리비(420-04목)	-	13	-	13	13	-	-
시설부대비(420-05목)	-	4	-	4	4	-	-
자산취득비(430-01목)	519	204	△2	721	720	-	1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구체적으로, 내역사업 중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 강화' 사업

은 사법부 구성원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 외국어연수, 법정언행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총 2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억 900만원(9.7%)이 본부 인건비로 이용되었음.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 이용 내역>

2. (단위: 백만원)

비목별 개요	계획(예산)	실적(집행)	이전용 등	이전용 내역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2,144	1,892	△209	3. 일반인건비(7001-151) 부족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인건비(110-01)로 112백만원 승인이용 4. 5. 일반인건비(7001-151) 부족으로 임차료(210-07)에서 일반인건비(110-01)로 96백만원 승인이용
일반수용비 (210-01)	1,552	1,398	△112	
임차료 (210-07)	98	2	△96	

자료: 대법원 제출

특히 대법원은 동 내역사업에 편성된 임차료 9,800만원 중 200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인건비로 이용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전혀 필요하지도 않았던 임차료가 공연히 편성되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됨.

○ 다음, 내역사업 중 ‘건강지원운영’ 사업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업무 부적응 직원에 대해 의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총 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7,600만원(8.1%)이 본부 인건비로 이용되었음.

<'건강지원운영' 사업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별 개요	계획(예산)	실적(집행)	이전용 등	이전용 내역
건강지원운영	958	895	△78	6. 일반인건비(7001-151) 부족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인건비(110-01)로 76백만원 승인이용 7. 8. 공공요금 부족으로 자산취득비(430-01)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2백만원 자체전용
일반수용비 (210-01)	604	543	△76	
공사비 (420-03)	250	250	-	
자산취득비 (430-01)	104	102	△2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 다음, 내역사업 중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372]에 의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야간작업종사자에 대한

372)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학물(가솔린 등 109종, 생략), 나. 금속류(구리 등 20종, 생략), 다. 산 및 알카리류(무수 초산 등 8종, 생략), 라. 가스 상태 물질류(불소 등 14종, 생략), 마.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생략)
2. 분진(7종, 생략)
3. 물리적 인자(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소음작업 등 8종, 생략)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검진의 의무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에 총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3,900만원(45.3%)만이 집행되고, 미집행된 예산 4,700만원은 본부 인건비로 이용되었음.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 이용 내역>

비목별 개요	계획(예산)	실적(집행)	이전용 등	이전용 내역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86	39	△47	9. 일반인건비(7001-151) 부족으로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인건비(110-01)로 47백만원 승인이용
일반수용비(210-01)	86	39	△47	

(단위: 백만원)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에서 제출한 동 내역사업의 지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3,9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위 자료와는 달리 특수건강검진에 집행된 금액은 총 4건, 384만원에 불과함.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 집행 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금액	집행사유
2023. 8. 30.	일반수용비 (210-01목)	2,997,360원	2023년도 특수건강검진 비용
2023. 10. 10.	일반수용비 (210-01목)	265,040원	2023년도 대법원등기정보센터 특수건강검진 비용
2023. 11. 21.	일반수용비 (210-01목)	447,790원	2023년도 전산정보센터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2023. 12. 19.	일반수용비 (210-01목)	130,660원	2023년도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비용

주) 대법원 본부 지출대장에 따른 자료로, 그 외 각급 법원의 지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373].
자료: 대법원 지출대장

대법원은 실제 집행에 있어 각 내역사업별로 구분 없이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각 내역사업별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액 규모의 적합성 등이 폭넓게 인정되어 편성에 이른 반면,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구분 없이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더군다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374] 특수건

373)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세부 지출 내역은 집계 및 취합의 어려움으로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총 집행액은 3,900만원(전체의 45.3%)이 맞고, 미집행된 예산 4,700만원이 본부 인건비로 이용되었다고 설명함.

374)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1. 화학적 인자

강검진 대상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각급 법원별 수혜 대상자 파악을 위해 공문 시행 및 취합을 통해 전수조사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산 집행률이 50% 도 안 될 정도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는 바[375], 이에 사업 대상자 선별과 사업 추진이 모두 부실했다는 문제가 있음.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유해인자 분류		종류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등)	109종
	■ 금속류(구리, 납, 니켈 등)	20종
	■ 산 및 알칼리류(질산, 황산 등)	8종
	■ 가스 상태 물질류(불소, 염소, 오존 등)	14종
	■ 산안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금속가공류(광물성 오일)	1종
분진	■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연분진, 목재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7종
물리적 인자	■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8종
야간작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종
합계		181종

가. 유기화학물(가솔린 등 109종, 생략), 나. 금속류(구리 등 20종, 생략), 다. 산 및 알카리류(무수 초산 등 8종, 생략), 라. 가스 상태 물질류(불소 등 14종, 생략), 마.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생략)
2. 분진(7종, 생략)
3. 물리적 인자(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소음작업 등 8종, 생략)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375)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22년 사법부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전담조직이 2023년부터 전국법원 사업장을 점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재설정(확대)하였고, 재설정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범위를 안내함에 따라 2023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24년부터 특수건강진단 집행률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 대법원은 유해인자 중 화학적인자, 분진, 물리적인자 등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자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고 설명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만큼만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부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사법정책연구개선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사업은 체계적인 사법정책연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과 재판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6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0억 2,000만원이며, 이 중 24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7,5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정책연구개선	2,621	464	△65	3,020	2,444	501	75

(나) 정책연구용역 연례적 이월 부적정

○ 동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에 내역사업인 '법원정책연구비'는 전년도 이월액 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4억 4,400만원이나, 이 중 9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9,400만원은 다시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21	464	△65	3,020	2,444	501	75
양형제도 개선지원	1,026	-	△73	953	914	-	38
사법정책연구원운영	438	-	-	438	438	-	-
사법정책연구 관련 외국연구자료 조사 수집	50	-	-	50	50	-	-
법원정책연구비	990	454	-	1,444	914	494	37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관련 법적문제연구	117	10	8	135	128	7	-
□ 세목별 분류(합계)	2,621	464	△65	3,020	2,444	501	75
일용임금(110-04목)	36	-	-	36	19	-	17
일반수용비(210-01목)	987	-	△26	960	956	-	4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22	-	△22	-	-	-	-
특근매식비(210-05목)	20	-	-	20	12	-	8
복리후생비(210-12목)	403	-	△1	402	395	-	7
국내여비(220-01목)	32	-	△15	17	17	-	-
국외업무여비(220-02목)	91	-	-	91	91	-	-
정책연구비(260-02목)	1,026	464	-	1,490	952	501	37
고용부담금(320-09목)	4	-	-	4	2	-	2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총 35건의 연구용역 중 23건(65.7%)에 대한 계약기간이 차년도로 이어졌는데, 이와 같은 이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법원정책연구비 사업 정책연구용역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과제 선정일	계약기간
1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	60	60	-	22.10.17.	23.1.2.~23.7.2.
2	윤관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 사업	22	22	-	23.1.16.	23.3.6.~23.8.31.
3	가장납입과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	2	-	23.4.1.	23.4.4.~23.7.4
4	민법 제367조의 법적 성격 (경매절차매수인에게대항 가능한유치권성립여부와 관련하여)	3	3	-	23.4.1.	23.4.4.~23.5.31.
5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을 감액함에 있어 사실심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 및 재량 일탈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위약금 및 성공보수를 중심으로-	2	2	-	23.4.7.	23.4.12.~23.5.31.
6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후속과제)	10	10	-	23.3.20.	23.5.18.~23.11.17.
7	임의조정에 대한 준재심사유 검토 -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	2	2	-	23.5.12.	23.5.18.~23.5.31.
8	프랑스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우리나라 도입 가부	2	2	-	23.5.12.	23.5.18.~23.7.31.
9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공제 여부	2	2	-	23.5.19.	23.5.22.~23.6.30.

연번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과제 선정일	계약기간
10	법관 임용절차에서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법조경력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78	39	39	23.1.16.	23.6.13~24.1.13.
11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의사소통 개발 방안 연구	67	33	34	23.1.16	23.6.23.~24.3.13.
12	사법부지식정보 공유 복합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검토 연구	49	49	-	23.3.20.	23.6.23.~23.12.11.
13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	3	23.6.29.	23.7.5.~23.10.31.
14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5	-	5	23.7.25.	23.7.26.~23.10.31.
15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가 승인한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 제36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3	-	3	23.7.25.	23.7.26.~23.11.30.
16	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합의)의 적정한 참작방안에 관한 연구	27	13	14	22.12.12.	23.7.31.~24.2.26.
17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기준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	49	24	25	23.4.17.	23.8.8.~24.2.7.
18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	28	14	14	22.12.12.	23.8.21.~23.12.21.
19	고가의 유상감자 관련 업무상 배임죄 성부	2	2	-	23.8.14.	23.8.28.~23.10.27.
20	유류분 반환에 있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동일 소송물인지 여부	3	3	-	23.8.22.	23.8.28.~23.10.31.
2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3	-	3	23.8.21.	23.8.28.~23.9.15.

연번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과제 선정일	계약기간
22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및 제70조 제2호 해석론	3	3	-	23.8.27.	23.8.30.~23.10.30.
23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문 규정 신설이 이월결손금 관련 조세소송에 미치는 영향 및 이월결손금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	3	23.9.8.	23.9.12.~24.2.29.
24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	3	23.9.8.	23.9.12.~24.1.31.
25	이지리드(Easy-Read)판 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자료 개발 연구	50	30	20	23.4.17.	23.9.14.~24.3.11.
26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 부인론 등에 관한 연구	3	-	3	23.9.19.	23.9.26.~23.10.26.
27	학교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0	21	9	23.5.22.	23.11.6.~24.4.6.
28	온라인 이용자 데이터 수집·활용의 적법성 판단기준 연구	30	15	15	23.4.17.	23.10.31.~24.4.30.
29	사법정책연구원 조직진단	50	25	25	23.5.22.	23.10.31.~24.6.30.
30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31	-	31	23.3.20.	23.12.12.~24.6.12.
31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방안 연구	61	31	30	23.9.18.	23.12.20.~24.6.20.
32	각급 법원의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사례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69	-	69	23.5.22.	23.12.22.~24.6.22.
33	법정수어통역 교육·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98	49	49	23.10.16.	23.12.21.~24.6.21.
34	강제수사절차에서의 적정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	70	-	70	23.7.24.	23.12.28.~24.8.28.

연번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과제 선정일	계약기간
35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재판절차를 중심으로	28	-	28	22.12.12.	23.12.15.~24.4.15.
합 계		951	456	495		

자료: 대법원 제출

<최근 5년간 법원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		불용액
					이월액	이월률	
2019	1,000	225	1,225	1,066	118	9.6	41
2020	900	118	1,018	679	339	33.3	-
2021	990	339	1,329	471	469	35.3	389
2022	990	469	1,429	973	454	31.7	2
2023	**990**	**454**	**1,444**	**914**	**494**	**34.2**	**37**

자료: 대법원 제출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376],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연구용역비(260목)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377]고 명시하고 있음.

376) 「국가재정법」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37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87.

○ 2023년도에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적인 사법정책에 관한 과제로서 특별한 이월 사유가 없어 보이는 바, 향후 대법원은 이와 같은 연례적 이월 문제가 해소되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법원시설관리 등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은 법원시설에 대한 개선·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458억 3,1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17억 5,800만원이며, 이 중 389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27억 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법원시설관리 등 기능별 결산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법원시설관리 등	45,831	142	△4,215	41,758	38,905	2,707	146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3,744	-	△1,900	1,844	1,219	595	31
사무환경 효율화	3,976	-	△800	3,176	3,044	92	40
민원환경 개선	17,902	142	△354	17,690	17,677	-	13
재판시설 확충	4,143	-	△789	3,354	3,342	-	12
청사안전관리	4,128	-	△311	3,817	1,798	2,020	-
청사보안강화	2,850	-	△149	2,701	2,673	-	28
관사확충 및 개선	3,291	-	△1	3,290	3,290	-	-
법원연수관 운영	830	-	89	919	899	-	20
수원법원 운영	4,967	-	-	4,967	4,963	-	4

(나) 노후 시설 및 비품의 적절한 교체 필요

○ 법원시설관리 등의 내역사업인 ①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사업은 내구연한을 도과한 냉방기나 복사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② 사무환경 효율화는 각급 법원의 노후·협소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③ 재판시설 확충은 노후화된 법정 내부 인테리어나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임.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후화된 법원 시설 및 비품을 교체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해당함.

○ 그런데, 법원의 비품 및 시설 내용연수 도과 현황을 보면, 내용연수를 도과하여 사용 중인 물품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법원시설관리 등 관련 비품 내용연수 도과 현황>

물품	내용연수(년)	총 개수	내용연수 도과 개수(비율)	내용연수 5년 이상 도과 개수(비율)
법정 의자	8	13,858	7,895(57%)	2,762(20%)
법정 방청석	9	9,239	5,656(61%)	3,808(41%)
냉방기	10	497	232(47%)	52(11%)
냉난방기	9	1,246	493(40%)	89(7%)
디지털 복합기	6	2,733	1,754(64%)	미산정
방독면	7	13,507	7,869(58%)	1,562(12%)

자료 :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대법원이 관리하는 법정의자와 방청석의 경우 절반 이상이 내용연수

를 도과한 상태이고, 디지털 복합기의 경우 전체 기기의 약 2/3가 내용연수를 도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단순히 1~2년의 도과가 아니라 내용연수를 5년 이상 장기간 도과한 물품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내용연수란 일반적으로 유형 고정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고, 조달청은 「물품관리법」[378]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여 공개하고 있음. 내용연수를 도과한 물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379], 국가기관은 근무 직원 및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내용연수를 물품의 교체 필요성 및 교체 예산 편성의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음.

<23년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예산안 산출 근거>

법정 등 비품 구입 및 교체: 2,355백만원
  법정 냉방기 확충: 477백만원
  - 냉방기 내구연한 (6년) 감안 단계적 교체
  노후장비(복사기 등) 교체: 1,878백만원
  - 복사기 등 내구연한과 법원 인원 및 청사면적 고려 단계적 교체

자료: 대법원

378)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379)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2. 세부지침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 대법원은 시설 및 비품 교체 예산에 대해 내구연한(내용연수)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만 예산 집행이 아닌 편성 단계에서 개별 물품의 지속 사용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구체적인 예산 편성 기준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보임.

○ 만약 교체 예정 물품의 내구연한이 도과했더라도 여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물품의 노후화가 한계에 달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시급히 교체될 필요가 있을 것임.

○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2.-나.-(4)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380], 대법원의 시설과 비품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안전 및 사법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될 필요성이 있음. 향후 대법원은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적극적 집행을 통해, 노후한 법원의 시설 및 비품을 시의적절히 교체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380)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제2021-41호)」
2. 세부지침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6) 정보화사업 총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법원의 2023년도 일반회계 사법정보화운영[1300] 프로그램의 예산액은 961억 4,3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012억 2,700만원이며, 이 중 863억 1,500만원이 집행되고, 133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음.

사법정보화운영[1300]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으로는 사법업무 전산화, 전자소송,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등이 있음.

<사법정보화운영(일반회계)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A)	집행액(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사법정보화운영(일반회계)	96,143	7,210	△2,125	101,227	86,315	13,340	1,572	85.3
사법업무 전산화	45,250	931	△1,050	45,131	42,886	1,596	649	95.0
전자소송	8,504	-	△650	7,854	7,793	-	61	99.2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	18,461	5,923	-	24,384	14,802	9,355	227	60.7
형사전자소송시스템구축	3,829	-	-	3,829	1,387	2,389	53	36.2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17,767	-	△411	17,356	16,774	-	582	96.6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2,332	356	△14	2,673	2,673	-	-	100

(나)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최소화 필요

○ 대법원은 매년 초 사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381]. 그런데 대법원의 2023년 사법부 정보화사업 계획과 대법원에서 제출한 실제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을 비교하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남.

<2023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계약 중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계약 목록>

연번	사업명	사업 부서	발주 계획	공고일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1	전자소송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매 사업(27인치 모니터)	관리운영 담당관실	23.2. ~ 23.8.	23.10.	23.11.	23.11. ~ 24.2.
2	전산화기기 확충 및 기록뷰어 관련 장비 도입 사업(고속스캐너)	관리운영 담당관실	23.4. ~ 23.5.	23.9.	23.10.	23.10. ~ 24.1.
3	전산화기기 확충 및 기록뷰어 관련 장비 도입 사업 (시스템통합관제)	관리운영 담당관실	23.4. ~ 23.5.	-	23.11.	23.11. ~ 24.2.
4	전산화기기 확충 및 기록뷰어 관련 장비 도입 사업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관리운영 담당관실	23.4. ~ 23.5.	-	23.11.	23.11. ~ 24.2.
5	사법행정시스템 고도화 (법관임용홈페이지 구축사업)	정보화지원 담당관실	23.5.	23.11.	23.12.	23.12. ~ 24.8.
6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사업	정보화지원 담당관실	23.3.	23.5.	23.8.	23.8. ~ 24.1.
7	사법업무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	정보화지원 담당관실	23.4.	23.8.	23.11.	23.11. ~ 24.5.
8	보안장비 구매 사업 (유닉스용 백신)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1.	23.11. ~ 24.2.
9	보안장비 구매 사업(행위기반모니터링솔루션 관리서버 OS)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381)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53 (주요사업 발주계획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연번	사업명	사업 부서	발주 계획	공고일	계약 체결일	사업 기간
10	보안장비 구매 사업(행위기반모니터링솔루션)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1	보안장비 구매 사업 (행위기반모니터링솔루션 관리서버)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2	보안장비 구매 사업 (가설사설망 VPN 장비)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3	보안장비 구매 사업 (가설사설망 VPN 장비용 GBIC)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2.	23.11. ~ 24.2.
14	보안장비 구매 사업(AggregationTAP등)	정보보호 담당관실	23.2. ~ 23.10.	-	23.11.	23.11. ~ 24.2.
15	전자법정 개선사업(노트북)	정보보호 담당관실	23.8. ~ 23.9.	-	23.12.	24.2.

자료 :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2023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계약 중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계약 목록을 보면, 주로 계약의 체결일이 11월·12월 등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 이 때문에 계약상 사업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를 넘어 2024년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음.

○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등의 취합과 이에 따른 사업 준비 과정이 길어져 발주 공고가 늦어졌고,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 적정 사업기간[382]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완료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함.

38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발주 공고 후 유찰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지연된 것은 불가피한 지연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준비 과정이 길어져 발주 공고를 늦게 한 것은 사업을 당해 회계연도 상반기부터 신속히 준비하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지연 사유일 것임.

○ 따라서, 대법원은 각 정보화사업 준비 및 발주를 매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7) 사법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업무 전산화(1331-300)는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판사무시스템 및 사법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451억 3,100만원으로 이중 428억 8,6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4,900만원 불용되었음.

○ 사법업무 전산화의 내역사업인 시스템 및 보안관제 등 운영사업에는 해킹/디도스 등 외부 공격에 대비한 보안관제 운용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23년 사법업무 전산화 보안관제 운영을 위해 8억 5,200만원 편성되어 8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00만원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업무 전산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사법업무 전산화	45,250	931	△1,050	45,131	42,886	1,596	649
시스템 및 보안관제 등 운영	2,999	-	-	2,999	2,950	-	49
보안관제 운영	852	-	-	852	837	-	15

(나)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 강화 필요

○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하여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1. 1. 7.부터 23. 2. 9.까지 있었고, 최초 침입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1. 1. 7. 이전부터도 침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공격자는 2년여에 걸쳐 국내외 서버로 1,014 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하였고, 유출 자료 중 0.5%인 4.7GB의 자료(5,171개)에 대해서만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두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법원 전산망 침입 및 자료 유출 기간>



자료: 경찰청 보도자료 (24. 5. 13.)

○ 해킹 사건에 대하여 국회[383]·언론매체[384] 등에서는 ① 대법원이 악성코드 '라자도어'를 발견한 최초 시점이 2023년 2월이고 12월에 국

383)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 23.12.6.
384) 노컷뉴스, [단독]'北해킹' 반년 넘게 숨긴 법원…털린 비밀번호는 '123qwe', 23.12.5.

정원 등 합동조사가 시작된 점, ② 관리자 비밀번호를 ‘123qwe’와 같은 단순 문자열로 설정하고 6년 이상 바꾸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낮은 보안의식과 보안역량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 대법원은 해킹 사건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점검사업을 진행하고, 『사법부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보안관제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함.

○ 대법원이 소장한 자료는 개인 신원 및 재정 상황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 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기 쉬우므로, 대법원은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따라서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제도에 따라 2023년 12월까지 보안관제 사업 수행업체로 21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시스템 보안관제를 위해 주로 이 중 한 업체와 단일 응찰로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음. 그리고 대법원 효율적인 보안관제 사업관리를 위해 사법업무 전산화, 전자소송(1331-302),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 가족등록업무 전산화(1332-303),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1335-307) 등 각 세부사업 보안관제를 통합하여 발주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사법업무 전산화 및 전자소송 보안관제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수주업체	발주시기	계약시기	발주금액	계약금액	계약형태
2020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이글루코퍼레이션	19.09.27. (장기 1차)	20.01.~ 20.12.	1,128	1,071	경쟁
2021년			20.11.25. (장기 2차)	21.01.~ 21.12.	1,127	1,071	
2022년			21.09.13. (장기 1차)	22.01.~ 22.12.	1,127	1,085	경쟁→ 수의
2023년			22.10.31. (장기 2차)	23.01.~ 23.12.	1,150	1,098	
2024년			23.10.31. (장기 1차)	24.01.~ 24.12.	1,175	1,140	경쟁→ 수의

자료: 대법원 제출

<2023년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계약업체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사법업무 전산화	1,019	973	㈜이글루코퍼레이션
	전자소송	131	125	
	등기업무 전산화	725	692	
	가족등록업무 전산화	367	350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	410	391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보안관제 실패에 대한 해당 업체의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현재 해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보안관제 수행 업체의 과실 유무에 대해 결론이 난 것은 아니며, 2024년의 경우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함.

어떤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가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가 저조해지거나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이 안일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안관제 업체 입찰에 있어서도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가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보안관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정보보호조직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해킹 사건 이후 보안관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소관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직급을 국장급(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실장급(사법정보화실장)으로 격상하고, 지방법원 전산 인력 1인을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보안전문가[385] 1인을 추가로 공개 채용(전문임기제 6급)하였음. 현재 정보보호담당관실은 총 15인(정보보호팀 11인, 전자법정팀 5인, 1인 겸무)으로 구성되어 있음.

385) 전문임기제 6호로 신규 임용한 보안전문가는 ISO27001(정보보호 경연시스템 인증) 심사원 자격, CCIE(시스코 네트워크 전문가 최상위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유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 분장사무표386)>

정보보호 담당관실	1. 사법부 정보화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2.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사법부 가상화시스템 보급,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 직원 업무분장>

직원	직급	업무 분장
A	서기관	정보보호담당관, 전자법정/영상재판 총괄
B	실무관	정보보호담당관실 서무, 가상화시스템 운영
C	사무관	보안기획/운영. 보안관제, 망분리, 법원행정전자서명 총괄
D	행정관	보안기획, 보안관제사업, 사법보안장비운영, 가상화시스템 기획 · 사업
E	실무관	사법보안장비운영, 사법보안장비사업
F	실무관	사법보안장비사업, 보안관제, 법원행정전자서명, PC보안
G	실무관	등기/가족 보안장비운영 · 사업
H	실무관	차세대전자소송, 미래등기 지원(보안)
I	실무관	보안관제, 법원행정전자서명, PC보안
J	실무관	세종센터 보안 지원
K	사무관	개인정보보호 총괄
L	행정관	개인정보보호
M	행정관	전자법정 구축, 증설,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전자법정 지원
N	실무관	법정녹음 · 영상재판 · 재판안내 · 법정제어 운영 및 유지보수
O	실무관	영상재판 구축, 개선
P	실무관	영상재판/화상회의시스템 운영

자료: 「법원행정처 각 실·국 직원현황」, 2024년 2월 19일 기준

386)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

그런데, 정보보호담당관실 분장사무표를 보면 정보보호담당관실이 '각급 법원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전자법정·영상재판 관련 시설을 구축/개선하고,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로, 정보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실제로 정보보호조직의 책임자인 정보보호담당관(4급)이 전자법정·영상재판 총괄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안관제 업무수행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보호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려면 보안운영과 보안기획 업무가 서로 구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대법원 정보보호조직은 한정된 인원이 인증서 관리나 솔루션 구매와 같은 보안 외의 업무를 겸직하다보니 업무 경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인원증대 등을 통해서 보안운영, 보안기획, 보안관제,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등으로 보안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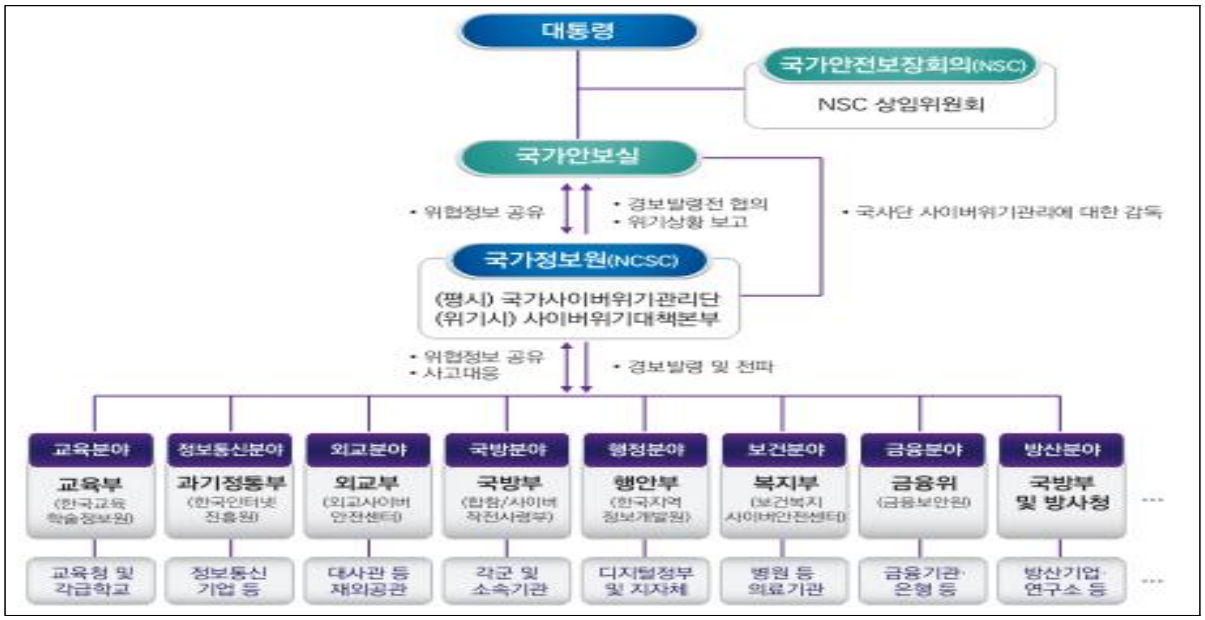
- **셋째, 국가정보원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필요가 있음.**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387]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하기 위하여 보안관제 체계를

387)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구축·운영하고 있음. 특히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매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담당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388], 대법원 직원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389].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자료: 『2024 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p.10

보안관제에 있어 비전문기관인 대법원은 사법부의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면, 효율적인 보안관제 업무 수행 및 직원 보안의식과 보안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88) 『2023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연례보고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 p.38
2023년에는 사이버보안 담당자 1,49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안보 정책, 보안시스템 운영, 보안관제, 악성코드 분석 등 32개 교육 과정을 진행함.

389) 다만 대법원은 법원의 정보보호 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가 받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에서, 현재 매년 약 8명 정도가 민간의 IT 전문교육(삼성SDS 멀티캠퍼스, IBM, 오라클 교육센터 등)을, 매년 약 12~13명 정도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디지털역량교육과정을 각각 수강하고 있다고 설명함.

(8)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1331-303)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93개 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243억 8,400만원이며, 이 중 148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93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2023년 11월부터 4차연도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9월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완료가 지연되어 개통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하였음.

<2023년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8,461	5,923	-	24,384	14,802	9,354	229

(나) 과업변경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대법원은 2024년 6월 현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LG CNS 컨소시엄)와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사업자는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약 요청서에 없었던 추가적 과업을 요구받았다는 취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대법원은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과업의 추가는 없었다는 입장임.

이에 사업자는 2024년 1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390](이하 “조정위”라 함)에 조정청구를 하였는데, 조정위는 사업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향후 소송이 진행될 예정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1) 분쟁과정

날짜	주체	내용	비고
24. 1. 23.	청구인	조정 청구	
24. 5. 14.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24. 6. 10.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 통보	
24. 6. 24.	피청구인(조달청), 수요기관(법원행정처)	이의제기서 제출	피청구인 및 수요기관 모두 제출

(2) 조정청구

39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청구인: ㈜엘지씨엔에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모빌씨앤씨
피청구인: 조달청(수요기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청구금액: 20,200,000,000원(①+②)
① 업무 이관 및 통합 부분 122억원, ② 전자소송포털 부분 80억원

(3) 조정결과
1) 업무이관 및 통합 부분 인용(조정 청구금액 122억원)
"업무이관 및 통합" 에 대한 과업 범위 및 조정금액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3자의 감정을 받아 재산정하되, 감정인에 대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제안하는 3인의 감정인 중 청구인이 1인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전자소송포털시스템 구조개선 부분은 기각(조정 청구금액 80억원)

자료: 대법원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점점 구체화되는 한편, 사업 기간이 길어 대외적인 환경도 자주 바뀌는 등, 일정 부분의 사업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391]. 따라서 대법원은 정보화 사업의 계약에 있어 다음의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먼저, 발주처는 과업 수행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가적 과업이 당초 요구사항 범위 내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요구사항을 가능한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임.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조정위에서 "업무이관 및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추가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사업비에 대한 예측성·정확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한다)를 둔다.
391) 권기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지급 방안」, 2013, p.2

○ 한편, 202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당시, 잦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과업내용 변경,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라 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392], 대법원 산하에도 과심위가 설치되어 있음[393]. 그런데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심위가 한 차례만 열렸을 뿐이고(2023년 6월), 그 심의결과[394]가 계약 사항에 반영되지도 못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심위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과심위를 계약 진행 단계별로 여는 등 상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분쟁이 심화된 단계가 아니라 내부적 사업 관리 단계에서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9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393)「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대법원 내규 제540호)」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업내용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4. 적정 사업기간 산정
5. 소프트웨어사업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94) 심의결과 : “제출된 자료로는 기준선 대비 추가 과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기능점수 방식의 금액산정의 객관성이 요구되는바, 공정한 외부기관의 검증을 통한 변경범위, 물량 계약금액 조정과 과업변경 전후 물량 비교자료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단, 3차 사업 기간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하되 전체 사업 기간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분쟁이 해당 사업의 완수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의 경우, 과업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등, 발주처와 사업자의 관계 악화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395].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은 법무부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2024. 9. 개통 예정)이나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2025. 6. 개통 예정)과 연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하나의 시스템 개통이 연기되면 다른 시스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은 이미 한 차례 개통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 추가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사업 계약에 있어 과업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견 발생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395) '복지부-LG CNS 컨소시엄, 계약 해지 수순... 책임소재 공방 본격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9846635774888), 이데일리, 23.10.20.

(9) 도서관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도서관 운영지원(7031-307) 사업은 도서 구입, 법원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도서관 문화행사 등 법원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7억 3,200만원,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을 감안한 예산현액은 25억 7,800만원이며, 이 중 25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1백만원 불용되었음.

<2023년도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도서관 운영지원	2,732	-	△154	2,578	2,577	-	1

(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동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에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1억 5,7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이 중 3백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2023년도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32	-	△154	2,578	2,577	-	1
도서구입	1,379	-	-	1,379	1,379	-	-
재판부장기대출도서	117	-	-	117	117	-	-
전자책(e-Book) 구입	219	-	-	219	219	-	-
서가구입	54	-	-	54	54	-	-
여비	10	-	-	10	10	-	-
직무수행경비	21	-	-	21	21	-	-
국내외 추록	75	-	-	75	75	-	-
국내외 법률학술잡지 등	357	-	-	357	356	-	1
해외거점도서관사업	16	-	-	16	16	-	-
도서보존사업	48	-	-	48	48	-	-
도서관 문화행사	123	-	-	123	123	-	-
구술총서 등 발간	38	-	-	38	38	-	-
도서발간	55	-	-	55	55	-	-
전국법원도서실 RFID 도입	63	-	-	63	63	-	-
시설유지관리	157	-	△154	3	3	-	-
□ 세목별 분류(합계)	2,732	-	△154	2,578	2,577	-	1
일반수용비(210-01목)	712	-	-	712	711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57	-	△154	3	3	-	-
국내여비(220-01목)	10	-	-	10	10	-	-
특정업무경비(250-03목)	21	-	-	21	21	-	-
자산취득비(430-01목)	1,832	-	-	1,832	1,832	-	-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구체적인 이·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예산 1억 5,700만원 중 1억 5,400만원이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는데, 1억 1,000만원은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사업으로 이용(자체이용)되었고, 4,400만원은 본부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일반 인건비(7001-151) 사업으로 전용(승인전용)되었음.

<2023년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자체이용)	도서관운영지원 (7031-307)	210-09 (시설장비유지비)	110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210-02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부족
전용 (승인전용)	도서관운영지원 (7031-307)	210-09 (시설장비유지비)	44	일반인건비 (7001-151)	110-01 (보수)	본부 인건비 부족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법원도서관은 2023년도 예산안에 법원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점자 보도블럭, 자동출입문 설치 등)을 위한 예산 1억 5,7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반영하였음. 그런데 점자 보도블럭, 자동출입문 설치 등은 공사에 해당하여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사비(420-03목)로의 전용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종합

열람실 정문 외벽 유지보수비로만 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가 아니라 공사비(420-03목)로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여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2023년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예산 집행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금액	집행사유
2023. 12. 1.	시설장비유지비 (210-09목)	2,607,000원 (반올림하여 3백만원)	법마루(종합열람실) 정문 외벽 유지보수비

자료: 법원도서관 제출

<2023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예산 산출근거>

□ (2023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 0 → 157백만원(순증)
  * 시설유지관리비(210-09) : 0 → 157백만원(순증)
  - 점자블록 보완 설치 : 14백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보도 경사로, 계단 핸드레일 설치 등 : 7백만원
  - 자동문 설치 및 촉지도 : 12백만원
  -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 70백만원
  - 기타 공사 소요경비(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 54백만원

자료: 대법원,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예결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2024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예산 산출근거>

□ (2024년도) 법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 157백만원(전년동)
  * 공사비(420-03목) : 157백만원(전년동)　　※ 금액만 전년동, 세목은 변경
  - 법마루 안내데스크 개선 및 시설 보완 : 110백만원
  - 대법원 열람실 안내데스크 등 환경개선 : 32백만원
  - 서고 항온·항습시설 보완 등 : 15백만원

자료: 대법원, 202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예결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Ⅱ-1)

○ 그런데 2024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1억 5,700만원의 예산이 공사비(420-03목)로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그 용도가 ‘법마루 안내데스크 개선 및 시설 보완’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용도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음.

○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산과목의 부적절한 선정, 연도 중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실패, 그리고 결국 연말 해당 예산을 공공요금 부족분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법원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모든 중앙관서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그 의결 취지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실패 등 사업담당자의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0) 연수원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사업은 법관 및 신규임용법관 연수, 재판연구원 교육, 법관숙소 리모델링 등 사법연수원의 운영을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64억 6,0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5억 5,100만원이며, 이 중 65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수원 운영지원	6,460	-	91	6,551	6,511	-	40

(나)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동 사업의 2023년도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에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명목으로 관리용역비(210-15목)[396]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3,600만원은 다른 사업 예산으로 변경 집행되었고, 600만원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남.

396)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운영 등 기관의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관리업무 일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3년도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기능별·세목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60	-	91	6,551	6,511	-	40
청사운영	412	-	239	651	650	-	1
청사청소시설관리 등	2,759	-	-	2,759	2,738	-	21
시설보수공사	543	-	-	543	543	-	
교육발전연구센터	130	-	-	130	130	-	
국제사법협력센터 운영	44	-	54	98	98	-	
재판연구원 교육	51	-	-	51	51	-	
이러닝시스템 사업비	250	-	-	250	249	-	1
신규임용법관 역량개발	218	-	-	218	218	-	
법원실무제요 발간 등	261	-	-	261	261	-	
법관숙소 리모델링	1,510	-	△166	1,344	1,344	-	
법관연수관리시스템	42	-	△36	6	-	-	6
승강기 교체공사	240	-	-	240	229	-	11
□ 세목별 분류(합계)	6,460	-	91	6,551	6,511	-	40
상용임금(110-03목)	1,713	-	-	1,713	1,696	-	17
일반수용비(210-01목)	644	-	26	669	669	-	-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313	-	239	552	552	-	-
피복비(210-03목)	5	-	-	5	5	-	-
임차료(210-07목)	5	-	1	6	6	-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10	-	-	10	10	-	-
복리후생비(210-12목)	63	-	△11	52	52	-	-
일반용역비(210-14목)	250	-	△40	210	209	-	1
관리용역비(210-15목)	705	-	4	709	700	-	9
사업추진비(240-01목)	3	-	-	3	3	-	-
특정업무경비(250-03목)	55	-	-	55	55	-	-
일반연구비(260-01목)	-	-	-	-	-	-	-
포상금(310-03목)	20	-	-	20	20	-	-
고용부담금(320-09목)	331	-	-	331	330	-	1
공사비(420-03목)	2,193	-	△130	2,063	2,051	-	12
자산취득비(430-01목)	151	-	3	154	154	-	-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2023년 관리용역비(210-15목) 예산의 다른 사업으로의 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본부 운영지원(7031-303) 사업으로 3,600만원이 내역변경[397][398]되었음.

<2023년도 관리용역비(210-15목) 내역변경 내역>

구분	~에서		금액 (백만원)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210-15 (관리용역비)	36	본부운영지원 (7031-303)	210-02 (공공요금및제세)	공공요금 부족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사법연수원은 2022년도 예산에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1,400만원(시스템 구축 개발비 1억 7,300만원, 시스템 전산장비 확충비 8억 4,1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이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에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편성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4,200만원 역시 미집행(3,6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 600만원은 불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397) 내역변경이란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내역변경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이용, 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다만, 내역변경은 세부사업 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 가능(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98)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과 본부 운영지원7031-303)은 동일한 단위사업(7031, 사법운영지원)에 속하는 세부사업이고, 관리용역비(210-15목)와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는 동일한 목(210목, 운영비)에 속한 세목임.

<2022~2024년도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예산 산출근거>

연도	산출근거	비고
2022	□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 1,014백만원(신규) - 시스템 구축 개발비(260-01목) : 173백만원 -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확충(430-01목) : 841백만원	불용 1,014백만원
2023	□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42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210-15목) : 42백만원	이·전용 등 36백만원 불용 6백만원
2024	관련 예산 미편성	-

자료: 사법연수원 제출

○ 2023년도에 편성된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은 2022년도 해당 시스템의 구축 사업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법연수원이 해당 사업의 추진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탓이 크다고 보이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서에 기재된 용도와 달리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임.

○ 사법연수원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반영한 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대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등기특별회계

《세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2023년에는 1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6억 6,000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중 6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0만원은 미수납한 상태임.

<2023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3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기타재산이자수입	155	660	659	1	-

(나) 등기소 매각대금 분할 납부금을 반영하여 예산과 수납액의 불일치 해소 필요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399]에 따라 세입·세출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수입과 그 밖의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는데, 2023년에는 유휴등기소인 구 남대전등기소의 토지 및 건물 사용허가[400]로 인한 사용료를 분할 납부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401]와,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받고 있음에 따라 발생한 이자[402]로 인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였음.

○ 등기특별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편성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다가 2015년 수납액을 기반으로 하여 2016년부터 최초로 1억 4,800만원이 편성된 이후 2021년까지 6년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나, 수납액은 매년 예산현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9

---

399)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 ④ (생 략)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영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00) 사용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용허가기간: 2023.9.22. ~ 2024.9.21., 사용료: 77,433,330원, 2회 분할납부

401)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402) 「국유재산법」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한다.

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납액이 100만원에 불과하여, 2020년 국회 결산심사결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 편성하라고 주의를 받은 바 있음[403].

이에 대해 대법원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며, 2022년부터 1억 5,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7백만원 증액하였으나 2022년과 2023년 모두 세입예산액을 상회하는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바 있음.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 편성 경과(2015~2024)>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액 상세 내역[404]
	본예산	추경(A)				
2015	-	-	-	126	126	-
2016	148	148	148	144	44	-
2017	148	148	148	119	119	-
2018	148	148	148	13	13	-
2019	148	148	148	1	1	국고예금이자(1)
2020	148	148	148	1	1	국고예금이자(1)
2021	148	148	148	1	1	국고예금이자(1)
2022	155	155	155	213	213	은평등기소 매각 이자(208) 남양주·구리 등기소 환급금 반납(3) 국고예금이자(1)
2023	155	155	155	660[405]	659	은평등기소 매각 이자(658) 국고예금이자(1)
2024	155	155	155	-	-	-

자료 : 대법원 제출

403)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268

404) 대법원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8조 [별표1]에 따라, 회계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이 5년인 이유로 2019년 이전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상세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함.

405) 남대전등기소 토지 및 건물 대여료 이자 978,920원은 납입기한이 2024년 3월 31일까지여서 2023년 결산 시는 미수납액이었으나, 2024년 3월 18일 수납되었음.

○ 이는 대법원이 2021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구 은평등기소를 매각하였고, 은평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라목[406]에 해당하는 용도로 구 은평등기소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대법원이 은평구로부터 매각대금을 10년에 걸쳐 나누어서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이자수입에 기인하는데,

기획재정부 고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407]에 따른 고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의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이자수입 예상액을 산출[408]한 결과 향후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406)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국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3의2.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삭제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소상공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407)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408) 이자 산정 산식 = [잔여원금 × 기간(전년도 납부일부터 당해연도 납부일까지의 일수) × 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 × 80%)]

<구 은평등기소 매각대금 이자금액 및 예상액(2022~2030)>

(단위 : 원)

연도	원금 (회차별 원금)	고시이자율[409]	일수[410]	이자금액
2022	24,441,365,770	1.24	250/365	208,448,560[411]
2023	21,725,656,000	2.82	392/365	657,983,810
2024	19,009,949,000	2.82	366/366	536,840,960
2025	16,294,242,000	2.82	365/365	460,149,390
2026	13,578,535,000	2.82	365/365	383,457,830
2027	10,862,828,000	2.82	365/365	306,766,260
2028	8,147,121,000	2.82	366/366	230,074,700
2029	5,431,414,000	2.82	365/365	153,383,130
2030	2,715,707,000	2.82	365/365	76,691,570

자료 : 대법원 제출

○ 즉, 대법원은 구 은평등기소 매각으로 인한 이자가 2022년부터 세입 예산액 1억 5,500만원을 초과해서 발생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액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예산부터 동일한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 계상하였는데,

세입을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과소하게 추계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경우 과소 추계액만큼의 실제 세출 규모

409) 2024년도 이후 이자율은 2023년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로 가정하여 계산함
410) 2023년도 이자 산출시에는 실제 납부일을 계산하여 392일로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실제 납부일을 알 수 없으므로 1년 단위로 계산함
411) 208,448,560원 = [2,075,840원(A) + 206,372,720원(B)]
※ 1차 이자 납부일 당시 징수할 이자액 : 24,441,365,770원 × 1.24% × 250/365 = 207,584,200원
(A) = 1차 이자 납부일(2022.3.7.) 당시 징수한 이자 2,075,840원
(B) = 1차 이자 납부일(2022.3.7.) 당시 미지급 이자 205,508,360원 + 미지급 이자에 대한 이자 징수금 864,380원 = 206,372,720원(2022.6.30. 최종 납부)

가 줄어들어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용료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수입 예상액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여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세 출》

(2) 등기소 신증축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소 신증축(1252-411) 사업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노후·협소한 일반등기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 하고, 대도시 지역의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통합등기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73억 8,2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76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52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4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소 신증축	17,382	1,688	△1,339	17,670	15,227	2,404	39

(나) 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예산비목 중 일반수용비는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용도로 4억원, 등기소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용도로 8,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집행률은 14.9%부터 51.3%까지로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등기소 신증축 일반수용비 집행현황(2021년~2023년)>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B/A)
2021	487	198	40.6
2022	487	250	51.3
2023	487	73	14.9

자료 : 대법원 제출

○ 최근 3년간 신축 및 리모델링으로 이전하게 된 등기소들의 현황 및 이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통합등기소의 경우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사이 정도로, 일반 등기소 리모델링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 수준으로 이전비 및 관련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음이 확인됨.

<신증축 등기소 이전 및 이전비 집행 현황(2021년~2023년)>

(단위: 원)

연도	구분	예산편성 당시 입주예정 등기소	실제입주 등기소	입주일	이전비 및 이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액
2021	신축	부산통합등기소	부산통합등기소	2021. 3. 14.	141,116,240
	리모델링	진천등기소	진천등기소	2022. 1. 23.	8,900,000
		영암등기소	영암등기소	2021. 12. 26.	28,739,000
		동수원등기소	동수원등기소	2021. 3. 1.	26,250,000
		하남등기소	하남등기소	2022. 2.28.	-412)

412) 등기소 내부 공사시 주말 이용 등의 사유료 이전비 미발생
413) 2022년 신축 및 리모델링 이외 등기소 기록물 보존 관리 용도로 21,478,000원 집행
414) 2023년 신축 및 리모델링 이외 등기소 기록물 보존 관리 용도로 20,250,000원 집행

연도	구분	예산편성 당시 입주예정 등기소	실제입주 등기소	입주일	이전비 및 이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액
2022 413)	신축	대전통합등기소	대전통합등기소	2022. 10. 3.	149,138,000
	리모델링	보은등기소	보은등기소	2022. 11. 27.	24,750,000
		장수등기소	장수등기소	2022. 12. 10.	26,428,000
		인제등기소	인제등기소	2023. 1. 7.	21,960,000
2023 414)	리모델링	문경등기소	문경등기소	2023. 12. 16.	23,723,500
		화천 또는 남해등기소	남해등기소	2023. 12. 2.	28,937,000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통합등기소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연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연도에 비해 이전비 소요가 크고 리모델링이 되는 등기소의 수에 따라 이전비 소요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신증축 사업에서는 수요와 무관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이전비 관련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23년은 예산 편성 당시 통합등기소 완공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리모델링 예산이 전년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리모델링 대상 등기소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3곳에서 2곳으로 1곳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이 더욱 부진하였음.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당해연도의 등기소 완공 현황과 리모델링 실시 계획에 따른 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의 절차적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일반 등기소 리모델링 20억원과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10억 1,400만원으로 구성되고, 2023년 예산현액은 29억원으로 이 중 19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백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3,014	31	△145	2,900	1,982	910	7

○ 이 중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10억 1,400만원 중 감리비 1억원을 등기특별회계 인건비로 승인이용하였고, 예산현액 9억 1,400만원에서 공사비 9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 3백만원 집행 및 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여수등기소 신축 사업은 1개의 행정구역인 여수시에 2개의 소규모 등기소[415]가 운영되고 있어 인적·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415) 여수등기소(1975년 건축,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640번지, 건물면적 490.81㎡), 여천등기소(1988년 건축,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97-1번지, 건물면적 905.48㎡)

에 따라, 인력감축, 예산절감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통합등기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에 총사업비 77억 4,000만원 중 7억 6,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있으며, 당시 공사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예상되었음.

<2021년도 예산의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7,740	763	2,843	4,134
○ 토지매입비	3,065	565	1,500	1,000
○ 공 사 비	4,113	-	1,234	2,879
○ 시설부대경비	562	198	109	255
- 기본설계비	91	91	-	-
- 실시설계비	107	107	-	-
- 감리비	350	-	105	245
- 시설부대비	14	-	4	10

자료 : 대법원 제출

○ 이후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은 2021년 10월 여수시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설계용역 계약[416]을 체결하여 기본·실시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였음.

○ 2022년 설계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소요[417]가 확인되었으나, 대법원

416)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여수등기소청사신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2021.10.22.~2022.8.17.	185,000,000원

417) 공사비 증액 15억 900만원 상세 내역(물가상승분 6억 800만원, 각종 법규 및 지침 준수로 인한 추가비용 1억 6,900만원, 부지 특성으로 인한 안정성 확보 비용 5억 500만원, 내·외장재 변경 2억 2,700만원)

은 2023년 예산에 증액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고, 2024년 예산안 정부심의 과정에서 감리비 요구액 일부분을 제외한 22억 1,200만원이 증가한 99억 5,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증액한 후,

2023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건축공사를 포함한 전문공사들의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023년 12월 14일 착공일부터 총 공사일을 360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2024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9,952	3,518	300	1,014	2,563	2,564
ㅇ 토지매입비	3,613	3,320	293	-	-	-
ㅇ 공 사 비	5,622	-	-	910	2,356	2,356
ㅇ 시설부대경비	717	198	-	104	207	208
- 기본설계비	111	91	-	-	20	-
- 실시설계비	107	107	-	-	-	-
- 감리비	483	-	-	100	185	198
- 시설부대비	16	-	-	4	2	10

자료 : 대법원 제출

○ 그러나, 건설공사의 착공을 위해서는 「건축법」제21조제2항[418]에

418)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 공사감리자의 선정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2024년 3월 기획재정부와 감리비 증액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마쳤지만 6월말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을 공고하지 못한 상황으로 2024년 하반기 착공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여수등기소는 2025년 하반기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2024. 3. 기준 감리비 증액에 따른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최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11,082	3,323	478	3	3,473	3,795
○ 토지매입비	3,613	3,320	293	-	-	-
○ 공 사 비	5,622	-	-	-	3,266	2,356
○ 시설부대경비	1,847	3	185	-	207	1,439
- 기본설계비	111	3	78	-	20	-
- 실시설계비	107	-	107	-	-	-
- 감리비	1,597	-	-	-	185	1,412
- 시설부대비	32	-	-	3	2	27

자료 : 대법원 제출

○ 즉, 여수등기소는 최초 계획시 준공월인 2023년 12월보다 1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하반기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비도 최초 계획 당시 77억 4,000만원 보다 33억 4,200만원(43.1% 증가)이 추가된 110억 8,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된 원인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임.

○ 첫째, 대법원이 2022년 설계과정에서 확인된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조속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임.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실시한 설계보고회(2022. 3. 29.) 당시부터 요율 및 단가 변동으로 공사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419]. 그 후 4차례 실시설계 협의후 5차 실시설계 협의(2022. 6. 9.)에서 총 공사비가 52억 8,400만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계용역 사업자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420].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421]이 아닌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편성기간(6월~8월)에 일괄하여 총사업비 협의·조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422]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2022년 상반기 이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획재정부와 6월에서 8월 사이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19) 「여수등기소청사 신축 기본실시설계용역 종결보고서」, 2023.10., p.95
420) 「여수등기소청사 신축 기본실시설계용역 종결보고서」, 2023.10., p.104
421) 건축사업의 경우 완성에 2년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기획재정부 훈령,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4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21

이 시기를 놓친 결과[423] 기획재정부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사업이 중단[424]되었음.

○ 둘째, 2024년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적정 감리비를 반영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된 점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감리비 산출 기준으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425]과 실비정액가산방식[426]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은 2021년 최초 예산 편성 당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3억 5,000만원[427]이 편성된 바 있음.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428]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 대가 산출내역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429]에 따라,

---

423) 22.8.9. 대법원은 사업자와의 실시설계 회의에서 사업예산 추가계획을 표명함

424) 기본실시설계용역의 최초 계약기간은 2022년 8월까지였으나, 공사비 증액이 확정되지 못해 용역계약이 중단되었고, 용역계약상대방과 건축비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가 확정되는 때 공사비 산정 내역과 설계를 수정하여 납품한다는 협의 후 2022년 12월 종결보고서를 받은 바 있으며, 2023년 10월 공사비 최종 증액 부분을 반영한 수정된 종결보고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됨

425) 공사비×요율에 의하여 해당공사에 대한 총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후 해당년도 감리비를 배분

426)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427) 공사비 41억 1,300만원 ×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8.52%

428)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429)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

연면적 1,661.49㎡인 여수등기소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 발주해야 하는 사업임.

대법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해 총 감리비를 21억 5,1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공사비 요율 방식을 준용해 4억 8,300만원만 인정했고, 이 예산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출한 건설사업관리계획과 부합하지 못하는 관계로 2023년 감리비 예산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음

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수립해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6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대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할 수 없었음.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2024년 2월 조달청의 감리비 조정 검토를 거쳐 2024년 3월 기획재정부와 총 감리비를 15억 9,700만원으로 변경하는 총 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음.

즉, 대법원은 2023년 사업이 중단된 동안 실제 감리비 소요 예산을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점을 기획재정부에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감리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는데,

2024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감리비 총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2023년 말 건축공사 등 발주와 동시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고, 이 경우 공사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져 완공도 현재의 예상인 2025년 하반기보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앞당겨졌을 것임.

○ 이와 같이 대법원이 적시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등기소 신축 사업이 실제 계획보다 지연되며, 이 경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 전체적인 편익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어서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2021년~2023년도 여수등기소 신축사업 이월 및 불용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편성	집행	이월	불용	편성	집행	이월	불용	편성	집행	이월	불용
○ 토지매입비	565	3,320 [430]	-	-	300	293	-	7	-	-	-	-
○ 공 사 비	-	-	-	-	411	-	-	411	910	-	910	-
○ 기본설계비	91	3	78	10	-	-	-	-	-	-	-	-
○ 실시설계비	107	-	107	-	-	-	-	-	-	-	-	-
○ 감리비	-	-	-	-	35	-	-	35	100 [431]	-	-	-
○ 시설부대비	-	-	-	-	4	-	-	4	4	3	-	1
총 계	763	3,323	185	10	750	293	-	457	1,014	3	910	1

자료 : 대법원 제출

○ 따라서, 대법원은 등기소 신축 등을 포함한 대법원 소관 국유재산 건축사업에서 여수등기소 신축사업의 사례와 같은 사업 지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절차별로 진행해야 할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예산요구의 근거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430)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지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여수시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계약 체결 이후 1년 이내 부지 매입비 납부를 요구함에 따라 세목조정을 통해 건설보상비 2,755백만원을 증액함

431) 등기특별회계 인건비(7001-152) 세부사업으로 승인이용

(3) 등기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 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415억 3,2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408억 6,900만원이며, 이 중 404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6,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업무 전산화	41,532	1	△665	40,869	40,407	-	462

(나) 계약사무의 전문성 증진 필요

○ 등기업무시스템은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및 인터넷 등기소 등 53개의 등기응용 정보시스템[432]으로 이루어지며, 제도개선

432) - 등기소 내부 업무시스템(23개) : 부동산등기시스템, 법인등기시스템, 기타등기시스템,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집행관통합 시스템, 집행관 관리감독 시스템, 부동산전환 시스템, 등기내부포털 시스템, 통합이미지전환 시스템, 재외국민등록번호 관리시스템, 법무사명부 관리시스템, 사용자등록 시스템, 등기소환급 시스템, 수입징수관 환급시스템, 디지털등기소 시스템, 이미지음영화 시스템, 통계시스템, 이러닝시스템, 사용자지원시스템, SLM시스템, 무인발급기 서비스지원시스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 대민서비스 시스템 (16개) : 부동산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 부동산등기전자신청시스템, 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통합전자등기시스템, 법인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 법인등기 전자신청시스템, 법인등기 인터넷 열람/발급시스템, 기타등기 인터넷시스템,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 동산·채권 담보등기 전자신청 시스템, 동산·채권 담보등기 인터넷 열람/발급 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전자신청 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인터넷 열람/발급 시스템, 등기외부포털시스템, 전자납부시스템, 메일고지 시스템
- 연계 업무 시스템 (14개) : 재판사무 전자촉탁시스템, 표시변경 전자촉탁시스템, 압류와압류말소 전자촉

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서는 위 시스템들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및 각종 성능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이러한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국가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433]해야 하는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434]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435]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탁시스템, 공통고유번호 연계시스템, 국민주택채권 연계시스템, 소유권변동 및 코드통지시스템, 법인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전자확정일자 연계시스템, 첨부서면 연계시스템, 전자수입인지 연계시스템, 등기수수료 은행연계시스템,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등록면허세 취득세 통지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 유/무상열람시스템

4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4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 5. (생 략)

○ 2023년 대법원은 등기업무 전산화 세부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세 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2023년도 원가계산용역 대상 정보화 사업 및 원가계산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대상사업	2024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	부동산 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
원가계산 용역금액	6	20	3.3
사업개요	등기응용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	등기사항증명서 등 인터넷 열람·발급 등 수수료 결제요청 및 정산에 이르는 전자지급서비스 대행	부동산등기 DB서버 3대 주요 자원 교체 및 증설, 백업서버 1대 구매
편성된 사업예산	16,716	전자지급결제 수단을 통해 징수된 수수료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므로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없음	78.5[436]
입찰공고 시 사업금액	17,350	8,613	1,389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 작성방식	비예가	비예가	비예가
최초사업 시행연도	1998년	2008년	2023년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36) 해당사업은 금융리스를 통해 60개월 동안 비용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78.5백만원 집행

○ 그런데, 원가계산용역의 대상사업 세 건은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437]으로 입찰 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438]으로 세 계약 모두 최초 입찰 공고 당시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으로 계약금액 기준을 정하는 비예가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였음.

○ 즉, 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기획재정부에 예산안 심의를 위해 산정한 사업예산이 계약 금액 결정 기준이 된 것이고, 별도의 예정가격으로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았으므로 원가계산용역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의 사업예산은 사업기간[439] 동안 발생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예상 징수액에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 등 각 결제수단별로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등기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목의 예산 편성시 다음연도 수수료 예상 징수액을

4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4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439) 2023. 9. 1. ~ 2024 12.

예측할 수 있고,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440]」이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들이 수취하는 수취료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지 않고도 담당공무원이 사업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과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은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대규모 신규 서비스의 도입과 같은 과업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등의 큰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원가계산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신규사업인 부동산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의 경우 물품 구매 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대법원이 취득한 물품은 다음과 같이 민간기업이 판매하는 기성품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해당기업에 견적요청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원가계산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44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를 통해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2023. 3. 31.

<부동산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 사업 구매내역>

(단위: 백만원)

대상장비	물품명	금액
부동산등기 DB서버 2식	HPE Superdome2 OB900s i6	900
부동산등기 DB서버[DR] 1식	HPE Superdome2 OB900s i6	450
이중화 구성용 L2스위치 2식	HPE 5140 24G	10
OS백업용 Ignite 1식	HPE rx2800	28.2

자료 : 대법원 제출

○ 한편, 국회는 2019년 결산심사시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업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원가계산 정보를 토대로 담당자가 직접 원가를 계산하여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441]한 적이 있고, 대법원은 불필요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과거 국회의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회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 계약담당공무원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계약사무에 대한 이해 부족도 원인인 것

441)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249

으로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계약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4) 등기업무 운영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 사업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 등의 발행 경비, 등기신청사건 업무 처리비, 등기국·과·소 건물의 유지·보수, 등기장비의 교체 및 민원실 환경개선 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239억 8,600만원, 이·전용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260억 9,600만원이며, 이 중 258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등기업무 운영지원	23,986	805	1,306	26,096	25,816	47	232

(나) 예산 이·전용 및 세목조정 활용시 정확한 추계 필요

○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은 총 168개의 등기관서[442] 청사의 각종 공공요금과 대법원등기정보센터의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책임보험료 등으로 집행되고 있음.

442) 광역 등기국 11개,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시·군법원 및 등기소 111개로 총 168개 관서이며, 지방법원 건물에 위치해 독립청사를 활용하지 않는 등기 관서를 제외하고 실제로 등기특별회계를 통해 청사 공공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청사는 123개임.

○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공공요금 집행액은 다음과 같은데, 2022년과 2023년 사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443] 등의 원인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의 집행액은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상황임.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현황(2021~2023)>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1	3,193	323	3,516	3,379	136
2022	3,420	475	3,895	3,837	58
2023	3,995	3,728	7,723	7,646	76

자료 :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부족한 공공요금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용·전용·세목 조정을(이하 '이·전용 등') 통해 예산액의 93.3%에 해당하는 37억 2,800만원을 다른 사업과 다른 비목에서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의 공공요금으로 변경했음[444].

○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공공요금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전용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했다고

443)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전기요금	116.27원/kWh	124.4원/kWh
가스요금	16.1841원/MJ	25.061원/MJ
대법원등기정보센터 공공요금 총 집행액	597,419,160원	960,454,960원

※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단가는 각각 당해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일반용 전력 저압 여름철 및 업무난방용 도매요금 기준임

444) 일반회계에서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 청사 및 분당 전산정보센터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세부사업인 본부운영지원(7031-303)사업에서도 예산액 146억 4,6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51억 2,900만원이 이·전용 등 되었음.

하지만, 이로 인해 재원을 보내주는 다른 비목을 활용하는 사업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전용 등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 향후 소요분만큼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일부 지방법원·지원 등의 일선 공공요금 집행 관서에서는 오히려 공공요금이 남아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에서 다른 세목으로 세목조정을 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바 있음.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에서 다른 세목으로의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일자	보내는세목	받는 세목	금액	집행관서
2023-01-13	210-02	210-08(유류비)	1	성남지원
2023-10-05	210-02	210-01(일반수용비)	50	인천지방법원
2023-10-1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성남지원
2023-11-20	210-02	210-15(관리용역비)	5	제천지원
2023-11-20	210-02	210-01(일반수용비)	35	성남지원
2023-11-24	210-02	210-01(일반수용비)	8	성남지원
2023-12-13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12-21	210-02	210-01(일반수용비)	21	성남지원
2023-12-26	210-02	210-01(일반수용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수원지방법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남원지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4	성남지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춘천지방법원
2023-12-28	210-02	210-01(일반수용비)	1	평택지원
2023-12-29	210-02	210-01(일반수용비)	8	여주지원
2023-12-29	210-02	210-01(일반수용비)	2	목포지원

자료 :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 대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일선 관서들이 세목조정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 일선 관서의 관서운영경비로, 매년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90%를 배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일선 관서에 배정하고 이후 부족분 발생시 수시 요청을 받아 배정하고 있다고 함.

○ 비록,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일선 관서들에서 동일 목 내에서는 세목 간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총괄 회계관서인 법원행정처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3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일부 관서의 경우 공공요금 배정액이 집행액보다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원행정처로서는 이를 미리 파악하여 이 금액을 공공요금이 부족한 다른 관서로 재배정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바람직한 재원 배분이라고 볼 수 있음.

○ 2024년 등기업무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편성액은 51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전년도 집행액보다 부족한 상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다시 이·전용 등을 폭 넓게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대법원은 등기업무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청사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일선 관서들의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당해연도 공공요금 청구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 분기별로 각 일선관서들에 대해 구체적 액수로 확정된 공공요금 재배정 계획을 추가적으

로 수립한 후 예산을 배분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인건비가 연말 부족하다고 추계하여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에서 등기특별회계 인건비로 7억 1,400만원을 승인 전용하였으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등기특별회계 인건비에서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으로 다시 7억 1,100만원을 자체전용 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최초 불필요한 전용을 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이·전용 등에 앞서 면밀한 추계를 통해 각 사업의 부족한 예산액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과 등기특별회계 인건비 간 상호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이·전용 등 일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7	32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8	163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9	196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15	44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420-03	69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17.	승인전용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430-01	210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2023.12.27.	자체전용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140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2
2023.12.28.	자체전용	등특인건비 (7001-152)	110-01	528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2
2023.12.28.	자체전용	등특인건비 (7001-152)	110-05	43	등기업무운영지원 (7032-311)	210-02

(1)

자료 : 대법원,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예결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5) 일반회계 전출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일반회계 전출(8010-800) 사업은 등기특별회계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1,702억 1,100만원이며, 이 중 111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90억 3,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일반회계 전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전출	170,211	-	-	170,211	11,176	-	159,035

(나)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확대 필요

○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는 전년도 결산상 세입총계에서 세출총계를 빼는 개념인 전년도세계잉여금 목을 두고, 세출 과목에는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하는 일반회계 전출 비목을 둔 채로 이들을 예측치로 편성하는 것을 통해 세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고 있음.

○ 그런데, 등기특별회계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현황이 매우 낮은 상황임.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현황(2019~2023)>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19	74,634	24,586	32.9%
2020	81,521	-	-
2021	95,701	29,181	30.5%
2022	50,305	-	-
2023	170,211	11,176	6.6%

자료 : 대법원 제출

○ 이는 일반회계 전출금 규모를 결정해야 할 매년 연말에도 수수료 및 면허료 수입을 포함한 세입의 징수가 마감되지 않아서[445] 당해연도 총세입 징수액과 총세출 집행액의 실제 차이인 일반회계 전출금의 집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등기특별회계는 최근 3년간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어 세출 순계 규모의 큰 변동이 없으므로, 면허료 및 수수료 징수액 추이를 면밀히 추산할 경우 연말에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가능 규모를 보다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445) 2023년의 경우 12월 31일 전체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액의 7.7%에 해당하는 12월분이, 2024년 1월 20일 전체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액의 1.5%에 해당하는 13월분이 징수 마감되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2023년 12월 29일(2023년 평일 마지막날)에 확정됨

최근 5년간 결산을 살펴볼 때 비록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한 등기특별회계의 세입 순계의 변동으로 특별회계 전체의 재정여력이 매년 줄고 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2023년의 경우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추가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등기특별회계 재정여력(2019~2023)>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총계 (A)	전년도 세계 잉여금(B)	세입순계 (A-B=C)	세출총계 (D)	일반회계 전출(E)	세출순계 (D-E=F)	특별회계 재정여력 (C-F=G)	일반회계 전출금 추가집행 가능액 (A-D=H)
2019	287,343	42,283	245,060	246,676	24,586	222,090	22,970	40,666
2020	318,867	40,666	278,201	240,970	-	240,970	37,231	77,897
2021	353,446	77,897	275,549	279,761	29,181	250,580	24,969	73,685
2022	317,306	73,685	243,621	249,256	-	249,256	△5,635	68,050
2023	301,102	68,050	233,052	264,203	11,176	253,027	△19,975	36,872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일반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이 되고 국가결산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국가재정법[446]에 따라 국채 상환 등의 재원

446) 「국가재정법」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이 되므로,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이를 일반회계로 전입해 국가부채 상환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등기특별회계 내에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향후 매년 연말까지 총세입의 징수액 추이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이입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총 괄》

(1)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사법부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금으로, 2015년 12월 15일 「공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었음.

○ 동 기금은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을 바탕으로 하는 출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447] 기금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재판활동지원(소송구조지원, 조정제도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소년보호 등 지원 등), 사법정보화운영(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임.[448]

---

447) 「공탁법」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48) 「공탁법」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 내용
소송구조지원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
조정제도지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법원의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조정위원 수당, 조정센터 운영 지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에 민간경상보조
소년보호 등 지원	소년보호재판 및 아동보호절차 지원,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 지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소송자료 검색, 첨부서류 제출 등 전자소송 이용상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용	공탁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정보화 사업

○ 최근 5년간 동 기금의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기금규모는 계획(현)액 기준 2019년 745억 6,700만원, 2020년 1,157억 9,200만원, 2021년 1,468억 1,100만원, 2022년 1,874억 2,000만원, 2023년 2,011억 8,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바,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약 270% 증가함.

○ 주요사업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규모의 증가에 따라 사업비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 중이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할 때 2019년 484억 8,300만원, 2020년 531억 1,600만원, 2021년 671억 3,900만원, 2022년 718억 6,400만원, 2023년 701억 7,300만원으로 2023년에는 2019년에 비하여 약 145%가 증가하였음.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그러나 전체 기금에서 주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획(현)액 기준 지속적으로 감소(2019년 70.5%→ 2023년 38.3%)하고 있으며,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약 50% 수준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및 주요사업비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기금	계획(현)액(A)	74,567	115,792	146,811	187,420	201,181
	집행액(B)	94,569	135,870	123,597	133,285	136,889
주요사업비	계획(현)액(C)	52,565	62,382	82,289	80,133	77,139
	집행액(D)	48,483	53,116	67,139	71,864	70,173
	집행률(D/C)	92.2	85.1	81.6	89.7	91.0
주요사업비 비율	계획(현)액 기준(C/A)	70.5	53.9	56.1	42.8	38.3
	집행액 기준(D/B)	51.3	39.1	54.3	53.9	51.3

자료: 대법원 제출

○ 한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여유자금[449]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여유자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23년 말 기준 전년대비 360억 400만원이 증가한 1,203억 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449) 여유자금은 특정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에서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사업성 대기자금 포함)으로서 ①금융기관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목적의 대출 등 금융자산, ②자산운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포함함[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3조제3호]

<최근 5년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여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예치)	여유자금 규모 (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증감
2019	9,744	46,087	55,988	36,342
2020	43,343	82,754	95,339	39,351
2021	39,048	26,459	83,177	△12,162
2022	26,459	31,420	84,383	1,206
2023	3,920	36,715	120,387	36,004

자료: 대법원 제출

○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에 쓰이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켜 재정지출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재정제도이므로, 기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주요사업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여유자금의 과다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450]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기금 사업의 조정 또는 근본적인 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451]

○ 특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업성 기금에

450) 「2019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기획재정부, 2019.5.)에서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부적정'한 측면(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보다 과다보유하고 있으며, 과도한 여유자금운용 및 기금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를 관망할 필요)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기금존치 여부에 대하여는 기금의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며 주요 사업들이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451)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기금 여유자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나라살림 리포트(2019-제12호), 2019. 12.

해당하므로,[452] 이러한 점이 기금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대법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사업영역이 소송구조,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등으로 확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의 고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공탁법」에 따른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453]을 발굴하여 기금으로 이관·편성하는 등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452) 김선옥, '기금의 신축적 운영과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2018. 12.

<설치 목적에 따른 기금의 분류>

분류	주요 내용
사업성기금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
금융성기금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재정활동을 수행하기보다 특정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사회보험성기금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 및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성기금과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 기금으로 구성
계정성기금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집행 주체가 다른 기금으로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이해와 실제」, 2014.5.

453) 예를 들어, 현재 법원행정처는 '국선변호료지원(1143-409)'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① 현행 「공탁법」제31조에 따르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용도에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 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동 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 설치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일반회계 및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출연금에서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가, 2015년 출연금이 계획만큼 확보되지 않아 2016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설치 이후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고 있는 점, ③ 법원행정처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의 활성화 및 규모 증대를 통하여 국선변호료 지원 비용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사업 중 기금 사업으로 이관·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감사원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관련 감사 보고서(2022. 8.)에서도 유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수 입》

(2) 민간출연금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민간출연금(59-594)은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기 위한 과목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906억 3,600만원 중 1,008억 9,4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음.

<2023년도 민간출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목명·세목명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수정						
민간출연금	90,636	90,636	-	90,636	100,894	100,894	-	-

(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정에 있어 공개경쟁 방식 확대 및 심사·평가 기준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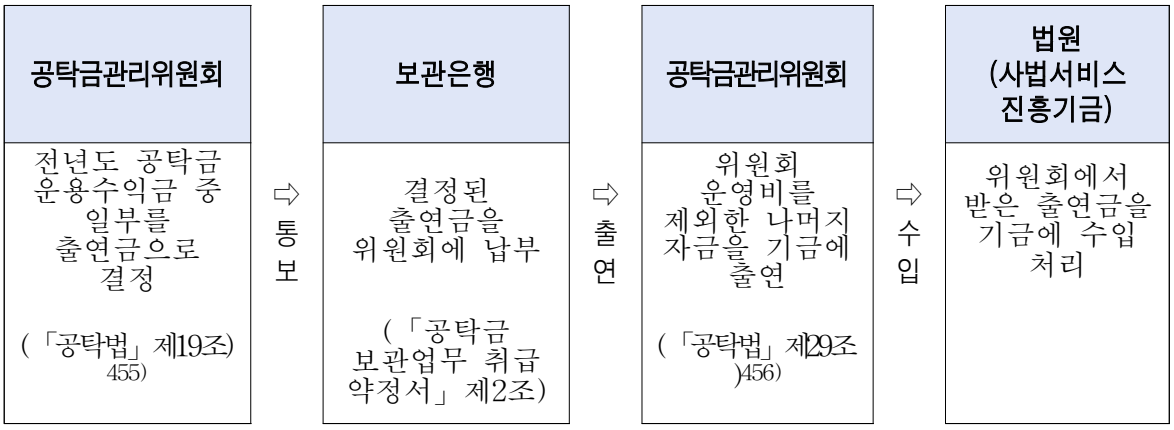
○ 대법원은 시중은행을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하여 공탁금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은행은 보관된 공탁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 형식으로 출연하고 있음.[454]

454) 공탁금 운용수익 발생 흐름도

공탁자 ⇨ 국가(법원) ⇨ 보관은행 ⇨ 국가(법원)

민간출연금의 수입 절차는, 「공탁법」 제19조 등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의 전년도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금으로 결정하고, 보관은행이 동 위원회에 출연금을 납부하면, 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금에 출연하는 순서로 진행됨.

<민간출연금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구조>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관리실태」, 202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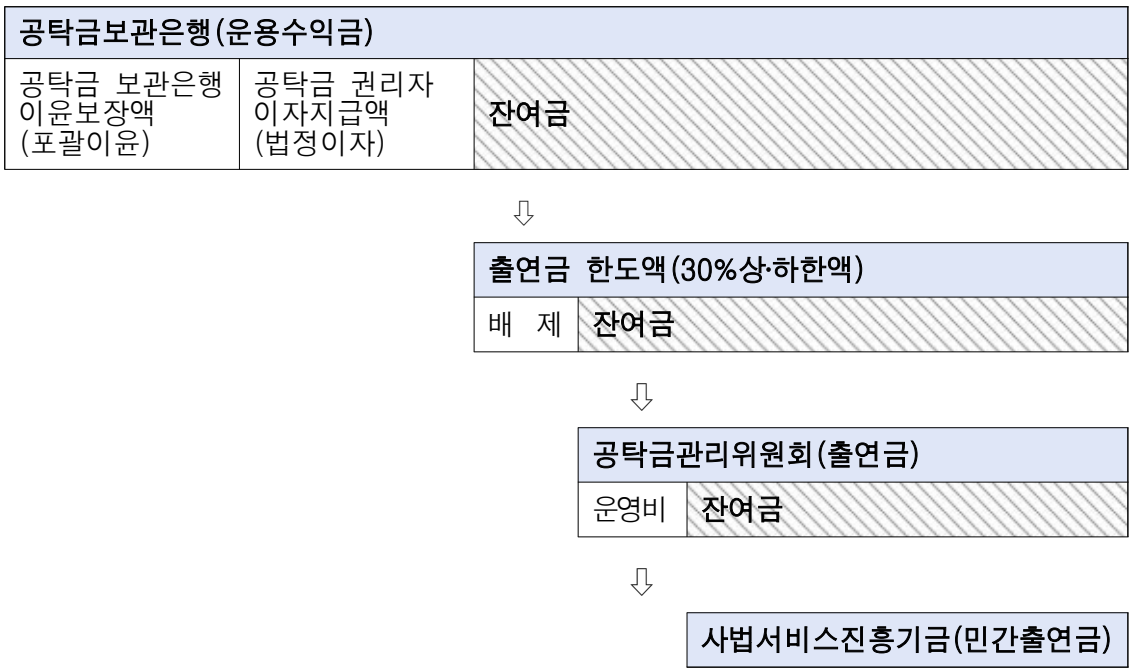
공탁금 | 공탁 | 보관(임치)·운용 | 수익 일부 출연

455) 「공탁법」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56) 「공탁법」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이때 민간출연금 규모는 은행의 공탁금 운용 수익금에서 은행에게 보장하는 특정 이윤(포괄이윤), 공탁금 반환 시 공탁금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탁금 이자(법정이자)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여 확정됨.[457]

<민간출연금 확정 절차>



45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하고, 위와 같이 지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공탁금의 연평균 납입액은 9.65조원, 지급액은 9.26조원으로 통상 납입액의 규모가 지급액 규모보다 크고, 공탁금의 연말 잔액은 증가 추세로서, 2019년(8.83조) 대비 2023년(10.84조) 22.8%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공탁금 납입·지급액 및 연말 잔액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납입액	8.47	9.78	10.09	10.49	9.42	9.65
지급액	8.55	8.55	8.90	10.42	9.89	9.26
연말 잔액	8.83	10.05	11.23	11.31	10.84	10.45

자료: 정현희,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4.

그 결과 2023년 기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중에서 민간출연금 비중은 73.7%로 민간출연금이 동 기금의 주된 재원임.

<2023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중 민간출연금 비중>

(단위: 백만원, %)

항목	민간출연금	여유자금회수	기타	계
수입액	100,894	3,920	32,075	136,889
비중	73.7	2.9	23.4	100

자료: 대법원 제출

○ 이처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공탁금 보관으로 발생하는 민간출연금이므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대법원은 기금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및 목적사업의 충실한 실시를 위하여 공탁금 보관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민간출연금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2023년 말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현황을 살펴보면, 공탁금 보관금의 70% 가량이 특정 은행에 집중되어 있고,

<공탁금 보관은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개소, 2023년 말 기준)

은행	공탁금 평균 잔액	공탁금 관리금액 비율	공탁금 관리 법원 수
신한은행	7,436,982	68.11	42
농협은행	1,050,158	9.62	87
국민은행	533,699	4.89	2
우리은행	423,317	3.88	6
하나은행	200,666	1.84	6
경남은행	351,456	3.22	8
대구은행	327,124	3.00	3
부산은행	253,082	2.32	2
광주은행	225,477	2.07	8
전북은행	116,578	1.07	2
전체	10,918,543	100	166

자료: 대법원 제출

최근 5년간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현황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458]에서 신규 지정의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따르는 반면[459], 기존 보관은행에 대한 정기정격성 심사를 통한 재지정(신규 지정 후 매 5년마다 실시)[460]의 경우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기존 보관은행을 재지정하므로,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소지가 있음.

<최근 5년간 공탁금 보관은행 계약방식>

(단위: 백만원, 해당연도 12.31.자 기준)

연도	공탁금 보관은행 계약방식	은행 수	공탁금잔액
2019	공개경쟁(신규지정)	1	121,886
	수의계약(재지정)	7	1,584,609
2020	공개경쟁(신규지정)	2	252,869
	수의계약(재지정)	5	573,307
2021	공개경쟁(신규지정)	3	3,666,092

458)「공탁법」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제2조(보관은행 지정) ① 법원이 신설되거나 제11조에 따라 보관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 보관은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보관은행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새로 지정된 보관은행의 업무개시일 전일까지는 종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459)「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제4조(보관은행 지정 방법) ① 보관은행은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없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3조 단서에 따른 복수지정 대상은행이 한 곳인 경우
3. 시·군법원의 경우
4. 제11조의 지정 취소로 인한 재지정 시 공탁금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460) 「공탁금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제6조(보관은행의 정기적격성심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보관은행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정기적격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개경쟁방식으로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다.

연도	공탁금 보관은행 계약방식	은행 수	공탁금잔액
	수의계약(재지정)	2	1,378,269
2022	공개경쟁(신규지정)	1	1,207,282
	수의계약(재지정)	3	1,483,093
2023	공개경쟁(신규지정)	1	291,802
	수의계약(재지정)	4	510,925

자료: 대법원 제출

○ 한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및 정기적격성 심사의 기준을 살펴보면, ⅰ)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ⅱ)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능력, ⅲ)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등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461], 출연금 규모 등 수익적 측면[462]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아, 기금 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공탁금 보관은행 재지정에 따른 적격성 심사 결과>

연도	권역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법원[463]			은행명	적격성 심사 결과
2019	대구, 부산, 울산,	20	신규	1	신한	모두 적격
			재지정	19	신한, 농협, 우리, SC,	

461)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제8조(심사·평가 기준)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정기적격성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능력
3.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4. 보관금·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 다만, 정기적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지원의 경우 지원장, 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 판사의 의견
7. 기타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62)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유·보관하는 현금 등을 취급하는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에 따르면 금고 관리 업무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수익성, 예치금리 등 수입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연도	권역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법원[463]			은행명	적격성 심사 결과
	창원지역				경남, 대구, 부산	
2020	광주, 전주, 제주지역	12	신규	2	신한, 농협	모두 적격
			재지정	10	신한, SC, 광주, 전북	
2021	서울, 의정부지역	19	신규	14	신한, 농협, 경남	모두 적격
			재지정	5	신한, 농협	
2022	인천, 수원, 춘천지역	10	신규	2	신한, 농협, 우리, 국민	모두 적격
			재지정	8	신한, 농협, 우리	
2023	대전, 청주지역	9	신규	2	신한	모두 적격
			재지정	7	신한, 농협, 우리, 하나	

자료: 대법원 제출

○ 실제 최근 3년간 보관은행별 공탁금평균잔액 대비 기금에 출연된 금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0.64%~1.06%, 2022년의 경우 0.40%~0.86%까지, 2023년의 경우 0.47%~1.08%까지의 편차를 보여 공탁금을 어느 보관은행에 예치하느냐에 따라 기금의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보관은행별 민간출연률 현황>

(단위: 백만원, %)

보관은행	2021			2022			2023		
	공탁금 평균 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공탁금 평균 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공탁금 평균 잔액 (A)	출연금 (B)	출연률 (B/A)
신한은행	6,778,960	63,674	0.94%	7,696,264	56,183	0.73%	8,076,038	73,410	0.91%
SC은행	507,324	4,013	0.79%	437,546	2,553	0.58%	111,211	1,163	1.05%
우리은행	353,628	3,468	0.98%	377,351	3,245	0.86%	453,264	4,218	0.93%

463) 시·군 법원 제외

농협은행	467,318	3,367	0.72%	611,846	4,161	0.68%	967,608	9,541	**0.99%**
하나은행	160,443	1,730	**1.08%**	197,219	1,676	**0.85%**	200,945	2,178	**1.08%**
광주은행	159,545	1,241	0.78%	191,812	1,208	0.63%	229,353	1,570	0.68%
대구은행	283,086	2,392	0.85%	304,188	1,977	0.65%	337,052	2,570	0.76%
부산은행	169,249	1,517	0.90%	266,556	1,854	0.70%	279,091	2,410	0.86%
경남은행	269,881	2,286	0.85%	342,735	2,296	0.67%	366,074	3,344	0.91%
전북은행	48,786	314	0.64%	94,728	377	0.40%	105,073	490	0.47%
합계	9,198,170	84,002	0.91%	10,530,245	75,530	0.72%	11,125,709	100,894	0.91%

자료: 대법원 제출

○ 따라서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에 있어 신규지정뿐만 아니라 정기적격성 심사를 통한 재지정에 있어서도 공개경쟁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또는 정기적격성 심사 기준에 있어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탁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64].

464)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보관은행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2024년 2월 연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2024년 4월 24일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24년 11월에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바, 향후 출연금 증대와 출연금 안정적 확보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지 출》

(3) 소년보호 등 지원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은 「소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가정(지방)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63억 6,700만원이며 이 중 50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12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계획(현)액 63억 6,700만원 중 11억 8,400만원은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5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4,600만원이 불용(54.5%)되었음.

<2023년도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소년보호 등 지원	6,367	6,367	-	6,367	5,074	-	1,293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1,184	1,184	-	1,184	538	-	646

(나)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개선 필요

○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소년보호사건[465],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포함)[466],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 포함)[467]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

465) 「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46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7.“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8. (생략)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9. (생략)

4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8. (생략)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4. (생략)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 사건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년법」 제12조[4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46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470] 및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471]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조회 비용 및 집단상담, 문화체험 실시비용 등으로 편성되어 있음.

---

468) 「소년법」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6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47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71) 「전문가의 진단 등에 관한 예규(재특 2016-1)」 제2조(진단전문가 명단의 작성 등) ① 법원장·지원장은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판사(다음부터 이들을 모두 합하여 '판사'라고 한다)가 조사·심리를 할 때에 「소년법」 제12조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교육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보호소년,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신·심리상태 등에 대한 진단 및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다음부터 '전문가의 진단 등'이라고 한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2년마다 1회씩 해당 연도 말까지 전문가의 진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 관할구역 내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진단전문가의 명단을 작성한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동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계획액 대비 실집행률이 40% 내외로 매년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연도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소년 등 집행감독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2019	1,184	474	40.1	710	59.9
	2020	1,267	570	45.1	697	54.9
	2021	1,184	497	42.1	687	57.9
	2022	1,194	454	38	740	62
	2023	1,184	508	42.9	676	57.1

자료: 대법원 제출

○ 동 사업의 실집행률의 부진은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및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 등에서 전문가 진단 또는 의견조회의 실시 비율이 낮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2023년을 기준으로 전문가 진단이 실시된 사업은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은 총 18,179건 중 856건(4.7%), 아동보호집행감독은 총 사건 4,752건 중 693건(14.5%), 가정보호집행감독은 총 사건 12,656건 중 1,847건(14.6%)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소년보호집행감독 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실시 건수>

(단위: 백만원, %)

사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년보호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 수	14,339	15,149	13,990	14,100	18,179
	전문가 진단 실시 건수	675	713	658	664	856
아동보호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수	2,311	2,477	3,949	4,737	4,752
	전문가 의견조회 실시 건수	337	631	576	691	693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수	561	690	854	535	371
	전문가 의견조회 실시 건수	81	100	124	78	54
가정보호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수	12,816	10,477	9,834	11,710	12,656
	전문가 의견조회 실시 건수	1,871	1,529	1,435	1,709	1,847
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총 사건수	1,340	1,087	1,004	855	845
	전문가 의견조회 실시 건수	195	158	146	124	123

자료: 대법원 제출

○ 법률에서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유형의 사건에서는 대상자의 발달적 특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범죄 원인의 규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대법원은 동 사업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요인을 분석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집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사법서비스 향상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알권리 강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은 128억 6,400만원이며 이 중 122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3년도 계획(현)액 128억 6,400만원 중 17억 600만원은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배정되었는바, 이 중 16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1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사법서비스 향상	13,129	12,832	33	12,864	12,287	24	553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077	1,682	24	1,706	1,611	24	71

(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472]

○ 국민참여재판은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473] 피고인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474]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 중 배심원의 안전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475]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47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 2007. 6. 1. 제정, 2008. 1. 1.시행)

47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47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조(대상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47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대상 사건 21,483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된 건수는 약 3.14%인 674건으로, 접수 사건 수 대비 실시율은 13.0%, 대상 사건 수 대비 실시율은 0.4%에 불과함.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12년 대상 사건의 범위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되어[476] 대상 사건 수가 4배 가량 증가하였지만,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와 실시 건수는 대상 사건 수 증가폭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2012년 이후에도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 대비 실시 비율은 하락 추세에 있음.

<국민참여재판 제도 실시 현황(2008년~2023년)>

(단위: 건, %)

연도	대상 사건수	접수 건수	처리							기타 (미제 등)
			국민참여재판 실시		배제결정 (통상회부결정 포함)		신청 후 철회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2008	4,287	233	64	29.8	61	28.4	90	41.9%	215	18
2009	5,661	336	95	30.8	75	24.4	138	44.8%	308	46
2010	6,040	438	162	39.1	75	18.1	177	42.8%	414	70
2011	5,924	489	253	51.2	63	12.8	178	36.0%	494	65
2012	20,464	756	274	40.5	124	18.3	278	41.1%	676	145
2013	19,974	764	345	43.3	118	14.8	334	41.9%	797	112
2014	21,397	608	271	44.4	107	17.5	233	38.1%	611	109
2015	19,521	505	203	38.6	106	20.2	217	41.3%	526	88
2016	20,924	860	305	38.9	151	19.3	328	41.8%	784	164

476) 2012년 이전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죄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였으나, 2012년 법률개정(법률 제11155호, 2012년 7월 1일 시행)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확대함.

연도	대상 사건수	접수 건수	처리							기타 (미제 등)
			국민참여재판 실시		배제결정 (통상회부결정 포함)		신청 후 철회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2017	19,615	712	295	37.2	195	24.6	304	38.3%	794	82
2018	19,717	665	180	28.8	183	29.3	261	41.8%	624	123
2019	17,948	630	175	28.0	187	29.9	263	42.1%	625	128
2020	19,314	865	96	12.4	293	37.8	387	49.9%	776	217
2021	18,758	767	84	10.7	306	39.1	393	50.2%	783	201
2022	21,289	811	92	11.3	241	29.6	480	59.0%	813	199
2023	21,483	674	95	13.0	226	31.0	407	55.9%	728	145

주: 대상사건 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당해 연도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의 건수를, 접수건수는 대상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된 건수임.

자료: 대법원 제출

○ 특히,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에 대하여 법원이 배제결정(법 제9조) 또는 통상회부결정(제11조)을 하여 참여재판이 실시되지 않은 비율은 최근 5년간 매년 29~39% 수준에 이름.

배제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제9조제1항제4호(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른 배제결정이 640건, 제11조(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의 사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함)[477]에 따른 통상회부결정이 374건으로 전체 배제사유 중 8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47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1조(통상절차 회부) ①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현황>

(단위: 건)

적용법조 / 연도	국민참여재판 배제					
	법 제9조제1항 제1호사유	법 제9조제1항 제2호사유	법 제9조제1항 제3호사유	법 제9조제1항 제4호사유	제11조	합계
	배심원 안전 위협·공정한 직무수행우려	공범인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희망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	통상회부결정	
2019	0	5	45	102	35	187
2020	1	4	43	167	78	293
2021	2	4	44	188	68	306
2022	1	0	45	93	102	241
2023	1	9	45	80	91	226
합계	5	22	222	630	374	1,253

자료: 대법원 제출

○ 한편,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의 광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 2021년의 서울서부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 2022년의 대전지방법원 및 2023년의 제주지방법원 등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실시 실적이 전혀 없었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른 실시 비율은 법원별로 0%에서 63%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최근 5년간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인용 현황>

(단위: 건, %)

연도	법원별	신청	인용	인용률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48	11	22.9
	서울동부지방법원	25	3	12.0
	서울남부지방법원	30	6	20.0
	서울북부지방법원	34	7	20.6
	서울서부지방법원	26	9	34.6
	의정부지방법원	32	7	21.9
	인천지방법원	66	18	27.3
	수원지방법원	82	24	29.3
	춘천지방법원	16	7	43.8
	대전지방법원	47	14	29.8
	청주지방법원	19	12	63.2
	대구지방법원	40	16	40.0
	부산지방법원	56	4	7.1
	울산지방법원	14	6	42.9
	창원지방법원	23	12	52.2
	광주지방법원	32	5	15.6
	전주지방법원	29	9	31.0
	제주지방법원	11	5	45.5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69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	35	9	25.7
	서울남부지방법원	55	3	5.5
	서울북부지방법원	42	6	14.3
	서울서부지방법원	18	1	5.6

연도	법원별	신청	인용	인용률
	의정부지방법원	68	1	1.5
	인천지방법원	59	8	13.6
	수원지방법원	126	14	11.1
	춘천지방법원	16	5	31.3
	대전지방법원	67	3	4.5
	청주지방법원	41	10	24.4
	대구지방법원	67	17	25.4
	부산지방법원	54	6	11.1
	울산지방법원	27	4	14.8
	창원지방법원	41	6	14.6
	광주지방법원	**39**	**0**	**0.0**
	전주지방법원	**25**	**0**	**0.0**
	제주지방법원	16	1	6.3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74	14	18.9
	서울동부지방법원	31	7	22.6
	서울남부지방법원	34	9	26.5
	서울북부지방법원	24	6	25.0
	서울서부지방법원	**17**	**0**	**0.0**
	의정부지방법원	61	2	3.3
	인천지방법원	61	3	4.9
	수원지방법원	108	4	3.7
	춘천지방법원	14	3	21.4
	대전지방법원	49	1	2.0
	청주지방법원	22	6	27.3
	대구지방법원	63	17	27.0
	부산지방법원	57	1	1.8
	울산지방법원	20	4	20.0

연도	법원별	신청	인용	인용률
	창원지방법원	36	1	2.8
	광주지방법원	45	6	13.3
	전주지방법원	**30**	**0**	**0.0**
	제주지방법원	**21**	**0**	**0.0**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45	4	8.9
	서울동부지방법원	25	3	12.0
	서울남부지방법원	41	6	14.6
	서울북부지방법원	39	7	17.9
	서울서부지방법원	17	3	17.6
	의정부지방법원	65	1	1.5
	인천지방법원	64	3	4.7
	수원지방법원	127	14	11.0
	춘천지방법원	13	4	30.8
	대전지방법원	**53**	**0**	**0.0**
	청주지방법원	33	6	18.2
	대구지방법원	72	15	20.8
	부산지방법원	67	6	9.0
	울산지방법원	16	1	6.3
	창원지방법원	46	14	30.4
	광주지방법원	43	2	4.7
	전주지방법원	28	2	7.1
	제주지방법원	17	1	5.9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44	5	11.4
	서울동부지방법원	9	1	11.1
	서울남부지방법원	31	4	12.9
	서울북부지방법	37	8	21.6

연도	법원별	신청	인용	인용률
	원			
	서울서부지방법원	18	4	22.2
	의정부지방법원	55	2	3.6
	인천지방법원	59	6	10.2
	수원지방법원	95	9	9.5
	춘천지방법원	15	3	20.0
	대전지방법원	41	2	4.9
	청주지방법원	23	8	34.8
	대구지방법원	48	19	39.6
	부산지방법원	74	9	12.2
	울산지방법원	19	4	21.1
	창원지방법원	26	7	26.9
	광주지방법원	48	1	2.1
	전주지방법원	16	3	18.8
	제주지방법원	**16**	**0**	**0.0**

자료: 대법원 제출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민참여재판 홍보 및 신청주의 수정[478] 등에 따른 접수건수 확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각급 법원의 명확한 배제기준 마련 등을 통한 배제율 관리, 관할구역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78)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453호, 제2101783호)에는 신청주의에 대한 수정의 내용이 포함됨(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사유 중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공정한 재판이 저해된다고 인정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하는 등).

(다) 국민참여재판운영 등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대법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8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개 전략목표, 2개 프로그램 목표(사법제도 개선 및 재판활동 지원,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를 설정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에서는 '전체 사건 처리율'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대법원의 성과목표 및 달성 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0년	'21년	'22년	'23년
전략목표Ⅰ : 좋은재판 실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재판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 Ⅰ-1 사법제도 개선 및 재판활동 지원								
재판활동 지원	①전체 사건 처리율 (%)	투입	(전체 처리사건수/전체 접수사건수)×100	목표	100	100	100	100
				실적	99.3	100.2	100.1	99.5
				달성률 (%)	**99.3**	**100.2**	**100.1**	**99.5**
전략목표Ⅱ : 사법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 : Ⅱ-1 사법정보화시스템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								
사법정보화운영	①장애복구시간준수율 (%)	산출	서비스제공에 영향이 있었던 장애 처리 준수시간 이내 장애처리 건수 / 서비스제공에 영향이 있었던 장애발생 건수) * 100(%)	목표	73	83	83	83
				실적	74	83	83	67.9
				달성률 (%)	101.4	100.0	100.0	81.8

자료: 대법원,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24.

○ 성과지표는 재정운용의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사건 처리율’만으로는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이 어떤 목표로 어떤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동 사업의 운영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재 대법원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및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라) 정책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문제 개선 필요

○ 2023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중 정책연구비(260-02)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00만원을 포함하여 4,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2,400만원이 이월(이월률 49%)되었으며,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정책연구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 목	2023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정책연구비 (260-02)	25	25	24	49	24	24	24

○ 최근 3년 동안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정책연구비로 수행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해마다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계획액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최근 3년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정책연구비로 수행한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공고기간	계약기간	과제명	수행기관
21년	30	29	-	29	21.11.1.~ 11. 11. (1차) 21.11.25.~ 12. 6.	21.12.~ 22.9.	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한국형사정책학회

연도	계획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연구용역 공고기간	계약기간	과제명	수행기관
					(2차)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방안 모색	
22년	25	24	-	24	22.5.2.~ 5. 17. (1차) 22.5.30~ 6 14. (2차)	22.8.~ 23.2.	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및 이를 채택한 1심 판단의 존중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
23년	25	24	-	24[479]	23.10.18. ~ 11. 7. (1차) 23.11.23~ 12.5. (2차)	23.12.~ 24.6.	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 방안의 연구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료: 대법원 제출

○ 동 기간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계약기간은 모두 3/4분기, 4/4분기에 개시되었으므로, 이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체결 지연으로 보임.

○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72조[480]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용역비(260목)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479) 2023년도에 이월된 24백만원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미집행상태임.

480)「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월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적인 사법정책 관련 과제로 특별한 이월 사유가 있다거나 이월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법원은 향후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연구비 집행에 있어 연례적인 이월액 발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Ⅴ. 대체토론 요지

1. 법무부 소관

○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 체결되는 리스계약 및 갱신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시 리스료의 실제 소요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 대상문서 확대 및 홍보를 위한 대한공증인협회와의 다각적인 협력, 간편인증 도입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편의성 강화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과 관련하여 출근 수당, 자료 검토·토의 및 이메일 결재 수당을 현행보다 감액하고, 자료 검토·토의 및 이메일 결재 건수를 1일 1회에 한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홈닥터의 지속적인 퇴사·휴직 및 채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연중 인력 채용 및 운용 과정에서 신속한 결원 보충을 통해 연례적인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긴급구조금을 포함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실적을 제고하고, 구상권 행사 인력 확충 및 가해자 재산 적시조회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상권 행사 실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적정한 집행을 시정하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교정 관련 법적 분쟁업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실무수습 변호사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신속한 추가 채용절차 진행 등 채용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사회적 추세와 교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년원 출원생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실시하는 사회정착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을 낮추기 위하여, 동 직위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보수 외에도 정신과 의사의 채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경감, 연구 · 교육기능 강화 등의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법제처 소관

○ 2023년 기타직보수(110-02목)로 편성된 예산은 2억 5,100만원으로 전용 1억원을 포함한 총 3억 5,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3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불용함. 법제처는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 근무로 인해 기타직보수가 부족하게 되어 보수(110-01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함. 매년 특정 비목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다르게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법제처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00)는 법제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 법제처는 2023년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에 따라 4명의 인턴을 6개월간 채용하기 위한 예산 6,500만원을 인건비(1001-100)-보수(110-01목)에서 일용임금(110-04목)으로 2023. 6월 전용함.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 이후인 2023. 1월 발표되었고, 필요한 비용은 전 부처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용이 이루어졌음. 청년인턴 운영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음. 법제처는 예산의 전용을 통해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계획되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00)는 법제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인 바, 그 중 일용임금(110-04)은 수개월 동안 고용하는 일용직을 위한 보수로,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6개월 임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 1억 700만원 중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모집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는 법제처 기관운영 및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2023년도 예산 26억 6,200만원 중 25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9,200만원이 불용됨. 현재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실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움. 법제처는 법령해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관운영기본경비는 법제처 기관운영 및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2023년도 예산 26억 6,200만원 중 25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9,200만원이 불용됨. 법제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법률안 소관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본 협의회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분되고 개최건수 중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본협의회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개최에 불과함.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의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무조정실에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법제처 기관운영 및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 중 '공사비'는 사무실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은

2억 5,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공사비’ 예산으로 수행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 사업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위한 영상회의실 조성 등을 위한 공사로 2023년도 예산 2,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고도회의 참석 용이성 등을 이유로 별도 임차료를 지불하고 외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영상회의실의 이용률이 저조함.법제처는 영상회의실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외부회의실 임차료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법령정보제공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은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3억 9,900만원 중 3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어린이법제관 수료기준이 낮아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수료율이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료 기준 강화와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은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3년 예산 10억 5,100만원 중 10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을 불용함. 법제처는 콘텐츠 신규 제작 시 각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두 달에 한 번 인용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오류를 신고받아 검토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현행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예정 법률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령심사지원 사업은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포하는 입법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억 8,100만원 중 3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불용함. 법제처가 총괄·조정하고 있는 정부입법계획이 자주 수정되고 국회제출비율이 낮아 계획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과정의 검토를 강화하고 준수율과 유연성을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법제정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은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6억 900만원 중 900만원이 자체전용되어 예산현액 6억원 중 5억 6,700만원이 집행

되고,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법제처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개선 등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를 주안점으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문장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입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예산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문장 구조 개선이 법령내용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법제정비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국민법제관 및 국민참여입법제도 운영' 사업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고, 국민들이 법령심사·법령정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2,700만원에 동일사업에서 조정된 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00만원이 전액 집행됨. 국민법제관 회의에 참여한 적 없는 국민법제관이 2023년 기준 31.5%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국민법제관이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미미하여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등 유사 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다른 제도들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개별법령 정비·분석에 관한 연구와 전

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 7억 3,000만원 중 6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 불용됨. 2023년 법제처는 3건의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효과성 등 입법영향분석보다는 일반적인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법제처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정책연구평가를 엄격히 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감사원 소관

○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비용 등을 반영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서류를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법정기한인 30일(1개월)을 초과하고 2022년도에는 결정 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법정기한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바,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이 타 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에 의거해 특수활동비 지급 관련 증거서류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감사원도 해당 지침에 따라 감시하여야 하고, 특수활동비는 수사, 외교, 안보, 경호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 감사원은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집행 계획, 지침, 세부내역 및 지출 증거서류를 빠른 시일 내로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남자 욕실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는 여성 욕실에 대한 추가 실시설계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향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예산 대비 46.7%의 증액 조정 하였고, 일부내역 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내역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4개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는바, 예산 계획 수립을 보다 면밀히 하고, 예산 전용 및 증액 조정을 최소화하여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공수처는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의 수가 실제 소요대비 부족하므로 기관유지를 위한 핵심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공수처 소속 행정직원과 파견공무원간 적절한 부서배치를 통해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유지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수처 검사의 경우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최종 연임(7.7%)되었고,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최근 3년간 퇴직자의 수가 총 15명으로 연평균 5명의 수사관이 퇴직하는 등 퇴직율이 높으므로, 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기준 및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운영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외부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장소대여료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등 방만한 집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위원회 회의를 외부회의장에서 개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금액을 미리 산정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이 과소편성 되어 편성된 고용부담금 총액의 74.8%에 달하는 1억 2,800만원을 전용으로 조달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일부가 누락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누락된 가입대

상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원을 포함한 법정 최소적립금을 조속히 산정하여 연말 납부하여야 할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미리 파악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반영할 필요가 있음.

5. 헌법재판소 소관

○ 헌법재판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으로 무선충전 탁상시계 730개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초청인원 393명, 참석인원 173명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량임. 향후 기념식 등 행사 계획 및 진행 시 기념품을 과다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본안심리에서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년 3개월로 법정 처리기간을 4배 이상 초과함.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 조직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헌법재판 청구 남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 내규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지만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위한 심

의위원회만 개최하였을 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동 내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시기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활용상황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도에 체결한 총 18건의 발간물 수의계약 중 14건(77.8%)을 한 업체와 체결하였고,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용역을 두 차례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할 발간 계약을 분할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재판정보화 사업 내 일반연구비 2,750만원을 집행하여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는데 사전에 구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아니하여 2023년 11월에 동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나 8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야 그 운영을 개시하였는바 향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 사전에 구축·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대법원 소관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 대법원은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워크숍 숙박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대법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만큼만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부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가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보안관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인원증대 등을 통하여 보안운영,

보안기획, 보안관제,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등으로 보안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것

○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등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법원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공사는 조속히 시행할 것

○ 대법원은 등기국·과·소 청사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청구액을 면밀히 분석 하고 매 분기별 구체적인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대법원은 보관금 운용수익금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

○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그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미리 수요계획과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 법무부 소관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전산장비 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등 총 1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그 밖에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2. 법제처 소관

‘현실적인 기타직보수 예산 편성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법률사무종사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3. 감사원 소관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 준수 필요’ 등 총 9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의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또한,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 제출 필요”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 1건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수사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5. 헌법재판소 소관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의 과다 제작 주의 필요’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헌법연구관 구성

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6. 대법원 소관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및 특수건강검진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예산 미집행 및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지양 필요’ 등 총 1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Ⅶ. 심사결과

1. 법무부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2. 법제처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3. 감사원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5. 헌법재판소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6. 대법원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Ⅷ.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Ⅸ. 시정요구사항

붙임과 같음

Ⅹ. 부대의견

1. 법무부 소관

○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 특수활동비는 그 본질이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으로, 공개될 경우 검찰의 정보 및 수사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원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 및 범위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다른 부처와 공통된 문제로 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대검찰청 인력운영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 이행 필요”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 대검찰청의 인력지원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형사부, 공판부 등이 시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업무지원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법제처 소관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소관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 제출 필요” 시정요구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 특수활동비는 그 본질이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원의 정보 및 직무감찰 활동에 상당한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 및 범위 문제는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다른 부처와 공통된 문제로 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해당사항 없음

5. 헌법재판소 소관

해당사항 없음

6. 대법원 소관

해당사항 없음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

□ 법무부 소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한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 및 기관별 인원 결정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법무부 청년인턴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년 법무부 청년인턴 경쟁률이 높지 않고, 채용 후 근무 포기 인원이 발생함. ※ 경쟁률 : (1차) 1.82대 1, (2차) 2.61대 1, (3차) 2.03대 1 ※ 2023년 채용한 200명 중 18%인 36명이 채용 후 근무 포기 ○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라서도 경쟁률 차이가 있었는데, 기관별 업무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가 청년들 선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1차 공고 기준 기관별 경쟁률 : (검찰) 2.95대 1, (범정국) 1.33대 1, (교정) 0.94대 1, (출입국) 2.82대 1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2023년 청년인턴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를 산정하고, 소속기관별 인턴 운영규모를 결정할 때 기관별 업무특성, 출퇴근 편의성, 청년 선호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청년인턴 운영 취지에 맞는 직무설계 및 프로그램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법무부 청년인턴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년 법무부 소속기관별로 부여한 청년인턴 직무의 상당수가 행정지원 및 자료정리, 행정지원·민원서비스, 문서수발 등 단순 업무 위주로,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와 정책 과정 경험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청년인턴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수사, 출입국심사, 교정 등 업무수행의 기밀성과 위험성이 높은 법무부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근무하는 청년인턴에게 적극적으로 직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청년인턴이 전공과 관심분야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제 근무한 청년인턴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조사·반영한 직무 설계 및 인턴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 법무부는 공안업무 중심인 기관 업무 특성상 법무부가 청년인턴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청년인턴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양성평등정책 위원회 설치 취지를 고려한 운영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양성평등정책 지원(7032-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동 사업에서 조직 내 양성평등 실현 및 관련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2020년부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개최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4차례 회의 중 법무부 차관 및 주요 실·국장으로 구성된 내부위원은 제1차부터 제3차 회의까지 참석 실적이 전무하였고, 제4차 회의에 내부위원 한 명만 참석하는 등 내부위원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음. ○ 회의 안건으로 동 사업에서 수행한 양성평등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실시하였는데, 해당 연구용역은 과제 선정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외부심사(정책연구용역 관련 평가위원회)가 진행된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첩되었음. ※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주변인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 계약액 5,900만원, 계약기간 2023.4 ~ 11., 수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내부위원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연구용역 평가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전산장비 도입 임차 사업의 연말 계약 관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3년 동 사업에서 52억 1,000만원 규모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리스)할 계획을 세우고 6개월분 임차료로 5억 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도입은 절반 수준인 24억 8,600만원 규모로, 임차료는 2억 8,369만원을 집행함(50.3%). ○ 전산장비 도입규모가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은 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존 리스 장비의 갱신 임차료가 상승하였고, 그 부족분(2억 6,938만원)을 신규 도입 임차료 예산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임. - 이는 전산장비 신규 도입 및 갱신 계약이 매번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어, 임차료 증액분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에 기인함. ※ 2023년 초과 지출이 발생한 기존 리스계약 3건은 리스료 갱신 계약이 2022년 말에 이루어져, 2023년 예산 편성시 리스료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었음. ※ 2022년 도입한 전산장비의 경우 2022년 리스계약이 2023년 예산안 편성·제출 완료 후인 2022년 10월말에 이루어져, 2023년도 예산에 정확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 체결되는 리스계약 및 갱신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안 심사시 리스료의 실제 소요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매체별 적정한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옥외·신문·라디오 광고 집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해당 광고 매체는 뉴미디어 매체와 비교했을 때 광고 노출 장소(옥외) 및 시간·기한이 제한되고, 광고 집행의 효과 및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음. ○ 2023년 옥외·신문·라디오 광고는 전부 마약 근절 정책에 집행하였는데, 최근 마약 범죄 예방 및 선도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상이 20~30대 청년 및 10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광고매체 선택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광고 매체별 광고효과의 장단점을 토대로 매체별 광고집행 비중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정책 홍보대상에 따라 그에 적합한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광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7038 단위사업)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단위사업(7038) 내 2개 세부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홍보 목적으로 각각 6,000만원,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각각 7,356만원, 1,462만원 등 총 8,818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대비 26%(1,818만원) 초과 집행함. ○ 정부 예산집행지침은 “기념품 등 홍보물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활용하여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하도록 규정한바, 법무부가 제작·구입한 홍보물의 종류 및 수량※, 초과 집행 규모 등을 감안하면 홍보물품 구매가 과도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탁상달력 12,500개, 미니선풍기 300개, 머그컵 100개, 종이쇼핑백 150개, 만년필 70개, 수성펜 90개, 수건세트 150개, 우산 250개, 텀블러 180개, 볼펜 3,000개, 수성펜 100개, 휴대용 담요 256개 등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확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를 지양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 집행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내용연수 고려 없는 개인 전산소모품 일괄 신규구매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7038-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형통단은 2023년 9월 ~ 10월 기간 중 전산실 확장 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를 실시하면서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암, 키보드 등 개인 전산소모품 구입에 819만원을 집행하였음. ○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의 소모품 구입은 최대한 절감 집행해야 하는데, 사무실 재배치시 기존에 사용하던 소모품들을 폐기할 필요는 없음에도, 사무실 인원 수에 맞추어 일괄 신규 구매한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있음. ○ 특히, 마우스와 키보드는 일반 사무용 단가 대비 5배 가량 비싼 특수 기능이 탑재된 모델(버티컬마우스, 적축키보드)을 일괄 구매하였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여 직원 개개인의 PC 부속품을 구매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7039-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중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총사업비 87억 5,100만원)은 2023년 예산현액 70억 6,500만원 중 39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55.6%), 29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서울소년원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에도 사업 지연으로 대규모 예산이 이월(42억원 중 28.7억원 이월)된바 있음에도, 법무부는 별도의 사업기간 조정이나 예산 축소 편성※ 없이 2023년 예산에 잔여 공사비를 전액 편성한 결과, 2023년에도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반복됨. ※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사비(420-03목) 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보다 축소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시설 리모델링 등 공사 추진에 있어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국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일반수용비는 2023년 예산안 심사시 기록관 준공 지연에 따른 운영기간 조정(5개월→3.5개월)으로 8,500만원 감액되었는데, 법무부는 감액분을 전부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에 반영하고,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는 당초 편성한 8,000만원을 유지하였음. ○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로 9,740만원을 지출하여, 당초 예산(8,000만원) 대비 21.8% 초과 집행함. ○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는 ‘기록물 보존처리 물품 구입비’와 달리 목적이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법무부가 임의로 해당 항목을 확대 편성·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확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취지에 맞게 항목별 예산을 배정·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연내 활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홍보물품 일괄 구매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부 기록관 운영(7039-302)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기타 기록관 운영경비’에서 준공 홍보물 구입 목적으로 1,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법무부 기록관 준공시점이 2024년 1월이었다는 점에서 연말에 다량의 홍보물품을 일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당해연도내 활용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홍보물품을 일괄 구매하는 집행 행태를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과장급 역량평가 제도 추진 여부 및 시행 계획 확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3년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용역비(210-14)로 ‘과장급 역량평가 과제 개발 및 모의테스트’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않았음. - 법무부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4,700만원, 5,700만원을 집행하여 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및 실행과제를 개발해왔음. ○ 법무부는 정부 규모 축소 기조, 국정과제 관련 예산·인력 우선 배정 등의 사유로 자체 역량평가 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불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그동안 법무부 내 자체 역량평가 실시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는 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가모델 개발까지 완료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과장급 자체 역량평가 제도의 추진 여부와 후속과제 개발 및 평가시행 계획 등을 신속히 확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국가배상금 소송비용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2년간 국가소송 송달료 및 감정료가 매년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 (22년)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사업에서 2억 9,800만원 전용,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에서 4,500만원 내역변경 (23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에서 2억 5,400만원 내역변경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가소송 관련 송달료 등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타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13	**공무직 퇴직 후 충원 간 공백기간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1032-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임금 불용이 나타나고 있음 - (22년) 약 1.25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00만원 (23년) 약 3개월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500만원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공무직 퇴직 예정 시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항소 여부 원점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032-308)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대한 항소의 인용 가능성이 국제법적으로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엘리엇, 론스타, 메이슨 등 우리나라가 패소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 항소 유지가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더욱 발생시키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투자분쟁 중재사건의 항소 계속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15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분담 및 엘리엇 패소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032-308)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7. 법무부의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각하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패소 책임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엘리엇에 대한 ISDS 대응 예산으로 5년간 약 170억 4,900만원의 재정손실을 겪는 등 문제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취소소송 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ISDS 취소소송 제기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론스타 사건의 충실한 기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032-308)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기재가 충실하지 않아 재무제표만으로 론스타 사건의 개요나 경과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기재부예규)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분쟁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당해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공시를 생략한 사실 및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과 같이 본심의 판정이 있었다면 취소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재무제표 주석에 당해 분쟁의 개요와 경과, 공시를 생략한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17	**국제투자분쟁 예방기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032-308)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ISDS 제소 후 분쟁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투자협정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기존의 교육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 현재까지의 ISDS 판정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ISDS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성과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년간 홍보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신규 공익신탁의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기부자들의 효능감 증진, 상속세와 같은 세제 혜택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공익신탁이 다른 기부제도와 비교하여 충분한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상 개선방안·세제혜택 등의 유인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료 예산 적정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공익신탁의 실적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인터넷이나 라디오 광고로만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홍보 효과의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2023년 1,225만원을 편성(회의 예정 일수 5회)하였으나, 실제로는 연말에 1회만 개최되어 120만원 집행에 그쳤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공익신탁에 대한 홍보 및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비 및 전문가 자문료 집행액이 매년 당초 예산편성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적정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 선진화(1033-03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19년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의 국제중재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사건접수 2019년 70건, 2021년 50건, 2023년 54건)에 있으므로 국제중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립되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제중재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21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률이 2020년 0.21%에서 2023년 0.35%로 이용률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이 가능한 대상문서 확대 및 전자공증시스템의 홍보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의 안정성 및 활용도 제고, 전자공증 대상문서 확대 및 홍보를 위한 대한공증인협회와의 다각적인 협력, 간편인증 도입 등 시스템 이용의 접근성·편의성 강화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1038-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심사자료 검토수당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그 횟수와 상관없이 매달 정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출근 수당, 자료 검토·토의 및 이메일 결재 수당을 현행보다 감액하고, 자료 검토·토의 및 이메일 결재 건수를 1일 1회에 한하여 인정하기 위하여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		
23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사업 운영비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동 사업 운영비가 매년 부족하여 타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는 등 동 사업에 대한 부정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 (21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 등에서 1억 8,800만원 전용 (22년) 국외여비, 일용임금 비목에서 2,900만원 전용 (23년) 임차료, 기타운영비 등 비목에서 5,300만원 전용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운영비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 법적근거 조속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토지대여료(11-51-511), 건물대여료(11-51-51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2019결산, 2021결산)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없는 검찰청 청사 무상 사용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없이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5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률구조(11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임금 및 퇴직금 소송 등의 감소 및 신규 공익법무관 충원의 감소로 인한 소송수행 건수 감소로, 자체수입이 구조적으로 감소하여 자체수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수지차 보전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지양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 축소 운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률구조(1131-300)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이 급격히 감소함. - 공단은 지난 10년간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퇴직급여적립액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기준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운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가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신규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퇴직적립금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		
27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률구조(11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공단이 공시한 퇴직급여 적립률은 직원에게 대부해 준 장단기대여금(생활안정자금 대부액)을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공단의 가용자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 적립률 보다 5.9%p~10%p 가량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나, 이는 재무건전성을 투명하게 인식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실제 공단 보유 가용자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립률을 산정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연례적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코로나19 상황, 격오지 등 일부 배치기관 장기공석, 육아휴직 등으로 법률홈닥터의 결원이 지속되어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지속적인 퇴사·휴직 및 채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연중 인력 채용 및 운용 과정에서 신속한 결원 보충을 통해 연례적인 결원으로 인한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		
29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한 임차료 분할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교육(1133-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단일 목적의 임차료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고 분할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를 원칙적으로 통상 절차에 따라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이 지출하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		
30	**출장자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교육(1133-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집행된 국내여비 6,200만원 중 약 3,200만원은 출장자가 아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와 기관에 직접 계좌이체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됨.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에서는 국내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가 결제를 한 뒤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정산·지급하고, 그 외 여비는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향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및 정산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여유자금 규모 적정성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한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여유자금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여유자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성 기금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수입·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여유자금 규모는 유동성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기금의 수입·지출 균형 및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방식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기금의 소요에 비례하는 적정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2	**여유자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계획액 증액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2년도부터 여유자금 증가로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이 급증하면서 초과 수납이 이루어져 2023년도에는 계획액과 수납액 간 차이가 11억원 이상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세입 계획액을 충분히 증액하여 편성함으로써, 세입 추계의 체계적 오류를 해소하고 정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예외 없는 징수결정 및 적극적 징수 활동을 통한 변상금 수납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변상금(57-57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액수와 별개로 실수납액(실제 회수한 금액)만을 징수결정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이 징수결정액에 반영되지 않아 그 금액이 과소계상되고 있음. ○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대비 회수한 변상금 수납비율은 최근 5년 간 10.8~21.6%에 불과함.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가해자인 근로보상금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근로보상금 등을 공제할 수 있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는 경우 수납 여부와 관련없이 원칙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도록 하고, 가해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조사 및 수형자에 대한 징수활동 등 적극적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변상금 수납률을 제고할 것		
34	**법정 전입금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정산 절차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일반회계전입금(91-91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정 전입금액(집행된 벌금액 × 8%)이 아닌 계획안 편성 당시 추정치를 기준으로 수납액을 확정하여, 법정 전입금액과 실제 기금납입금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결산 시 법령에서 정부로 하여금 기금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집행된” 벌금액에 8%를 곱한 금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비중 확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회는 그간 직접지원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였고, 이후 법무부가 기금 내 사업별 지원성격을 재분류하여 직접지원 비중이 확대된 것처럼 보임. 그러나, 시정요구 당시 분류 기준에 따른 직접지원 사업의 계획액 및 집행액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었고, 범죄피해자가 선호하는 생계지원의 계획액 및 집행액이 축소되었으며, 의료지원 규모도 축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특히 생계·의료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금 지출 사업을 관리할 것		
36	**예산 과다집행 및 정산절차 미이행 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종사자 교육” 사업 추진 시 당초 편성된 예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7,273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타 내역사업 예산을 혼용 집행하였으며, 교육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계약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미흡한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예산혼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 사업 예산을 “홍보·협의·점검 등”의 일반용역비로 단일 편성하며,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정산사항을 명시하여 수행용역 대비 과다한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구조금(1135-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3년 간 강력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이 감소하여 연평균 12억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구상권 행사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긴급구조금을 포함한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실적을 제고하고, 구상권 행사 인력 확충 및 가해자 재산 적시조회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상권 행사 실적 개선을 추진할 것		
38	**위치확인장치 관리 강화 및 활용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1135-306)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년도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위치확인장치 보급대수를 2배 이상 확대하였음에도 지급실적은 소폭 증가하고, 실질적인 조치실적(신고・가해자검거・현장조치)은 감소하여, 투입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검찰청은 보유기기 172대 중 7대만 지급하여 활용율이 4.1%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경찰청 및 검찰청은 구형 모델의 재활용을 포함한 폐기방안 마련, 위치확인장치의 이상유무에 대한 유지・관리 강화, 검찰청 보유분에 대한 수량 조절 등을 통하여 위치확인장치의 관리 및 활용 실적을 개선하여 위치확인장치 보급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상근 진술조력인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136-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3년 간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운용하는 '진술조력인 배치' 사업의 실집행률은 저조한 반면, 비상근 진술조력인 수당을 지급하는 '진술조력인 수당' 사업은 당초계획액 대비 초과로 증액 집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 상근 진술조력인의 열악한 처우로 매년 15명 내외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대부분 비상근으로 활동하여, 당초 계획액을 초과하여 비상근 진술조력인을 채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지속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40	집행잔액을 활용한 계획에 없는 예산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1136-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해당 일반수용비를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학술대회'(기념품비, 참석자 수당, 자료집 등)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 대상 권역별 사례관리회의'(장소 임차료, 참석자 수당 등)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사업의 집행잔액을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신속한 초기지원 등 역할 확대 및 실적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1136-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이 아닌 단순 참고인 내지 증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적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의견진술 등의 보충적 역할에 그치게 되는데,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일부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는 시점은 주로 수사기관 신고·고소 이후로,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단계를 고소장 작성 등의 초기 단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피해자수요조사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적관리를 강화할 것		
42	**성과지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1136-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성과지표가 성폭력 등의 피해자 발생 건수를 모수로 하고 있어 범죄 발생량이 증가하여 피해자가 증가하는 경우 성과목표 달성이 쉬워지고, 감소하는 경우 어려워져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 성폭력사범 접수건수가 감소함에 따라(2022년 47,143건→2023년 43,796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가 감소하여(2022년 25,340건→2023년 22,336건), 2023년도 성과목표(42,941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접수 건수 대비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로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전자여행허가제 (K-ETA) 한시 면제조치의 관광활성화 효과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로 인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고, 연도 중 정책시행으로 당초 세입 대비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였음. - 조치 실시 전, 2023년 1~3월 월 평균 40억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 조치 실시 후 2023년 4~12월 동안 월 평균 약 10억원 정도의 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감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가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인지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		
44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서 수립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년~ ‘27년)의 확정이 지연(2023. 12. 7.)됨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 시행계획이 2024년 5월에서야 확정되는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기한이 준수되지 못하고 늦게 수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향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국가현안인 출입국·이민정책이 제때 수립·시행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이민정책연구원의 보조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관리 의무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민정책연구원운영(1231-302)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이민정책연구원이 인건비(보수, 110-01)로 편성하여야 할 정규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법정부담금(고용부담금, 320-09)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법무부는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승인하는 등 전반적인 국고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보조금 정산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추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6	의무관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근무하는 의무관이 보호외국인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문제에 대한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소 3개소(화성, 청주, 여수)에 각 912만원의 연구비를 편성하였으나, 의무관 퇴직 등으로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의무관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제주 검찰연수원 이용료 세입예산 계상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외수입(11-54-547)</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법무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19년 7월부터 운영되는 제주 검찰연수원은 공무 이용 외 개인 이용에 대해서는 숙박료를 징수하고 있어, 매달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2023년 개인 이용 총 1,680건, 5,336만원 수입 발생).
○ 제주 검찰연수원이 계속 운영되는 한 사용료 수입 발생은 확실히 예측됨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됨.</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법무부는 제주 검찰연수원의 사용료 수입 실적을 토대로 적정 세입예산을 계상할 것</td></tr>
<tr><td rowspan="3">48</td><td rowspan="3">검찰 일부관서의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벌금 및 과료(12-56-561), 몰수금 및 추징금(12-56-56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법무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검찰청 일선관서에서 “추징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벌금·과료와 함께 “벌금 및 과료”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되거나, “벌금”에 해당하는 수입이 단독으로 또는 몰수금·추징금과 함께 “몰수금 및 추징금” 세입과목으로 잘못 수납된 사례가 확인됨.
<table>
<tr><th>구 분</th><th>과오수납 건수(건)</th><th>과오수납 관련 금액(천원)</th></tr>
<tr><td>추징금 수입 → 벌금 및 과료로 수납</td><td>53</td><td>375,274</td></tr>
<tr><td>벌금 수입 → 몰수금 및 추징금으로 수납</td><td>21</td><td>271,45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일선 관서 세입징수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세입징수·수납 과정에서 세입과목 혼동에 따른 과오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범죄수익 환수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몰수금 및 추징금(12-56-56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추징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집행대상금 30조 5,493억원 대비 연평균 집행액은 1,011억원으로 집행률이 0.33%에 불과하며, 2023년에는 집행률이 0.29%로 더욱 떨어짐. ※ 2023년 집행대상금액 32조 2,589억원 중 923억 5,100만원 집행 ○ 범죄수익 대부분이 차명으로 되어있어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추징금 미납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 및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내역 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특수활동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국회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갖고 있으나, 법무부가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정보공개소송 대법원 판결로 일부 공개된 특활비 집행내역을 보면 당초 정해진 목적이 아닌 검찰총장의 ‘쌈짓돈’ 등으로 부당하게 활용된 것으로 확인됨. ○ 검찰 특활비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정보활동 지장을 이유로 특활비 세부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법무부는 2022년 이후 대검 자체 사무감사 등을 통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특활비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법무부 차관으로 자체 점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적정한 집행을 시정하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대검찰청 인력운영 관련 국회 결산 시정요구 이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중 인력운영 관련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감사원은 2020년 대검찰청이 파견 등의 형식으로 검사 및 검사 외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국회에서도 2021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검찰의 초과 인력 운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음. ○ 2023년 검찰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여전히 대검찰청의 인력 초과 운영이 지속되고 있어 국회 결산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조치가 미흡함. - 2023년말 기준 대검찰청 근무 인원은 검사 91명, 검사 외 공무원 695명으로 정원 대비 검사 14명, 검사 외 공무원 161명 등 총 175명이 초과운영되고 있으며, 초과운영 규모도 2022년 대비 169명→175명으로 확대됨. 특히, 검사의 초과운영 인력은 14명으로 2019년(18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취지에 맞추어 대검찰청의 정원 대비 초과 인력운영을 감축·해소하기 위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파견 인력 등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정책연구과제의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활동(1300) 내 연구용역비(260목)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의 2023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과제 40건 중 34건(85%)이 수의계약으로 수행됨. ※ 수의계약 25건(62.5%), 유찰 후 수의계약 9건(22.5%), 경쟁계약 6건(15%) ○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검찰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으로 과제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바 있음. 그럼에도 2023년 수의계약비율이 85% 수준으로 높고, 전체 과제의 약 3분의 2인 25건을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구용역과제 경쟁계약 수행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계약 체결 세부 기준 마련 등 정책연구용역이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예산 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부산동부지청 구치감 승강기 설치 공사는 2023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이설공사 추가 등의 사유로 2억 264만원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었고, 2024년 2월말에 공사를 완료함. ※ 총 계약액 2억 9,121만원 중 2023년 집행액 8,657만원 ○ 시공방법 변경 및 배관이설공사 추가를 모두 반영한 총 공사기간이 5개월(2023년 10월~2024년 2월)이었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0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예산 이월의 근본적인 원인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연초에 지청 단위별 승강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청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집행 실적 부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년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 예산은 2022년 완공된 ‘국제검사협회 트레이닝센터’ 활용을 감안, 전년대비 임차료(행사장 임차) 및 국외업무여비(숙박비 지원)에서 총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함. 그럼에도 2023년 연수사업 집행률은 43.3%로, 2022년(48.5%)보다 더욱 낮았음. - 특히, 국외업무여비는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에도 집행률이 27.1%로 저조하여, 초청대상 및 실제 초청 규모를 감안하면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음. - 검찰은 2024년부터는 초청연수에 아태지역 회원국 외에 국제검사협회 관계자 방한도 예정되어 참석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일부 참석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국외업무여비 기존 집행률(2022년 34.4%, 2023년 27.1%)을 감안하면 집행 실적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초청 규모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국외업무여비를 절감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구조적 실적 감소에 따른 영상녹화시설 및 장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각 검찰청 내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개소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은 부진함. - 2023년 검찰 영상녹화 조사비율은 6.4%로 2022년(8.1%)보다 더 떨어졌으며, 영상녹화 조사 건수는 4,001건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①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영상녹화물의 피신조서 진정성립 입증수단 활용 불가, ②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가 영상녹화 실적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보임. ○ 영상녹화조사 실적의 구조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 설치된 영상녹화조사실과 영상녹화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 비용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2023년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총 903실의 영상녹화조사실 운영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시설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해 타용도 전환 모색 등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검사 및 수사인력 교육목적 사업에 특수활동비 배정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을 보면 대부분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검찰업무지원’이라는 미명하에 특수활동비 5억 2,200만원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동 사업의 특수활동비 비목을 삭제하고, 해당 예산을 증빙이 가능한 특정업무경비 또는 사업추진비로 편성할 것		
57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334-5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은 세 차례 유찰되어 10월에 계약이 체결된 결과, 당해연도 계약은 3개월분(10월 ~ 12월)만 체결하고, 나머지 대부분 기간(1월 ~ 9월)의 사업을 전년도 계약에 근거하여 전년도 계약 업체가 수행함. 이는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에 기속된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 최근 대검찰청의 해당 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5월에 첫 사업 공고를 하는 등 당해연도 신규 계약 체결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전년도 업체에게 당해연도 과업 수행을 맡기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시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한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년도 계약업체가 당해연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것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다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영장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은 부진한 집행 실적으로 2023년 일반수용비가 전년대비 5억 8,000만원 감액되었음에도 집행률이 2.7%로 크게 부진한바, 여전히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실제 수요보다 과대 편성되었음을 시사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영장심의위원회의 연간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59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수사(1335-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17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선거범죄포상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남. ○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공직선거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초기 신고, 제보, 포상금 신청이 중앙선관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임. -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지급 인원 수, 지급액, 예산집행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법무부보다 실적이 양호하며,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축소하는 등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탄력적·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0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찰은 2022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신규 추진시 중국 파견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정책 장기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필리핀으로 파견대상국을 변경하였음. -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97% 이상이 해외에 위치하고 그 중 87.5%가 중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에 수사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필리핀에 파견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뿐만아니라 성매매, 성폭력, 도박 등 다른 유형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운영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사관 파견을 추진하고, 필리핀에 파견된 전담수사관이 보이스피싱 총책 국제공조수사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수사(1335-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은 APICC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매년 일반연구비(260-01) 8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APICC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최신 게시물이 2020년 12월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2021년 이후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사실상 홈페이지가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편성·집행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APICC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APICC 주요 활동 및 실적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홈페이지가 APICC 및 마약퇴치 사업에 대한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 이·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보상(1337-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형사보상금은 매년 예산편성액 대비 초과 지출되어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빈번함. ○ 2023년에는 예산액 대비 40% 수준인 168억 5,200만원을 타 세부사업에서 충당하였고, 이를 위해 검찰국 소관 대부분의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를 떨어뜨리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반하는 부분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무죄 사건 평정 등 검사의 수사 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시 실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위법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 지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검찰청운영 기본경비(7018-25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찰은 고소인 등의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유사 사안 발생시 지속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패소를 반복하여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처분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이에 불복한 국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불필요한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을 개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사 범위를 확대하며, 대검찰청의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사업의 일반용역비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등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한 것으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 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65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비목 구분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구분하여 편성해야 함에도, ‘광주교도소 숙직실 및 사무실 증축 공사’는 기본조사설계비 편성을 누락하였다가 실시설계비에서 세목변경하여 집행함.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22. 9.30 ~ 23. 6.14)’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200만원을 세목변경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향후 기본설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것		
66	교정시설 개선공사의 이월 최소화를 위한 공정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의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20억 9,600만원 중 12억 3,100만원을 이·전용(감)하고 612억 7,7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68억 700만원은 이월하고, 30억 4,200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건설비를 연례적으로 이월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공·준공하도록 적정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7	**교도소 행정지원 사업의 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 혼용 집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1531-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타 세부사업인 “교도소 행정지원”에 편성된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일부 혼용 집행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예산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68	**대체복무시설 확충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1531-304)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대체역 편입인원에 비하여 복무할 수 있는 교정시설이 부족하여 대체역 소집희망자의 대기일 수가 2021년 상반기에는 173일부터 327일까지였으나, 2023년 하반기에는 606일부터 969일까지로 증가하여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기에 있는 대체역 자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대체복무시설 확충 사업의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체복무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69	**수용자 약물 오남용 관리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약품 투약 건수가 과다하여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여 징역형 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 · 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0	**수용자 의료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①의료비 예산 126억 6,300만원 대비 36억 5,7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고, ②건강보험 예탁금 예산 202억 6,500만원 대비 50억 4,400만원이 초과 집행되었으며, ③호송여비는 예산 25억 100만원 대비 8억 1,300만원을 이·전용으로 초과 집행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정기관 의무관이 충원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1	**교정시설 공공요금의 반복적 이·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공공요금을 매년 이·전용하여 집행하였고, 특히 2023년의 경우 재소자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대규모로 예산을 이·전용(이용:252억 6,000만원, 전용:67억 5,100만원)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2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 사회적 처우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교화(1532-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수형자 인원 대비 이용률 등을 보면, 가족만남의 집은 2.6%, 가족 만남의 시간은 7.4%,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실시하지 않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사회적 추세와 교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73	실무수습 변호사 채용을 위한 필요성 및 수요 조사 등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7011-2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본부의 법률사무종사변호사 중 일부를 실무수습 변호사로 채용하기 위하여 타 사업에서 내역변경을 하였으나, 최종합격자(2명)가 임용을 포기하였고, 이후 6월 법무부의 채용 재공고에 교정본부 선발 인원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 관련 법적 분쟁업무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실무수습 변호사 필요성에 대한 조사, 신속한 추가 채용절차 진행 등 채용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		
74	교도작업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도작업특별회계 - 교도작업(1535-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3년의 경우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은 집행이 저조(78.4%)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5	**교도작업 생산 직종 다양화 및 직업훈련 연계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도작업특별회계 - 교도작업(1535-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도작업은 작업 장소·시간 등 교도소의 특성상 단순 노무 중심 작업이어서 현대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민간기업의 교도작업 참여율은 산업 환경 변화로 과거 인력에 의한 작업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거나, 경기 불황에 따라 저조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생산 직종 다양화와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연계 등 생산성 제고 및 외부통근작업 확대 등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		
76	**노역집행률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교도작업특별회계 - 교도작업(1535-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노역집행률은 93.2 ~ 93.7%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부과 적격자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역을 하지 않는 수형자들이 1,300명 이상에 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작업장 신·증축 및 외부통근 작업 확대 등을 통해 노역 집행률 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7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공사에 대한 면밀한 감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1631-304)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이전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방,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공사를 제외한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축공사의 입찰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 2월 착공하여 5월말경 입주하였음. - 기존 입주건물의 임차기간이 2023년 4월 15일에 만료됨에도 사업이 지연되어 임차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 - 공사의 착공시기가 2월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추진경과를 면밀히 감독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 발생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8	**운영실적이 부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개선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청소년자립생활관 총 9개 중 절반 이상인 6개(강원・대전・부산・안양・광주・의왕)의 생활관이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50% 이하였고, 이 중 부산(31.2%) 및 광주(12.5%) 생활관은 현원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소년원 출원 후 재입원율이 최근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소년등의 사회정착율을 높이고 소년원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등 보조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소년원 출원생의 청소년자립생활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자립생활관이 실시하는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		
7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 세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갱생보호활동(1633-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분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업비를 운영비(210) 보조비목 중 기타운영비(210-16) 보조세목에 일괄 산정하여 계획・집행하였음. - 이는 해당 사업에 집행된 보조금 예산 규모의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상의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0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신과 의사 추가 충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치료감호자수용관리(1634-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4년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0.6명인데, 이 중 정신과는 정원 15명 중 현원이 7.2명으로 정신과 의사의 정원 대비 충원률이 48%에 불과하였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국립법무병원은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72명으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을 낮추기 위하여, 동 직위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보수 외에도 정신과 의사의 채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경감, 연구·교육기능 강화 등의 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8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감독(1635-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은 2021년 기준 4,950개에서 2023년 기준 6,176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대상자 수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4,0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수량이 과다한 경우 제작·관리 비용과 기술노후화에 따른 폐기비용 확대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 부재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 및 재처리 전자장치의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2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전자감독 인력 충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감독(1635-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감독이 추가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대상자 수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전자감독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전자감독 인력 충원을 위한 직제개정을 추진할 것		
83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건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별감찰활동(1831-300), 특별감찰관인건비(1802-15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특별감찰관은 공석이고, 사무실 유지·관리 인력 3인(파견2인, 공무직1인)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으로 전용하여 연간 5억 2,900만원을 264평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 -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임차 등 준비가 가능하고,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신속히 건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4	**특별감찰관 장기공석으로 인한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별감찰활동(1831-300), 특별감찰관인건비(1802-15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특별감찰관은 공석이고, 사무실 유지·관리 인력 3인(파견2인, 공무직1인)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으로 전용하여 연간 5억 2,900만원을 264평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 -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임차 등 준비가 가능하고,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 과다한 사무실 임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		
8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관리용역비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로 혼용 집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을 "법무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일괄 집행하거나 관리용역비 비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		

□ 법제처 소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현실적인 기타직보수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1001-100)	주의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최근 3년간 신규 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 근무로 인해 기타직보수가 부족하게 되어 보수(110-01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함 ○ 매년 특정 비목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부족한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부터 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 결과와 다르게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적절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기타직보수 예산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현실적으로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 예산 전용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1011-200)	주의	법제처
		지적사항	○ 국무조정실의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 이후인 2023. 1월 발표되었고, 필요한 비용은 전 부처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용이 이루어졌음 ○ 청년인턴 운영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발표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예산의 전용을 통해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당시 계획되지 않은 청년인턴 채용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의 효용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1011-2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 모집 계획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법제처는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시근로자로 채용하여 법률사무 경험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 운영 - 2023년 모집 계획인원 7명 중 2명(채용률 30%) 채용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21년 60%, ’ 22년 75%, ‘23년 30%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법률사무종사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법령해석 관련 예산 효율성 극대화 방안 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현재 법령해석 업무 관련 예산이 기관운영기본경비로 편성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실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법령해석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자원과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과 법률안 소관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본 협의회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로 구분되는데, 개최건수 중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본협의회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5건 개최에 불과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의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무조정실에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영상회의실 이용률 제고 및 불필요한 외부회의실 임차료 집행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여 영상회의실을 구축하고도 회의 참석 용이성 등을 이유로 별도 임차료를 지불하고 외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영상회의실의 이용률이 저조함. - 법제처는 2023년 3월 영상회의 개최를 위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실 조성을 완료하였는바, 동 회의실 조성에 2,180만원 집행 - 영상회의실 공사 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회의 개최 33건 중 22건은 영상회의실 이용(이용률 66.7%), 11건은 외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임차료 699만원 집행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영상회의실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외부회의실 임차료 집행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 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정보제공(1031-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어린이법제관 수료기준이 낮아 다양한 활동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수료율이 60% 초반에 머물러 있으며,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된 후 일정 점수를 적립하면 수료할 수 있는데, 활동별 참여점수(10~20점)에 비해 수료기준(50점)이 낮음 - 2023년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60.1%(모집인원 1,300명 중 782명 수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료 기준 강화와 맞춤형 교육 방안 마련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콘텐츠 현행성 점검방안 마련 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콘텐츠 신규 제작 시 각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두 달에 한 번 인용법령의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오류를 신고받아 검토 후 수정하는 방식으로 현행성을 점검하고 있음. ○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 생활법령의 경우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예정 법률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상시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는 법령을 국민에게 ‘찾기 쉽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현행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후 시행 전 법령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심사지원(1032-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가 총괄·조정하고 있는 정부입법계획이 자주 수정되고 국회제출비율이 낮아 계획수립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5년간 계획대비 국회제출 비율이 50%임. ○ 다만, 계획 준수를 강조하는 경우 부처가 정부입법을 회피하거나 긴급한 입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존재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수립과정의 검토를 강화하고 준수율과 유연성을 균형있게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정비(1032-301)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개선 등 ‘용어정비’에 이어 ‘문장정비’를 주안점으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문장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될 우려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입법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제 구축 사업 예산의 효용성을 검토하고, 문장 구조 개선이 법령내용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 저조 및 유사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사업 지속 여부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정비(1032-301)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국민법제관 회의에 참여한 적 없는 국민법제관이 2023년 기준 31.5%에 이르는 등 상당수의 국민법제관이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미미하여 제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등 유사 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2023년 기준 국민법제관 200명 중 31.5%(63명) 회의 불참, 설문조사를 포함 의견 제출한 적이 없는 국민법제관 6.5%(13명)		
		시정요구사항	○ 국민법제관 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다른 제도들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입법영향분석 취지에 맞는 연구용역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법제 혁신(1032-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2023년 법제처는 3건의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효과성 등 입법영향분석보다는 일반적인 정책 분석에 중점을 두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연구용역 결과물이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정책연구평가를 엄격히 하는 등 연구용역보고서 관리를 강화할 것		

□ 감사원 소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경비(1111-251)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업무용택시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		
2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경비(1111-251)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2021년 이전에는 9,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업무용택시비를 편성·집행하였으나, 2022회계연도에 감사출장 시 현장확인, 감사관계인 면담 등을 압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를 반영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23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 ○ 업무용 택시비를 감사활동경비 단위사업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기본경비에 편성된 감사활동 현장 출장 목적의 업무용택시 예산을 감사활동경비 일반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추후 감액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경비(1111-251)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액 1억 3,500만원 중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밖의 연도는 집행률이 모두 50% 미만이고,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제 집행액의 2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지어 2022년도에는 40%를 증액 편성하고 있는 바,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예산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소요에 부합하도록 감액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감사활동부서 관서운영 일반수용비”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편성 시 소요에 부합하는 금액을 설정할 것		
4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를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방식 개선과 여비 예산의 규모 재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활동경비 중 여비예산을 다른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여비 2억 5,800만원을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국외업무여비 및 기본경비의 업무용 택시비로 전용함 ○ 여비 예산에서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이 전용된 것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증액에 해당 ○ 여비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고, 지속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제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여비 예산규모 재산정 필요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감사활동경비의 국내여비 예산을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감액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감사청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하는데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매년 법정기한인 30일(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결정 기간이 다소 단축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다시 법정기한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2023년도 국민제안감사청구 중 공익감사청구가 감사 실시완료 16건, 처리 중 37건으로 감사실시 결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훈령상 처리기간을 실제 처리기간과 향후 감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축할 필요 - 2023년 평균 감사처리 기간: 135.4일/ 훈령 상 처리 기간: 6개월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결정과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6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일반연구비로 추진한 연구용역 전체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바,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이 계약의 원칙임에 어긋나고, 특정 학회나 연구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 보기 어려운 일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음. ○ 감사원은 수의계약의 근거자료 및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연구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향후 일반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줄이고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변상판정 이행상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변상판정 이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변상금 환수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 ○ 감사원이 이행기한이 지난 변상판정 사례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위탁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통한 변상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감사원은 감사결과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검토하고 독촉서를 발부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중요한 사건들에서 강제징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위탁이행 요구를 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변상판정 이행 관리 강화를 통해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감사원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 제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이 타 기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거해 특수활동비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기재한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감사원도 해당 지침에 따라 감시해야 할 필요 ○ 집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임 ○ 감사원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 ○ 특수활동비는 수사, 외교, 안보, 경호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데 감사원은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집행 계획, 지침, 세부내역 및 지출 증거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		
9	**국가결산 검토시 연례적 세수부족에 대한 검토 후 국회에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현 정부 들어 연례적 세수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원 국가결산 검토 미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연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족 상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목표·성과목표 등 추가개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활동경비(1131-303)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 예산 및 성과계획은 단일 전략 목표 및 단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략목표는 <건정재정 운용,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다>으로 하고 있음 ○ 감사원은 프로그램 목표의 “배경 및 의의”에는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에 대한 언급이 없음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o ‘23년 총 136개 감사사항을 시행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처리하는 등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중 –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 예산운용, 고질적 비리, 소극행정 등 엄단 필요 o 아울러 위법·부당사항의 적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소통·지원도 필요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등의 수행을 통해 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추가개발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 단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2023년 재심의 청구 처리의 법정기한(2개월 이내) 준수 비율은 3.8%로, 최근 5년간 기한 준수 비율 중 최저치를 기록함. ○ 2023년 재심의 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474일로, 1년을 초과하였고, 전체 재심의 청구 중 62.3%가 처리에 1년 이상 소요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12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사 및 시설물관리(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교육원은 남자 욕실에 대한 실시설계 수행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는 여성 욕실에 대한 추가 실시설계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실시설계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과다한 공사비 사고이월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사 및 시설물관리(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교육원은 설계용역 2회 실시 후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 공사자금을 연말에야 확보하고 긴급 입찰공고 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공사비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예산 사고이월 등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14	비목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사 및 시설물관리(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교육원은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 보기 어려운 인조라탄 벤치 등을 시설부대비(420-05)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등 비목에 벗어난 예산집행을 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향후 비목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집행 중 사업 목적 변경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사 및 시설물관리(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본래 11개층에 대한 공사를 계획했었으나, 공사범위를 2개 층으로 축소하고 예산 편성 당시에 없었던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가하고 공사비 예산 4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해 다수의 가구・의자 등 물품을 구매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23년도 자산취득을 위해 전용한 사업현황과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계획서를 제출할 것		
16	공정한 경쟁입찰 환경 제고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다년간 계약으로서 매년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과 OASYS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단독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행하였고, 입찰공고문에서 시스템의 업무 구성도 등의 필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신규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향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서 유효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경쟁환경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사용 목적과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 갱신비용을 잘못된 비목으로 편성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SW 사용 라이센스의 만료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시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항목을 올바르게 편성할 것		
18	**면밀한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제도개선	감사원
		지적사항	○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예산 대비 46.7%의 증액 조정(총 9차례 이·전용)을 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예상 가능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 일부 내역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내역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4개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본예산과 상이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예산 계획 수립을 보다 면밀히 하고, 예산 전용 및 증액 조정을 최소화하여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소요예산 확보 후 지출원인행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행사대행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반용역비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전용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확보함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계약은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라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여 전체 예산을 확보한 후 계약 등의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국고금 관리법」을 준수하여 소요 예산의 확보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선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낙찰차액 사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예산집행지침」상의 합법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59차 ASOSAI 이사회 개최” 행사대행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수송차량, 통역장비, 회의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함 - 「예산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 등 낙찰차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해당 용역의 수정계약 체결시 추가소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예산집행심의원원회를 통해 낙찰차액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함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관련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낙찰차액 집행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ODA 연수과정의 간접비 최소화 대책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	주의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ODA)을 2023년부터 용역체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수 운영 및 진행을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민간업체 대행방식으로 인하여 일반용역비에서 5,142만원의 간접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동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음 - 특히 비슷한 성격의 다른 ODA 사업은 직접 운영하면서도 동 사업은 민간업체 대행방식으로 수행하여 간접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비효율적인 간접비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2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	시정	감사원
		지적사항	○ 감사원은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종합시행계획 등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감사교육원 홍보 동영상(국문·영문) 제작비용”을 ODA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감사원은 ODA 사업 예산을 종합시행계획 및 사업성격 등에 부합하게 집행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공수처 업무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인건비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특검 또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조직과는 달리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회, 예산, 인사 업무 등 독립적인 행정 소요가 존재함에도, 타 수사기관과 비교할 때 검사정원 대비 검사외 인력 정원 비율이 낮다(검찰청 3.7배, 공수처 2.4배)는 점에서, 기관 운영을 위한 행정직원의 수가 실제 소요대비 과부족 ○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민원소통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력운용에 부담인 상황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기관유지를 위한 핵심업무를 정원 내 인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공수처 소속 행정직원과 파견공무원간 적절한 부서배치를 통해 행정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기관유지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검사 및 수사관의 적극적인 충원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인건비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 검사의 경우 1기 검사 13명 중 1명만이 최종 연임(7.7%)되었고,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최근 3년간 퇴직자의 수가 총 15명으로 연평균 5명의 수사관이 퇴직하였음. -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의 경우에도 6년의 임기가 적용됨에 따라 신분이 불안정하여 높은 퇴직률 초래 - 연임제한 외에도 채용 또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검사의 퇴직률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요인 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연임제한 규정 개정 등 수사처검사의 연임제한에 따른 신분불안 해소책을 마련 및 추진함과 동시에, 검사 및 수사관의 채용기준 및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보다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운영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줄일 것(제도개선)		
3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공판활동지원(1012-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내 위원회 운영 경비로 총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2,700만원에 그쳤고, 공판활동지원 사업의 위원회 운영 경비 또한 5,300만원 중 900만원만 집행됨. - 예산 편성 시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등은 각 15회씩의 개최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3회만 개최되었고, 공보심의위원회는 20회를 계획했으나 5회만 개최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위원회 개최 실적과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불용을 방지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게 수사권 또는 기소권이 있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 검찰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중 누구에게 영장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간 협의된 바가 없어 공수처 출범 후 현재까지 사법경찰관이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 예산 편성 시 영장심의위원회의 경우 1년간 15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촉식 회의 한 건만이 개최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관련 수사기관과 영장 신청과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의 집행실적을 제고하되, 이후 예산 편성 시 영장심의위원회 개최예산은 실적에 맞게 축소 편성할 것		
5	**수사 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공판활동지원(1012-301)	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수사관련 위원회의 예산집행율 및 개최실적 부진은 수사 등 공수처 기능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지연 발생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하여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개최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공판활동지원(1012-301)	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각 1회 개최하였음. - 외부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장소대여료 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등 방만한 집행 우려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위원회 회의를 외부회의장에서 개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7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01-30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의 전산 인력은 1명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담할 전산 인력이 부재하고, 신설 조직으로서 기존 시스템 위탁운영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시스템 구축 후 외부 위탁운영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였음.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기관 주요 정보시스템으로서, 향후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이 추진되는 등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와 개인정보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전담 전산 인력을 확보하여 충실한 운영 필요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전산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리 및 운영을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민원소통전문관 보수지급을 위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2023년 11월까지 민원소통전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월 평균 약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음. ○ 공수처는 예산편성 당시 심의되지 않았음에도 공수처 출범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수용비 330만원, 임차료 745만원 등 총 1,075만원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예산편성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9	**교육훈련 실시에 면밀한 사전준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2023년 빅데이터 연관분석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210-01)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이는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이 구축된 교육 시설과 공수처 수사업무 활용에 필요한 강의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용역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됨. - 교육 훈련 시행 시 교육과정에 대한 충실한 파악으로 교육 시설 및 교육교재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부합한 예산 비목을 사전에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필요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에 부합한 예산편성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세목변경을 통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고용부담금의 예산 적시 반영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총액)(7011-20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 퇴직급여 적립금 납부금액을 미리 산정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이 과소편성(총 1억 7,100만원) 되어 편성된 고용부담금 총액의 74.8%에 달하는 1억 2,800만원을 전용으로 조달하였음. ○ 공수처의 공무직 근로자 중 퇴직연금 가입대상자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수는 총 3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결과 통보서에 가입자 수가 14명으로 적시되는 등 일부 누락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누락된 가입대상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원을 포함한 법정 최소적립금을 조속히 산정하여 연말 납부하여야 할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미리 파악한 후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반영할 것		

□ 헌법재판소 소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1	**헌법연구관 구성에서의 다양성 확보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2024년 6월 말 기준 헌법연구관 78명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출신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법조인 출신은 2명에 불과함. - 헌법재판은 단순히 법률 해석을 넘어 정치·경제·사회학 등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재판이므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적 문제를 다루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외에도 다양한 지식과 배경을 가진 헌법연구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비법조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개선책, 유인책을 마련하고 채용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2	**심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확충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1001-1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다양해진 헌법소원 사건에 대응하고 연간 2,500건이 넘는 헌법재판 접수 건수 처리를 위하여 헌법연구관 채용에 있어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헌법재판의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헌법연구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23년 기준 46.6건임 ○ 인건비 불용액은 퇴직·휴직 및 신규채용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므로 채용 소요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보) 채용에 있어 채용시기를 다양화하여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직 방지 및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및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만을 운용하고 있는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 운용할 경우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음. 또한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DB형 퇴직연금이 DC형 퇴직연금에 비해 퇴직급여가 많게 됨. -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미운용시 적립된 부담금만을 퇴직급여로 받게 되나,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전 평균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공무직근로자의 후생증대 차원에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4	**재무결산 지원용역의 일반수용비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재무결산 지원용역은 수행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며,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동 용역계약의 주된 과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야 함.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를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를 ‘사무용품 구입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재무결산 지원용역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면서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직접 생산 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분할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중견기업의 제품을 우회하여 구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법률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것		
6	**헌법재판소 기념식 등 행사 기념품 과다 제작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주의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창립 35주년 기념식 기념품으로 무선충전 탁상시계 730개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초청인원 393명, 참석인원 173명에 대비하여 현저히 많은 수량임. - 일반적으로 기념품은 넉넉하게 제작하는 경향이 있으나, 초청인원 수의 2배 가까이 되는 기념품을 제작한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향후 기념식 등 행사 계획 및 진행 시 기념품을 과다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7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최근 4년 집행률을 확인해 보면 지속적으로 약 10% 정도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특근매식비(210-05),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직책수행경비(250-02) 세목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 4개 비목의 불용액 합계가 3,300만원으로 기본경비 전체 불용액 4,500만원의 약 73%에 이르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예산을 전년도에 준한 관례적 편성이 아닌 실소요를 감안한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		
8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본안심리에서 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2년 3개월로 법정 처리기간을 4배 이상 초과함. ○ 해당 연도 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미제 헌법재판의 수도 2023년 말 기준 1,6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10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함('14년 824건→'23년 1,604건).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연구부 조직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헌법재판 청구 남발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9	**위원회를 통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 도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 내규인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지만 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만 개최하였을 뿐,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여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동 내규는 위원회 심의대상에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점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점검 시기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활용상황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		
10	**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1011-251) 및 운영지원(1033-303)	시정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연구원은 2023년도에 체결한 총 18건의 발간물 수의계약 중 14건(77.8%)을 한 업체와 체결하였고, 총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용역을 두 차례 나누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해야 할 발간 계약을 분할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기관
11	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시 사전 계획 미흡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에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동 홈페이지 구축·운영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아니하여 8개월이 지난 2024년 7월에서야 그 운영을 개시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향후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사업 시 사전에 구축·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		
12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23년도 기준 전자접수율 51.3%, 전자송달율 39.2%)에 머물고 있음. -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전자접수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자접수·전자송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재판 접근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의 활용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대법원 소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복리후생비 예산의 용도에 맞는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복리후생비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기관의 경우 대개 기본경비 사업에 한정적으로 편성·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국선변호료 지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소년보호 등 지원 등과 같은 일반 사업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워크숍 숙박료의
비목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및 전용절차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워크숍 숙박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세목조정을 하여 임차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워크숍 숙박료는 임차료가 아니라 국내여비로 편성·집행해야 하므로, 예산 추가 확보시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세목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용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하는 것이 적절함
<2023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워크숍 비용 관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사업명</th><th colspan="7">2023년</th><th>2024년</th></tr>
<tr><th>예산액</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
현액</th><th>집행액</th><th>차년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예산액</th></tr>
<tr><td>일반수용비(210-01)</td><td>183</td><td>-</td><td>△35</td><td>148</td><td>123</td><td></td><td>25</td><td>84</td></tr>
<tr><td>임차료(210-07)</td><td>12</td><td>-</td><td>35</td><td>47</td><td>47</td><td>-</td><td>-</td><td>12</td></tr>
<tr><td>국내여비(220-01)</td><td>129</td><td>-</td><td>-</td><td>129</td><td>127</td><td>-</td><td>2</td><td>12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예산의 계획적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워크숍 숙박료를 연례적으로 초과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비목편성 및 세목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본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인건비: 1억 6,800만원, 공공요금: 4,000만원)하여 사용하거나, 사업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6개월 미만 단기 어학연수에 지출 또는 계획에 없던 온라인 강의 등록비에 지출하는 등 해당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은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의 교육훈련 또는 연구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수기간은 6개월, 1년, 1년 6개월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어학연수나 단기 위탁교육 등은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 내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23년도 예산 21억 4,400만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추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시정	대법원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2억 900만원, ‘건강지원운영’ 사업에서 7,600만원,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서 4,700만원 등 총 3억 3,200만원이 본부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이용함 ○ 대법원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될 정도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는바, 사업 대상자 선별과 사업 추진이 모두 부실했다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야간업무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자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적정 예산 규모만큼만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부당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형사보상청구 결정 기한 준수에 대한 관리 및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형사보상청구 시 결정 기한인 6개월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결정 기한 준수율 등에 대한 자료 관리 등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정 기한 준수율을 높여 형사보상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형사보상청구 결정 기한의 준수율을 관리하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별로 사례를 관리하여 각급 법원에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연례적 이월 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법원정책연구비’는 전년도 이월액 4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4억 4,400만원이나 이 중 9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 9,400만원은 다시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023년도에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일반적인 사법정책에 관한 과제로서 특별한 이월 사유가 없음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연구용역비(260목)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가 해소되도록 사업 관리에 유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국선변호료
지급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국선변호료 지원(1143-4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국선변호료 지급 결과를 살펴보면, 국선변호를 신청한 총 접수 건수는 417,924건으로 전년 대비 38,341건(10.1%)이 증가되었고,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162,577건으로 전년 대비 16,765건(11.5%)이 증가하였음
○ 2023년 국선변호료 불용액 4,900만원은 각급 75개 법원에서 일반국선변호료 기본보수액(2023년 기준 50만원) 미만의 잔액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임
<2021~2023년 국선변호료 지급현황>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접수 건수</th><th rowspan="2">국선변호인 선정건수</th><th colspan="3">국선변호료(백만원)</th></tr><tr><th>예산액</th><th>지급액</th><th>불용액</th></tr><tr><td>2021년</td><td>380,064건</td><td>140,627건</td><td>61,567</td><td>58,133</td><td>3,484</td></tr><tr><td>2022년</td><td>379,583건</td><td>145,812건</td><td>61,000</td><td>60,586</td><td>406</td></tr><tr><td>2023년</td><td>417,924건</td><td>162,577건</td><td>65,334</td><td>65,285</td><td>49</td></tr></table>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제4항에서 각 법원 회계관계공무원의 국선변호료 지급지연에 대한 보고의무를 두는 취지는 국선변호인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과부족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각 법원에 대한 예산 배정을 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임</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각 법원에 국선변호료의 정기적인 배정 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선변호료 지급에 있어 지연 및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노후 시설 및
비품의
시의적절한 교체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법원의 비품 및 시설 내용연수 도과 현황을 보면, 내용연수를 도과하여 사용 중인 물품이 많은 것으로 보임
<법원시설관리 등 관련 비품 내용연수 도과 현황>
<table><tr><th>물품</th><th>내 용 연 수 (년)</th><th>총 개수</th><th>내용연수
도과 개수(비율)</th><th>내용연수 5년 이상 도과
개수(비율)</th></tr><tr><td>법정 의자</td><td>8</td><td>13,858</td><td>7,895(57%)</td><td>2,762(20%)</td></tr><tr><td>법정 방청석</td><td>9</td><td>9,239</td><td>5,656(61%)</td><td>3,808(41%)</td></tr><tr><td>냉방기</td><td>10</td><td>497</td><td>232(47%)</td><td>52(11%)</td></tr><tr><td>냉난방기</td><td>9</td><td>1,246</td><td>493(40%)</td><td>89(7%)</td></tr><tr><td>디지털 복합기</td><td>6</td><td>2,733</td><td>1,754(64%)</td><td>미산정</td></tr><tr><td>방독면</td><td>7</td><td>13,507</td><td>7,869(58%)</td><td>1,562(12%)</td></tr></table>
○ 물품의 내구연한이 도과했더라도 여전히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해야 하고, 반대로 물품의 노후화가 심하면 국민의 안전 및 사법서비스의 제고 측면에서 시급히 교체해줄 필요가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예산의 정확한 편성 및 적극적 집행을 통해, 노후한 법원의 시설 및 비품을 시의적절하게 교체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정보화운영[1300]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매년 초 사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대법원 정보화사업 실제 계약 현황을 보면, 11월·1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사업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를 넘어 마무리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계약 준비 및 발주를 매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히 추진하여,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보안관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업무 전산화(1331-300)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북한의 해킹조직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하여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출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대법원이 소장한 자료는 개인 신원 및 재정 상황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유출 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되기 쉬우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다른 사업자가 사법부 보안관제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예산 증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사업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보안관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인원증대 등을 통하여 보안운영, 보안기획, 보안관제, 개인정보보호, 침해대응 등으로 보안 담당업무를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과업변경 분쟁 및 사업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1331-3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4년 9월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완료가 지연되어 현재 시스템 개통 일정을 잠정 연기하였음 ○ 대법원은 현재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LG CNS 컨소시엄)와 과업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음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업 추가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과업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예측성·정확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과업 수행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하고, 추가적 과업이 당초 요구사항 범위 내의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제안서 요구사항을 가능한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과업변경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견 발생 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133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도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예산현액 38억 2,900만원 중 13억 8,700만원만 집행(집행률 36.2%)되고, 23억 8,900만원이 이월(이월률 62.4%)되는 등 예산 집행이 저조함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1차 과업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과업기간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함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과업기간 변경내역>
<table><tr><th colspan="2">구분</th><th>1차</th><th>2차</th><th>3차</th></tr><tr><td rowspan="2">개발</td><td>기존</td><td>2023. 7. 31.~2024. 5. 1.
(9개월, 275일)</td><td>2024. 5. 2.~2025. 5. 1.
(12개월, 365일)</td><td>2025. 5. 2.~2026. 3. 31.
(11개월, 334일)</td></tr><tr><td>변경</td><td>2023. 7. 31.~2024. 6. 30.
(11개월, 335일)</td><td>2024. 7. 1.~2025. 8. 31.
(14개월, 427일)</td><td>2025. 9. 1.~2026. 7. 31.
(14개월, 427일)</td></tr><tr><td rowspan="2">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td><td>기존</td><td>2023. 12. 5.~2024. 5. 31.</td><td>2024. 6. 1.~2025. 5. 31.</td><td>2025. 6. 1.~2026. 4. 30.</td></tr><tr><td>변경</td><td>2023. 12. 5.~2024. 7. 31.</td><td>2024. 8. 1.~2025. 9. 30.</td><td>2025. 10. 1.~2026. 8. 31.</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과업기간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예산 미집행 및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도서관 운영지원(7031-307)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은 법원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하여 점자보도블록, 자동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1억 5,700만원 중 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음 ※ (2023년도) 시설유지관리(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 157백만원 - 점자블록 보완 설치: 14백만원 - 장애인 주차구역, 보도 경사로, 계단 핸드레일 설치 등 : 7백만원 - 자동문 설치 및 촉지도 : 12백만원 - 장애인 전용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 70백만원 - 기타 공사 소요경비(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 54백만원 ○ 법원도서관은 공사비(420-03목)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 예산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잘못 편성하였고,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도 실패하여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원도서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예산과목의 잘못된 설정 등 실무적인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법원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필요한 공사는 조속히 시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법관연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 예산 당초 목적 외 사용 부적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사법연수원은 2022년도 예산에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 1,400만원(시스템 구축 개발비 1억 7,300만원, 시스템 전산장비 확충비 8억 4,1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이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에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편성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 4,200만원 역시 미집행(600만원은 불용, 3,600만원은 다른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사법연수원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반영한 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5</td><td rowspan="3">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등기특별회계 - 등기소 신・증축(1252-41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등에 따른 이전비로 편성된 일반수용비는 집행이 부진한 상황인데, 2023년의 경우 리모델링 대상 등기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1곳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등기소 신증축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2021년~2023년)>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A)</th><th>집행액(B)</th><th>예산집행률(B/A)</th></tr>
<tr><td>2021</td><td>487</td><td>198</td><td>40.6</td></tr>
<tr><td>2022</td><td>487</td><td>250</td><td>51.3</td></tr>
<tr><td>2023</td><td>487</td><td>73</td><td>14.9</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등기소 이전비용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계약사무의
전문성 증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등기특별회계 -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대법원은 동 세부사업에서 세 건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
<tr><th>대상사업</th><th>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th><th>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th><th>부동산 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th></tr>
<tr><td>원가계산용역금액</td><td>6</td><td>20</td><td>3.3</td></tr>
<tr><td>사업개요</td><td>등기응용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시스템 개선</td><td>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
등 결제 · 정산 대행</td><td>부동산등기 DB서버 3대 교체
및 증설 등</td></tr>
<tr><td>사업예산</td><td>16,716</td><td>징수수수료 총액에서
일정비율을 사업자에 지급</td><td>78.5
(60개월 금융리스로 집행)</td></tr>
<tr><td>입찰공고금액</td><td>17,350</td><td>8,613</td><td>1,389</td></tr>
<tr><td>계약방식</td><td>협상에 의한 계약</td><td>협상에 의한 계약</td><td>협상에 의한 계약</td></tr>
</table>
○ 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인터넷등기소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업은 사업예산이 계약금액 결정기준이 되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사업금액 산출이 가능했음
○ 부동산등기시스템 DB서버 성능개선사업은 민간기업이 판매하는 기성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별도의 원가계산용역이 필요하지 않았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각급법원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계약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원가계산용역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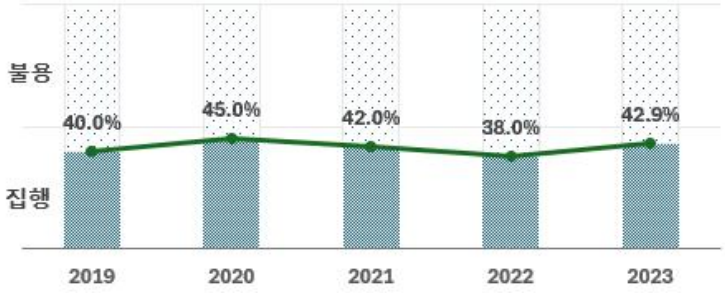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예산 이·전용 등 활용시 정확한 추계 필요	관련사업명	등기특별회계 - 등기업무운영지원(7032-31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한 등기국·과·소 건물의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전용·세목조정(이하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액 39억 9,500만원의 93.3%에 해당하는 37억 2,800만원을 다른 사업과 세목에서 공공요금으로 변경함 ○ 이·전용 등은 재원을 보내주는 다른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만큼 정확한 추계에 의해 향후 소요분만큼 이루어져야 하나, 일선 관서에서는 공공요금이 남아 공공요금을 다른 세목으로 세목조정 한 사례들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등기국·과·소 청사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청구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 분기별 구체적인 재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18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지원 사업 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등기특별회계 - 등기업무운영지원(7032-31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점자법」의 개정에 따라 점역을 위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점역 신청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련하였으나, 점역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신청으로 수행됨에 따라 2023년 7월 1건의 점자 문서만 제공되어 사업실적이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점자 문서 발급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으로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등기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출(8010-800)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이는 예산편성시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을 과다 예측해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도 과다 편성할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규모를 결정하는 매년 연말 세입 징수가 마감되지 않아서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 가능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기인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연말까지의 총세입 징수액 추이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이입액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20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의 세입예산 편입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관련 - 법원보관금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법원 소관 보관금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금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법원보관금이 포함되는데, 공탁금의 경우 그 운용수익금이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회수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그 운용수익금이 법원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음 ○ 2023년 말 현재 법원보관금 잔액은 2조 63억원으로, 그 운용수익금을 세입예산에 편입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보관금 운용수익금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 절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수입) - 민간출연금(59-594)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공탁금 보관은행을 신규지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재지정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 있음 ○ 각 보관은행별로 출연율(공탁금 평균 잔액 대비 출연액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출연율 등 기금 수입과 관련된 항목을 보관은행 지정에 반영하는 경우 기금 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기준에는 ①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② 공탁물 보관업무의 수행능력, ③ 민원인 이용 편의성 등이 포함될 뿐 출연율 등 수익적 측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공탁금 운용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기준에 기금 수입과 관련된 항목을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의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소송구조 지원(1161-301)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이 실시하는 개인파산·회생사건 지원의 경우 전세사기사건과 관련된 임대인도 구조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임대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보전처분 등이 실효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받는 절차가 중단되고, 결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게 됨 ○ 국토교통부 등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송구조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소송구조 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1161-303)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사용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 작업지침과 달리 사용목적, 집행방식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일자별, 세목별 집행내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정산보고서만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하기 어려움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여야 하는 회계법인은 작성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정’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그 작성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전문가 진단 등
집행률 개선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은 전문가 진단 등의 실시 부족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매년 40% 내외임(2023년 기준 42.9%)
 

○ 전문가 진단 등은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심리와 처분을 위한 것인데, 2019~2023년간 대상사건 대비 실시사건 비율을 보면 소년보호사건 4.7%, 아동보호사건 14.6%, 가정보호사건 14.6%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적정한 심리와 처분를 위하여 연례적으로 저조한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집행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사업 성과지표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기금 지출 구조상 소송구조 지원 사업(1161-301), 조정제도 지원 사업(1161-302),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1161-303),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 등과 함께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1100)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판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성과지표로 '사건 처리율' 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지표로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국민 대상 사법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 사업의 성과와 운영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알권리 강화 등을 목표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성과지표 보완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모색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국민참여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사건에 대하여 실시되는데, 대상사건 대비 신청사건 비율은 통상 5%에도 미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상사건 21,483건 중 3.14%인 674건만이 신청되었음 ○ 당사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비율은 매년 30%에 이르는 수준으로(2023년도 기준 31.0%), 그 결과 2023년에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95건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 제고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홍보, 신청주의 수정, 당사자 신청에 대한 배제기준 마련 및 각 법원별 실시율 격차 해소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모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7</td><td rowspan="3">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개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대법원</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3년동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정책연구과제의 연구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정책연구비를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이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가개정법」,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강조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취지에 어긋남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계약액</th><th>집행액</th><th>이월액</th><th>계약기간</th><th>주 제</th></tr>
<tr><td>2021년</td><td>29</td><td>-</td><td>29</td><td>'21. 12. ~ '22. 9.</td><td>평결 및 양형이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td></tr>
<tr><td>2022년</td><td>24</td><td>-</td><td>24</td><td>'22. 8. ~ '23. 2.</td><td>사실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td></tr>
<tr><td>2023년</td><td>24</td><td>-</td><td>24</td><td>'23. 12. ~ '24. 6.</td><td>국민참여재판 연일 개정 활성화</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대법원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을 지양하고, 미리 수요 계획과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하여 정책연구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td></tr>
</table>